기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언론의 책임

▲ 2013-114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3년 5월 13일자 「스타투데이 &」 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매일경제는 8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 「스타투데이 &」에 관계사인 보도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8개 면 중 2개 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 면 중 4개 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에 관한 기사들로 채웠다.

아예 관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별지 섹션을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보도채널은 각기 다른 방송과 치열하게 시청률 경쟁을 해오면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주말 별지 섹션으로 올들어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회의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바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는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4차 회의에서 같은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 2013-1186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별지섹션 '스타투데이 &' 2013년 5월 30일자, 6월 13일자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매일경제는 8면짜리 주말 별지 섹션 '스타투데이 &'에 관계사인 보도채널 MBN의 프로그램과 출연인물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8개 면 중 2개 면은 전면광고이며 나머지 6개 면 중 4개 면 전체를 MBN 프로그램과 출연인물 관련기사들로 채웠다.

아예 관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별지섹션을 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제작태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기보다 오로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왜곡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문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2011년 연말에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한 후, 기존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보도채널은 각기 다른 방송과 치열하게 시청률 경쟁을 해오면서 일부 신문사들은 자사 신문지면을 관계사 종편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데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매일경제는 관계 방송사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말 별지 섹션을 제작하기에 이르러 이미 올 들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작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5월 7일자 21면 「"내 책 읽고 운다고? 웃기다는 편이 훨씬 좋아"」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독자들에게 보내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내 책을 읽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쉴 틈없이 웃었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 훨씬 더 좋다"며 "아무래도 유머감각 쪽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8년만에 일본 팬들 앞에 등장해 자신의 문학여정을 회고하는 가운데 한 말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비록 해당 문장의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그 내용과 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상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제목에 등장하는 '웃기다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표현이다.

'웃기다'의 우리말 원형은 '웃다'이다. '웃기다'는 '웃다'의 사역동사로서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기본형이다. 어떤 사람의 현재 행동을 나타내려면 기본형을 활용해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제목의 표현은 '웃기다'가 아니라 '웃긴다'라고 해야 옳다.

더욱이 이 제목의 앞 문장에서 "내 책 읽고 운다고?"라며 '울다'의 활용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활용현재형을 쓰는 게 맞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기다'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문화면 머릿기사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국민일보 2013년 9월 5일자 17면 「선물 사면 상품권 주고 귀향 길 교통비도 할인 … /카드 꺼내니 더 풍성해진 추석」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추석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석선물세트 할인, 교통비 할인, 경품행사 등 종류도 다양하다. 미리 본인이 소지한 카드와 혜택을 확인해두면 씀씀이가 커지는 명절에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일부 대형할인점에서 5일부터 19일(홈플러스는 20일)까지 선물세트를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한다. 더불어 1일부터 22일까지 주유소, 고속버스, 철도, 항공업종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업종의 이용 조건을 포함해 삼성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교통비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한카드도 교통비 혜택을 제공한다. 17일부터 22일까지 신한카드로 10만

원 이상 주유(LPG 포함)하고,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한 고객에게 통행료의 50%를 캐시백 해준다. 또 KTX나 고속버스, 국내선 항공 운임을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만원을 돌려준다.

현대카드는 5일부터 19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현대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행사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고 30%의 할인 혜택을 주고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들에게 최고 5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 혜택도 풍성하다. G마켓에서 현대카드로 8일까지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매금액의 5%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에서 식품 선물세트를 살 때는 BC카드가 유리하다. BC카드는 6일부터 18일까지 20만원 이상 식품 선물세트를 BC카드로 구매하면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9일부터 15일까지 현대아이파크몰에서 BC카드로 20만~500만원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상품권으로 준다.

롯데카드는 5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서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롯데카드로 선물세트를 결제할 경우 최대 30% 할인해주고, 선물세트를 10만원 이상 사면 구매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하나SK카드는 '행복 한가위 大잔치'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하나SK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SK주유소 모바일주유권을 제공한다. 누적 사용액이 20만원 이상이면 1만원, 40만원 이상이면 2만원짜리 주유권을 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22까지 경부·영동·서해안·호남·남해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때마다 2000원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더불어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하나SK카드 모바일카드로 결제시 1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NH농협카드는 5일부터 19까지 모든 가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사기간 중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에서 과일 및 가공생필품 선물세트를 농협카드로 결제하면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준다. 또 9월 한 달간 농협주유소를 이용한 고객과 NH농협 알뜰주유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카젠엔진오일 2만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외환카드는 '오색찬란 한가위 이벤트'를 열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추석연휴(18~22일)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성인 4만4000원)을 1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 이벤트도 풍성하다. KB국민카드는 30일까지 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귀성, 차례, 힐링 관련 업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응모하고, 행사기간 중 해당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18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30일까지 우리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하고 홈페이지나 ARS(1577-3920)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스파 이용권, 주유상품권, CGV 영화관람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추석을 앞두고 각 신용카드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고객 서비스 이벤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 자체는 독자들에게 생활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 카드 꺼내니 더 풍성해진 추석」이라는 기사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사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카드를 더 사용하라고 직접 촉구하고 있다는 어감을 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의 판촉의도에 부응하는 것으로 정확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등 편집기준에 따른 제목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문〉

한국일보 2013년 10월 14일자 22면 「웃긴데 헛헛하네 … '대세배우' 하정우 감독 데뷔작」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 영화 웃긴다. 요절복통의 등장인물들이 관객의 배꼽을 정조준하고, 장난기 어린 대사가 눈가 주름을 깊게 만든다. 웃고 싶은데 그다지 웃을 일 없는 관객은 만족스러운 94분을 보낼 듯하다. 충무로의 블루칩 배우 하정우가 처음 메가폰을 쥐며 시선을 모은 이 영화는 꽤 잘빠진 코미디다.

설정부터 웃기려 든다. '육두문자맨'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욕설로 벼락 한류 스타가 된 마준규(정경호)가 스크린의 중심에 선다. 도쿄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탄 그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이한다. 막 결혼한 여성 승객이 뜨거운 눈빛으로 그에게 사인 요청을 하고 마준규가 출연한 영화에 투자했다는 대기업 회장이 여비서와 탑승해 '갑질'을 마다하지 않는다.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스님이 "고기는 먹지 마라" 등 걸핏하면 참견하려 든다. 마준규와 한때 밀애를 즐겼던 여승무원이 다짜고짜 그의 뺨을 때리는데 다른 승무원들은 여전히 그에게 구애의 눈빛을 보낸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마준규가 온통 정신을 뺏겼는데 설상가상 비행기는 태풍에 휘말려 추락 위기에 처한다.

웃음의 대부분은 욕설 섞인 속사포 대사로부터 온다. 영화 속 태풍의 이름은 냉기미와 아사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욕설과 속어를 응용했다. 마준규의 신경을 거슬리는 회장이 거느린 그룹 이름은 지질함이 묻어나는 짜사이. 중국음식점 밑반찬이다. 영화는 그렇게 근엄이란 가면 뒤에 숨은 인간 군상들의 비루함을 야유한다. 등장인물들의 말투와 동작 하나하나에 성격이 배어난다. 10여

년 배우 생활로 다져진 하정우의 영화적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웃고 웃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른다.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답을 찾긴 쉽지 않다. 삶에 대한 성찰도, 특별한 메시지도 딱히 없다. 그래서일까 강한 웃음 뒤 짙은 허무가 느껴진다. 기내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에 집중하다 보니 극적 힘은 약하다.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에서 덜 웃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하정우 감독은 "태풍 때문에 비행기 착륙에 실패한 류승범의 경험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화의 동명 중국소설을 바탕으로 한 '허삼관 매혈기'도 연출할 예정이다. 17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인 하정우가 처음으로 감독한 영화 '롤러코스터'에 대한 평론이다. 기사는 이 영화가 시종 관객을 웃게 만든다고 평했는데 문제는 제목의 '웃긴데 헛헛하네'라는 표현이다.

'웃긴데'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와 같은 '~ㄴ데'는 형용사에 붙는 어미이며 '웃다'와 같은 동사에는 '~는데'라는 어미가 붙기 때문이다. '웃긴데'는 '웃다'라는 동사 원형의 사역형 '웃기다'에서 유래하므로 '~는데'라는 어미를 붙여 '웃기는데'라고 표현해야 우리 어법에 맞다. 또 만약 과거시제라면 '웃겼는데'라고 해야 한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긴데…'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문화면 기사의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충 견

〈주 문〉

경남신문 2014년 1월 3일자 1면「부산, 끝없는 '경남 침탈'/1970년대 시작된 '침탈의 역사'/아직도 호시탐탐 기회 노리며 경남-부산 대립·갈등 이끌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의 경남에 대한 야욕이 끝이 없다.

최근에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 금융주권의 상징' 경남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동남권 금융패권을 사실상 거머쥐었다.

앞서는 공항과 항만, 방송, 식수에 이르기까지 경남지역과 협의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끝없는 세력 확장에 골몰해 왔다.

이로 인해 가장 인접해 서로 상생이 필요한 두 지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경남은행 인수 문제로 동남권 경제협력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재배적이다.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 현재 이 일대의 행정구역이 부산시이기 때문에 김해공항이란 명칭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원래 부산 강서구 일대는 김해시에 속해 있다가 1978년에 부산시로 강제 편입됐다. 부산지역 정치권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부산시가 김해공항의 명칭을 공공연히 부산공항으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김해시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해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강서구를 재통합하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와 창원시 진해구 용원 일원에 항만을 건립하면서 경남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2005년 개항을 1년 앞두고 명칭과 신항 관할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항 신항'을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남도가 '신항명칭 무효 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부산과 수년간에 걸친 대립을 보이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명칭은 결국 '신항'으로 확정됐다. 관할권 다툼도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났다.

부산시는 또 2009년 부산시민의 식수원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통해 남강댐 광역상수도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경남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광역상수도사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추가로 확보된 3억5000만t의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남강댐 담수율이 평소 30% 안팎에 그쳐 댐수위를 올리더라도 100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없고, 남강댐의 유지수위를 높일 경우 침수지역 확대로 주민피해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본사를 두고 경남에서 활동하는 KNN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민방 설립과 관련해 1도1사 원칙을 고집해오던 정부에 대해 경남에 민방이 설립될 경우 지역방송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논리를 펼쳐 2005년 광역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KNN은 부산·경남이 대립하는 사안은 경남지역 언론처럼 강하게 경남의 여론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뉴스 건수에도 경남의 비중은 낮다.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 추진도 10여 년 동안 경남도민의 민영화 지역환원 열망을 저버리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경남도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은행인수추진위와 경남도는 BS금융지주에 여러 차례 동남권경제협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요청했지만 BS금융지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종 입찰을 앞두고 사모펀드의 자격논란 등을 제기하며 단독입찰로 전환해 일단 인수전에 성공했다. 하지

만 경남도와 시군의 경남은행 금고 해지를 비롯, 지역 상공인들의 거래정지운동 등이 이어지면 유동성 위기로 이어져 '승자의 저주'로 치달을 수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9669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위 기사에서 부산과 경상남도가 대립했던 몇 가지 지역 현안들을 되짚으면서 부산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끝없는 세력 확장에 골몰해 왔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큰 제목과 작은 제목도 「부산, 끝없는 '경남 침탈'」 「1970년대 시작된 '침탈의 역사'」 등 자극적으로 달았다.

기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경남은행 인수전에서 BS금융지주(부산은행)가 경남 지역의 지지를 받은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각 입찰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보다 3천100억 원이 많은 1조2천800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써낸 것으로 보도됐다. 지방정부간 다툼이 아닌 민간 차원의 경쟁에서 최고가 낙찰이라는 시장주의적 입찰방식에 따라 판가름 난 것이다.

그런데도 경남신문은 이 문제를 과거 광역자치단체 간 현안이었던 김해국제공항 명칭, 부산·진해 '신항' 명칭과 관할권 문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 등과 연관지어 『부산의 경남에 대한 야욕이 끝이 없다』는 식으로 거칠게 비난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 현안들은 한쪽이 다른 쪽 몫을 빼앗는 양상이 아니라 양쪽의 이해와 명분이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목에 나온 '침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일부 현안들은 양측간 협의에 의해 오래 전에 마무리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4년 3월 14일자 24면 「웃긴 얘기 안 해도 좋은 사람 말에 귀 기울이듯 결국, 사람이 좋아야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KBS는 지난해 10월 가을 개편을 맞아 칼을 빼들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연출로 나영석 PD와 함께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유호진 PD를 투입하고 〈개그콘서트〉의 서수민 책임PD를 총괄팀장에 앉혔다. 최근 만난 유호진 PD는 메인 연출로 자신이 지명됐을 때의 두려움을 털어놨다. 예능국장과 이하 선배들의 설득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고 한다. (중략)

서수민 총괄팀장은 전체 흐름을 읽어내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다. 그는 이전 시즌 부진의 이유가 제작진과 출연자 간 갈등이 선명하지 않았던 데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 PD에게 '악마'가 될 것을 주문했다.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출연자들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웃음의 포인트를 찾으라는 것이다. 유 PD는 초창기 〈1박2일〉 선전 배경에는 야외취침, 먹을거리 복불복 게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tvN으로 이적해 〈꽃보다 할배〉로 대박을 터뜨린 선배 나영석 PD를 언급하며 "짐꾼으로 나오는 이서진이나 이승기는 불편한 여행에서 오는 긴장감을 완충해주는 역할로 철저하게 계획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략)

〈1박2일〉이 방송되는 일요일 오후 6시 시간대는 전쟁터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시청률 1위가 바뀐다. 경쟁 프로그램인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과 MBC 〈일밤-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는 호시탐탐 1위를 넘본다. 유 PD는 "이토록 시청률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모두 완성도 높은 콘셉트에 어필하는 시청자 성별과 연령대가 달라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언제까지나 철들지 않을 남자들의 좌충우돌 여행기가 우리 프로그램의 포인트죠. 타사 프로그램이지만 〈꽃보다 할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노배우의 우아한 여행기가 아니라 허술한 할아버지들의 고생스러운 여행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웃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의 말에는 누구나 귀기울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32127445&code=9608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KBS의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의 연출을 맡고 있는 유호진PD에 관한 피처 스토리다. 기사는 그가 연출을 맡은 이후 '1박2일'이 부진에서 벗어나 두 자릿수 시청률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는데, 문제는 기사 본문과 제목의 '웃긴'이라는 표현이다.

'웃긴'은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제목에서와 같은 '~ㄴ'는 형용사에 붙는 어미이며 '웃다'와 같은 동사에는 '~는'이라는 어미가 붙어야 옳다. '웃긴'은 '웃다'라는 동사 원형의 사역형 '웃기다'에서 유래하므로 '~는'라는 어미를 붙여 '웃기는'이라고 표현해야 우리 어법에 맞다.

스포츠경향은 이날 신문 16면에 같은 기사(「결국은 사람…사람이 승부수죠」)를 게재하며 본문 중 표기를 경향신문과 달리 '웃기는'으로 옳게 표기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의 오자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제목의 '웃긴'이라는 표현은 요즘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중심

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우리말 오용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다.

신문이 이처럼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면도 아닌 대중문화면 머릿기사의 본문은 물론 제목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화 창달이라는 신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세계닷컴 2014년 1월 22일자 「졸업하려면 교수에게 50만원 상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4-01-22 09:16:28, 수정 2014-01-22 09:48:43

졸업하려면 교수에게 50만원 상납?

관동대 A교수, 학점 이수를 빌미로 학생에게 금품 요구 의혹

A교수, 제기된 의혹 전면 부인… "윤리위 통해 진실 밝혀질 것"

한 지방사립대 교수가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은 제자는 이 교수의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결국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부 4학년 이모(24)씨가 A교수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신고함에 따라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관동대에 따르면 이씨는 "졸업 필수학점을 빌미로 전공과목 A교수가 현금 50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이달 초 학교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2학기 이씨가 수강한 A교수의 수업은 '전공실기'로,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이다.

이씨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을 한 뒤 취업계를 내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을 때부터 A교수가 '십일조'를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A교수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졸업하고 싶으면 현금 5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말했다.

이씨는 A교수의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전공실기 과목의 기말시험격인 졸업연주회에 참여했으나 F학점을 받았다.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이씨는 결국 올해 졸업할 수 없게 됐다.

같은 학과의 한 학생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쉬쉬하던 학생들이 A교수와 관련된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A교수가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편입생들로부터 학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스포츠예술대학 한 학생의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근로장학금을 신청, 학생이 받은 장학금 150만원 중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학생들이 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A교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나와 마찬가지로 취업해 수업에는 나가지 않고 졸업연주회만 참여

한 다른 학생은 F학점을 받지 않았는데, A교수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기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2/2014012200076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지방사립대 교수가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 측도 이 사실을 해당 학생으로부터 제보받은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주장일 뿐이고, 해당 교수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편집자(기자)는 기사 서두에 해당 학교의 교명과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홍보리플릿의 일부를 게재하였다. 설령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해도 해당 학교에서 이같은 비위를 저지른 또다른 사례는 알려진 바 없고, 더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의 교수를 비롯한 학생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와 평론

▲ 2014-1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2월 4일자 5면 「황우여 호남 지지율, 김한길 추월 … 與도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30%대의 깜짝 지지율을 기록, 새누리당이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등 한때 '즐거운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사에서 새누리당 호남지역 정당 지지도는 15%에 불과했는데, 여당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우여'라는 이름이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대권주자도 아닌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새누리당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 1월 20~23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여당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황 대표는 전국적으로 30%의 지지율을 얻었고, 호남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33%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호남지역 업무수행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호남지역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15%, 민주당이 33%였다.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0%의 지지율을 받기도 힘들었다.

이 같은 깜짝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황 대표의 실제 인기인지, 조사 오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갤럽이 앞서 1월 6~9일 조사했을 때도 황 대표 지지율은 전국 평균이 25%, 호남지역은 16%였다. 2주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그때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황 대표에 대한 일정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호남 기독교인들이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갤럽 관계자는 "두 번의 조사만으로 지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여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것은 이번 두 번이 전부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0401070523301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지역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해 20%대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추월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1월 20~23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황 대표는 전국적으로 30%의 지지율을 얻었고, 호남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33%의 지지를 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호남지역 업무수행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이 같은 지지율에 대해 『깜짝 지지율』『새누리당 '즐거운 소동'』『새누리당 실제 인기인지, 조사 오류인지 파악』 등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기관과 시기만 밝혔을 뿐 조사 의뢰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여론조사 기사에 포함돼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1일자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기사입력 2013.09.01 20:19:20 | 최종수정 2013.09.01 20:34:03

배우 채민서의 파격 '올 누드' 스틸컷이 공개되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채식주의자' 스틸컷에서 채민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꽃과 식물 무늬의 페인트를 온 몸에 칠하고 등장한다.

영화 '채식주의자'는 소설가 한강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육식을 멀리하며 식물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채민서는 극중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끔찍한 영상에 사로잡혀 육식을 멀리하고 점차 말라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식물이 되기를 꿈꾸는 영혜 역을 맡았다.

채민서의 상대 역에는 임순례 감독의 '세 친구'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김현성이 출연했다.

한편, 이 영화는 임우성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작품임에도 선댄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 기자 happy@mk.co.kr] 』

〈http://photos.mk.co.kr/view.php?no=792491&sc=40100044&cm=인기포토N&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group_code=〉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24 187〉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기사입력 2010.01.14 15:59:36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지난 2010년 1월 14일에 게재한 「채민서, 파격 '올누드' 스틸컷 공개」 제목의 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같은 기자 이름으로 2013년 9월 1일자로 포토뉴스 난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3년 전에 보도한 내용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8월 30일자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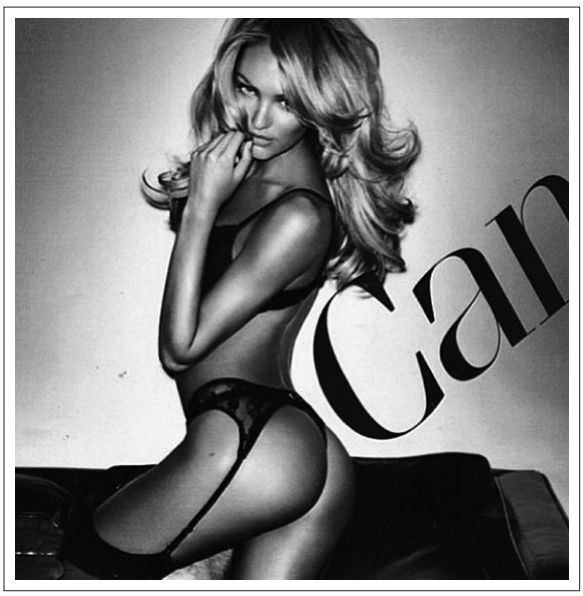
기사입력 2013.08.30 14:53:29 | 최종수정 2013.08.30 15:09:05

[스포츠서울닷컴| 성지연 인턴기자] 캔디스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서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뭇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315&year=2013&no=78491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스포츠서울닷컴 6월 8일자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제목의 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8월 30일, 9월 2일 등 두차례 그대로 게재하였다.

두 달 전에 전재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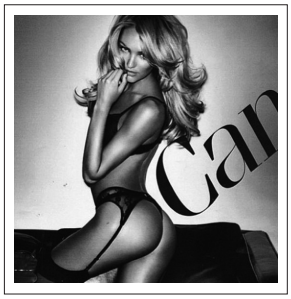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315&year=2013&no=793633 기사입력 2013.09.02 07:30:22 | 최종수정 2013.09.02 07:30:59	캔디스 스와네포엘, 톱 모델의 비결은? … '완벽한 허벅지' http://news.sportsseoul.com/read/sunday/1193324.htm 입력 2013.06.08 08:30 | 수정 2013.06.08 08:30
[스포츠서울닷컴| 성지연 인턴기자] 캔디스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서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뭇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

스와네포엘(24)이 속옷 모델다운 완벽한 보디라인을 공개했다.

스와네포엘은 7일(한국 시각)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 스와네포엘은 도발적인 포즈와 함께 풍만한 엉덩이 라인을 뽐내고 서 있다. 가녀린 그의 팔에 비해 도드라지는 스와네포엘의 탄탄한 하체는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그의 헤어스타일과 뇌쇄적인 눈빛은 뭇 남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다음 사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뒤를 돌아 있는 스와네포엘은 속옷 자국만 난 채, 발가벗고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건강미 넘치는 그의 보디라인과 탄탄한 근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와네포엘의 사진을 본 국외 누리꾼들은 "하. 정말 스와네포엘 사진은 보기 싫어! 내 몸매랑 비교된다",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나도 저 속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 볼까?", "다이어트 꼭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캔디스 스와네포엘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카탈로그 표지 모델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수입 톱10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amysung@media.sportsseoul.com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 2013-3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26일자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제목의 기사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기사입력 2013.09.26 11:02:50 | 최종수정 2013.09.26 11:09:00

배우 홍수아가 파격 노출 화보를 공개, 시선을 집중시켰다.

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

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패셔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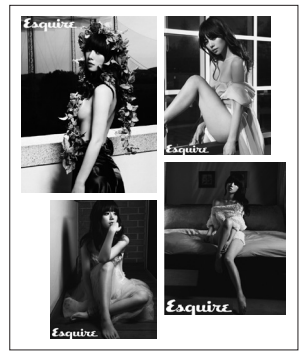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017&year=2013&no=89760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12년 5월 30일자 「[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제목의 기사를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이라고 제목을 약간 바꾼 뒤 사진 4장 중 한 장만을 골라 싣고 보도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홍수아는 에스콰이어 6월호를 통해 다양한 매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화보를 공개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1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사 비교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화보] 홍수아, 위험한 반라 노출에 男心 멘붕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328637&year=2012
기사입력 2013.09.26 11:02:50 | 최종수정 2013.09.26 11:09:00 배우 홍수아가 파격 노출 화보를 공개, 시선을 집중시켰다. (삭제) 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 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패셔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	기사입력 2012.05.30 14:14:34 | 최종수정 2012.05.30 15:29:29  홍수아는 에스콰이어 6월호를 통해 다양한 매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화보를 공개했다. 청순한 외모와 털털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홍수아는 이번 화보를 통해 반라 노출을 감행한 것은 물론 몽환적인 표정으로 고혹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선보였다. 에스콰이어 김민정 부장은 "20대 여성들의 패션 아이콘인 홍수아가 최근 KBS 2TV '강철본색'을 마치고 배우 홍수아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패셔너블한 모습과 함께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수아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에세이집을 발행할 예정이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연예팀/사진=에스콰이어 제공]

▲ 2013-302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9월 29일자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

기사입력 2013.09.29 08:47:25 | 최종수정 2013.09.29 20:04:42

'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렸던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

간루루는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훔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

〈http://photos.mk.co.kr/view.php?category=news&sc=40500017&year=2013&no=9100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12년 4월 27일자 「'중국판 똥습녀' 노출여왕 간루루, 모터쇼 깜짝 방문」 제목의 기사를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이라고 제목을 줄이고 사진 2장을 추가한 뒤 보도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행사일자(빨간 색 부분)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1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사진을 추가했다고는 하나 추가된 정보 없이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다. 특히 위 기사는 1년 전 행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2012라는 숫자를 지워 시점을 모

호하게 함으로써 마치 최근에 열린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사 비교**

간루루, 모터쇼 깜짝 노출쇼	'중국판 똥습녀' 노출여왕 간루루, 모터쇼 깜짝 방문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256664&year=2012
기사입력 2013.09.29 08:47:25 | 최종수정 2013.09.29 20:04:42	기사입력 2012.04.27 09:28:12 | 최종수정 2012.04.27 18:51:23
'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렸던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 간루루는 ×××××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훔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	'중국판 똥습녀'로 불리는 모델 간루루(27, 干露露)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에 파격적인 의상과 함께 깜짝 등장해 화제다. 간루루는 24일 2012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전 모친이 촬영한 샤워 동영상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르고 공식석상에 파격적인 의상으로 나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간루루는 이날 역시 가슴의 주요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그녀의 모터쇼 방문은 예정에 없던 것이라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간루루의 의상은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레이싱 모델들에게 향해있던 카메라 플래시를 모두 훔쳐 다른 모델들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 기자 nobody-in@mk.co.kr]

▲ 2013-3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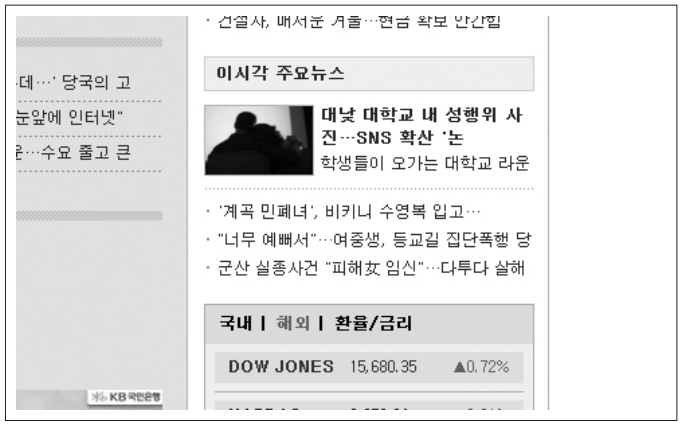
〈주 문〉

세계닷컴(세계파이낸스) 2013년 10월 30일자(캡처시각)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 외 3건 등 〈이시각 주요뉴스〉 기사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파이낸스에 게재된 〈이시각 주요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30. 15:55 캡처〉



1)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세계닷컴 홈페이지

〈http://www.segye.com/index.jsp〉

2) '계곡 민폐녀', 비키니 수영복 입고 …

입력 2013-07-29 16:20:20, 수정 2013-07-30 13:33:22

'계곡 민폐녀', 가족끼리 노는 곳에서 비키니 입고 …

이른바 '계곡 민폐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곡 민폐녀'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여성은 몸매가 드러나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서 있다. (중간생략)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계곡에서는 비키니 입으면 법에 걸리나", "비키니 입을 자유 정도는 있다"며 논란이 된 여성을 옹호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3386.html〉

3) "너무 예뻐서" … 여중생, 등교길 집단폭행 당해

입력 2013-07-29 14:33:41, 수정 2013-07-30 04:57:46

"너무 예뻐서" … 여중생, 미모 때문에 집단폭행 당해

예쁘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이 등교 도중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일이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이 지방도시 투쿠만이 근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도했다고 서울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카디아라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한 소녀를 집단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잡고 뒹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구타했다.

(이하 생략)

뉴스팀 news@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2561.html〉

4) 군산 실종사건 "피해女 임신" … 다투다 살해

입력 2013-07-29 10:59:56, 수정 2013-07-31 07:33:15

군산 여성 실종사건 "피해자 임신" … 다투다 살해했나

'군산 여성 실종사건'의 용의자인 현직 경찰관이 실종여성과 다투다 살해해 암매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연 관계였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경사를 만나러 나간 이모(40)씨가 실종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정 경사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하 생략)

이○○ 기자 ehofkd11@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29/20130729021233.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파이낸스는 자사 사이트 메인페이지 〈이시각 주요 뉴스(11월 11일 캡처)〉난에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 외 3건의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면 각각 3개월여 지난 7월 29일자 세계닷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대낮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 … SNS 확산 '논란'」 제목의 기사는 세계닷컴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정 기사를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방식 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전문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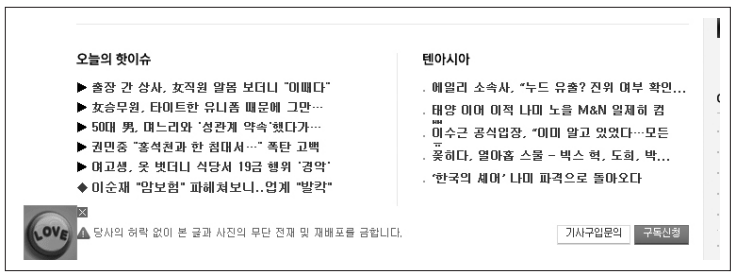
〈주 문〉

한경닷컴 2013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제목 외 1건 〈오늘의 핫이슈〉 기사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 11. 16:55 캡처시각〉



1) 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

채팅방서 '성관계 약속'한 女 알고보니 … 경악

입력 2013-10-29 10:18:32 수정 2013-10-29 13:27:38

중국의 한 50대 남성이 성관계 약속 후 만난 여성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중간생략)

이날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여성은 혼비백산해 도망쳤지만 호텔 로비에서

이내 뒤따라온 남편에게 잡혀 폭행을 당했고, 뒤에 서있던 왕 씨 또한 아들에게 맞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916337〉

2) 여고생 옷벗더니 식당서 19금 행위 '경악'

美 '고교생 음란동영상' 파문

입력 2013-10-17 03:04:51 수정 2013-10-17 05:11:56

미국 고등학교에서 남녀 학생이 점심을 먹는 급우들 사이에서 성행위를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하 생략)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177084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자사 사이트 서브페이지 메인페이지 〈오늘의 핫이슈(11월 11일 캡처)〉난에 「50대 男, 며느리와 성관계 약속했다가 …」, 「여고생 옷벗더니 식당서 19금 행위 '경악'」이라는 제목을 각각 게재하고 보름여가 지난 10월 29일, 10월 17일자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뉴스목차에 게재한 제목은 뉴스면에 있는 원래의 제목 보다 더 선정적이다. 특정 기사를 이용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방식 하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전문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1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 「[베스트 클릭화보]최여진」, 10월 21일자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18 10:59 캡처시각〉

1) 최여진

〈http://photos.mk.co.kr/slide.php?initNo=1145293&filename=list&sc=40500325&year=2013&category=news&group_main=&group_sub=〉

2)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

〈10. 21 15:40 캡처시각〉

기사입력 2013.10.21 13:23:38 | 최종수정 2013.10.21 13:38:01

사진제공 : 매일경제

2009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매거진 W Korea 11월호

[매경닷컴 연예편집팀]

▶ 참고사항 : 매경닷컴 2009년 10월 22일자 게재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9&no=54895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2009년 10월 22일자 「최여진, 화보서 명품 몸매 드러내」 기사를 2013년 11월 18일자 「[베스트클릭화보]최여진」, 10월 21일자 「[베스트클릭화보] 최여진 갤러리」로 각각 제목을 바꾸고 본문을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게재하였다.

4년여 전에 게재한 기사를 추가된 정보 없이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고 날짜만 바꿔 그대로 게재한 것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이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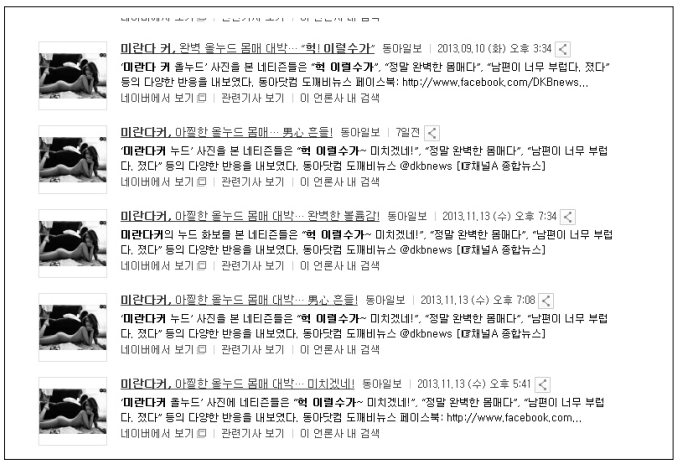
▲ 2013-3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도깨비뉴스) 2013년 11월 13일자「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대박 … "헉! 이럴수가"」,「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 미치겠네!」,「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대박 … 男心 흔들!」,「미란다 커, 아찔한 올누드 대박 … 완벽한 볼륨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도깨비뉴스가 게재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2.09 13:59〉

■ 기사 비교

원기사	재전송기사
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 “헉! 이럴수가” [2013-09-10 15:29:00] http://dkbnews.donga.com/3/all/20130910/57575426/2	1) 미란다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 “헉! 이럴수가” [2013-11-13 17:06:00]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4513/2
 미란다 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란다 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 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란다 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미란다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란다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1) 1번 기사 미란다 커의 과거 올누드 화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란다 커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 커는 최근 한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로 곤욕을 치루면서 과거 화보들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란다 커 올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2) 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 미치겠네! [2013-11-13 17:38:41]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5565/2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인 바 있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삭제) '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에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2)번 기사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인 바 있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3) 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男心 흔들! [2013-11-13 19:05:49]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7564/2?rec=1

미란다커 올누드' 사진에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 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3)번 기사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세계적인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가히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 네티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 누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4)미란다커, 아찔한 올누드 몸매 대박… 완벽한 볼륨감! [2013-11-13 19:30:43] http://dkbnews.donga.com/3/all/20131113/58877924/2 세계적인 톱모델 미란다커의 올누드 화보가 새삼 화제다. 미란다커는 과거 남성잡지 GQ 화보를 찍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올누드 몸매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미란다커는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만 굴곡진 몸매가 일품이다. 또한 매끈하고 늘씬한 몸매에 뭇 남성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란다커의 누드 화보를 본 네티즌들은 “헉 이럴수가~ 미치겠네!”, “정말 완벽한 몸매다”, “남편이 너무 부럽다. 졌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도깨비뉴스는 2013년 9월 10일자 「미란다 커, 완벽 올누드 몸매 대박 … “헉! 이럴수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한달 여가 지난 11월 13일 사진을 포함해 제목과 기사를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포털에 송고한 데 이어 1시간 20여분 사이에 제목을 약간 바꾸고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단어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수정한 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라는 동일한 크레디트를 달아 모두 네차례 전송하였다.

한차례 보도한 내용을 추가된 정보 없이 단어 몇 개만 고친 뒤 여러차례 전송하는 것은 기사의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한 작위적인 행위로, 이는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이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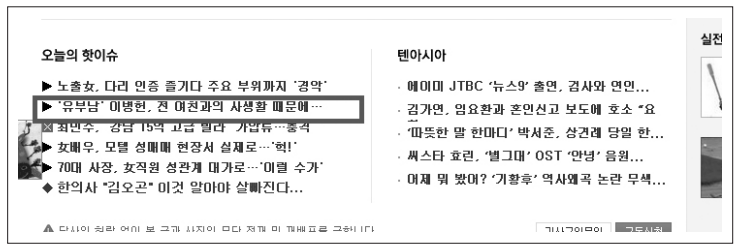
▲ 2014-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4년 1월 22일자(캡처시각) 「‘유부남’ 이병헌, 전 여친과의 사생활 때문에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1. 22. 14:4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3060807〉

『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결국…

입력 2014-01-02 23:51:34 수정 2014-01-08 15:44:01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협박했던 장모(54)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지인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 판사는 이어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해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026238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자사사이트 서브페이지 〈오늘의 핫이슈〉난에 여러 기사 제목을 게재하고 이 가운데 일부 기사의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지 20여 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통상적으로 '오늘의 핫이슈'라 함은 당일 또는 아주 최근의 기사로밖에 볼 수 없는데, 한번 보도한 기사를 상당 기간 노출해 마치 새기사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특히 「'유부남 이병헌', 전 여친과의 사생활 때문에 …」 제목의 기사는 1월 2일 작성되었음에도 1월 22일까지 장시간 게재되었다.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협박했던 장모(54)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다 알려진 소식임에도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톱스타라는 이유만으로 〈오늘의 핫이슈〉라는 타이틀 하에 이렇듯 장시간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만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뉴스는 이야기가 새롭고 처음으로 취급된 보도여야 할 것이다. 남이 먼저 보도하였거나, 현재와 상당히 떨어진 이야기는 뉴스의 가치가 적거나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1.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2013-109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3년 4월 9일자 6면 「흔들림없는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8일 4·24 부산 영도 재선거에서 김비오 후보 지원을 위해 총출동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 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후보는 이날 기자의 동행 취재에도 "국회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라며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김무성 후보는 이날 오전 영도구 내 한 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나섰다. 환갑을 넘었지만 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어르신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찍어주셨죠. 그래서 대통령 됐습니다"라며 다가섰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 뒷받침을 못해줘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들어가 박 대통령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영도구청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 김무성 후보는 기자가 "민주당이 중

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중앙당 지원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중앙 무대의 정쟁을 지역에 옮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무성 후보는 이어 태종대의 태종사를 방문해 도성 스님을 접견하고 "큰 일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작은 일에 분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큰 스님 말씀에 "원내대표 시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랑 큰 일을 많이 처리했다"며 "국회에 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한 측근은 "지역 현안보다 '큰 일 하라'는 덕담이 많다"고 전하며 "원내대표보다 큰 일을 하려면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무성 후보는 차량 이동 중 노사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해 홍역을 치른 한진중공업을 지나면서 "노사 문제에 정치권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생태계에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며 "한진중에 나쁜 선례를 남겨 쌍용차 문제도 커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폐업 방침에 논란이 거센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귀족 노조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면 홍준표 지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노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선을 앞두고 기자가 부산 영도 선거운동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의 하루 일정을 동행 취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사는 김 후보의 행적을 스케치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는 흔들림이 없었다』『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게 경종을 울리자고 압박해도 김무성 후보는 오히려 국회에서 새정부 성공을 돕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정면 돌파했다』『국회에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갈 것이라며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그는 특유의 친근함을 앞세워 …』『…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것이다』『"지역 현안보

다 큰일 하라는 덕담이 많다"』『"… 당대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제목도 이같은 기사 본문을 반영해 「흔들림 없는 김무성/야 지도부 부산 총출동에도 "국회서 朴정부 돕겠다" 기염」으로 표현했다.

객관적인 신문 보도 기사라기보다는 김무성 후보 진영이 제작하는 선거운동 소식지 내용을 연상케 한다.

기사와 제목이 김무성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과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경제는 영도구의 여러 후보자 가운데 김무성 후보 외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지면 할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4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 문〉

每日新聞 2013년 5월 10일자 1면 「PK판 되어가는 새누리」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남진하고 있다.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의 대조적인 위상이 박근혜정부 초기 집권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남의 위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승승장구 일색이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주요 내각의 수장을 거머쥐었다. 새누리당 내부 역학지도도 부산경남이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돌아온 '좌장' 김무성 의원의 힘이 크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다. 일부에선 차기 대선주자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형편이다.

한 여권 인사는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등 부산경남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면서 "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주영 의원이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침통한 분위기다.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물론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과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주요 당직자들이 내주초 '당직'을 벗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당장 당 중진 및 최고위원회의에 지역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난 총선에서 박종근·이해봉·이상득 등 굵직굵직한 의원들이 줄줄이 낙천·낙선 하는 등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든 측면이 많다"면서 "대구경북 27곳 지역구 중에 11명이 초선들로 채워지는 등 꼬맹이들만 있는 '불임 TK'로까지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치권 다른 관계자는 "지역은 포스트 박근혜를 키우지 않은 죗값을 톡톡히 치루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산경남이 치고 나가고, 대구경북의 현안들을 대변해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정치 지형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

당내 분위기를 볼때 3선의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최 의원 측은 10일 "우리가 6.5대 3.5로 앞선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 의원 측은 "6대 4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맞받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집권 초기인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인사가 원내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최 의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이 중심 축인 부산경남에 맞서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 지분의 세를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력구도 추이를 분석한 기사다. 기사는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부산경남(PK)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반해 대구경북(PK)은 위기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의 당락에 따라 TK정치권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최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기사는 우선 새누리당 권력구도에서 '박근혜가 빠진 대구경북'과 '김무성이 복귀한 부산경남'을 내세워 '대구경북의 위기감'과 '부산경남의 승승장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흥미로울 순 있으나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기사는 『"(내년초)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내년 중순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년 후에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예단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 권력구도가 PK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기사의 키워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TK출신 최경환 의원이다. 기사는 최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PK출신의 이주영 의원을 경계하고 있

다. 기사는『"내주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의 약진에) 이주영 의원이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면서『최경환 의원이 당선된다면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산경남 출신인 이주형 의원이 원내 대표가 되면 당내 권력 축은 부산경남으로 기울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당내 분위기로 볼 때 3선의 최경환 의원(경산청도)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라고 기술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최경환 의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每日新聞은 위 기사의 바로 위인 1면 사이드 기사에 사진과 함께 최경환 의원의 기자간담회 기사를 다뤘다. 이러한 지면 배치와 기사 내용으로 위 기사가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는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편집자는 예단을 전제로 작성된 위 기사의 큰 제목으로 인용부호도 없이「PK판 되어가는 새누리」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이러한 보도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3년 9월 12일자 1면「김순견 10.8%-박명재 43.3%」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현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개인이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앞두고 지난 7~8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명재 예비후보와 당내 예비후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숙 시의원이 밝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이번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다음 예비후보들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박명재(43.3%), 김순견(10.8%), 임영숙(9.1%), 서장은(7.5%) 순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일 보도된 본지(1면)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분포로 박명재 예비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별 특성은 박명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동해·호미·구룡포·오천·장기 거주자(52.9%)-남성(46.2%)-50대 및 60대 이상(50.6%)-농림어업 종사자(60.1%) 등에서, 김순견 예비후보라는 응답은 울릉군 거주자(14.4%)-여성(10.9%)-50대(13.3%) 및 40대(13.1%)-농림어업종사자(13.0%)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는 대이·효곡·연일·대송 거주자(12.7%)-여성(9.3%)-20대(14.9%)-노동직 종사자(14.0%) 등에서, 서장은 예비후보는 대이·효곡·연일·대송 거주자(7.9%)-여성(8.7%)-20대(18.0%)-학생(20.0%) 등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이외에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가 9.1% 지지를 얻어 김순견 예비후보와 불과 1.7%차이며, 서장은 예비후보 보다는 1.6% 앞섰다.

이는 그동안 임영숙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여성후보로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가구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2만2천865세대 통화시도)으로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 거주 19세 이상 남(513명)·여(487명) 1천명을 최종 표본으로 실시했다.

연령별로는 20대 171명, 30대 185명, 40대 213명, 50대 224명, 60대 이상 207명으로 인구 비례 무작위 추출했다.

통계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이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32186&news_area=010&news_divide=&news_local=10,17&effect=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7, 8일 이틀간 실시된 이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박명재 43.3%, 김순견 10.8%, 임영숙 9.1%, 서장은 7.5% 순으로 나타났고, 모름 또는 무응답이 29.3%였다.

편집자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큰 제목을 「김순견 10.8%-박명재 43.3%」로 뽑았다.

위 여론조사는 경북일보가 실시한 것이 아니다. 입후보 예정자인 임영숙 씨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얻은 결과인데 경북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한 것이다.

포항시의원인 임씨는 이번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경북일보 같은 날자 3면 보도)한 예비후보로 여론조사 대상 후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임씨가 출마를 위한 선거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사시점, 조사대상, 설문내용, 문항의 수, 조사방법 등이 의뢰자의 요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인 임씨는 유권자에게 여성후보 공천여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항목에 넣었다. 그런데 기사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재선거 여성후보 공

천 찬반여부 질문에는 찬성 35.4%, 반대 34.9%, 잘모름 29.6% 등으로 오차범위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그 결과를 다뤘다. 결과적으로 임씨가 자연스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것이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 「임, 女후보 경쟁력 부족 우려 상당부분 해소한 듯」이라고 뽑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예비후보' 선정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남·울릉 재선거' 예비후보는 1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기사에서 언급된 예비후보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 모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특정 예비후보의 필요에 의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도, 기사는 '임씨의 여론조사'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예비 후보들 중 단 4명만 기사에서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경북일보가 이번 선거의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예비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춘 설문내용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다룬 것은 선거기사의 기본원칙인 공정성·형평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9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11면 「표명구가 만난 김의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중부일보는 광고 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한 'Issue & 사람' 면을 통해 김의범 청년회의소(JC) 중앙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김 부회장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인터뷰를 한 계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첫 리드 문장에서 김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현안"』이라고 전제한 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사)청년창업원 설립을 준비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주 제목을 「김의범 청년회의소(JC)중앙회 부회장/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하여 … 청년창업을 돕는 기관 만들겠다」고 뽑았다. 이 점에 미뤄 김 부회장의 '청년창업원 설립' 준비에 주목해 인터뷰가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청년회의소는 민간단체다. 청년창업원은 그 단체의 부회장의 구상이고, 현재로선 설립 준비단계일 뿐이다. 대형 인터뷰 사진을 게재하며, 1개 면을 할애할 정도로 큰 뉴스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김 부회장은 내년 지방선거 안성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7월 보도한 바 있다. 또 인터뷰 기사에서 소개했듯이 현재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고,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다.

따라서 뉴스거리가 있는 뚜렷한 계기도 없이 특정 정치인을 장점 일변도의 내용의 인터뷰 형태로 크게 다룬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674〉

▲ 2013-1296 신문윤리강령 위반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주 문〉

新亞日報 2013년 11월 12일자 24면「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모두 다함께 잘사는 영등포 만들기 매진"」, 11월 15일자 24면「인터뷰/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 강북 만들기 총력"」, 11월 18일자 24면「〈기획특집〉 앞서가는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新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4 인터뷰 / 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모두 다함께 잘사는 영등포 만들기 매진"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박차"

〈11월 12일자 24면 인터뷰/오인영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역사·문화·관광 중심도시 강북 만들기 총력”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민들 참여 열린 행정 추진”

〈11월 15일자 24면 인터뷰/박겸수 서울시 강북구청장〉

힘껏 날아 오르는 인천 “제일 잘 나간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국내외 대기업 이전·입주 등 ‘잇따라’

〈11월 18일자 24면 인천광역시 기획특집〉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新亞日報는 뚜렷한 계기나 이유가 없이 1개면씩 할애해 정치인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거나 특정 자치단체를 소개하는 기획 특집기사를 보도했다.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 인터뷰 기사에선 오 의장이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관련 상을 수

상하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인터뷰 기사에선 강북구청의 일자리 행정, 등산교실,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에 대한 홍보사진을 보도했다.

기획특집기사로 다룬 인천광역시에 대한 기사에선 송영길 시장의 시정활동을 담은 각종 사진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서 게재된 사진은 해당 정치인 혹은 자치단체가 제공한 것으로 기사의 성격과 맞지 않아 해당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적시 기사들은 해당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11월 29일자 1면「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수원구간 완전 개통으로 본격적인 수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이번 개통 구간은 수원 망포역~매탄권선역~수원시청역~매교역~수원역 총 5.2㎞로 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된다.

여기에 2016년 개통될 수인선까지 연결되면 인천~수원~성남을 잇는 수도

권 남부를 동서축으로 이어주는 순환철도망으로 거듭나게 된다.

2002년 오리역~죽전역 구간에서 첫 삽을 떴던 분당선 연장구간은 모두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1년만에 완공하게 됐다.

당초보다 한 달 먼저 개통된 분당선 연장구간을 통해 수원에서 40여분이면 강남까지, 1시간대에 왕십리역까지 이동해 서울지역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수원지역에만 수원·매교·수원시청·매탄권선·망포·영통·청명 등 7개역과 기존 국철1호선 세류·수원·화서·성균관대 등 4개역까지 10개역이 들어섰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는 수원시 어느 곳에서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은 출퇴근 시간에 6분마다, 평소에는 13분마다 운행하며 평일에는 352차례, 휴일에는 280차례 운행한다.

첫차는 주말·휴일에 용인 죽전역과 서울 왕십리역에서 5시 40분에, 평일에 수원역 오전 5시 3분, 왕십리역 오전 6시 38분, 죽전역 5시 35분에 출발한다. 평일에만 운행되는 급행열차는 6시 49분 첫차가 수원역을 출발, 수원시청역~망포역~기흥역~죽전역 등에만 정차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지하철 시대의 개막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은 29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개통식을 갖고, 30일 오전 5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161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왕십리-수원 복선전철 완전 개통식'을 앞두고, 이 구간 개통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다룬 분석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오늘 개통식 … 내일부터 본격 운

행」으로 부제목을 달고 「염태영, '수원 지하철 시대' 열었다」라고 주제목을 뽑았다.

제목만 보면 염태영 수원시장의 노력만으로 '수원 지하철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공사는 2002년 시작돼 11년이 걸린 대역사다. 수원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고, 게다가 염 시장은 2010년에야 수원시장에 취임했다.

기사 본문에도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개통과 관련해 염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1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3년 12월 2일자 16면 「"'주민을 위한 봉사' 초심, 더욱 크게 펼쳐보고 싶다"/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월2일 퇴임하는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난 28일 만났다. 박 부지사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그는 '포용과 소통 공감, 갈등 조정능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포용은 따뜻함, 갈등조정 능력은 리더십, 소통과 감동은 오랜 공직과 두터운 인맥을 통한 경험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이며 그에겐 부단한 실천의 길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부지사는 "(사표)를 던져놓고 보자"며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단호한 모습을 비쳐주지 못한 것과 달리 출사표를 던졌다. 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의 속내는 안개 속에 가려진 정치형국에 맞물려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맏형 같고 포용력이 강했던 박 부지사는 30여년의 공직생활에 대해 "'초심'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이 순간까지 지켰다"고 밝혔다. 그의 초심은 정책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부친에게 물려받은 주민을 위한 초심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박 부지사의 공직생활과 앞으로 그가 도전해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인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중 어디로 출마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출마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어디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 후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단체장 출마)가 있었어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었던 마음과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가족들은 평소에도 내가 가는 길을 믿어줬고 지탱해 주었고, 이번에도 가족들이 동의를 해줘 새로운 길을 걷도록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완주와 전주에 대해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향에 대한 발전과 봉사 등을 여러 차례 말해 전주보다 완주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출마배경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면사무소직원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동네 각종 민원을 해결하시면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면 자라왔고, 아버님보다 더 큰 곳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아버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셨던 생각을 가지고 나섰죠.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저의 '초심'이죠. 아버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30여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께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더 크게 펼쳐보고 싶습니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도 없고 힘든 길입니다.

▲단체장은 순수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풍부한 행정경험은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인적네트워크입니다. 중앙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앙인맥은 지역발전에 큰 자산이 됩니다.

조직은 없고, 아직 인지도에서 밀리지만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알릴 계획입니다. 유권자를 자주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자연히 지지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원칙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신경 쓰다 보면 주민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보고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다음은 원칙에 맞는지 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법규와 관련 규정에 맞는 원칙은 주민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가 입니다. 담당자와 계장, 과장, 국장이 보는 틀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향후에 닥칠 문제점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 때 다른 면접관과 다른 질문으로 유명했다면서요.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봉급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80년대 관치시대에 면접 때 '공무원 봉급은 누가 주나요'라고 물으면 '도지사가 봉급을 준다'고 대답한 지망생들이 많았어요.

당시는 회계공무원이 봉급을 준다고 답한 응시생도 있었을 정도로 주민이 낸 세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거죠. 그때 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응시생에게 알려줬어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소리축에요. 제1회 세계소리축를 기획하고,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분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북이 맛과 멋을 전남광주 김치 축제와 광주비엔날레에 빼앗긴 상황에서 소리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유종근 전 지사와 소리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정읍부시장에서 다시 불려와 구원투수로 세계소리축제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기여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대선 정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입법발의부터 통과까지 18일 만에 이뤄냈다는 긍지가 있어요. 덕분에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도 출범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갈등조정능력을 키웠으면 해요. 이제 행정의 덕목은 갈등조정능력이라 봐요. 아직은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주민을 설득하는 행정이 80%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조정능력은 교육을 통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조정능력은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주민을 위한 현장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http://jeollailbo.com/news/general_view.php?An=415148&code4=PO0100001&page=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1개 면을 할애한 '전라일보가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난을 통해 박성일 전북도행정부지사를 소개했다. 위 기사는 형식적으로 박 부지사의 퇴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이며, 퇴임 날에 맞춰 보도됐다.

그러나 위 기사는 단순 퇴임 인터뷰가 아니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 채비 중인 박 부지사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출사표를 던졌다』『고향인 완주 군수와 전주시장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출마할 자치단체, 출마배경, 준비상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 박 부지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때문에 위 기사는 박 부지사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12월 5일자 11면「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 안성이 달라졌다」·12면「황은성 안성시장 인터뷰/民心을 들었다 봤다/계사년 안성 핫이슈/한 뼘 더 성장한 市政」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民心을 들었다 놨다
계사년 안성 핫이슈
한뼘더 성장한 市政

〈12월 5일자 11면〉

경기도가 세계로

안성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
안성이 달라졌다

〈12월 5일자 12면〉

중부일보는 '경기도가 세계로'라는 섹션을 통해 각각 1개면씩 할애해 안성시와 황은성 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11면 기사는 '황은성號 분야별 성과분석'이란 부제로 자치행정, 경제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예술체육, 농정 등 분야별로 안성시가 이룩한 성과를 찬사 일변도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편집자는「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5기/안성이 달라졌다」라고 제목을 달았다.

황은성 안성시장을 인터뷰한 12면 기사에선 화재 현장을 찾는 황시장의 사진 등과 함께 안성지역 이슈에 대한 황 시장의 입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위 기사들은 특별한 계기도 없고, 시간을 다투어 보도해야 할 만큼 뉴스거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국민일보 2014년 1월 6일자 10면「신년초대석 김만수 부천시장/"영화·만화·공연 …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할 것"」, 8일자 10면「신년초대석 송영길 인천시장/"아시안게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만수 부천시장〉=『"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인천과 결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5일 부천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천의 지역 특성상 인천과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특히 부천에서 생산된 캐릭터가 중국 CCTV의 날씨 안내 캐릭터로 등장한 것을 발판삼아 K팝 이후의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시장은 "땅은 좁고 밀집돼 있는 부천에서는 문화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화·애니메이션은 세계에서 부천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천시가 프랑스에서 선보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툰 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은 독보적 영역이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80~90%가 문화도시가 나갈 길이라고 응답한 점에 주목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주말을 부천에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부천영화제, 부천필공연, 만화축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시민화합 차원에서 90만명의 시민 중 10만명이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인구를 3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천FC와 여자프로농구 등을 활용한 응원문화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김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 상반기 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는 경인전철 지상구간 33만 m^2를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는 소사구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대표적인 구도심인 역곡동 화장장 예정부지에 부천대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김 시장은 "옛 부천 중심지인 심곡천의 복개구간을 걷

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08784&cp=nv〉

〈송영길 인천시장〉=『"오는 21일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여는 등 남북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51·사진) 인천시장은 7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미제'란 용어를 '미국'으로 바꾸는 등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변화가 모색되고 있어 올해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2010년 취임한 후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며 "북한선수단이 오는 9월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확보해 전임 시장 등이 초래한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것을 재임 중의 성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선수촌·미디어촌을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리스·렌트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1276억원 규모의 세원을 발굴하는 등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원활한 행정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국정평가 1위를 차지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을 유치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사무국을 유치해 전 세계에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깊이 각인시킨 것은 역사적인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송 시장은 인천지역 대표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분양 사업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경인전철 제물포역 인근 도화구역 사업지구에서 벌일 계획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도화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 2만1090㎡를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급하고, SPC는 이 부지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4월 중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 시장은 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활용, 제2의 디즈니랜드가 될 테마마크를 유치해 아라뱃길 일대를 관광벨트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송 시장은 "올해는 인천시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서며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변할 것"이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잘 사는 인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15366&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인터뷰 난을 가독성이 높은 사회면 톱기사로 배치해 김만수 부천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각각 소개했다.

김만수 시장을 다룬 기사는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상세히 소개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배드민턴장을 착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수십 곳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착공을 소개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을 다룬 기사는 송시장이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막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원도심인 도화구역 활성화 계획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송시장의 인천 발전 구상을 자세히 다뤘다.

그런데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과 송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후보들이다. 송 시장은 이미 재선 도

전의사를 밝혔고, 김 시장은 내달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상당수 언론이 보도한 상태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두 시장의 재임기간 업적과 장점은 '홍보성'으로, 두 시장이 추진할 지역현안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위 기사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경쟁상대가 있는 시장 후보인 두 사람을 장점 위주로 다뤄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경북매일 2014년 2월 6일자 3면「도교육감 이영우·이영직 양강구도/"3선 연임"-"이번엔 내가" 기싸움 치열/문경구, 참신성·패기 내세우며 도전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매일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교육감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이영우 교육감에 맞서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이 출사표를 준비중이거나 이미 던졌다. 이외에 한 두명 정도 교육감 후보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교육감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영우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인 만큼 예비후보 등록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이 자유롭긴 하나, 업무공백이 커 부담으로 작용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선거때 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업무공백을 초래,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교육감은 3월 중·하순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선에 걸쳐 5년여간 경북교육청을 무리 없이 잘 이끌었고, 여러 가지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시도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내 3선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이영우 교육감의 3선 저지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이다.

현재 포항 영신고 초빙교장으로 재직중인 이 전 교육장은 경북대 사대부고와 사범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의성 금성고에서 교편을 잡은 이래 교장, 연구사, 장학사 등을 거쳐 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교육정책국장, 영주교육장을 역임한 만큼, 교육청 내 인맥이 많아 이 교육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교장은 퇴직후 4년 임기의 초빙교장으로 온 만큼 이번달 말까지 1년만이라도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3월초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 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 선거에 나가는 만큼 학교측에 미안한 마음이 많다. 이 교장은 그동안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 위에 정치권 분위기도 우호적이라고 판단,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 학교의 전 재단이사장인 강석호 국회의원에게 교육감 출마 의사를 알렸고,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철우 현 새누리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학후배로 관계가 돈독한 점 등 여러 여건도 성숙됐다고 보고 있다.

강력한 2파전 양상에 문경구 후보도 가세했다. 문 후보는 현재 만 50세의 나이로 젊고 역동적인 참신성을 주무기로 경북교육청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문 후보는 영남대 졸업후 경북의 여러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22년간 근무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해 정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지난 해 명예퇴직을 하고 선거준비를 해왔다. 그는 4일 예비등록과 동시에 기

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전한 후 영천 호국원을 다녀오는 등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의 위 기사는 6·4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후보들의 면면을 짚어보는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교육감 후보로는 이영우 현 교육감과 이영직 전 영주교육장, 문경구 한국 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다 한두 명 가량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선거 전망과 관련해 이영우 교육감과 이영직 전 교육장의 『2파전 양상』이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한발 더 나아가 「도교육감 이영우·이영직 양강구도」라고 단정해서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위 기사는 왜 '2파전 양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예컨대 여론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현직 교육감과 더불어 이영직 씨를 양강 후보로 꼽은 배경으로는 『폭넓은 경험과 인맥의 바탕위에 정치적 분위기도 우호적』이라는 등 홍보 색채가 짙은 이 씨 측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이 씨가 과거 선거에 출마해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거 전문가나 관계자들이 그를 '양강 후보'로 꼽고 있다는 부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특정후보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도봉구/창동역 일대 문화·창조산업 중심지 조성」, 2월 4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동구/도시농업 '강산강소'로 건강한 먹거리 책임진다」, 2월 7일자 29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노원구/창동차량기지 터 비즈니스 메카로 개발」, 2월 11일자 25면 「서울 자치구 새 살림/송파구/잠실·위례 기반, 관광·지식산업 거점 육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새해를 맞아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새해 살림살이를 짚어본 데 이어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서울 자치구 새살림'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도봉구는 올해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4년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구민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올해는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희망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주요 현안 사업으로 창동·상계지역 개발 본격화,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등 사회간접(SOC) 시설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창동역세권 등 SOC사업 본궤도

도봉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창동·상계 개발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동북권역 체육시설 조성 △창포원 북쪽 대전차 방호시설 개선사업 및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동역 일대 광역중심 발전 계획의 경우 문화공연인프라와 창조산업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전형필 가옥을 비롯해 김수영 문학관, 함석헌 기념관, 둘리뮤지엄,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를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봉산 권역은 생태·힐링·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봉산 권역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인 점을 감안, 생태·힐링·관광지구와 함께 마을 이름 자체가 힐링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이 구청장은 소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곳에는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뜻의 '무수골(근심 없는 고을)'이 있다"며 "이곳을 생태치유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북 4구 공동발전 체제 구축

지난해 출범한 동북4구발전협의회(도봉·성북·강북·노원구의 협력 발전협의체)를 통해 동북 4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동북 4개구가 함께 창동역 일대에 '창동문화공연인프라 및 서울창조산업파크'를 구축시킬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생활권 도시계획에 반영돼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이 구청장은 "민선5기가 시작된 이후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며 "도봉구의 살림 역시 경제 상황만큼이나 어렵지만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지난 4년여 를 돌이켜볼 때 '참여와 복지'라는 기치를 들고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가 보듬은 형태의 복지공동체를 지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1240100254770012817&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23〉

〈이해식 강동구청장〉=『서울 강동구의 올해 구정 목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공공텃밭 3800계좌와 상자텃밭 3만계좌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공공 텃밭을 5300계좌, 상자텃밭은 4만8000계좌로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우리 강동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 상추 등 농산물을 지역 주민의 밥상에 올리는 이른바 강산강소(江産江消)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농업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산강소는 강동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강동에서 소비한다는 뜻으로 이 구청장이 만들어낸 말이다.

■ 강산강소(江産江消) 역점 추진

강동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인 '싱싱드림'을 통해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에 속한 38개 농가로부터 매일 아침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싱싱드림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한다. 생산자가 가격을 직접 정하고 본인의 사진과 정보를 표시해 매장에 진열하면 주민들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하루 평균 250명의 주민이 싱싱드림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게 강동구의 설명이다.

이처럼 강동구는 도시농업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구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가정 내 식탁에 올라가는 데 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유통단계를 최소화시켜 운송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이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 농산물을 관내 26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협의회와 관내 음식점을 연결시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중화시키기로 했다.

■ 모든 동네에 건강센터 운영

강동구는 이와 함께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강도시로 발돋움한

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혜택의 격차를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담센터는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측정과 생활습관개선 상담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동네 미니 보건소다. 현재 18개 모든 동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주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0대 이상 주민 28만5891명의 33%인 9만4907명이 이 상담센터를 이용했다.

이 같은 강동구의 주민 건강 정책은 국내외에서 인정 받았다.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대회에서 이 건강 정책은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강동구 사회조사' 생활환경 만족도 분야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구정(55.9%)에 꼽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040100019900001029&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3〉

〈김성환 노원구청장〉=『서울 노원구는 전동 열차 차량기지인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이곳을 '동북권 비즈니스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에 구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창동차량기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탓에 노원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다. 구의 노력 끝에 이 기지는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곳을 상업·업무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구는 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 학교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권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면 이 일대는 인근 도봉면허시험장까지 포함해 24만 m^2의 개발 부지가 생긴다. 이는 강남의 코엑스나 롯데월드보다 넓은 규모다. 노원구는 이곳이 노원 100년 미래를 좌우할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인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까지 통합 개발하면 그동안 낙후된 강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남·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사업은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곳에 대규모 상업·업무·문화시설을 유치해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조화로운 자족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 육성

노원구는 또 '마을 학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에코센터 주변 산책로에 학습테마가 있는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을 조성하고, '마을학교 지원센터' 운영을 더 내실화한다.

또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학력 인정 '맞춤형 대안학교'는 3개소로 확대한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는 확대·발전시켜 소외계층 대상 방문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자살예방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무연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자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을 통해 건물과 주택을 미니 발전소로 만드는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조성 사업, 서울북부지법 이전부지의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동북선 경전철 조기 착공, 광운대.석계역 신경제 거점지역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070100064220003412&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06〉

〈박춘희 송파구청장〉=『서울 송파구는 잠실동의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및 동남권유통단지, 위례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역이다.

송파구는 이같은 랜드마크 시설과 지역 관광 인프라 연계를 통해 서울 · 수도권의 관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59)은 "지역개발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수년 내 송파가 우리나라 지식기반 및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50만명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송파구로 250만 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들은 송파구에 관련 랜드마크 시설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경우 송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소 4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관광 수요의 폭발적인 발전을 예견하고 이미 지난 2012년 3월 올림픽공원, 방이맛골,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등을 아우르는 서울 최대의 잠실 관광특구를 지정받았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기존 4개의 관광특구(종로·청계천, 명동·남대문, 동대문, 이태원)의 방문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잠실관광특구는 서울 관광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송파구는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 관광활성화를 위해 옥외 영업 허용과 함께 관광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확충, 관내 숙박업소의 관광호텔 리모델링화를 통한 숙박시설 업그레이드, 외국인 대상 팸투어, 외국인 대상 관광마케팅 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개발 주체와 주민, 구청이 참여하는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상설, 운영해 주민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지식기반산업, 미래먹거리 허브로

송파구는 2대 미래 먹거리 사업은 관광거점 육성과 지식기반산업의 기반 구축이다. 분양이 완료된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는 정보기술(IT)융합 산업, 예술콘텐츠 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전시·관광(MICE)산업 등이 8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된다.

박 구청장은 “인근의 법조단지 및 오피스텔 등 수요와 맞물려 일반 상가 분양은 벌써 대부분 마무리됐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형 업무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거리형 문화 공간인 ‘컬쳐밸리’가 앞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귀띔했다.

거대 민간 자본의 투입과는 별도로 송파구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나 영세한 예술인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존 사회적기업허브센터와 일자리센터,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합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마련한 ‘중소기업청 지정 참살이실습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플로리스트 등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오는 2019년께는 송파구는 아파트촌 위주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어나 관광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은 외적 팽창에 걸맞게 사회복지 등 내실도 다져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110100097570005115&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10〉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서울 자치구 새 살림’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핫 이슈로 등장해 있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의 지방살림 챙기기도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1월 24일자 25면(지역면) 머릿기사로 ‘도봉구’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 4일 ‘강동구’ 7일 ‘노원구’ 11일 ‘송파구’를 잇따라 보도했다. 해당 자치단체장의 인터뷰 형태로 자치구를 소개하면서 인터뷰 사진도 실었다. 기사

는 자치단체 탐방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 치적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동 역세권 사업 본궤도』 『국제대회 건강 정책 최우수상 수상』 『동북선 경전철 조기착공』 『서울 최대의 잠실 관광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장의 사업 구상 혹은 치적 등을 알리고 있다.

소개된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단체장들이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이들 단체장의 장점은 '홍보'로, 역점사업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때문에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국민일보 2014년 2월 4일자 10면 「최성 고양시장/"시민들 행복·문화도시 자부심 갖게 할 것"」, 2월 6일자 10면 「이인재 파주시장/"국내외 기업 파주 러시 … 국제도시 도약 꿈"」, 2월 7일자 10면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아직 할 일 많아 … 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 2월 10일자 12면 「안병용 의정부시장/"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시 만들 것"」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민들에게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자부심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은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포부를 밝혔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제일주의 행정 구현, 신한류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 등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성하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한류 중심도시의 이미지도 완전히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보여준 고양시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최고의 일자리 창출도시로 인정받는가 하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페이스북 팬수 5만을 돌파하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와 시민들의 저력이 뒷받침됐다고 보았다.

"시장이기 전에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양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와지 볍씨'로 대변되는 5000년의 역사도시임도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인구 99만500여명을 기록한 고양시는 올해 '인구 100만 도시'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행정과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이 늘어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자연히 시장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고 최 시장은 강조했다. MICE 산업과 한류 방송영상 산업 중심지이자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고, 고양형 복지브랜드인 '고양 복지나눔 1촌맺기'의 정착 등이 이뤄질 것이

라는 설명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98766&cp=nv〉

〈이인재 파주시장〉=『전국에서 국·도비와 외자 유치를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꼽으라면 단연 첫 손가락은 경기도 파주시 몫이다. 지난 3년간 1조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2012년 이후에만 무려 2조 4000여억원의 외자를 끌어들였다. 여기에는 지역의 메리트와 함께 이인재 시장의 저돌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 시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파주를 일약 국제적인 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파주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파주 하면 임진각, 통일동산,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과 함께 개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단호히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진각 관광지를 1000만 관광객 시대에 어울리는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DMZ 세계평화공원의 파주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실질적인 통일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정 목표에 대해 이 시장은 '살기 편한 자족도시'라는 말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통일동산 지구와 산업단지 재개발, 다양한 교육지원,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 보강, 농업과 농촌개발 지원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유달리 큰 관심을 보였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확대,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등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으로 파주에는 소외계층이 없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10년 이 시장 취임 이래 지금까지 각종 대회와 평가 등에서 83억여원의 시상금을 받는 진기록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난관리'와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무한불성'(無汗不成·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이라는 사자성어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06360&cp=nv〉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익철(62·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3년여간 활동을 평가하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구 발전에 전념해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자부심은 임기 중 거둔 성과들에 기반한 것이다.

진 구청장은 우선 1조3000억원 규모의 우면지구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꼽았다. 그는 "서초 삼성타운의 2배가 넘는 이 부지는 당초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묶여 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서 "2010년 취임 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을 찾아가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한다'고 설득해 2년 만에 높이 10층, 용적률 360%가 됐고 결국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2015년 5월 완공되면 석·박사 1만명이 상주하는 첨단과학도시가 될 예정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옆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확정된 것도 자랑거리다. "3년 넘게 표류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대안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 끝에 의료원 이전비용 165억원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700병상이 넘는 대규모 의료원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날 겁니다."

이는 취임 직후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갖고 추진한 소통행정의 결과라는 게 주위 평가다. "소통의 핵심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반응하는 것"이라는 진 구청장은 "구 공무원들과 함께 토착비리 등 관료제 폐해를 척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서울시 도시정책지표 조사에서 2010~2011년 연속 행복지수 1위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올해 강남역 일대 및 사당역 주변 방배동 침수예방, 지능형 CCTV 운영

강화, 양육품앗이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방배동 '성뒤마을'의 합리적 개발도 관심거리다.

진 구청장은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하루를 1년처럼 생각하고 주민을 섬기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09788&cp=nv〉

〈안병용 의정부시장〉=『"모든 시민이 한 가족처럼 어울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경기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을 앞세워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안 시장의 시민 행복에 대한 집착은 지난해 시의 성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32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언급했다. 그는 "의정부시민들에게는 역사적인 자부심과 함께 경기북부 중추지역 주민이라는 의식이 있어 시정이 잘 먹힌다"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장가능성이 큰 도시"라고 밝혔다.

교수 출신인 안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생애 첫 도서관 만나기, 청소년 독서골든벨, 시니어 독서스쿨, 북 수레 이동도서관 등은 의정부만의 이색 브랜드다. 교육예산 비중을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이야말로 시민들을 온전히 수혜자로 만드는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미군부대로 뭉뚱그려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진 도시였다. 하지만 미군부대가 하나씩 떠나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 안 시장은 "반환되는 미군부대 부지에 품격 높은 콘텐츠들을 담아가면 의정부는 분명 미운 오리새끼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주민 삶의 질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는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21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했다. 주민행복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한데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한 주변 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 이용 전기 생산, 음식물류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재정수입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안인 의정부경전철과의 갈등 등도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017926&cp=nv〉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최성 고양시장, 이인재 파주시장,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각각 실었다. 기사는 해당 자치단체를 장점일변도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최성 고양시장을 다룬 기사는 『"전국 최고 일자리 창출 도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겠다."』『"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에 40% 이상, 교육분야에 5% 이상 편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에 매진할 계획"』이라는 최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고양시 활약상 대단』『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서 최우수상 수상』『전국 지자체 최초 페이스북 팬수 5만 돌파』 등의 표현으로 고양시와 최시장의 치적을 평가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을 다룬 기사는 『"국내외 기업들의 '파주 러시'는 현재진행형"』『"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최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이 시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이 시장 취임 이래 83억여원 시상금을 받은 진기록』『'재난관리' '청렴도'에서 전국 최고 지자체로 선정』『지난 3년간 1조원 이상 국 도비 확보』 등으로 이 시장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첫 문장을 『"4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진 구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다시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남역 주변 상습침수 개선 등 못다한 일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편집자도 큰 제목으로 「"아직 할 일 많아…대형사업 완성 4년은 짧다"」고 달았다. 기사는 이밖에 『행복지수 1위 도시 선정』 등의 표현으로 서초구와 진 구청장의 업적을 긍정 평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다룬 기사는 지난해 의정부시가 거둔 성과를 홍보했다. 기사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안전행정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거기다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 32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역점사업을 소개했고, 편집자는 이 가운데 안 시장의 말을 인용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행복도시 만들 것"」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칭찬일변도 소개하는 내용들이다. 비록 신년 인터뷰 성격이지만 보도시점과 그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4년은 짧다"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장들도 우회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4면 「미운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까지/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자전 에세이 '꼴찌교수' 출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6·4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의 자전 에세이 '꼴찌교수'(부제 꼴찌학생 서울대 강단에 서다·사진)가 출판됐다.

모 원장의 첫 번째 에세이집 '꼴찌교수'는 저자가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도전정신을 불태우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꼴찌교수'는 모 원장의 파란만장했던 학창시절에서 시작된다.

학창시절 방황하면서 성적은 꼴찌로 추락했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님이 아들의 학업을 위해 대구로 전학시킨 사연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전학 이후 모 원장은 뒤늦게 학업에 열중해 대학 진학에 성공한다.

모 원장은 당시 내무부에 입사,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역경제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내무부 지역경제국과 지역발전국에서 전국의 지역경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또 대학 교재로서 스테디셀러인 '지역경제정책론'과 '지역발전정책론'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전 세계 230개 도시를 돌아보며 견문을 넓히는 등 도전적 삶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8남매를 탈없이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 가족에 대

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다.

'꼴찌교수'출판기념회는 18일 오후 3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미된 공연형식의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5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6·4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이 '꼴찌 교수'라는 자전 에세이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다.

기사는 모 원장의 학창시절과 내무부 공무원 시절, 집필 활동 등을 『치열한 삶』『백조로 거듭 나게 된다』『도전적 삶』『애틋한 사랑의 감정』 등 감성적 표현을 곁들여 상세히 소개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모 원장보다 하루 앞선 2월 17일에 경쟁후보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는 등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줄을 이은 출판기념회 소식을 함께 묶어 보도했다. 포항시장 선거에는 여권에서만 모두 7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선별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4 신문윤리강령 위반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주 문〉

울산매일 2014년 2월 26일자 1면 「강길부-김기현-김두겸 지지율 박빙/새누리 울산시장 후보 경선 '총력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울산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3명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대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선기간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울산시장 출마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출마선언 예정인 강길부·김기현 의원 간 지지율 차이가 최대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후보 간 치열한 총력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정갑윤 의원의 울산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3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정 의원의 지지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정 의원의 지지층이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도 마의 '30%'대를 넘어서지 못한 채 '초반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여의도 연구원의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후보 간 크게 앞서 가는 후보가 없다"면서 "(타 시도와는 달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20%대에 달하는 무응답층"이라면서 "결국 조직력을 겸비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예비후보와 조만간 출마선언이

예고된 강길부·김기현 의원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림은 물론 각 후보 진영은 조사 결과에 따른 선거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실제 선거까지는 시간과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의 민심이 변화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이렇다 할 변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큰 지지율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두겸 예비후보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없이 지금부터 주타깃은 노동자·서민층이 될 것"이라면서 "무응답 비율이 높은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작고, 어렵고, 추운 곳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측은 '준비된 시장후보'임을 강조하며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강길부 의원은 "2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면서 "출마선언 이후 큰 그림의 공약발표를 통해 지지율 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적 공약을 통한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의 지지율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향후 출마선언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를 울산시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울산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3월초 출마선언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정책적 비전을 발표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율의 높낮음을 떠나 지지율이 우세한 쪽은 필승카드 마련을 위해, 낮은 쪽은 반전카드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 듯 후보별 지지도에 있어서는 특정 후보의 '대세론' 없이 다자간 접전 속에서 초반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확실한 조직력이 승부의 최대 관건으로 점쳐지고 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57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매일은 지난 2월 26일자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강길부·김기현 의원과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3명을 놓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 차이가 박빙으로 나타났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20% 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지지율 차이는 최대 5% 내외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비롯해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 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위 기사가 보도된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3자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강길부·김기현 두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선거결과 예측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7일 울산매일과 담당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매일은 위 기사와 관련한 해명이나 정정보도, 공개 사과 등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강길부·김기현 두 의원의 반발에다, 울산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앞선 조사결과까지를 감안한다면 담당 기자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거짓 소문을 기본적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담당기자가 애초부터 특정 후보자를 돕겠다는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도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정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제3조「보도준칙」전문, ⑤(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5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1일자 25면「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서구/젊은층 가구 많아 … 육아문제 해결에 역점」, 3월 12일자 27면「서울 자치구 새 살림/강서구/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으로 늘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월 21일자 강서구〉=『서울 강서구는 신혼가구나 아이를 가진 20~30대 젊은층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이들의 육아 문제 해결에 구정의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실제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어린이집 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입소 대상 영유아는 3만33명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은 425곳으로 전체 보육정원은 1만 6146명이다. 수용률이 전체 수요의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

■ 현재 어린이집 수용률 53% 불과

강서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을 포함한 어린이집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맞

벌이부부 등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0곳 이상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강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조성한 5곳을 포함해 총 34개소로 정원은 2891명이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17.9%에 불과하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매진해 2018년까지 60곳으로 현재보다 20곳 이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약 3500명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분담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은 물론 공동주택단지 내 건립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재개발 등 재정비구역 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공공시설 내 복합설치 등 다각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선 개인이나 종교시설 등 민간이 제공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의 민관 공동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3곳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강서구는 더불어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건물 신축 또는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 건립 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여건을 활용해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은 주택밀집지역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서구는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곳 이상 운영해 지역 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관내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맞벌이부부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21010021868001164 5&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20〉

〈3월 12일자 강서구〉=『서울 강서구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구정은 '도서관 중심도시' 구축이다.

관내 곳곳에 구립도서관을 개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는 '포켓도서관'을 대거 들일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민선 5기 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구정 목표로 정하면서 도서관 확충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4개에 불과하던 구립도서관은 현재 7개로 늘었다. 서울지역 상당수 자치구에 구립도서관이 3~5곳임을 고려하면 많은 수준이다.

■'도서관 천국'으로 탈바꿈

11일 강서구에 따르면 탄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특성화된 도서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2년 등빛도서관과 강서영어도서관을 건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곰달래도서관까지 3개의 구립도서관을 신설했다. 이들 도서관의 회원 수만 해도 7만7000명이 넘고 지난해까지 이용객은 130만명에 육박했다.

또 지난 2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1동 1작은도서관' 확충 사업도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화곡3동 책마루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관내 20개의 모든 동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다.

노 구청장은 "주민이 언제든지 도서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도서 대출과 열람에만 머물러 있던 지역 내 모든 동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을 개관할 계획이다.

■복합도서관 운영 통해 내실화

동 주민센터 건물 안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 주민의 호응도 좋다. 지난해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구민이 130만명에 달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11만권이 넘는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펼친 결과다. 작은도서관은 문화복합센터 기능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의 고유기능은 물론 세미나, 연주, 상영, 전시회까지 가능하다.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소통과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 여름방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부모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네일아트·독서논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어린이에게는 또 하나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강서구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도서관마다 전문사서를 배치했다.

노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 운영해 각종 행사 및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컨설턴트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2010112590005884&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자치구 새 살림'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20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서구와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소개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포맷으로 노 강서구청장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 탐방 형태지만 실제는 각기 다른 내용의 노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또한 단체장의 역점사업과 발전 구상을 다루고 있다.

2월 21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60곳으로 늘려 젊은층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또 공공주택단지의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해 구립화한다는 계획도 보도했다.

3월 12일자 기사에선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40곳으로 늘려 강서구를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정 목표를 소개했다. 또 작은 도서관을 모든 동에 설치해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단체장 구상도 전했다.

그런데 노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이다. 때문에 기사에 소개된 노 구청장의 장점은 '홍보'로, 역점사업은 '공약'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 강서구가 기사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도

서관'의 설치 목표연도 2018년은 올 7월부터 시작될 민선6기와 겹쳐있어 사실상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를 차례로 소개하는 기획에 특정 자치단체와 장을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 다루는 것은 보도 관행상 보기 드문 경우다. 파이낸셜뉴스가 위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밝힌『새해를 맞아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구청장들의 구정 방향을 살펴본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재되고 있는 위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기사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나 걸쳐 특정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주 문〉

국민일보 2014년 3월 4일자 10면「성장현 용산구청장/"명문학교 육성 … 강북 교육 1번지 만들 것"」, 3월 7일자 10면「차성수 금천구청장/"역점뒀던 교육·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용산의 학교들이 명문의 조건을 갖춰 교육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현(59·사진) 서울 용산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용산을 '강북 교육 1번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3일 밝혔다.

학교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으며,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를 살리고 입학사정관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산·학 업무협약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에도 신경을 썼다고 성 구청장은 소개했다.

용산구는 민선 5기부터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15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물론 체육, 예능,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5개 언어와 문화를 월 2만원에 배울 수 있는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보습학원연합회와 연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학원 수강권을 제공하는 '호프업 드림업(Hope Up Dream Up)'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과 '현장'은 용산 구정의 주요 키워드다. 성 구청장은 취임 이후 매주 목요일 구청장실 문을 열어 구민들을 만났다. 지난 3년여간 구민 1058팀 1872명이 찾아와 1021건의 민원을 제시했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해결됐다. 또 현장을 누비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해왔다. 그는 "지역·계층·정당 간 갈등을 허물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를 위해 달려 온 게 민선 5기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원효로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성 구청장은 "주민 동의 없이 마권 장외발매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발매소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구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99496〉

〈차성수 금천구청장〉=『"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대 부지 개발, 교육·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성수(56·사진) 서울 금천구청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5기 임기 동안 하드웨어(지역개발)와 소프트웨어(교육·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고 중심기능도 미흡한 데다 도로와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공단의 72%가 속할 정도로 서울에서 중소제조업, 특히 IT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밀집돼 있는 데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해 교통여건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미개발지인 대규모 나대지가 10만평이나 되는 것도 강점으로 꼽았다.

차 구청장은 지역의 이런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취임 전 20억원 수준이던 교육 관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렸고 교육담당관 신설 및 직원 확충, 멘토장학금 운영,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성적향상도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 단연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고 이는 인구유출 감소 및 군부대 부지 아파트 분양 호조 등 지역개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 뒤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으로 금천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2017년말까지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아파트 3200여가구, 오피스텔 1200여실, 업무·상업시설, 관광호텔, 초등학교와 경찰서, 공원,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가 도입됐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개발에서 소외된 단독주택 위주의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11113〉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신년 초대석'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성장현 용산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이들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강북 교육 1번지' 정책 추진』『100억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로 매년 10-15억원 적립해 지원』『원어민 외국어 교실 운영』등 성 구청장의 역점사업을 보도했다. 또 『무료 학원 수강권 제공하는 '호프업 드림업'사업 호응』『매주 목요일 시민과의 만남 통해 1021건 민원 청취,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 해결』 등으로 성 구청장의 치적을 평가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다룬 기사는 제목을 「"역점뒀던 교육·복지 개선사업 마무리 원해"」로 달고, 본문 첫 문장을 『"4년 더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옛 군부대 부지개발, 교육 복지 여건 개선 등 임기 중 추진해 온 역점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차 구청장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재선 희망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재선이 되면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며 사실상 선거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는 이밖에 『20억원 수준이던 교육관련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등의 기술로 금천구와 차 구청장의 치적을 긍정 평가했다.

이들 단체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때문에 위 기사들은 자치단체장에 신년 인터뷰이지만 보도시점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내용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실제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4년 더 기회를 달라"며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성장현 구청장도 자신의 치적과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이들 단체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 입장에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의

혹을 살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2013-1116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3년 4월 11일자 B5면「갤럭시 스튜디오 in Campus 크리슈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들다」기사의 제목 및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모빌리아르부스(Mobiliarbus)!" 해리 포터가 마술봉을 들고 주문을 외치자 의자가 스르르 움직인다. 삼성 '갤럭시 S펜'을 뽑아들자 축구로봇이 리오넬 메시처럼 볼을 몰아 상대의 골문을 두드렸다.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강풍 속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광운대 캠퍼스에 설치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로봇축구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 부스에서는 응원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옆에서는 사진반 학생들이 'S펜'으로 크리에이티브 포토를 제작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대형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체험 존에서는 학생들이 갤럭시 노트Ⅱ와 갤럭시 노트10.1의 '이지 클립'을 활용해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낸 학교 홍보 티셔츠를 만들고 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전공서적을 손에 든 학생들이 노트10.1의 필기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다.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광운대 경영학부 3학년 이상덕 씨(25)는 "이렇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며 "S펜만 있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행사는 이미 3000회를 돌파했다. 방문 고객이 5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 이 정도면 '국민 체험 프로그램'이라 부를 만하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제품의 혁신적인 성능을 소비자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탄생했다. 개별 부스에서는 '갤럭시 앰배서더'들이 갤럭시 제품을 활용해 만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객들과 소통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단순한 제품 체험 공간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고객들이 갤럭시 시리즈의 독창적인 사용법을 찾아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생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크리슈머(Cresumer Creative와 Consumer의 합성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크리슈머는 제품의 가치와 스토리를 찾아내 주도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이끌어 간다. 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생명력이 길고 영향력도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는 제품 혁신에 발맞춰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진화 중"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포토&」라는 문패를 달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광운대 캠퍼스 안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대서특필했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삼성전자가 생산한 '갤럭시 노트Ⅱ'와 '갤럭시 노트10.1' 등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다.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는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되는 곳이다』 등 감성적인 문구를 곁들여 '갤럭시 스튜디오'와 삼성전자 제품들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으며, 「갤럭시 스튜디오 in Campus 크리슈머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들다」라는 큰 제목에 덧붙여 기사 중간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혁신적 기능 체험」, 「국민 체험 프로그램」, 「크리슈머와 새로운 가치 창조」 등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작은 제목들을 돋보이게 달았다.

또 「Samsung」 로고와 제품 브랜드 등이 노출된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3년 3월 22일자 별지섹션 「물의 날, 똑똑해진 세탁기」, 4월 3일자 별지 섹션 「명품의 향기」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중앙일보의 3월 22일자 「물의 날, 똑똑해진 세탁기」 섹션은 삼성 버블샷 세탁기를 홍보하는 기사 4건과 관련 사진 4건, 그래픽 2건, 절수 안내 기사 1건, 삼성버블샷 세탁기 전면 광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3일자 「명품의 향기/셀레브리티의 잇 아이템 구찌」 섹션은 구찌 상표의 가방과 구두, 구찌 회사 등을 홍보하는 기사 5건, 구찌가 제공한 관련 사진 14

건, 구찌 전면 광고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섹션을 각각 특정 브랜드 제품의 홍보를 위해 할애한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이고 노골적인 섹션 제작은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지면 제작과 광고 수입이라는 상업적 거래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기사의 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상품과 업체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기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4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3년 5월 10일자 주말섹션 LET'S (Leisure & Outdoor) 중 C1면「브라이틀링 제트기 탑승 비행체험 환상의 순간들/기체 치솟자 머릿속 피가 목밑으로 쏠렸다」제목의 기사, C2면「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 브라이틀링 정체성이 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東亞日報는 주말 별지섹션 LET'S (Leisure & Outdoor)의 1, 2면을 할애해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 브라이틀링을 다루었다.

東亞日報는 브라이틀링 사가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방한해 제공한 제트기의 취재기자 시승기를 1면에 게재했고, 2면에는「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 브라이틀링 정체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브라이틀링 시계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브라이틀링 사는 평소 항공기와 시계의 정밀함을 자사의 정체성, 즉 상징적인 홍보 이미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취재기자가 브라이틀링 시계를 홍보하기

위해 이 회사가 제공한 제트기까지 시승하면서 그 시승기를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 형태의 홍보기사는 신문사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상품과 업체에 유리한 편파적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김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3년 5월 6일자 18면「"포기했던 허리뿐만 아니라 화병도 고쳤죠"/침도문화보급 캠페인 ⑧허리수술 환자들」기획 제목의 관련 기사 4건, 5월 13일자 18면「부부·남매가 함께 깨끗한 세상 만났다/안경 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 ④가족 노안수술」기획 제목의 관련 기사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기사들은 일간스포츠가 펼치고 있는 '침도문화보급 캠페인'과 '안경·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과 관련해 각각 매월 1차례씩 전면을 할애해 내보내고 있는 기사들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캠페인 시작 이후 이제까지 '침도문화보급 캠페인'은 서울원광한방병원과 이건목 원장을, '안경·돋보기 없는 세상 캠페인'은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이러브안과와 박영순 원장을 선전하는 광고와 다를 바 없게 지면을 꾸몄다.

위 지면에서도 일간스포츠는 각각 3건의 치료체험 사례를 홍보성 짙은 문구

를 섞어 상세히 소개하면서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치료와 관련한 문답 박스의 제목도 「이건목 원장 Q&A」, 「박영순 원장의 Q&A」라고 각각 달았으며, 지면 위쪽에는 원장과 환자가 함께 찍은 큼지막한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들은 특정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4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스포츠경향 연재만화 「노숙왕」(박인권 작품) 2013년 5월 3일자 17면 제20화 「아주 특별한 초대」 8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만화는 주인공이 승용차를 모는 장면에서 승용차 앞 부분에 'KIA'라는 특정 자동차회사의 로고를 뚜렷하게 내보냈다.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간접광고(PPL)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문제의 장면은 특정업체의 영리를 돕기 위해 묘사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0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별지섹션 'TOUR WORLD' 2013년 6월 3일자 B3면 「일본 북알프스 신비에 빠지다」, 6월 10일자 B3면 「빼곡한 돌기둥 절경」, 6월 17일자 B2면 「에메랄드빛 바다·하얀 백사장서 캠핑을」 제목의 기사 등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매일경제는 8면 짜리 별지 섹션 'TOUR WORLD'에 국내외 관광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게재하면서 상당수 기사의 말미에 특정여행사 한 곳을 추천했다. 해당 국내외 관광지를 오가는 여행사 상품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곳만 기사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상 특정여행사를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매일경제는 지난해에 같은 방식으로 별지섹션 'TOUR WORLD'를 제작하면서 여행안내기사에 각각 관련 상자기사를 물리고 이 상자기사를 통해 특정 여행사를 소개해오다 본 위원회로부터 두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올들어서도 유사한 홍보성 지면제작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신문윤리위원회 제862차, 제863차, 제865차 회의에서 각각 주의 조처를 받았다.

이러한 기사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위해 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버리고 독자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4.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5.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7.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東亞日報 2013년 5월 24일자 C3면 「LET'S Outro」 면의 기사들, 문화일보 5월 24일 19면 「기획특집」, 6월 13일자 26·27면 「특별기획」의 기사들, 헤럴드경제 5월 28일자 20·21면 「해외투자도 '스마트 시대'」, 5월 30일자 19면 「행복한 老테크」 면의 기사들, 경향신문 5월 29일자 18면 「특집」, 6월 14일자 19면 「특집」, 6월 17일자 20면 「자동차」 면의 기사들, 머니투데이 6월 13일자 18면 「진화하는 보험상품」, 6월 14일자 25면 「하반기 유망종목」 면의 기사들, 매일경제 6월 13일자 C4·C5면 「톡톡 이 상품」 면의 기사들, 세계일보 6월 13일자 19면 「부동산분양 특집」, 6월 17일자 24·25면 「병원특집」 면의 기사들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각각 1개면 또는 2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장점일변도의 기사로 다루었다. 위 신문들은 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홍보함으로써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를 제작,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정기업과 상품·업체에 대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3년 6월 10일자 15면「기업&피플 인사이트」면 기사 7건, 6월 14일자 15면「기업&피플 인사이트」면 기사 8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기업&피플 인사이트」면 전면을 할애해 특정 기업과 상품, 대학, 병원, 인물 등 다양한 대상들을 광고와 다름없이 홍보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기사들은 작성자의 크레디트도 없이 특정 업체나 상품, 인물 등을 사진이나 로고 등을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나 제품, 인물, 그리고 해당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8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2.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3.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 문〉

국제신문 2013년 5월 31일자 「바다의 날 특집/'아시안 게이트웨이' 부산항서 만나요」 별지 섹션, 每日新聞 5월 31일자 「영남이공대학교 입학 특집」 별지 섹션, 부산일보 5월 31일자 「바다의 날 특집/바다가 우리의 미래다」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대학이나 기업들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위 신문들은 홍보기사를 게재한 대학과 기업들의 광고를 섹션 지면에 함께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과 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대학과 기업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3년 7월 13일자 3면 「"수성 고량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영남일보는 고량주를 생산하는 업체인 '수성고량주'의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관련 회사와 제품을 전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했다.

기사는 '수성 고량주'의 부침의 역사를 소개하고, '수성고량주'의 맛과 향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고 있다.

편집자는 「"수성 고량주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라는 큰 제목과 「그 술, 지키고 싶었다」 「향만 맡아보십시오」 「중국인들도 "띵호와"」라는 작은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문구다.

이 지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사진 역시 기업의 CEO를 광고모델로 활용하는 광고기법을 연상케 하고 있다. 사진 속 이승로 사장은 수성고량주가 그동안 생산한 모든 제품을 앞에 최근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 고량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제작방식은 독자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더러 특정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203.228.23.102/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713.010030752000001〉

▲ 2013-122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7월 18일자 「헬스경향」 별지 섹션, 중앙일보 7월 18일자 「시선집중」 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5일자 「조선비즈 특집/스마트클라우드쇼」 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31일자 「Real Estate」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별지 섹션의 일부 지면에 걸쳐 특정 업체, 단체, 상품에 대해 장점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3.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8월 27일자 23면·9월 10일자 22면·9월 11일자 14·15·18·19면 「기획」 면제목의 기사 30건, 헤럴드경제 8월 27일자 22면 「가을 분양시장」 면제목의 기사 7건, 머니투데이 9월 2일·9월 3일·9월 4일자 18·19면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 면제목의 기사 48건, 매일경제 9월 12일자 B4·B5면 「톡톡 이 상품」 면제목의 기사 10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발행일에 따라 각각 1개~2개면 전체를 할애하여 특정한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장점 일변도의 기사로 다루었다. 위 신문들은 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업체들을 홍보함으로써 광고와 다름없는 기사를 제작,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특정기업과 상품·업체에 대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정보를 편파적으로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3.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4.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8월 20일자 「취업 잘되는 전문대학」 별지 섹션, 대구일보 8월 28일자 24면 「"강한 생명력 탁월한 해독력 … 통풍 성인병 치료효과"」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9월 5일자 9면 「특집/경북의 신성장 동력 '물 산업'/세계 3대 국제물주간 행사로 육성 … 동아시아 대표 브랜드화」 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9월 6일자 10·11면 「기획/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6좌 등반/결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부산일보는 '2014 전문대 수시전형'을 주제로 12개면의 별지섹션을 제작하면서 9개 전문대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대학 광고도 함께 실었다.

대구일보는 1개 면을 할애해 '미산약초농장'의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이 농장이 생산하고 있는 어성초 등 약초를 홍보하고, 같은 지면에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영남일보는 특집 1개 면을 할애해 '경북의 물 산업'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지면에 관련 광고를 함께 실었다.

光州日報는 2개 면을 할애해 아웃도어 업체인 밀레와 공동 기획한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에 대한 결산을 기사를 게재하면서 밀레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밀레 광고를 같은 지면에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의 영리와 해당 대학, 자치단체, 업체의 홍보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6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9월 23일자「버버리 트렌치코트」, 9월 27일자「불가리」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7일자「Carl Schmidt」별지 섹션, 9월 30일자 B5면「포토&」제목의「버버리 아트 오브 더 트렌치 서울을 수놓다」제목의 기사와 사진들, 중앙일보 9월 30일자「시간의 장인, 까르띠에」, 10월 18일자「하이 주얼러, 불가리」별지 섹션에 대해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각각 특정 브랜드의 상품 홍보를 위해 별지 섹션을 맞추어 제작하거나 1개 면 전체를 특정 브랜드 홍보지면으로 꾸몄다.

朝鮮日報는 두 차례에 걸쳐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해 각각 영국 의류 브랜드 버버리의 트렌치코트와 이탈리아 보석 브랜드 불가리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기사와 사진물, 광고를 게재했다. 또 東亞日報는 독일 주방기구 '칼 슈미트'의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해 홍보 기사와 사진물, 광고를 게재했으며 한 차례는 본지면 1개 면에 '포토&'이라는 면 제목을 내걸고 영국 의류제품 버버리의 트렌치코트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중앙일보 역시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시계 브랜드 까르띠에의 제품과 이탈리아 보석 브랜드

불가리의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각각 제작, 홍보기사와 사진물, 이들 제품의 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사가 오직 특정 상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섹션, 또는 별도의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신문 윤리를 전적으로 위반하는 행태이다.

이러한 지면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신문의 기본사명이라 할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독립,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언론의 독립」,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6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3년 10월 21일자 18면「"어떤 각도에서 사진 찍어도 자신 있어요"/아름다운 얼굴 만들기 안면윤곽수술」제목의 기사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제목의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은 마르지 않는다. 예뻐질 수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한다. 그러나 '성괴' '강남미인도' 같은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 성형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성도 만만치 않다. 수술 시간이 길면 그

만큼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이제는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장인 환자가 주말에 시술받고 다음주 초에 출근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성형수술 18년 경력을 가진 김동하 비포(BEfor)성형외과 원장의 'SSQ안면윤곽술'은 사각턱 수술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는다. 짧은 수술 시간은 여러가지 장점을 동반한다. 성형수술을 한 지 모를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준다. 지난 16일 안면윤곽술 시술을 참관한 후 이 수술을 받은 세 명의 환자를 만났다.』

〈http://isplus.joins.com/article/810/12909810.html?cloc=〉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전문과 관련 기사들은 일간스포츠가 새로 시작한 '아름다운 얼굴 만들기 캠페인' 지면에 실린 것들로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기사들이다.

일간스포츠는 그러나 김동하 비포(BEfor)성형외과 원장이라는 특정 인물과 병원을 선전하는 광고와 다를 바 없게 지면을 꾸몄다.

사례로 내세운 여성 환자 3명에 대한 인터뷰 모두가 김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얼굴 고민을 해결했다는 내용이고,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문답 박스의 제목도 「김동하 원장 Q&A」라고 달았다.

기사들은 '수술 후 자연스러운 모습에 기뻤다'는 식의 홍보성 문구로 일관했을 뿐 수술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지면 중간에는 김 원장과 수술을 받은 여성 2명이 함께 찍은 큼지막한 사진과 더불어 환자 2명의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는 특정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0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29일자 「자동차 특집/2013년 가을 지상모터쇼」 별지 섹션, 每日新聞 11월 5일자 16, 17면 「자동차」 면 제목의 기사 7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자동차를 주제로 별지 섹션과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해당 지면에 출시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장점일변도의 홍보기사를 게재했다. 게다가 위 신문들은 홍보기사를 게재한 자동차 중 상당수 광고를 별지 섹션 및 특집 지면에 함께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기업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의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2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 문〉

중앙일보 2013년 12월 10일자 「척추·관절 으뜸 지킴이」 별지 섹션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중앙일보는 '세바른 병원'이라는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 대해 장점 일변도의 기사와 관련 사진으로 다룬 4면짜리 별지 홍보섹션을 제작했다. 중앙일보는 1·2·3면에 관련 기사와 사진, 그리고 광고를 게재했으며 4면에는 이 병원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신문사가 경제적 대가를 위해 오직 특정한 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는 것은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독립,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언론의 독립」,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한국경제 2014년 1월 8일자 B6~B7면(「화제의 분양 현장」)의「층수 달리해 조망권 확보 … 교통여건 우수/울산 범서 사랑의 부영」등 13건의 기사, 서울경제 1월 13일자 B1면「'홍행 보증수표' 위례 동탄2 잡아라」·B3면「위례 동탄2 올 7,000여 가구 분양」및「내달 분양 스타트 이곳을 주목하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경제는 부동산 면에 부영주택이 울산 범서지구에 분양하는 '울산범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비롯해 '오천 서희스타힐스'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DMC 파크뷰 자이' 아파트 등에 대해 사진을 곁들여 장점만 일방적으로 서술했다.

서울경제는 위례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를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또 편집자는 「'홍행 보증수표' 위례 동탄2 잡아라」, 「뜨거운 청약 열기 예고」 등 광고를 방불케 하는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54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경북매일 2014년 2월 4일자 12면 「눈꽃산행 필수 아이템 챙기셨나요?/■겨울철 등산 필수품 제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LG패션의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라푸마는 올 겨울 눈꽃산행을 계획하는 이들의 안전한 등산을 위한 필수품을 제안한다.

겨울 산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줄 헤비 다운점퍼가 중요하다. LG패션 라푸마의 원정복은 완벽한 방풍성과 우수한 발수성, 최고의 투습성을 지닌 윈드 스타퍼 2L원단을 사용해 외부로부터 칼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내장된 충전재가 젖지 않도록 지켜준다.(중략)

스패츠(spats)는 등산화 속에 눈이나 흙, 모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목에 차는 커버장비로 이물질뿐만 아니라 바람도 막아줘 보온 효과를 극대화 해준다. 라푸마의 스패츠는 방수, 투습, 통기성으로 유명한 소재인 고어텍스가 사용된 제품으로 언제나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해주며 패커블 포켓이 따로 구성돼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등산화 바닥에 부착해 쓰는 아이젠은 겨울 산행의 필수 아이템으로 빙판이나 다져진 눈길을 걷는 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지녔다. 라푸마 노말 체인 아이젠은 전, 후면 분리형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경량 피그로 편안한 착용감과 접지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우수한 내구성의 고탄력 고정밴드로 탈착이 용이하다.(후략)』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2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매일은 겨울철 '눈꽃산행'에 필요한 등산복과 장비 등을 안내하는 취지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시종일관 LG패션의 '라푸마'라는 특정 브랜드 상품만을 돋보이게 소개했다.

기사는 『완벽한 방풍성과 우수한 발수성, 최고의 투습성』『탁월한 복원력』『보온효과를 극대화』『쾌적한 착용감』『편안한 착용감과 접지력』 등 광고 카피를 연상케하는 판촉성 문구를 곁들여 '라푸마' 제품을 홍보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나 해당 신문사의 영리를 위해 기획·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2월 25일자 「자생한방병원」 별지 섹션, 朝鮮日報 2014년 3월 3일자 「버버리」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각각 '자생한방병원'이라는 특정 병원과 '버버리'라는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기사와 관련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전국 체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을 주제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 병원의 시술, 치료법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생 체험기'를 싣고 비수술 치료를 홍보했다. 해당 지면에는 이 병원을 안내하는 광고를 실었다.

朝鮮日報는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를 주제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버버리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는 이 버버리 광고를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 병원 또는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으로,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병원과 기업만을 위한 섹션으로 이 병원과 기업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3년 8월 4일자 「[사진]아이파크몰 '더위와 한판승부,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 제목 등 7건의 사진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한창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워터파크에서 어린이들이 악당 캐릭터로 분장한 도우미들과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매 주말 오후 2시30분, '여름 악당과의 한판승부,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http://www.mt.co.kr/photonews/photovod_view.html?no=2013080413415596 90&cate=4000&cType〉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특정 업체의 워터파크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사진을 제목만 약간 바꾸고 같은 사진 설명을 달아 6분 사이에 8차례

게재하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종류의 물놀이 시설 가운데 특정 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네이버 기사 목록 난 캡처

▲ 2013-3039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11월 25일자「푹 자고 잘 먹는데 몸이 허하면 경옥고 한 번 복용해보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푹 자고 잘 먹는데 몸이 허하면 경옥고 한번 복용해보세요

[중앙일보] 입력 2013.11.25 00:10

왕실에서 애용한 3대 명약

인삼·생지황·복령·꿀로 구성된 경옥고는 피로회복·혈액순환·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인 전통 한방처방이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갈망이다. 중국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는 데 집착하고, 현대인이 각종 영양제와 건강·보양식을 챙겨먹는 이유다. 우리의 옛 선조 역시 무병장수를 위해 '이것'을 복용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최고의 명약'으로 꼽은 경옥고(瓊玉膏)다. 허준은 "27년 동안 먹으면 360세를 살고 64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500세를 살 수 있다"며 경옥고의 효능을 높이 평가했다. 급격한 추위로 몸을 보하는 노하우가 절실한 초겨울,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통 한방처방 경옥고의 효능을 알아본다.

경옥고는 공진단·청심환과 더불어 3대 한방 명약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건강을 위해 바쳐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왕실과 고위 양반층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귀한 보약이었다. 원광대 약학과 손동환 교수는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 시조 쿠빌라이칸은 원기회복을 위해 평생 경옥고를 먹었다고 전해진다"며 "얼굴(건강)을 옥처럼 가꾸기 위해 먹는다는 의미에서 '경옥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경옥고를 구성하는 약재는 인삼·생지황·복령·꿀이다. 이를 한데 섞어 오랫동안 끓이면 걸쭉한 액체 형태의 경옥고가 완성된다. 손 교수는 "각 약재만으로도 좋지만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숙성되면서 효능이 배가 된다"고 말했다.

경옥고의 효능은 『동의보감』에 상세히 기록돼있다. '양성연년약이(養性延年藥餌,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편에서 "정(精)과 수(髓)를 보충하고 허한 것을 채워주며 진기를 고르게 한다. 원기를 보해 늙은이를 젊게 하고 온갖 병을 낫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이 좋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진다.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오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진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허준은 ‘성약(聖藥)’이라 표현할 정도로 경옥고를 최고의 약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피로회복·혈액순환·면역력 증가에 효과

경옥고가 내세우는 효과는 피로회복이다. 손동환 교수는 “푹 자고 잘 먹어도 항상 피로한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생약 중의 왕으로 꼽히는 인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의 흡수를 돕는다. 항피로·항스트레스 작용이 매우 활발해 원기회복에 탁월하다.

생지황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예로부터 허약 체질·토혈·코피·자궁 출혈·생리불순 등에 사용해왔다. 피를 맑게 하고 조직 내의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복령과 인삼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복령은 쇠약해진 원기를 보충하고, 위장·비장의 기력을 돕는다. 손 교수는 “요즘 같이 갑작스런 추위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에 더욱 좋다”고 말했다. 꿀(봉밀)은 특유의 해독작용으로 신체 곳곳의 통증을 감소시킨다.

손 교수는 “이 밖에도 경옥고는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갱년기증후군·만성변비·지구력 증강·다이어트 공복감 해소에 좋다”며 “한마디로 허약한 몸을 두루 튼튼하게 만드는 명약”이라고 덧붙였다. 타고난 허약체질이거나 질환·수술로 체력이 떨어진 사람, 스트레스·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산후조리 중인 임산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만성위장병 환자 등에 권할 만하다.

최근에는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입증됐다. 경희대 약대 류종훈 교수팀이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시킨 쥐에게 1일 1회씩 7일간 경옥고를 투여하고 단기기억·사물인지기억을 측정했다. 그 결과, 유의적인 기억력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손 교수는 “기억력이 감퇴하는 노인에게 치매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없는 게 특징, 복용 시 쇠수저 피해야

경옥고를 제조하려면 상당한 정성이 필요하다. 80~9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3~5일 동안 밤낮으로 중탕해야 한다. 경옥고가 대중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제조기법을 재현하면서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중 원광제약은 70년의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보화 경옥고'를 선보였다. 경옥고 특유의 이물감을 제거해 목넘김이 좋다. 종양억제인자(TNF)의 역할을 하는 신규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손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를 통과한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모든 것을 식약처가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경옥고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하루 2회 공복에 약 20g을 수저로 떠먹거나 미온수에 타먹는다. 개봉 후 변질을 피하려면 냉장 보관하고, 쇠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132214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전통 한방 처방약인 경옥고의 효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문헌적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어 작성된 위 기사는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사 말미에 특정 제약사의 경옥고 제품을 소개하였다.

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성분으로 제조한 다수의 다른 제약사의 경옥고가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사의 제품만을 상품명까지 적시해 소개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려는 보도하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 위 기사가 비록 건강관련 기획물의 일부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배제하고 특정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

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3년 12월 19일자 「이제는 新중년시대]허리통증보다 무서운 수술 공포 … 고주파로 말끔히 제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강남초이스병원

기사입력 2013-12-19 03:00:00 기사수정 2013-12-19 03:00:00

가수 휘성(왼쪽)은 최근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다 고주파 특수 내시경 치료술을 받고 증상을 말끔히 털어냈다. 휘성이 시술을 담당한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함께 웃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최근 KBS 2TV '불후의 명곡'과 JTBC '히든싱어'에서 우승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휘성(31). 하마터면 그는 군 제대 뒤 꿈꾸던 연예계 활

동을 재개하지 못할 뻔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생활을 하면서 악화된 허리통증 때문이었다.

제대 뒤 병원을 찾은 휘성에게 내려진 진단은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말기였다.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다. 국소 마취 뒤 미세 특수 내시경으로 염증 부위의 병변을 제거하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그 결과 휘성은 통증을 말끔히 씻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인 추간판(디스크)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삐져나오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추간판은 평소 등뼈에 유연성을 더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추간판이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이 일어난다.

이 병의 주된 원인은 노화다. 척추의 노화는 이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이때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 막에 균열과 파열이 나타난다. 이처럼 이미 추간판과 주변 조직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추간판 막이 찢어지고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병이 악화된다.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심각한 요통이다. 탈출한 추간판이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때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도 다반사다. 심할 때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지마비, 대소변 기능 및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

치료법으로는 크게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들 수 있다. 초기 증상이거나 환자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소염 진통제 복용, 보조기 착용, 열·초음파 치료, 피하신경 전기 자극 등이 있다. 치료사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들어 척추뼈를 바로잡는 '도수감압치료'와 최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감압치료' 역시 요즘 각광받는 치료법이다.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인 치료를 3개월 이상 실시해도 효과가 없는 중증 환자,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때 실시한다. 기

존에는 추간판 탈출 부위를 직접 절개해 수술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미경, 내시경, 레이저 등을 이용한 수핵 절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도 늘어가는 추세다.

휘성이 받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강남초이스병원이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시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뿐만 아니라 재발하거나 아예 터져버린 추간판과 퇴행성 협착증에까지 치료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수술 외적 요법으로 꼽힌다.

이 병원은 또 노인이나 고혈압 당뇨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시술 받을 수 있는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함께 시술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 마취 아래서 1.5mm 굵기의 미세 내시경을 아픈 부위에 집어넣어 돌출된 추간판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쏘면서 염증 부위를 제거한다. 추간판 탈출증에 동반된 신경근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배우 윤계상 씨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잠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은 직후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다. 수술이 두려운 환자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허리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벼운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매일 20~30분 정도 평지나 낮은 언덕을 걷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특히 권장된다.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몸에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 한다. 무리해서 허리를 억지로 비틀거나 구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앉을 때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엉덩이를 등받이에 대야 한다.

잠잘 때는 단단한 바닥을 고르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돌아누워서 자는 게 허리 건강에 좋다. 흡연은 요통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금연하고 뚱뚱한 사람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기자 irontiger@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31218/59638957/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목·허리디스크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이라는 특정병원의 수술법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인기가수 휘성이 위 병원에서 디스크 시술을 받게 된 사연과 담당 의사의 진단과 시술 및 효과를 언급한데 이어 위 병원의 또 다른 시술법(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소개한 뒤 전문가의 입을 빌려 예방법을 안내하는 등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기사에서 "3년 전 국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언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위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정병원의 시술법만을 과도하게 소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욱이 동아닷컴은 2013년 11월 27일자 「[첨단의학을 달린다] 목 허리 디스크질환 고주파로 10분에 끝낸다」, 2013년 8월 28일자 「[헬스&뷰티] 참기힘든 허리·목 통증 … 10분 고주파 시술로 한방에 잡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 이름만 다를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두차례 보도하였고, 2013년 5월 22일과 4월 24일에도 비슷한 형태로 위 병원을 집중 소개하는 내용을 연거푸 보도하였다.

특히 앞서 보도한 4건의 기사에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 역에 있는 본원 외에 홍대입구 역에도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했다"는 내용을 실어 마치 이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으로 특정병원을 여러차례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뉴스 1-10 / 34건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검색결과 자동고침 시작 언론사선택

[첨단의학을 알린다] 목 허리 디스크질환 고주파로 10분에 끝낸다 동아일보 | 5일전

강남초이스병원 [동아일보] 유명 가수 휘성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조교로 근무했다. 유격훈련 시범 도중 4번과 5번 요추 사이의 추간판이 빠져나오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 휘성은 1년 전에 **강남초이스**병원에서...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헬스&뷰티] 참기힘든 허리 목 통증… 10분 고주파 시술로 한방에 잡는다

동아일보 | 2013.08.28 (수) 오전 3:03

강남초이스병원 [동아일보] 가수 휘성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조교로 군복무를 했다. 약 1년 전 유격훈련 시범을 보이던 도중 허리와 주변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강남 초이스**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헬스&뷰티] **강남초이스병원** '새로운 디스크 치료' 동아일보 | 2013.05.22 (수) 오전 3:03

미켄 수술없이 치료… 다음 날 출근 가능 **[동아일보]** 눈을 뜨고 일어서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극심한... **강남초이스**병원은 3년 전부터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해왔다. 병원 의료진은 그동안의 치료 경험을...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헬스&뷰티] 삐져나온 디스크, 마취 후 다시 안으로… 당일 퇴원 가능

동아일보 | 2013.04.24 (수) 오전 3:05

척추 관절 전문 '**강남초이스병원**' **[동아일보]** 유명 연예인인 Y 씨는 얼마 전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한 달 정도 앓다가 결국 서울 **강남**의 유명한 척추병원과 대학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

네이버에서 보기 | 관련기사 보기 | 이 언론사 내 검색

〈강남초이스병원 소개기사 목록〉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 참조〉

3. 사회적 책임

▲ 2013-1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3년 4월 9일자 3면 「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 … "현안 침몰 위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사무실. 지난달 28일자로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한 김일수 서기관은 지난해 11월1일자로 친정인 경북도청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로 발령받았다. 김 서기관은 근무 만료일인 올 10월까지 과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북도로 복귀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수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과 수산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되면서 정부 직제에서 사라진 지 5년 만이다. 해수부 부활로 부산·경남은 물론 수산·해양업계도 전반적으로 크게 반기고 있지만,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해양수산비서관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과 비수도권의 '파워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TK는 인맥과 노하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남일보는 3회에 걸쳐 해수부 부활의 의미와 경북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을 집중 점검해 본다.

◆해수부 부활 약일까 독일까

부산·경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청와대도 인수위원회의 정부 직제 개편안에 해수부를 최종 포함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명맥을 이어온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정치권의 표계산에 따라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PK지역 해양수산업계와 정치권, 부산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수부는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다.

경북도에서 파견 간 김 서기관은 해수부로 발령받았다. 그의 임무는 경북 동해안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에서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계가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김 서기관은 "해수부 내에서도 TK출신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다. 동해안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라며 "경북도 수산·해양직 공무

원과 TK출신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수부는 경북에 위기이자 기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해수부 부활에 직면해 경북 동해안 권역 수산·해양 분야에 대한 국비 확보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 부처의 부활로 전국의 각 시·도 단위 지자체의 수산·해양 분야 국비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경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도 고민을 더하고 있다.

3실·3국·9관·41과로 구성된 해수부 직원의 80% 이상이 부산·경남·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해양정책·수산정책·기획조정실, 해운물류·해사안전·항만국 등 주요 실·국 과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TK출신은 거의 전무하다. 윤진숙 장관 후보자와 손재학 차관은 부산 출신이다.

그동안 대구·경북 지역 고교와 대학에서 수산·해양 분야 인력 양성 노력을 등한시 해온 것도 이같은 인력 불균형의 배경이 된다.

부산의 경우 국립 해양대와 부경대 등 수산·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관련 공직과 업계에 해마다 수천여 명씩 진출시키고 있다. 전남도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수산해양대학과 여수수산대학을 통해 어업인력을 꾸준히 키워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구·경북으로 눈을 돌려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역 수산·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1954년 포항수산초급대학으로 문을 연 포항1대학이 수산 관련 전공을 운영하다가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경북지역 수산·해양 과제 산적

당장 경북도는 올해부터 동해안 일대 영일만항과 영덕 강구항 개발,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비롯해 수산 분야 유통과 양식, 신규 사업 등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앙정부 내 인재풀의 한계속에 수산·해양 전공 인력 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목표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내부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011년 기준 전국 각 시·도 수산 분야 현황만 놓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예산만 보더라도 경남은 국·도비 규모로는 806억원으로 전국 1위다. 부산이 731억원으로 2위, 충남은 574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고, 경북은 567억원으로 부산·경남과는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수산해양 인프라 및 산업 규모를 보면 부산·경남으로 국비 지원이 쏠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경북 동해안의 경우 포항항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무역항조차 그동안 정부에서 키워주지 않았다.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해수부 출범을 호기로 삼아 경북 동해안에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모든 직원이 해수부를 찾아가 올해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며 "지역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산·해양·어업 인력을 키워 중앙에 인재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경북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획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다. 기사는 '〈상〉경북 동해안 먹구름'이라는 시리즈 소제목 아래 『해수부 부활로 수산 해양업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반기고 있지만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TK인맥이 없어 국비확보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기사는 TK인맥과 관련해 『3실 3국 9관 41과로 구성된 해수부 직원의 80% 이상이 부산 경남 호남권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행된 해수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직원만 3,790명이다. 기사

대로라면 부산 경남 호남 출신은 본부에서 3천명을 넘어서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기사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또 『주요 실국 과장급 이상 고위직 간부에 TK출신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해양 수산분야 예산과 관련해 기사는 경북지역과 다른 지자체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경북의 예산규모는 경남(806억), 부산(731억), 충남(574억)에 이어 4위에 해당되는 567억원이다. 지자체별 산업구조, 주력산업, 특화산업 등을 감안한다면 경북의 해양 수산분야 예산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 혹은 '차별'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편집자는 큰 제목을 「TK출신 해수부 직원 씨말라…"현안 침몰위기"」로 달았다. '씨가 마르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없어지다'라는 뜻이다. 기사에 『"해수부 내에서도 TK출신은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다.…』라거나 『해수부 내에 TK인맥이 전무한 것도…』라는 기술이 있기는 하나 이같은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목처럼 '씨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TK지역 주민의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안 침몰위기"」라는 표현은 본문 중의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이라는 내용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자극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다.

지역 신문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관심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지역 우선주의 내지 지역 중심주의적 편견에 근거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국민일보 2013년 7월 31일자 1면「또 高大서 … /남학생 1명이 여학생 19명 성폭행·추행/'의대생 사건' 이어 충격」기사와 제목, 8면「'高大 의대생 사태' 와중에도 버젓이 몹쓸 짓 '경악'/2001년부터 올 초까지 여학생 3명 성폭행·16명 몰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고려대 남학생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다 적발됐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고려대에서 다시 엽기적인 학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려대학교' 명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이 학교 11학번 A씨는 2011년 초부터 올 초까지 2년간 같은 과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A씨의 성범죄를 파악해 최근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학교와 경찰이 확보한 A씨의 동영상 CD에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 외에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를 찍은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동기생보다 서너 살 많아 같은 학번 여학생 사이에서 '좋은 오빠'로 불렸다고 한다.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을 조사한 경찰과 학교 측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그는 범행 장면을 전부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 동영상을 저장해 둔 CD가 유출되면서 A씨의 범행 사실도 들통 났다. 이 영상에는 수업 시간이나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같은 과 여학생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교 측과 별도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이미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학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19170&cp=nv〉

〈8면〉=『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도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학교 측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의 성범죄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어졌다.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했고, 16명에게 '몰카(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가 난리통에 빠졌을 때도 그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다. A씨를 잘 아는 한 고려대생은 "A씨는 입학이 늦어 동기들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았기 때문에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 '편하고 좋은 오빠'였다"고 말했다.

A씨는 술자리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했고 이 장면을 매번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덜미에 잡힌 것도 동영상 때문이다. A씨 사건을 접수한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 학교 관계자는 30일 "사안이 불거질 경우 피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지만 그렇다고 묵과하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해 학교 명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학교를 휴학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

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캠퍼스의 성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서울의 한 유명 미술대학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5월 22일에는 규율이 엄격한 육군사관학교에서까지 남생도가 술에 취한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대학 280곳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9년 학교당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소문이 날까봐 쉽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9명이나 됐지만 조사 과정에서야 피해 사실이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내 성폭력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대학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는 "요즘은 각 대학이 성폭력상담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성범죄는 훨씬 많다"며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419207&cp=nv〉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들은 고려대 남학생 A씨가 2년여에 걸쳐 같은 과와 다른 과 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A씨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같은 과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과 더불어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 등을 '몰카(몰래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을 CD에 담아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해당 대학을 고려대로 특정한데다 기사에 나와 있는대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같은 과 여학생이며, 대학측의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고려대 안에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는 금세 입소문을 탈 수밖에 없다.

성폭력 범죄를 당하면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평생 멍에처럼 짊어지게 되고, 자칫 신원이 노출되면 주위의 시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혐의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시점인데도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단정해 보도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일보는 피해자들의 신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기사를 처리했어야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성추행 사실은 밝혀졌지만 성폭행은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는 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됐다.

위 기사와 제목은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8월 20일자 1면「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민주당 국회 계수조정소위 임명에서 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소위 임명이 이뤄져, 민주당의 균형발전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역별 소위 임명 자료를 들어 "전북이 민주당의 총알받이와 병참기지 역할에 불과했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위 임명은 5년 동안 총 20명이었다.

이 중 전북은 지난해 박민수 의원(무진장·임실) 단 한 명에 불과, 전남·광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광주·전남지역은 소위 위원 수가 총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가 예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지도부도 광주·전남 정치권이 장악했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 지역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 한 것이다. 도내 중진의원은 "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라는 비유로 당내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위치를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민주당은 소위 임명과정에서 권역별, 상임위별로 임명한다는 대원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위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광주·전남 의원이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나 포함됐다.

민주당 몫으로 5명이 배정됐던 지난 2010년의 경우 전남 출신 서갑원 전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은 상황에 광주가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불과 4명만 민주당 몫으로 배정됐던 2011년에는 광주의 강기정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전남의 주승용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소위 임명 결과만 놓고 보면 "호남이 다 해먹느냐. 호남 정당 색깔을 빼야 한다"라는 타지역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틀리지 않지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이었다는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5년 만에 전북 의원이 포함된 지난 2012년 소위 임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전북에 대한 배려가 아닌 정치적 우연에 따른 산물에 불과했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 1~2명을 배려했던 과거 관행과 달리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4명, 5명에 머물렀던 민주당 몫도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전북출신이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소위 임명에서 차별받고 있지만 올해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지난해 전북의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도내의원 소위 임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도 정치권과 김완주 지사 등은 이 때문에 20일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에 전북출신 계수조정 소위 임명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67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2012년까지 5년 동안 민주당소속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모두 20명(18대 국회 13명, 19대 국회인 2012년 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전북이 철저히 차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20분의 1'은 민주당 소

속 전체 의원수 등을 감안하면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전북 지역이 민주당내에서 '철저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또, 기사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해 취재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 자조 섞인 말을 토해내고 있다.』『도내 중진의원은 … 자조 섞인 말로 대신했다.』『… 타지역 의원들의 볼멘소리 …』『… 정치권의 중론이다.』『민주당 안에서 …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등의 기술을 하고 있다.

하나같이 발언한 사람들의 실체가 모호하고, 그나마 하나 있는 '도내 중진의원'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조차 전북도의원인지 전북 출신 국회의원인지 알 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들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사는 광주 전남과 직접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전북 차별'을 주장하면서『정치적 열매는 광주·전남이 모두 차지』『"꿀맛은 보지 못하고 침만 쏘였다"』『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찬밥』『상황이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 차별받는 전북 정치권이 호남권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같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편집자는 작은 제목을 컬러 글씨체로 「예결위 계수소위 철저 배제」로 돋보이게 단 뒤 큰 제목을 「전북, 민주당 병참기지인가」로 달았다. 이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위 기사의 요약적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독자를 자극하려는 의도의 선동적인 의견성 제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전북도민일보의 이같은 지면 제작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 또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

명 조건), ③(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2.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11월 15일자 3면「'충청의 습격'/선거구 재획정 '호남 겨냥'」기사의 제목, 全北日報 11월 18일자 1면「국회 의석 빼가려는 충청/협력 창구 셔터 내린 호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도민일보)=『충청 정치권의 신 패권주의 전략에 전북 정치권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도당위원장 등 도내 의원들은 최근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재조정 주장을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중앙 권력 재편을 위해 호남 정치권을 희생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6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도당위원장도 "19대 국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은 빨라야 총선 1년 전에 진행돼왔다"라며 "충청 정치권의 선거구 재조정 주장에 대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야 의원,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내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직전해 12월 말 국회의원 선거구가 결정된다. 2012년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 획정은 2011년 12월 말 이뤄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진행됐다.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영남 의석이 1석 늘면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지역 의석도 1석 늘리고 충청, 강원지역도 고려해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까지 299석이었던 국회의원 수가 19대 국회에서 1석 늘어난 300석이 된 것도 여·야간 정치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장을 영·호남중심의 정치구도를 영남, 충청 대결로 몰고 갈려는 의도로 정치권이 판단하는 이유다.

충청 정치권은 실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기점으로 충청 대망론이 불거졌다. 충청 대망론은 영·호남 중심의 권력구도를 충청 정치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충청지역 인구 늘자 충청 대망론은 적어도 충청 지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에게는 충청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재조정이 정치적 도약의 절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은 실제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전북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 수 축소를 내용을 담고 있어 호남 주도의 민주당 내 세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충청지역 의석수 확보로 당내 세력을 영남, 충청 대결구도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호남지역이 정치적 불모지인 만큼 전북 등 호남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충청 정치권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경북 의석수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호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충청이 526만 명이고 호남이 525만 명, 대구·경북은 520만 명이다. 의석수에 있어서는 호남이 30석, 대구·경북이 27석, 충청 25석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대구·경북이 충청보다 2석 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604〉

(全北日報)=『충청권이 사실상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을 겨냥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는데도 불구, 호남권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창구는 작동조차 안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인구가 적은 호남이 충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올 들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지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적은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호남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돼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광주·전남 등 이른바 호남권은 기존의 협력창구가 전혀 가동되지 못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분열양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현재 호남권 갈등 해결과 공동 번영을 위해 호남권 자치단체·지방의회·경제단체가 각각 참여한 호남권정책협의회 및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도지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참석하는 호남권정책협의회는 5

년 전인 지난 2008년 11월5일 '제5회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아예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호남권은 최근 광주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전주권 R&D(연구·개발) 특구 등 지역 현안사업을 놓고 대립, 감정싸움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광주공항 군산공항 이전' 논란의 경우 호남권 자치단체가 공동번영을 논의하기는 커녕 심각한 분열 상태라는 것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갈수록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호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우려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남권의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호남권의 공동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호남권 자치단체 중심으로 협력창구를 재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66〉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충청 정치권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요구를 전북 정치권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올 10월말을 기준으로 충청의 인구수는 526만 명이고 호남은 525만 명이다.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호남이 30석 충청은 25석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충청 정치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와 관련, 『충청 정치권의 신 패권주의 전략』 『호남 정치권을 희생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 『영·호남중심의 정치구도를 영남, 충청 대결로 몰고 갈려는 의도』 『영·호남 중심의 권력구도를 충청 정치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충청 대망론』 『새누리당은 정치적 경쟁자(호남지

역)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부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 「'충청의 습격'」으로 달았다. '습격'은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근거없이 피해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全北日報의 위 기사는 호남권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창구인 호남권정책협의회와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충청 정치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요구 등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 대해 두 줄 큰 제목으로 「국회 의석 빼가려는 충청/협력창구 셔터 내린 호남」이라고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충청 정치권이 호남지역 국회의석을 빼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선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기사 본문에 『(충청 정치권의 주장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호남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돼 호남권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 311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주 문〉

每日新聞 2013년 11월 19일자 1면 「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 〈1〉」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곁불도 쬐지 못하는 형국이다. '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 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역 편중 예산'이란 야권의 공세에 모조리 깎일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낙동강 오리 알 신세다.

◆여권은 대구경북을 외면

"100만 표 차로 이겼다. 대구경북에서 200만 표 차이가 났으니 우리 지역이 당선의 일등공신 아니냐"는 한 여권 관계자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오로지 집토끼' 역할만 했으니 누가 알아주지도, 요구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력지형에서 대구경북은 소수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자리에 대구경북 정치인은 없다. 최경환 원내대표(경산청도)는 민주당과의 정쟁(政爭)에 발이 묶여 있다. 지역을 돌아보며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정부의 최근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후보 지명에도 지역 출신 인사는 리스트에 없었다. 아니 그 몇 배 수 속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이명박정부가 'TK 소외와 역차별'로 반여 정서를 눌렀던 것을 고스란히 학습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친박계 핵심으로 통하는 한 의원은 "박 대통령으로선 대구경북에 빚진 마음이 없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4선)이었지만 지금은 전국을 봐야 하는 대통령 신분"이라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에서 TK가 워낙 누렸다는 비판이 크다.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해줘야겠다고 하면 다 '욕심'으로 보니 챙겨줄 수 있겠는가"하며 자아비판을 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당·대권 주자로 부상한 부산의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역사교실이라는 당내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이 가입했다. 이어 '퓨처라이프 모임'을 만들어 노후 대비 등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이 눈치를 보며 가입하는 모양새다. 18일에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창립총회를 열었다. 부산의 유기준 최고위원과 충청의 이완구 의원이 주도한다. 대구경북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客)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충청 정치권은 의뭉스러움을 여과 없이 보이고도 있다. 인구 수로는 호남권을 넘어섰는데 의원 수는 5석이나 적다며 국회의원 증원을 꾀한다. 당내에선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가 없다. 의석 수를 늘리는데 충청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에는 아예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정치권, 자생력은 있나?

정치권은 '포스트 박근혜'의 부재가 대구경북 정치권으로선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이라 진단한다. 과거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이상득 박종근 이해봉 전 의원 등이 은퇴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선수(選數)로 치면 졸(卒) 부대와 다름없다. 대구 12명 의원 중 초선이 절반 이상인 7명, 재선이 단 한 명, 3선이 3명, 4선이 1명이다. 부산은 초선이 4명, 재선이 6명이나 되고, 3선 이상은 5명이다. 3선 이상의 선수를 모두 모으면 20선으로 대구(13선)보다 큰 어른이다.

문제는 용기와 결집력이다. 지역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서서 문제 해결 방안을 주도하는 의원을 찾기 힘들며 당내 정치세력화는 더욱 어려운 상태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신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10여 년 동안 원점을 헤매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줬던 충청권이나 지역 예산을 위해서는 똘똘 뭉치는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초선 의원은 "끌어주는 선배도 없다"고 푸념하기 일쑤고, 재선 이상 중진들은 "초선이 너무 얌전하다. 뭘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한다. 그런데 서로 탓만 할 뿐 모여 머리를 맞대진 않고 있다. 당권이든, 대권이든

리더가 나타나지 않을 땐 여권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참담한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230&yy =20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은 '권력구도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위 기사는 그 첫 번째 기사로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현주소를 진단한 분석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중앙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정권 재창출의 일등공신이지만 오히려 권력구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정치권내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무기력증을 앓고 있어』『곁불도 쬐지 못하는 형국』『낙동강 오리알 신세』『"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집토끼 역할』『권력지형에서 소수파』『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客) 신세』『선수(選數)로 치면 졸(卒) 부대』『여권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다른 시도 정치권에 대해선 객관적인 사실 나열도 없이 『'박근혜의 사람들' 이름에는 부산경남(PK)만 오르내리고』『충청권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려 의뭉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구 경북 출신 인사들이 권력 재창출의 일등공신으로 권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타 지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경계심을 드러내는 기술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또, 편집자는 이 연재물 제목을 「권력구도에서 밀려나는 대구경북」으로, 기사의 큰 제목을 「새누리당서도 토사구팽」으로 달았다. 기사 본문을 보면 '토사구팽'은 익명의 '한 여권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기술한 내용이 있긴 하나 객관

적인 근거도 없는데도 편집자는 이를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에 담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과장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2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4년 3월 12일자 A31면「위조여권, 80만원 주면 일주일새 '뚝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빠른 위조 여권, 완료 7일, 신분증 위조 070-**-****'**

'위조 여권 copy*****@hotmail.com, 전화번호로 광고하는 곳에 문의하면 경찰에 걸립니다. 위험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위조 여권 호객 문구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에도 위조 여권이 쓰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온라인상에 각 나라 여권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판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 등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문 브로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브로

커에게 인적 사항과 원하는 나라의 여권 등을 보내면 경찰 추적을 피해 맞춤형으로 가짜 여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브로커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의 여권을 취급한다. 위조 여권은 보통 EMS(국제배송)를 이용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며 기한은 5~7일 정도 소요된다. 가격은 80만~100만원 안팎이다.

일부는 브로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문 위조 인터넷 사이트까지 열어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 샘플 이미지까지 올려 놓고 자신들의 정교한 위조 기술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묻는 질문(F&Q) 코너까지 운영하며 위조 여권에 자신들의 최신형 특수 잉크와 워터마크 등을 박아 넣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다고 광고한다.

전문 위조 사이트인 buypassports****.**에서 는 주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면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무료 배송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권을 위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브라질 여권의 경우 400유로(약 60만원), 캐나다·독일·프랑스 등의 여권은 600유로(약 88만원), 가장 비싼 미국 여권은 700유로(103만원) 등이다.

또 위조 여권을 위조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저렴한 묶음상품으로도 제공하고 있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예를 들어 900유로(약 132만원)만 있으면 미국 국적의 여권과 운전면허증(Driving Licence), 그리고 신분증(ID Card)까지 풀옵션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신용카드뿐 아니라 최근 각광받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결제 가능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위·변조 여권은 모두 1만9213건에 달했다. 2009년 2523건에서 2012년 570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417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3~4건 정도 위·변조 여권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취업을 위해 해외에서 위·변조 여권을 구해 입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한민국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사례는 20만건을 넘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전자여권 이전에 만들어진 여권이라 위조 위험에 노출돼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8407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위조 여권으로 탑승한 승객이 있다는 점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위조 여권 판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전문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는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고, 인적 사항 등을 보내면 경찰 추적을 피해 맞춤형으로 가짜 여권을 전달받을 수 있고, 기한은 5~7일이며 가격은 80만~100만원 안팎이라는 등 세세한 내용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또 나라별 위조 여권의 가격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위조 여권과 위조 운전면허증까지 '풀 옵션'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전문 위조 사이트'라며 'buypassports****.**'라는 인터넷 주소를 일부는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채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손쉽게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여권 위조 사이트를 안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조 여권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일 뿐 실제로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기사는 위조 여권 제작이나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했다.

이 기사는 위조 여권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조 여권 구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3월 4일자 8면 「강남엄마의 '공부 알약' … 정체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모(여)씨는 고교 3학년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두 달 전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를 매일 두 알씩 복용했다. ADHD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콘서타를 복용했다는 최씨는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으면 3~4시간이 단숨에 흘러갔고 암기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았다"면서 "강남 일부 병원에서는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싶다고 하면 처방전을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채 오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가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처방된 건수는 2010년 58만 3867건에서 2011년 60만 5510건, 2012년 65만 645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50만 5930건으로 주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대 교수는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방 정보가 심평원에 기록되는데, 자녀의 처방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물을 병원에 처방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ADHD 치료제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게시판 등에는 "페니드 하루분 2000원에 삽니다", "페니드, 콘서타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2주마다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 택배 배송이나 직거래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입소문이 확산된 탓에 소량의 약을 개인적으로 거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새 학기를 맞아 감시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연화 경희대 약대 교수는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장복하면 식욕 감퇴, 구토, 성장 장애, 환각, 환청 등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ADHD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한 뒤 학업 성취도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치료를 통해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완화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메칠페니데이트는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040080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학부모들 사이에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소문나 자녀 공부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다.

위 기사를 다룬 취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처방 증가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일 것이다. 기사 본문에서도 『새 학기를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치료제가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채 오남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콘서타' '메칠페니데이트' 등의 ADHD 치료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물론, 『처방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물을 병원에 처방해 달라고 했을 가능성』과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ADHD 치료제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불법·편법적인 구입 경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페니드 하루분 2000원에 삽니다』『2주마다 병원에 가는 게 번거롭다. 택배 배송이나 직거래했으면 좋겠다』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 글까지 인용하며 마치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되는 것인 양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기사는 또 『약을 먹으면 3~4시간이 단숨에 흘러갔고 암기력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다』『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 주는 '공부 잘하는 약'』 등의 표현으로 독자들이 ADHD 치료제의 약효를 오인해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했다.

기사는 또 제목에 「강남엄마의 '공부 알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강남엄마'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ADHD 치료제 복용 경험이 있다는 최모 씨의 사례 1건과 『강남 일부 병원에서는 공부 때문에 약을 먹고 싶다고 하면 처방전을 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씨의 전문 외엔 기사 본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위와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공부 알약' 사용이 강남 엄마들 사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추측과 예단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행태는 사회의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4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7일자 10면「한국해커들, 日 '2ch'〈극우 사이트〉 공격 예고/4년만에 3·1절 사이버 한일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일 양국 간 감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3·1절을 앞두고 한·일 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1년 이후 매년 3·1절이면 크고 작은 싸움을 해온 디시인사이드(디씨·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반일 온라인 카페와 2ch(2채널·일본 내 극우성향 커뮤니티)는 2010년 3·1절 사이버 공격 이후 서로 대규모의 공격을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내 한 해커가 4년 만에 대규모의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유포했다.

과거 2ch와 사이버전을 벌였던 디씨 역사갤러리에는 지난달 22일 '2010년의 영광을 다시 한 번, 3·1절 2ch 테러 공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올해는 더 많은 해커들이 참여해 2ch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2010년 사이버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아이디 '네거티 자폐'로 활동)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디씨 코미디프로그램 갤러리(코갤)의 산하 '코갤정보원'의 리더(총통)로, 이 글은 지난달 8일 A 씨의 블로그에 게시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코갤 총통 네거티다. 한국인 유학생 사망을 조롱하던 일본 원숭이들에 분노해 우리는 일본 넷우익의 근거지인 2ch를 박살내고 단죄한 영광스러운 업적이 있다. 나 또한 당시 공격을 지휘하며 참전한 기억이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이어 "4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 일본 원숭이들은 다시 도발을 일삼고 있다. 현재 일본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그 수장 아베 신조는 신사 참배를 하는 등 막장짓을 일삼고 있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지껄이고 최근 미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네티즌의 청원이 1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새끼들은 매가 약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겠다. 이번 공격을 위해 새로운 공격 도구 등을 이미 제작 중이다. 2014년 3·1절, 일본 원숭이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더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일본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온라인 카페 '넷테러대응연합(넷대연)'에도 3·1절 사이버전과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이달 8일 '2ch 터는 날 없느냐'라는 제목의 글에 '3·1절에 털지 않을까 싶다'는 답글이 게시됐다.

'일본 안티 카페(일안카)'에도 이달 22일 '2ch 테러 안하냐'는 글이 올라왔고, '고려해볼게'라는 댓글이 달렸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행사를 강행하는 등 반일 감정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보이더라도 실제 사이버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한·일 해커 간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집중 감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지난해 경우에는 3·1절을 앞두고 디씨 코갤, 넷대연, 일안카 등에서 2ch에 대한 공격이 예고됐지만 실제 2ch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매년 3·1절에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나 악성 게시물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 외교부 및 독도 관련 사이

트,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70001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3·1절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해커들 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위 기사를 사회면 머릿기사로 게재했다. 기사는 이의 근거로 『최근 국내 한 해커가 4년 만에 대규모의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010년 사이버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다. 또한 이 글이 게재된 곳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디씨)다. 디씨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2010년의 영광을 다시 한 번, 3·1절 2ch 테러 공격』이며, 내용은 올해는 더 많은 해커들이 참여해 일본의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2ch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이 게재된 것은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여 전인 1월 22일이라고 한다. 이후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양국 해커들 간의 사이버 전쟁 가능성이나 관련된 움직임은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 기사 내용도 A씨가 올렸다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일본 사이트에 공격을 시도했던 온라인 카페와 일본 안티 카페에 올라온 '2ch 테러' 관련 질문에 대한 답글도 인용하고 있으나 『3·1절에 털지 않을까 싶다』『고려해볼게』 등의 막연한 내용이어서 사이버 전쟁을 벌이겠다는 구체적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기사 게재 이틀 뒤인 3월 1일이나 그 이후에도 사이버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기사는 또 A씨가 올렸다며 인용한 글에서 일본인들을 『일본 원숭이』로 비하하고, 『이 새끼들은 매가 약이다』『수장 아베 신조는 신사 참배를 하는 등 막장 짓을 일삼고 있다』 등 두 나라 국민감정을 자극할만한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했다.

이처럼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뚜렷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하고 저속한 표현

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일부 독자들의 반일감정에 기대고 이를 자극하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며,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차별과 편견의 금지

▲ 2014-1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4년 1월 17일자 1면「'호남 3선 제한론' 망언에 전북 정치권 발끈/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 발언 일파만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이 원한다면 호남 3선 제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민주당 노웅래 신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노 사무총장은 16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 혁신 차원에서 거론된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호남지역 국회의원 3선 제한론'에 대해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면 어떤 것을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사무총장은 '국민이 원한다면'이란 토를 달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전북 정치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북 의원을 비롯 호남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볼모로 한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역민들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언제부터 민주당이 호남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했느냐"라며 "노 총장이 지역구로 있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각 여론조사 기관들의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전북 등 호남지역만 유일하게 안철수 신당과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현실에 대한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전남과 도내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전북과 광주는 민주당과 안 신당이 오차범위 지지율 싸움을 펼치고 있으며 전남은 민주당이 안 신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 "노 총장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전북 정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선 승리를 위해 현재 지역에서 밤낮으로 발품을 파는 현역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당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에서 총을 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중 7명이 초선의원으로 채워졌으며 이중 정읍과 남원, 순창지역은 무소속과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됐다.

현역 교체 비율이 70%를 넘어서 전국 평균 50%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현역의원 교체는 '쓰나미'로 비유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대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지역을 떠났으며 18대 대선에 출마한 정세균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도 정치권 위상 추락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노 사무총장은 이날 호남의 '중진차출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국민 편과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며 "최적, 최강의 후보를 상향식 공천과 투명한 공천 시스템에 의해 하려고 한다. 국민이 원하신다고 하면 누구도 우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

해서도 “중진차출론과 상향식, 투명공천 시스템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이름을 그만 팔고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비하하는 낡은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9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호남 3선 제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전북 등 호남 지역의 비판적인 의견을 묶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16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 혁신 차원에서 거론된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호남지역 국회의원 3선 제한론’에 대해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면 어떤 것을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전북 의원을 비롯 호남 정치권 인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정치권을 볼모로 한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망언’이라는 표현 자체를 중립적이지 못한 『극단적 발언』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큰 제목을 「‘호남 3선 제한론’ 망언에 전북 정치권 발끈」이라고 달았다. 실체가 불분명한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사용한 ‘망언’이라는 『극단적 발언』을 객관화된 표현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국제신문 2014년 2월 14일자 1면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황우여의 억지/새누리 최고위서 여론몰이/"극지연구와 해양 분리해야"/부산이전 해과원서 독립 주장/부산의원들은 눈치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개소 직후, 인천 정치권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과기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영구 잔류시키고 극지연구를 해양과 분리하려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극지와 해양을 분리하면 연구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양과기원은 내년 12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지연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지속하도록 해양연구의 한 부분으로 치부됐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구소를 독립시키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극지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극지연구소 독립 및 인천 잔류는 해양과기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현재 황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있다. 황 대표는 2012년 대선 기간 연구소의 인천 잔류 등을 담은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재균 전 의원, 서병수 김세연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극지연구는 해양·생명·대기·빙설·지질·운석·북극정책 등 7개 세부

연구로 나뉘고 4, 5개 분야가 해양연구로 분류된다. 예컨대 바다에서 크릴새우 등을 먹으며 서식하는 펭귄의 연구는 해양연구이면서 동시에 생명연구·극지연구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중국 미국 같은 선진국도 해양과 극지의 융합연구를 한다며 황 대표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독일 알프레드베게너 연구소는 극지·해양연구소이고, 극지 선진국인 중국은 극지연구를 국가해양국 산하에 두고 있다.

한국해양대 남청도 기관공학부 교수는 "해양과 극지는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분리하면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황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 출신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 발언을 반박하지 않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214.220012124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은 위 기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독립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극지활동 진흥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영구 잔류시키고 극지 연구를 해양과 분리하려는 정치적 여론몰이』라는 요지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극지 연구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지속하도록 해양연구의 한 부분으로 치부됐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아래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문제의 '극지활동 진흥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몇몇 부산 출신 의원들도 서명했다.

그런데 과거 보도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는 2007년부터 부산 이전 문제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9년 9월 교육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결정에 따라 인천 잔류가 확정됐고, 2010년부터 새 청

사 건설 작업에 들어가 지난 해 4월 준공식을 가졌다. 그리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2개 연구동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극지연구소의 독립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사의 소재지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신문은 황 대표가 극지연구소의 소재지 문제에 얽매여 무리하게 '뒤집기'라도 시도하는 양 '억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황우여의 억지」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는 '억지'라는 표현은 없다.

이 같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지역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8 신문윤리강령 위반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14년 2월 25일자 2면 「원경환〈평창〉 경무관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장 발령/"강원출신 경찰 홀대" 뒷말 무성/靑 "특별한 배경 없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평창출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경무관)이 24일 출범한 '경찰청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01경비단은 청와대의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자리로 통상 2년 전후 근무하고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코스다.

원 경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1년2개월 정도 근무했으나 이날 경찰청 인천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발령됐다.

원 경무관은 간부 37기로 정선서장, 본청 장비과장, 서울 강동서장, 본청 감찰담당관을 거쳐 2011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인천청 차장을 거쳤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경북 김천출신으로 김천고와 경찰대(제4기) 출신으로 지난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박건찬 인천경찰청 제2부장이 왔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발령 1개월만에 요직으로 손꼽히는 청와대 101경비단장으로 영전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도출신의 경찰청 인사들은 "힘없고 배경없는 강원출신 경찰 홀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 의원은 최근 현 정부들어 단행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13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출신고 등이 확인된 129명 중 영남 인사가 58명(45%)에 이르렀다고 '지역 편중인사'를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수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특별한 인사배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6946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평창 출신 원경환 경무관이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에서 2월 24일 출범한 경찰청 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강원 출신이라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의 단장은 통상 2년 가량 재직하고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코스이지만, 원 경무관은 1년 2개월 가량만 근무하고 아시안게임 기획단장으로 옮겨 갔으며, 그 자리에는 경북 김천 출

신의 새내기 경무관이 발탁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 『도출신 경찰청 인사들은 "힘없고 배경 없는 강원출신 경찰 홀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춰 「"강원출신 경찰 홀대" 뒷말 무성」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기사는 원 경무관이 강원 출신이기 때문에 '홀대'를 받았다는 데 대한 명백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가 적시한대로 101 경비단장이 치안감 승진을 보장받는 노른자위 자리라면, 원 경무관이 그 자리를 맡았던 것은 오히려 '우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경찰 치안활동의 총괄사령탑으로 출범한 아시안게임 기획단의 단장 자리가 101 경비단장에 비해 치안감 승진에 불리하다는 객관적인 평가도 없다.

기사는 말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인사수요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특별한 인사배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했지만,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할 만한 근거를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추측과 확대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과장기사로, 특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준칙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2013-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3년 3월 27일자 A3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툭하면 총수 국회 출석 요구, 불참하면 줄줄이 재판/법정에 선 정용진〈신세계 부회장〉·정지선〈현대백화점 회장〉 … 정치 입김에 기업경영 위축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다. 선처해달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소병석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정용진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인으로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며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고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30분 뒤 성수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정지선 회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

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출장이라 부득이 다녀온 만큼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정 회장, 18일 정 부회장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같은 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업들도 이날 총수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가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 오너들의 해외 출장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전에 일정이 잡히고, 방문국의 최고위 관료와 협력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만나는 일이 많아 갑작스러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국회는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열리기 2주 전 주요 유통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내 윽박지르는 등 죄인 취급하는 듯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 자체가 잘잘못과 관계없이 죄인처럼 비쳐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기업인의 국회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 일부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상무)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유전유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한국식 오너경영의 강점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감 때마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는 무리한 정치권 개입의 폐해를 잘 보여준

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 생산직 근로자 400여명 희망퇴직 발표를 계기로 노조의 총파업과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등장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제1야당 대표가 2011년 7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잇따랐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2011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불려갔고, 그해 10월 환노위 권고안을 수용해 1년 뒤 해고 노동자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회사 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작년 11월 정리해고됐던 생산직 근로자 92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쌍용차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거 정리해고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홍역을 치렀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지난 1월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데 정치권이 자꾸 쑤셔대면 더 어려워진다"며 정치권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큰죄를 짓고도 검찰 소환을 미루고 불응하는 일이 많다"며 "피의자 신분도 아닌 기업인들을 국회가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

기사는 기자의 의견과 재계인사·교수 의견을 반영한 기사 본문과 제목을 통해 국회의 대기업 총수 출석요구에 대해 '대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 자체가 잘잘못과 관계없이 죄인처럼 비쳐진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국회소환을 자제해야한다"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유전유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한국식 오너경영의 강점이 위협받

고 있다" "국감때마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 기업인들을 국회가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기술이 그 사례들이다.

위 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심지어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등기 임원을 맡지 않고 있는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 일부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며 엉뚱하게 입법부를 탓하는 재계의 시각도 여과없이 전했다.

기사는 대기업 총수들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 해외출장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자체적인 사실 확인 노력없이 그대로 전했다.

위 기사는 입법부의 대기업 총수 국회출석 요구와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실제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지, 대기업 총수들의 등기임원 회피현상도 이같은 입법부와 요구 때문인지와 관련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회가 왜 기업 총수들을 출석토록 요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정략 때문에 대기업 총수 국회출석 요구를 남발한다면 언론으로서 그 사안은 별도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기사가 문제삼고 있는 기업 총수들의 국회 출석 요구가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없다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정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업 총수들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일을 정치권의 개입이니 기업 활동 위축이니 하는 말로 폄훼하는 일을 돕는 것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설사 해당 기업들의 주장대로 기업 경영상의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국민인 이상 그것이 국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은 대기업 총수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법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기술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론이 대기업 총수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공기로서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3조「언론의 독립」,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1면「현대차 노조의 생떼 5400억원 생산차질」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밤샘근무가 없어졌는데 과거 심야특근 때 받았던 임금과 조건을 그대로 해 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들어 줄 수 있습니까?"(현대차의 한 간부)

현대자동차가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생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30~31일까지 4주 연속 주말특근을 거부하면서 2만7400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금액으로는 5400억원이나 된다.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차가 안 팔리는 가운데 그나마 수요가 몰렸던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은 각각 2개월과 3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다. 영업 일선에서는 수입 브랜드 혹은 다른 국산차의 경쟁모델에 시장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3월에 현대차 판매가 전년보다 0.9% 늘었지만 이는 해외공장 물량이 9.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오히려 국내공장의 해외수출 물량은 7.7% 줄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문제다. 과거 주야 2교대 때의 주말특근수당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아래 지난달 4일부터 주야 2교대근무를 주간연속 2교대제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평일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조)+10시간(야간조)'에서 '8시간(1조)+9시간(2조)'로 바뀌었다.

주말특근도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1개조가 14시간을 근무했던 것에서 '8+9시간' 2개조로 변경됐다.

1인당 근무시간이 14시간에서 8시간 또는 9시간으로 준데다 심야특근이 없어졌으므로 심야 특근수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회사측의 시각이다.

반면 노조는 평일 낮 근무의 350%까지 받던 심야특근수당을 그대로 달라고 하고 있다. 1개조가 14시간 특근을 할 때보다 2개조가 '8+9'시간의 특근을 하므로 전체 생산량이 2000대 늘어난 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1인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라인가동속도가 빨라지고 노동 강도도 높아졌다"며 "전체 생산물량이 늘었으므로 할증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하는 수 없이 지난달 말에 종전의 주말특근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14시간 동안의 특근수당이 약 31만원이었으므로 '8+9시간' 동안 약 39만원을 주기로 한 것.

그러나 1교대 때 1인당 31만원을 받던 것과 달리 2교대로 바뀌어 39만원이

지급되므로 1인당 수령액이 20만원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말특근수당 뿐만 아니라 특근관련 운영기준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밤샘근무는 없어졌지만 과거 주야 2교대 때의 주말 특근 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노조측이 수당 보전 이유에 대해 "밤샘근무가 없어지면서 1인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라인 가동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강도도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과거 심야특근 때 받은 임금과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회사측은 종전의 주말 특근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노조의 거부로 노사 양측이 계속 팽팽한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위 기사는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당은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대자동차의 주말 특근 수당 역시 진행 중인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측의 요구는 협상의 카드이며 그 내용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개별 기업체의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진행 중인 특정 기업체의 노사 협상에 대해 언론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노조의 주장을 '생떼'라는 표현으로 매도, 협상을 통해 근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나서서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1면 머릿기사의 제목으로까지 달았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신문

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2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 문〉

국민일보 2013년 4월 9일자 8면「대학가 '無알코올 축제' 하자는데/"술 없이 뭔 재미 …" 어이 없는 반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술 없는 봄 축제에 대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無)알코올 축제'를 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축제를 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호(27) 학생회장은 8일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의 술 문화가 잘못된 관행으로 변질돼 온 게 사실"이라며 "학내 음주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이어서 축제 기간 캠퍼스 절주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총학생회장모임(전총모) 소속 20여개 총학생회는 '캠퍼스 내 절주' '욕설·구타 근절' '총학비리 근절' 등을 3대 과제로 내걸고 이달 중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건국대 용인대 국민대 한양대 중앙대 등도 축제시즌을 앞두고 '무알코올 축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 술을 대체할 '놀 거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3일 학생총회에서 '무알코올 대동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자 920명 가운데 찬성이 180표에 그쳐 무산됐다. 숙명여대

도 최근 총학생회와 과 대표들의 회의에서 캠퍼스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술을 뺀 축제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부터 교내 주점 설치를 금지한 한국외대는 최근 이를 어기고 주점을 연 동아리 회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가 학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대학 학생회장은 "술 말고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술을 못하는 친구들은 축제에서 소외되는데, 모두가 함께 즐기려면 절주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봄 축제를 앞둔 일부 대학들에서 술 없는 축제를 치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 4월 3일 '무알코올 대동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20명 가운데 찬성은 180표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 숙명여대 총학생회와 과대표 모임에서도 『캠퍼스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술을 뺀 축제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술 없이 뭔 재미…" 어이없는 반발」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표현으로 달아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어이없다고 매도해버렸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룬 기사 본문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견에 따라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런 편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8일자 1면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 만능시대'」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5월 9일자 6면 「내달에도 경제민주화 '폭탄' 쏟아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최근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민생 정책을 주도하는 '입법부 전성시대'가 열렸다. 행정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해 밝힌 총·대선 공약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 더욱이 6월 임시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와 신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회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행보가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경제·민생정책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2014년 1월 1일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할 뜻을 발표했다.

더욱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4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ASEAN)+3 재무장관회의에 불참, 대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을 통해 추경안 논의 추이를 살폈다.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도소득세·취득세 한시감면 기준과 소급적용일 모두 여야 논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됐다. 특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정부 발표 한 달 이내에 관련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 이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일각의 예상을 깨고 여야 수정안 도출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경우 환경부(10%)와 산업통상자원부(1%) 간 의견차를 보인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대체휴일제 법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대안이 없을 경우 안행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며 안전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9월까지 공휴일 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체휴일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때도 국회의 입법 주도활동은 왕성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 상정 직전 제동이 걸린 프랜차이즈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헤럴드경제)=『지도부가 교체된 민주당이 6월 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추진 과제의 새판짜기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에서 만들어진 '여야 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합의 법안 83개 외에도 '이자제한법' 등 새로운 의제를 설정,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포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상임위 간사 등 20여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경민추)'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9일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하는 경민추 모임을 열어, 이들의 행보가 당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 관계자는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불공정거래 부분이 주로 다뤄졌다면, 6월 국회에서는 대부업 이자제한, 채권추심 완화 등 서민경제 부분과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고금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피에타(Pieta) 3법' 중 하나다. 현행 연 30%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파산 신청 후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도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벌어진 남양유업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제조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질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추가입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공통공약이나 6인협의체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던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핵심 사안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금융지주회사법)도 재추진된다.

여야 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

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정리해고 관련법' '최저임금법' 등이 4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된다.

김한길 신임 당대표도 연일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강조하며 이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접견 자리에서 "6월 국회는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은 "당내 중도·진보 논쟁을 떠나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바람에 당 차원에서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두 신문은 모두 기사 본문의 내용을 과장·왜곡해 제목을 달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새 정부 들어 행정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민생 정책을 주도한다면서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입법부 전성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위 기사는 해당 사례를 열거하며 소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의 제목을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 만능시대'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 본문 내용의 '입법부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훨씬 과장한 것이며 이 때문에 제목 표현이 주는 이미지는 기사 본문 표현과는 전혀 달라 결과적으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현상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가 지난날의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성실한 본연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오히려 기사 본문 표현을 부정적으로 과장해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만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편집자의 사적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다. '좌지우지'나 '국회만능'이라는 표현은 은연중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고 이에 따라 기사 본문의 취지와 달리 국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제목 역시 편집자가 기사 본문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왜곡을 초래했다. 위 기사의 본문은 민주당이 지도부 교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추진과제 새판 짜기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민주당이 이자제한법이나 채권추심 완화, 불공정거래 바로잡기 등 서민경제 부분과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사실관계를 위주로 객관적 서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은 경제민주화 추진과제를 '경제민주화 폭탄'이라고 표현했다. 폭탄은 무차별적인 인마살상과 주거지 파괴가 목적인 병기인데 이러한 끔찍한 물건을 경제민주화 과제와 동의어로 비유한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가 사람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준다는 뜻이며 이는 편집자가 기사 본문의 취지를 벗어나 자신의 치우친 선입견을 제목에 반영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독자들에게 기사 본문의 사실 및 취지와 다른 내용을 제목으로 왜곡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3년 4월 23일 1면「엔低공습·역사도발 … 日, 또 '한반도 침략'」기사의 제목, 4월 26일자 2면「"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후속 조치를/통상임금 확대땐 기업 38조 부담해야"」기사의 소제목「'포퓰리즘 법안' 어떤게 있나」, 5월 6일자 1면「유해물질관리법, 違憲·과잉입법 논란/ …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기사의 제목, 5월 21일자 3면「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 …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 '초강수'」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 23일자/엔低공습…〉=『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폭주기관차를 연상케 하는 '우익 포퓰리즘'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부터 잇단 과거사 망언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아베 정부는 집권 후 경제(엔저 공세)와 외교(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도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100년 만의 제2한반도 침략'으로 볼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오전에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관계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상징적 사건'이다.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오쓰지 히데히사 자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주변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극우 포퓰리즘은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부작용과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외교적 도발로 인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매년 5월 개최돼 온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언제 열릴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아베 내각에 사전경고했는데도 이번에 참배를 감행했다"고 밝혔다.(후략)』

〈4월 26일자/정년연장…〉=『경제5단체 수뇌부가 26일 긴급회동에서 정치권을 향해 수정·철회를 요구하며 지목한 '포퓰리즘 입법' '과잉 입법'들은 10여 개에 달한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의 경우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 경쟁력 유지와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연장법이 통과할 경우 노사 간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될 '임금체계 개편'에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가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체계(연봉제, 성과급제 등)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관련 법 가운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의무고용)에 대해서도 "고용 유연성과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로, 정비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이 '과잉입법'으로 지목한 것은 우선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정하는 '공휴일법'이다. 국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공휴일을 법으로 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벌칙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행정제재·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때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엄마가산점제)은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며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불분명해 노동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조치를 요구한 사안들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이후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정산해 달라는 노동조합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우리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000억 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5월 6일자/유해물질관리법…〉=『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

금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재계는 물론 입법전문가와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반대의견을 내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이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3억 원인 관련조항을 수정, '영업정지를 갈음하거나 인적 사상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경봉(경제학) 국민대 교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영업이익 등을 따지지 않고 매출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인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2012년도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액수가 조 단위로 해당 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실수 하나가 기업 존폐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행정제재가 가해지면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21일자/ 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6월에 집중 처리키로 하면서 정·재계 간에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지배구조 관련법까지 가세해 기업들에 '삼중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갑을(甲乙) 문제까지 겹쳐 이들 법안은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재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은행권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심사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51개 법률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초강력'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에는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 내용이 빠져 있지만 김기식·김기준(이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포함돼 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지주사 회장의 제왕적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주요 집행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해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6월 중순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4월 23일자 1면 머릿기사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인사들의 도발적 언사와 엔저(低) 경제 정책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 「엔저공습·역사도발 … 日, 또 '한반도 침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반도 침략'이라는 표현은 은유적 수사인데 사실관계를 다루는 스트레이트 기사(사실기사)의 제목으로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비유다.

국가간 외교관계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며 그같은 굴곡이 극대화한 것이

침략이다. 비록 지금 일본의 잘못된 우경화와 엔저 정책으로 양국관계가 급냉하고 있다 해서 이같은 상황을 곧바로 '침략'으로 비유한다면 양국간에 수없이 발생하는 유사 상황을 번번히 '침략'으로 비유해야 할 것이다.

4월 26일자 2면 기사는 여야 정치권이 다각도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자 경제5단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그 논조는 주로 경제5단체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는데 문화일보는 경제5단체가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을 소개하면서 작은 제목으로 「'포퓰리즘 법안' 어떤게 있나」라는 내용을 달았다. 여기에서 표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제5단체가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문화일보의 제목은 마치 해당 법안들이 모두 객관적인 '포퓰리즘 법안'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

5월 6일자 1면의 머릿기사 「유해물질관리법, 違憲·과잉입법 논란」은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대로라면 행정부와 전문가들 모두가 반대한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이같은 법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안경봉 국민대교수가 『"… 면밀히 검토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을 요구했고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기사는 적고 있으며 김희균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량을 정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2면의 관련 기사 「"영업이익 최대 22배 과징금 … 살아남을 기업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일보가 임의로 선택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들로서 이들이 모든 행정부와 전문가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제목은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라고 표현했다.

5월 21일자 3면의 「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 …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 '초강수'」 제목의 머릿기사는 1면 머릿기사의 해설기사이다. 이 기사는 정부와 새

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은행권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보험·카드사를 소유한 대기업에 경영권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이라고 제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며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문화일보의 제목 달기는 기사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이나 표현, 그 취지와 달리 편집자의 의견을 치우치게 반영한 것으로 이는 독자들에게 사실을 왜곡 전달해 신문 제작의 기본인 정확성과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신문의 신뢰·권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6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光州日報 2013년 6월 3일자 3면「"5·16은 혁명, 5·18은 폭동" … 뉴라이트 '교과서 쿠데타'」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光州日報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의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어서 5·18 왜곡·폄훼에 이어 교과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18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영진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에 합격한 것은 처음이다.

교학사가 발행하는 이 교과서는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각 학교에 전시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 전쟁' 재연 우려=** 역사 전쟁은 2008년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를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교과서포럼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 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내놓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필자 여러분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해 말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포럼과 통일부·국방부·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금성교과서의 수정을 지시했다.

2011년엔 교과부가 역사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고 이후 교과서 집필기준도 대폭 변경했다. 새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5·16 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들이 빠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자,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엔 넣지 않았지만 이 사건들을 교과서 집필할 땐 꼭 넣으라"는 고육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열린 '현문즉답' 행사에서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라고 말해 지역 사회와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5·18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이 만든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핵심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들이 2008년에 내놓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채 과거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 것으로 새 교과서 내용을 '예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사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학자들이 펴낸 '대안교과서' 내용도 왜곡했다.

기사는『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안교과서'는 4·19는 "4·19 민주혁명"으로, 5·16은 "5·16 쿠데타",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각각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교과서를 공동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역시 지난 6월 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5·18을 반란,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는 새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추정하면서 이 교과서를 펴낸 교학사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교학사는 새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5월 31일 반박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광주일보가 이 기사를 보도한 날자는 사흘 후인 6월 3일자였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본문 내용이 미확인 사실임에도 큰 제목으로 「"5·16은 혁명, 5·18은 폭동" … 뉴라이트 '교과서 쿠데타'」로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7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8월 1일자 11면「새누리 '홍준표 경남지사 재공천' 딜레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이 '홍준표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경남지사를 다시 공천하기도, 그렇다고 낙천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홍준표 대항마'만 나타나면 내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홍 지사를 공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당내에 "경남지사를 야권에 빼앗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홍 지사를 공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복지공약 전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상당수 새누리당 인사들은 홍 지사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다.

정부와 긴밀한 상의없이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박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언론과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독불장군' '홍반장'으로 소문난 홍 지사를 일방적으로 내치기도 쉽지 않다.

최근 모 언론이 실시한 4개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 홍 지사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홍 지사가 경남지사 재선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35.4%) 보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답(53.6%)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경수 민주당 경남김해을 지역위원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 야권후보와 맞대결에선 10% 이상 앞섰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당 지지도를 감안할때 누구를 내세워도 야권 후보를 이긴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대항마'를 찾는데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홍 지사에게 패한 박완수 창원시장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이 약해 제외시키는 분위기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 시장의 정치력으론 홍 지사를 누르기 힘들고, 야권 후보를 이기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학송·권경석 전 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도 거론되지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김 의원은 내년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뒤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홍 지사와 야권 후보들을 동시에 제압할 사람은 김 의원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가설도 김 의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홍 지사를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80100001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공천'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고민을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홍지사를 다시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진 해설기사다.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달리 기자의 의견이나 식견, 안목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기사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홍준표 대항마'만 나타나면 내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홍 지사를 공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당내에 "경남지사를 야권에 빼앗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홍 지사를 공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다.』『상당수 새누리당 인사들은 홍 지사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다.』『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대항마'를 찾는데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선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홍 지사에게 패한 박완수 창원시장을 거론하는 사람

들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이 약해 제외시키는 분위기이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등으로 기술, 전체적으로 홍 지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차기 선거 출마에 필수적인 당의 재공천 문제는 현역 정치인인 홍 지사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사가 새누리당 내에 홍 지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주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홍지사의 행적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선거기사'에 버금가는 엄격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어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 전체에서 사실이나 논리 전개의 근거가 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최근 모 언론이 실시한 4개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뿐이고, 그 밖에는 기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부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또 위의 지지도 조사 결과도 홍 지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전체적으로 반 홍지사의 기류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 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10월 16일자 1면 「'팽'당한 에너지 희망 … '원전대계' 무너지나」 제목의 기사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슴 하나가 있었다. 35년간 주인에게 충성했다. 밥은 많이 먹었지만, 힘 하나는 장사였다. 다른 머슴보다 3~4배 일을 많이 했다. 주인은 그래서 그 머슴을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병색이 돌자, (물론 그 머슴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주인은 머슴에 대한 애정을 거뒀다. 다른 젊고, 힘센 머슴에게 눈길을 돌렸다. 충직했던 머슴은 토사구팽을 당하는, 착잡한 심경을 맛봤다.

그 머슴, 다소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원전(原電)'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간 워킹그룹이 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원전이 그런 입장에 처해진 것이다.

원전은 에너지의 희망이었다. 100년 대계(大計)였다. 지난 1970년대 말 중화학 육성정책과 맞물려 원전 건설은 장려됐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값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발전(發電) 수단이라고 수십년간 칭송됐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일군 바탕 중 하나는 그런 원전의 값싼 전기로 중화학은 물론 전자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이 경쟁력을 확보한 채 성장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역대 정부는 원전 건설에 몰두해왔고, 이명박정부에 이르러서는 41% 비중으로까지 올리겠다고 원전 '올인 정책'을 편 것이다.

그런데 워킹그룹이 권고한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2~29%로,

41%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비중은 26.4%(석탄 31%, LNG 28%)임을 보면 워킹그룹의 권고안과 그리 차이는 나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향후 20년 뒤면 에너지 사용량이 현재보다 엄청 늘 것이라는 점에서 '원전 역할의 후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시대 흐름을 완전히 거역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선 원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발령된 상태다. 원전 강국 독일 등 원전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4면으로 계속

문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원전 이후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실효성이 빠져 있고, 전기 가격과 수요에 대한 해법이 결여돼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35년간 충직하게 일해온 머슴을 대신할 새 머슴을 구하지 못한 채, 구박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원전 사고로 거세게 불고 있는 반(反)원전 여론을 의식하다보니 일단 원전 비중 감축 방향을 정하고 보자는 심리가 짙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나명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원자력이 (향후 에너지시대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시대 대체에너지가 되기 어렵고, 바이오메스·태양열·수력·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도 원전 이후의 주요 대안이 되기엔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러다보니 원전에 대한 '홀대'는 기회주의적이며 20년 후의 한국경제를 고려치 못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재로선 원전만한 값싼 에너지는 없다"며 "대체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지금, 원전 비중부터 줄이자는 것은 산업용 전기료는 물론 가정용에도 뒤따를 엄청난 부담 증가를 그냥 감수하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석탄은 CO_2 배출 문제가 있고,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는 발전단가가 원전의 2.65배에 달한다. 현 계획대로라면 철강, 화학 등 값싼 원전 전기를 사용했던 기초소재 업종은 경쟁력이 약화될 대로 될 것이고, 이는 자동차, 조선 등 가공

업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5년간 충직하게 일해온 머슴과 그 못잖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머슴, 이 둘의 조화를 일궈낼 '주인의 슬기'가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인 41%에서 20%대로 낮추자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권고한데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글머리에서 원전을 머슴에 비유, 정부가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인다면 이는 머슴이 늙고 병색이 돌자 주인이 애정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서술했다. 헤럴드 경제는 이같은 비유 내용을 1면 머릿기사인 이 기사의 제목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머슴'의 비유는 위 기사의 원전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민간워킹 그룹이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자고 권고한 이유는 원전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이 인류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원전 확대 일변도 정책의 그늘 아래에서 엄청난 조직적 비리가 기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시설의 부실도 만연했음이 뒤늦게 드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것이다.

결국 위 기사 중 '머슴'의 비유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중대한 비유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즉, 기자가 자신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또 헤럴드경제가 위 기사의 소제목을 통해 「전문가들 "무책임한 정책"비난」이라고 밝힌 표현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는 두 사람으로서, 이들 중 아무도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

았으며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이도 두 사람 중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뿐이다. 당연히 유 본부장이 전체 원전 전문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제목에서 마치 전체 원전 전문가들이 모두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자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신문의 책임성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3년 9월 23일자 1면「박원순 서울시장님 책임입니다/처참한 상암벌 논바닥 잔디!」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눈물겨운 노력이 있는 반면 여론과는 동떨어진 그라운드가 있다. 여러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결국 '국제 망신'을 당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한국 축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스포츠조선은 이달 초 '이제는 클래스다!' 코너를 통해 상암벌의 '비상식 그라운드'를 지적했다. 그라운드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곳곳이 맨땅이다. 급하게 잔디를 손질하지만 선수들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경기력에도 영

향을 미친다. 패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드리블도 쉽지 않다. 선수들은 볼을 차면서도 틈만 나면 패인 잔디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3류 그라운드 탓에 선수들도 부상에 노출돼 있다.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CL 8강 2차전이 벌어졌다. FC서울이 천신만고 끝에 4강에 올랐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었다. 비토르 페레이라 알 아흘리 감독은 "우리는 패스를 통해 경기 운영을 풀어나가는 팀인데 잔디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토로했다. 아쉽기는 최용수 서울 감독도 마찬가지다. "좋은 잔디에서 좋은 패싱 축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서울과 알아흘리전은 아시아 전역에 중계됐다.

'인재'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산물이다. 서울특별시의 현주소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을 미소짓게, 서울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공기업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서울시 산하에 있다. 여론의 지적에도 반응은 더뎠다. 반성은 없었다. 조목조목 절차만 따졌다. 잔디 복구를 위해 6000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최근 승인이 떨어졌지만 입찰을 통해 잔디 보수 업체를 또 선정해야 한단다. 서울은 25일 에스테그랄(이란)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CL 4강 1차전을 치른다. 그 때까지 원상 회복되진 못한다. 또 한번 국제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다. 다음달 12일 브라질과의 A매치에 맞춰 긴급 보수 작업을 마칠 계획이란다. A매치와 ACL, 차별을 두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스포츠를 바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 궁금하다. 능력이 안되면 기업구단에 그라운드 운영을 맡기면 된다. 밥그릇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관리는 부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축구협회도 문제가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영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1국가-1협회'를 원칙으로 한다. 대외 창구는 프로연맹이 아닌 축구협회다. 축구회 고위관계자들은 서울의 8강 2차전을 현장에서 관전한 후 상암벌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브라질과의 친선경기 걱정으로 우려를 토해냈다. 그러나 ACL도 신경을 써야하는 무대다. 어떤 경로든 사전에 우려를 전달했어야 했다. 일본축구협회의 경우 ACL이 열리

는 경기마다 관계자들을 파견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극과 극의 후진 행정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240100186590014305&servicedate=2013092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프로축구 구단 FC서울의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척박한 잔디 상태를 고발하며 그 원인과 대책을 따지고 분석한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 9월 18일 FC서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ACL) 8강 2차전을 치를 당시 잔디 곳곳이 맨땅이어서 선수들이 패스와 드리블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기가 아시아 전역에 중계됐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그런데 스포츠조선은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 제목을 「박원순 서울시장님 책임입니다/처참한 상암벌 논바닥 잔디!」라고 달면서 박 시장의 얼굴 사진을 문제의 잔디 그라운드 사진 중간에 돋보이도록 배치했다. 제목만 놓고 보면 박 시장의 잘못 때문에 경기장 잔디가 엉망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기사에도 일부 지적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생긴 축구경기장 잔디 부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1면 톱 제목으로 단정해 비난한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과장이다.

특히 위 기사가 보도되기 얼마 전에는 박 시장 측과 새누리당 사이에 '무상보육' 재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펼쳐진 터여서 이렇다 할 근거없이 박 시장을 겨냥한 위 기사의 제목은 자칫 박 시장을 정치적으로 흠집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소지도 있다.

서울시는 위 기사가 나간 이후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이틀간 동아시안컵 경기로 4경기를 연속으로 치르는 등 13경기를 무리하게 치르는 바람에 잔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경기가 계속 열려 잔디가 뿌리 내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은 그러나 위 기사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3년 9월 23일자 18면「오너 지분 경쟁에 '나사 풀린' 롯데그룹」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58)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59)이 '책임경영'을 앞세우며 올해들어 계열사 주식을 잇따라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내에선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질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형제가 실제로는 책임경영과는 상관없이 지분경쟁에만 몰두, 회사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선 최근 고객 사은품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꿀 제품을

제공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일부 고객에게 제공한 홍삼꿀차와 대추꿀차,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것으로 홍삼꿀차와 대추꿀차는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됐고, 블루베리꿀차와 아카시아꿀은 8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취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해당제품의 납품과정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선 지난 4월21일 여성복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여성(47)이 백화점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투신 직전 의류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앞으로 '대리님,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힘들어서 저 떠납니다'라는 글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백화점 측의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A씨가 자살했다는 것이 당시 주변의 분석이었다.

롯데는 각종 법규를 어기는 것도 '단골 손님'이다.

롯데그룹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 간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4억47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의결·미공시 등 위법행위 11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회사별로는 롯데상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롯데와 롯데푸드, 롯데브랑제리 등이 각각 1건씩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신동빈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지분 늘리기 행보를 가속화해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 롯데케미칼 주식 6만2200주를 100억여원을 들여

매입했다. 신 회장은 6월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 주식 7580주를 사들였다.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5.34%, 롯데칠성의 지분율은 4.96%로 높아졌다. 신 회장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는 롯데손해보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번 주식 매입 이전에는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

신동빈 회장의 이같은 움직임에 자극받은 것일까? 신 회장과 함께 그룹의 경영을 양분하고 있는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도 최근 주식매입에 나서 두 형제의 '지분 경쟁'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제과 주식 643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3.52%로 높였다. 신 부회장이 롯데제과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쇼핑 지분을 각각 13.46%, 13.45%를 갖고 있어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

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주식매입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형국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230100182680014002&servicedate=2013092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올 들어 계열사 주식을 잇달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형제가 지분경쟁에만 몰두하면서 회사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기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 롯데케미칼 주식 6만2200주를 100억여원을 들여 매입했고, 6월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 주식 7580주를 사들였으며, 9월에는 롯데손해보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 8월 롯데제과 주식 643주를

매입했다.

기사는『두 형제의 '지분 경쟁'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면서도『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주식매입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만 놓고 보면 두 형제가 '지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일 뿐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데 위 기사가 제시한 롯데그룹 내 불상사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고객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넘긴 꿀 제품 제공 ▲지난 4월 21일 롯데백화점 여성복 매장 여성 매니저 투신자살 ▲롯데그룹이 지난 3년간 내부거래 관련 부실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4억4705만원 부과받은 것 등 세가지 사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 매니저 자살 사건과 내부거래 부실 공시 등 두 건은 신동빈 회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인 지난 5월 이전에 일어났다. 설사 두 오너형제가 '지분경쟁'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건의 불상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포츠조선은 두 사람의 지분경쟁으로 인해 경영이 방만해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양 기사 큰 제목을「오너 지분 경쟁에 '나사 풀린' 롯데그룹」이라고 단정적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롯데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10월 31일자 1면 「학생 역사인식보다 뒤처진 역사교과서/중·고생 70% "친일 규명은 정부·국회서 해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의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정부나 국회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일각에서 일제 통치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역사 논란이 학생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지난 5~6월 전국 중3, 고2 남녀 학생 1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 '일제강점기의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나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민족반역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국회가 친일 진상을 밝히고 기록으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답도 31%였다. 이어 '시민단체가 앞장서 친일 진상을 밝혀야 한다'(12%), '지난 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11%), '일제강점기에는 누구든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친일 문제를 따질 수 없다'(8%) 등의 순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평소 역사에 흥미와 관심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흥미와 관심이 꽤 있는 편'(34%), '언제나 흥미와 관심이 있다'(12%) 등의 긍정답변이 46%로, '흥미와 관심이 별로 없다' 등의 답변(22%)의 2배를 넘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노동자·농민들이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였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은 반면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꼽은 답변은 8%로 최하위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정작 역사교과서 논쟁은 '반공' 등 지난 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대부분의 국민과 학생들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경제발전도 특정 리더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특정 리더십만 강조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가치보다 훨씬 성숙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02321185&code=9404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이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요지는 큰 제목의 표현대로 「학생 역사인식보다 뒤처진 역사교과서」라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역사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서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사 중 '시리즈 8, 9면'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향신문 같은 날자 8, 9면 기획 특집에서 비판적으로 소개한 '교학사 교과서'를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지난 5~6월에 전국 중3, 고2 남녀학생 1,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사는 설문 항목 가운데 '일제 강점기의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고, 위 기사에 적시된 5가지 답변 항목별 응답자 수를 근거로 『한국의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정부

나 국회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교학사 교과서' 내용과 비교하려면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민족반역자' 처리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도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이 『학생들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사회의 역사논란』이, 즉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라고 상대적 평가를 내렸다.

기사는 이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연관지어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정작 역사교과서 논쟁은 '반공' 등 지난 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 데』라는 기술의 근거는 기사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를 '역사 교과서 논쟁'에 대비시켜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10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9월 11일자 1면 「채동욱 총장 婚外아들 생모로 알려진 임씨, 본지에 편지/"아이 아버지는 다른 蔡모씨 채동욱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학적부에 아버지로 올려"/법조계 "비논리적 주장 … 특가 유전자 검사 받아야"」 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11)을 낳은 것으로 보도된 Y(54)씨가 10일 '채 총장은 경영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내 식구들에게까지 (애 아버지로) 속여 왔다. 진짜 아버지는 다른 채모씨'라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편지에 '임○○'라는 실명(實名)을 밝힌 그는 "밝힐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됐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 출생 신고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본지와 한겨레신문에 이날 각각 배달된 임씨 명의의 편지는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임씨는 이어 "채동욱씨를 (10여년 전) 부산에서 술집을 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레스토랑과 술집)을 할 때도 제가 청(請)하여 여러 번 보게 됐다"며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가게(술집)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채동욱)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했다. 술집 단골손님인 채 총장을 아이 '아버지'라고 하면 사업도 수월하고, 주변에서도 깔보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까지 자기 가족을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주장의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혼외 아들의 진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채 총장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했길래 주점 여사장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도록 했는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씨의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 총장과 임씨가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두었다고 처음으로 보도했던 朝鮮日報가 후속 보도로 내보낸 것이다. 기사는 당초 朝鮮日報가 채 총장의 婚外 아들의 생모로 보도한 임모씨가 朝鮮日報에 보내온 편지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으며 이 편지내용에 대한 법조계 인사 2명의 반응도 덧붙이고 있다.

위 기사는 본문에서 임씨의 편지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주장의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 '비상식적 주장'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법조계 인사 2명의 발언 내용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임씨의 편지내용을 두고 합당한 근거없이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인용한 발언에도 없는 내용을 '법조계'의 의견인 것처럼 적은 것은 객관적 사실 기술이 아닌 기자의 의견 기술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기자는 이들의 발언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기술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이 특히 사실기사(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강조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을 외면한 것이다.

또 이 기사는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 『"임씨의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총장과 임씨가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발언 내용 속에는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이나 또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을 설득력있는 '법조계' 인사의 의견인 것처럼 기사에 담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기는 것이다.

또 위 기사의 부제목을 보면 「… 법조계 "비논리적 주장 … 즉각 유전자 검사 받아야"」라고 돼있다. 기사 본문 중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한 사람의 발언 내용뿐이다. 그나마도 그가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동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목에서 이 발언 내용을 토대로 이를 '법조계'라고 지칭, 유전자 검사 요구가 법조계 전체의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기사 본문 내용을 왜곡·과장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니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본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제목에서 기사본문의 내용을 과장·왜곡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매일경제 2014년 1월 7일자 1면 「지자체 한마디에 1.4조 허공으로/인천 서구청 "SK공장 증설위법 … 공사 당장 멈춰라"」·A14면 「공사 지연 피해 매달 1000억/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 위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자체 한마디에…〉= 『SK그룹이 인천에서 진행 중인 화학공장 증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1조4000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인천시 서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K인천석유화학 측에 '파라자일렌 생산 제조시설' 증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1월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시가 권고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열흘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 인허가 기관인 서구를 상대로 공장 증설 승인 및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 일체를 감사했다. 그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작물 17기, 공작물 제조시설 5092m^2와 공작물 부대시설 3만2899m^2를 누락시켜 서구에 신고했으며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인천시는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고 각종 변경·승인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줬다고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인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난해 초부터 증설하고 있다. 총 1조600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인

이번 공사의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이미 1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공사가 중단되면 매월 540억원가량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은 "1조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 2014&no=27909〉

〈공사지연 피해…〉=『SK그룹이 1조6000억원을 투자한 화학공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겉으로는 승인 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주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힘 겨루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 지역에 증설 중인 화학공장은 당초 올해 4월 완공 예정이었다. SK 측은 이 공장에서 '파라자일렌'이란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 물질을 생산한 뒤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화학공장으로 옮겨 고순도 테레프탈산 제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일 인천 서구청 측이 "공장 증설 중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SK 측은 일단 인천시와 서구청의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증설 공사 승인이 적법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해석 결과에 따라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거나 아예 증설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매달 매몰 비용만 5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감소·공정비 부담·원유 장기 도입 계약 손실 등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매달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는 국내 대형 기관투자가들 자금도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3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사학연금도 1000억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증설이 지연될수록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법조인들 역시 인천시와 서구청의 대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공사 승인 취소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도 문제다. 당초 공사 승인을 해준 건 인천 서구다. 스스로 승인한 사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거졌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승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 서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2006년 이뤄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청장과 인천시장이 모두 야당 출신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공장 증설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지난해 1월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6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들은 인천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관련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측에 ‘파라자일렌(PX) 생산제조시설’ 증설 공사의 중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앞서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사는 전했다.

1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증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1조 4000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라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토대로 큰 제목을 「지자체 한마디에 1.4조 허공으로」로 뽑았다. 제목대로라면 서구청의 공사 중단 예고에 투입 공사비 1조 4000억원이 사라졌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제기한 ‘가능성’을, 제목은 ‘실현’된 것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1조 4000억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설사 1.4조가 허공으로 살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것은 공장 증설 과정에서의 SK측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비껴 간 채 '지자체의 한 마디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예단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A14면 해설기사는 자치단체의 공사 중단 예고와 관련, 모두에서 『겉으로는 승인 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주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힘겨루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독자와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말미에서 『사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거졌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승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 서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2006년 이뤄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청장과 인천시장이 모두 야당 출신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공장 증설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지난해 1월이다.』라고 적었을 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예측에 얽매여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8일자 1면 「빚더미 LH, 눈뜨고 4600억 날렸다/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때 경기도에 땅 헐값 매각」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불평등한 협약서를 체결, 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방만경영 1순위라는 오명이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협약서를 경기도와 체결, 45만 4964m^2의 땅을 경기도에 조성원가로 매각해 실질적으로 4649억원(감정가 기준)의 이익을 날렸다.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LH를 비롯한 공동시행자들이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것이다. 택지개발처리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업무단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되면서 협약서 제2조에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 전체를 공급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 LH로부터 벤처·업무단지 택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이관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택지를 4개 유형(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 주차장)으로 그룹화해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안랩 컨소시엄 등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4649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경기도가 벤처기업 등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판매 조건으로 내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명백하게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일정기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결국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10년 뒤부터 개별적으로 토지거래에 나서게 됨으로써 큰 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H와 경기도가 입주 기업의 토지 투기를 사실상 도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택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LH가 직접 입주기업에 매각했으면 더 큰 이익을 얻었겠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택지가 없어 개발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0800101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라는 주제의 기획을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지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LH는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용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경기도에 매각했다. 기사는 이와 관련, 『택지개발처리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땅을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되팔아 464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기사는 이에 대해 모두에서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라고 적은 데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협약서를 경기도와 체결』『불평등한 협약서 체결 때문』『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 등으로 기술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빚더미 LH, 눈뜨고 4600억 날렸다」고 제목을 달았다.

여기서 '눈뜨고'는 '기만당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제목대로라면 LH가 상대인 경기도의 '꾐'에 빠져 46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기사는 그러나 '법령에 근거없는 불리한 협약'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는 LH공사가 택지개발처리지침에 따라 땅을 조성원가에 매각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해당 지침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LH와 경기도 등이 해당 협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년은 국가 정책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던 시기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 게다가 LH는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을 뿐이지,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섣부른 예단에 근거해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4년 1월 6일자 9면 「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 '파업 불법성' 깨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을 감행했다.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과 지방본부 간부들이 먼저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중앙간부들도 코레일과의 교섭 상황을 봐서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철도노조와 민변 등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천안지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철도파업에 대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

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9일 곧바로 191명을 고소·고발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도 180명가량을 고소·고발했지만 구속자는 김기태 전 위원장뿐이었다. 김 전 위원장도 1·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지난달 13일 코레일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도 코레일의 고소·고발에 따른 체포영장만이 유일한 법적 근거였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화된 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처음 진입했던 것이다. 파업 종료 시점을 전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이 파업 와해 수단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들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파업 중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파업이 끝나니까 기각됐다"면서 "검·경과 코레일, 정부가 상통해서 고소·고발과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은 경찰로서도 치욕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무차별 체포와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교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52118235&code=9407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한 해설 기사다.

기사는『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고 했다. 기사 제목도「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 '파업 불법성' 깨져」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기사는 또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통상 관련자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점 때문인 것이 일반적이다. 철도노조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대다수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이 적법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파업의 불법성이 깨졌다고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1월 9일자 9면 「한국사 학계도 좌파 일색」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뿌리는 '불균형'이다. 현재 진보성향, 소위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학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좌우 성향을 떠나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1980년대 민주화 물결이 만들어낸 파장의 일부다. 군사정권에 맞선 반작용으로 학계의 방향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렸던 것. '외눈박이 사학'이 시작된 근원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눌 공론의 장이 쉽게 펼쳐질 수 없다. 한때 진보이론가였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조차 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내 한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고 말한다.

학계의 세력 싸움에 학문·사상적으로 피해를 본 건 학생들이다. 편향적 시각의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반쪽자리 역사만 배워야 했던 것.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비봉출판사)를 통해 "민중사학자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고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되고,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된 시점부터 집필진으로 참여해 세력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정 위원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서 한국사학자로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좌편향 실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0901070930017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보수-진보로 나뉜 역사학계의 현실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뿌리는 '불균형'이며, 『현재 진보성향, 소위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학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좌우 성향을 떠나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본문에서 한국사 학계 다수가 '좌파'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좌파 일색」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과 '의견' 차이가 역사학계를 '좌파' '우파'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좌파' '우파'란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기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역사학계를 뭉뚱그려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졌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제목에도 '좌파'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있다거나 이를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 한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사 논란의 한 당사자인 권 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 이를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객관화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

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4년 1월 3일자 1면 「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인가"/26억 증액안 예결위서 20억이나 삭감/경북도 방파제 건설 비용 없어 속태워/日은 독도관련 예산 증액 대조적 행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 정부의 '독도야욕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외교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이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가 제출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예산 42억3천500만원에 26억원을 보태 68억3천500만원을 책정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추가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는 독도 예산을 20억원 증액했지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성사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012년 12월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했지만, 여전히 국비 예산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도는 방파제 건설 예산으로 100억원을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도 재차 요구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총사업비 4천74억원이 드는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은 독도 입도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독도 전체가 문화재보호시설이어서 방파제를 건설할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대외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속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억9천만엔(약 19억원) 증액한 10억엔(1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병석 국회부의장(포항북)은 "독도 예산 삭감은 일본이나 동북아 정세에 비춰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상황이 어려울수록 영토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은 정부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영토관리대책단에서 과감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03.0100107074400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20억 원 삭감된 데 초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는 지난 해 12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42억3천500만 원에 26억 원을 보태 68억3천500만 원으로 책정해 예결위에 넘겼지만 예결위는 20억 원을 삭감한 48억3천500만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종

안은 정부안보다 6억 원이 많다.

그런데 예결위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곧이어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 원만을 증액했지만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정부 부처의) 독도 관련 3개 사업에 추가로 160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2014년 (정부 전체) 독도 예산은 (외교부 증액분 6억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166억 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힌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남일보는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독도 방파제 건설 예산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함께 묶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 예산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도 「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 취재기자와 편집자의 자의적 시각과 판단에 맞춰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장 덕 수

〈주 문〉

중부매일 2014년 1월 3일자 3면 「"시장 나와라" 초유의 인사 항명/청주시 사무관, 한 시장에 면담요구 … 말리는 직원에 폭행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주시청 한 사무관이 인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항의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K 과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인사 결과와 관련해 한범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집무실 안에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속실 직원은 "동석자가 없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님이 K 과장에게 '나가'라는 말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속실 관계자는 집무실에서 나온 K 과장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집기를 훼손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K 과장은 오후에도 비서실을 찾아 부속실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시의회 모 의원은 K 과장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은 K과장과 부속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심층 조사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상 초유의 인사 불복 항명이라는 점에 미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전무후무한 인사 항명에 K 과장의 그간 행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K 과장은 이번 소동 이전에도 한 시장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 불만사항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도 '폭언·폭행'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한 증언이 필요할 경우 진술에 나설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37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청주시청의 K과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K과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청주시장 집무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한범덕 시장을 면담하고 나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 날 오후에 다시 비서실로 찾아와 부속실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모 시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K과장이 잘못했다는 쪽 목격담들만 묶어 전했을 뿐 K과장이 불만스러워 한 인사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폭력적 행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기사가 K과장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위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청주시청 관계자, 그리고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K과장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 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인 K과장으로서는 명예는 차치하고라도 위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사안 자체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클 법한데도 기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사는 특히 K과장의 행위를 『사상 초유의 인사 불복 항명』『전무후무한 인사 항명』이라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했지만 왜 '사상 초유'이며 '전무후무'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편집자는 큰 제목을 「"시장 나와라" 초유의 인사 항명」이라고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시장 나와라"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취재기자와 편집자는 객관적 사실 보도를 위한 확인 과정은 소홀히 한 채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기사와 제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

(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4년 1월 3일자 10·11면「내우외환-후계 경쟁 … '위기의 롯데'」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롯데그룹은 내우외환이다. CJ그룹과 효성그룹에 이어 대기업 사정의 다음 타깃이 롯데라는 얘기가 수개월전부터 나돈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이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사업은 부진하다. 또한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59)과 신동빈 회장이 잇딴 계열사 지분 매입으로 경영 주도권을 두고 형제간 경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자아낸다.

▶사정당국의 다음 타깃은 롯데?

롯데는 CJ그룹의 검찰 조사와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효성과 함께 사정 대상 기업으로 줄기차게 거론됐다. 최근 정부당국의 롯데에 대한 압박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 세무조사가 연장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3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8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쇼핑에 대해 120일간 세무조사를 해왔던 국세청이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무려 80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사업이 다양하고 조사할 자료가 많아 연장한 것일 뿐이다. 정기 세무조사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롯데쇼핑은 31개의 백화점과 100여개의 대형마트. 500개에 달하는 슈퍼마켓, 여기에 90개의 영화관까지 거느린 롯데그룹의 최대 계열사다. 롯데쇼핑은 그간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높은 판매수수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온 상황.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진 박근혜 정부와는 여러가지 안건에서 대립각이다. 여기에 지난 정부때 롯데가 잠실월드타워 사업 허가를 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해외사업의 부진

신동빈 회장이 2011년 취임후 롯데그룹 산하 계열사들은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앞다퉈 진출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부문은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롯데는 2008년 중국 유통업체인 인타이와 5대 5 지분 비율로 합작회사인 인타이롯데백화점을 설립했지만 최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5년간 누적적자가 1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260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제과는 중국에서만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 역시 중국 법인 4곳에서 72억원의 손실을 냈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한 후 173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등지에서는 비교적 매출이 좋은 편”이라며 “진출한 지 얼마되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성공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신 회장이 해외 시장의 공격적 투자를 통해 밝힌 ‘2018년 아시아 톱10 글로벌 그룹’이라는 비전과 ‘매출액 20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형제간 경영권 경쟁?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1)의 아들들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한국롯데 회장이 차기 후계자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롯데제과 주식 600여주 정도를 꾸준히 사들여 현재 지분율이 3.65%까지 늘어났다.

신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의 롯데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도 지난해 6월 말 롯데제과 주식 6500주를 사들이면서 현재 지분율을 5.34%까지 늘린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9월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사들여 100만주를 확보했다. 신 회장이 이번 주식 매입 이전 갖고 있던 롯데손해보험 주식은 전무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의 지분율도 늘렸다. 이들 형제는 롯데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지분 보유율이 13% 수준으로 엇비슷하다. 이에따라 업계 안팎에선 두 형제의 지분 매입 경쟁은 사실상 롯데쇼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 등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형제가 롯데제과·롯데칠성 등의 지분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롯데쇼핑에 대한 지분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두 형제의 지분 매입이 그룹 내부 주도권 경쟁이라 보기에 너무 소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부회장의 주식 매입은 개인적인 단순 투자일 뿐이고, 신동빈 회장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분율을 늘린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신 회장의 경우 지난 1월 미도파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롯데제과, 롯데칠성과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내수 침체와 불확실한 해외 경제 상황으로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한해였다.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며 "올해는 과감한 혁신과 현장중심 경영으로 기존사업의 내실화

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과 동반성장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개개인이 겸허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외부의 소리를 수용하는 유연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1030100022190000985&servicedate=201401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롯데그룹이 안팎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보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거론된 문제점은 대기업 사정의 다음 타깃이 롯데라는 얘기가 나돌며, 주요 계열사의 해외 사업이 부진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경영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CJ와 효성에 이어 사정 대상 기업으로 줄기차게 거론되며,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등 압박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납품가 후려치기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 박근혜 정부와 여러 가지 안건에서 대립각이라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신동빈 회장 취임 후 계열사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앞다퉈 진출했지만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이 두 사안을 뭉뚱그려 제목에 '내우외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기업은 롯데 계열사 외에도 여럿이다. 골목상권 침해 등의 사안이 거론된 곳도 롯데를 포함해 여럿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사정당국의 다음 타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막연한 추정일 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해외사업 부진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 경기로 국내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롯데그룹만을 지목해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며 몇몇 계열사의 부진한 실적을 나열한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 기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6월 롯데제과 주식 6,500주, 9월 롯데손해보험 100만주를 사들이고,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지분율도 늘렸다. 반면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이후 매달 롯데제과 주식 600여주를 사들인 게 전부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두 사람의 지분 매입을 그룹 내부 주도권 경쟁이라 보기엔 너무 소규모이다. 기사는 그밖에는 경영권 경쟁 가능성에 대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추측이 나오고 있다』『것이라는 분석이다』 등의 추측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롯데그룹이 사정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해외사업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의 경영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내우외환-후계 경쟁…'위기의 롯데'」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2월 4일자 1면 「규제법안 716개 쏟아낸 19대 국회」·A3면 「"운전사 딸린 렌터카, 일반인은 못탑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규제법안 716개…〉=『2010년 말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A사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포함시켜 분양을 하려 했다. 하지만 외부 건축사무소에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건축법에 발목이 잡혔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측은 큰 아파트를 많이 넣어야 각종 건축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며 버텼다.

A사는 회사 안에 건축사를 17명이나 두고 있었지만 자기 회사 아파트를 설계할 수 없는 '비정상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2012년 말에 겨우 설계를 변경했지만 아직도 아파트 분양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처럼 내부 건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분양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데도 2012년 5월 출범한 19대 국회가 새로 양산한 규제의 건수는 완화한 규제 건수의 5배가 넘었다. 3일 문을 연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는 규제의 총량을 줄이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3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설협회에 의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기업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모두 34건이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들 규제가 모두 한국에만 있는 '별난 규제'여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 중 단말기 보조금 규제,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처럼 기업 현장에서 투자를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형 규제'가 23건이었다. 수도권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등 나머지 11건의 규제는 여러 산업과 행정기관에 두루 걸쳐 있어 금방 없애기 힘든 '덩어리 규제'였다.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 중 상당수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영향을 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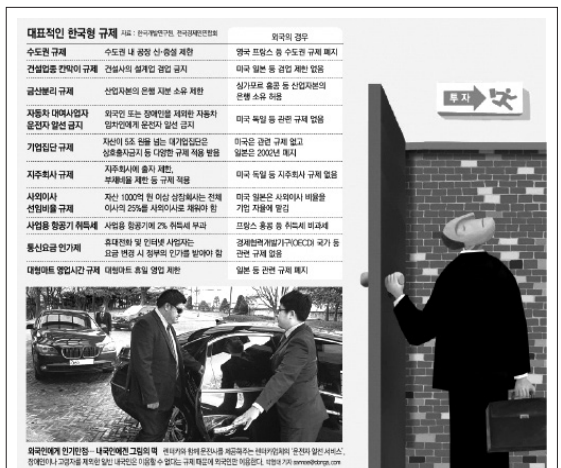
경제의 엔진을 늦추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규제가 우후죽순처럼 퍼진 것은 국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규제 양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경련에 의뢰해 경제 관련 5개 상임위원회에 1월 말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19대 국회 경제 관련 법안 1264개를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기업 지원 육성으로 분류해 보니 규제 강화 법안이 716개(56.6%)인 반면 완화 법안은 135개(10.7%)에 그쳤다. 의원들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5.3개 발의할 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안은 1개만 발의한 결과다. 국회에서 스포츠카가 질주하는 속도로 규제를 만드는 반면 자전거가 굴러가는 속도로 규제를 없앤 셈이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으로 발돋움하려면 한국형 규제 중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204/60554889/19〉

〈A3면= "운전사 딸린…"〉=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 입구에 번쩍번쩍하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독일인 우즈니 씨가 전날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차량이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운전사 박모 씨(56)는 우즈니 씨를 태우고 행선지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로 향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의 도움을 받아 취합한 34건의 '한국형' 규제는 대체로 규제 입법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 반기업 정서의 산물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한국형 규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규제에 정치적 논리가 덧씌워져 치유가 어려운 '규제괴물'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규제를 개선하려 해도 '반(反)기업 정서'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일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한국형 규제를 없애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수도권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환경보호나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규제가 만들어졌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편견이 생겼다. 정부로서도 19개 법률과 58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덩어리 규제를 손댈 엄두도 못 내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기업 투자가 저해된다는 이유로 1982년과 2003년에 각각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도 국내에서는 규제가 언제 개선될지 예상하기 힘든 한국형 규제로 꼽힌다.

'운전자 알선 금지'처럼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개선이 물 건너간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려고 시도는 했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택시 업계의 입김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귀띔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셧다운제' 등은 실효성 없이 관련 산업의 발전만 옥죄는 한국형 규제로 지적됐다.

• 규제 늘어 투자 위축 … "대못 뽑아야"

한국형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269건으로 2010년보다 2000건가량 늘었다. 규제가 늘면서 기업 활동이 둔화돼 2011년에 80%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75%대로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 평균치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31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88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형 규제의 '대못'을 뽑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규제 개선과 기업 수익성 회복,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를 혈관이라고 보면 한국형 규제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전에 해당한다"며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를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인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약 15조 원의 기업투자와 함께 1만3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흥국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가 지나친 규제로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며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기업 수익성 회복과 고용 활성화 등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204/60554846/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위 두 기사에서 '심층 탐사기획'으로 규제법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국회가 규제 법안을 양산해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1면 기사는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34건에 이르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2012년 5월 출범한 19대 국회는 716개의 규제법안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A3면 기사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법안을 표로 소개했다. 이러한 규제로 기업 활동 둔화 및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위 기사들이 제시한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의 정보 출처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설협회』다. 이들 기관과 단체에 의뢰해 34건의 '한국형 규제'를 분류했기 때문이다. 또 19대 국회가 716개 규제법안을 양산했다는 내용도 전경련에 의뢰해 얻은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다. 건설협회 역시 건설업체의 이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설립된 이익단체다. 때문에 이들 단체에 의뢰해 얻은 조사결과는 이들 단체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 또한 정부의 특정한 정책지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기사에 인용된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사는 수도권 규제를 대표적인 '규제 괴물'로 다뤘지만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 소속 연구소들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당사자, 평가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그럼에도 기사는 단정적으로 '한국형 규제'로 34건을 분류하고, 이를 '규제괴물', '동맥경화의 혈전', 뽑아야 할 '가시' '대못'으로 표현하고, 이와 다른 견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기사 제목 역시 1면의 경우 「규제법안 716개 쏟아낸 19대 국회」로 큰 제목을 뽑고, A3면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시」, 「반기업 정서의 산물」, 「규제 늘어 투자 위축 … "대못 뽑아야"」, 「'한국형 규제' 일자리 창출도 막아」 등 작은 제목을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2월 10일자 3면「호남지지율 安신당 '천장' 찍었고 민주 '바닥' 쳤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야권 표심의 바로미터인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밀렸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새정치신당(가칭)'은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앞선 것은 갤럽이 '안철수 신당'을 조사에 넣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안 의원이 독자적 정치세력을 선언,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지난해 12월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13%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당시 안철수 신당은 이보다 3배로 높은 44%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45%

지지율을 보이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역전' 경향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뉴스원이 전북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민주당 30.2%, 안철수 신당 39.6%였지만, 다음 달인 1월 민주당 42%, 안철수 신당 30.1%로 나타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001070323285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양새』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갤럽과 뉴스원의 여론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삼았다. 기사는 한국갤럽의 광주 전라지역 여론조사 결과 『(최근)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라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에 「호남지지율 安신당 '천장'찍었고 민주 '바닥' 쳤다」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여론이다. 때문에 오르내리는 여론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근거 없이 여론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불공정 보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 위 기사는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실시 시기와 표본 크기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4년 2월 11일자 3면 「새누리, 지방선거 '박심 논란'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잠잠해졌던 '친박-비박' 계파갈등으로 옮겨 붙을 태세다.

진원지는 서울시장 경선이었지만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박심'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심 논란은 주류인 친박계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밀고 있다는 관측에서 출발했다.

친박계인 당 지도부가 겉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진급 거물을 투입하겠다면서 실제론 '비주류 대선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정몽준 의원은 경선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자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지원설을 비판하면서 정몽준 의원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친박-친이 갈등으로 비화된 셈이다.

실제 "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경쟁력은 있겠지만, 당선된다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며 여권을 흔들 것"이란 게 친박계의 우려다.

지난 9일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의 불출마선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친박계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13일만에 이를 뒤집었다. 당내에선 부산·경남권 공천의 계파 안배를 통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서병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정리'란 해석이 나온다.

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이계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울산시장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차기 당지도부를 친박계로 구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말도 나온다.

친이계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남경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압박할 수 있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남 의원은 당지도부로부터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여권의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아, 김문수 지사 불출마 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거론된다.

또 비박계의 유력 원내대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차출될 경우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친박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친박독식 비판을 피하고, 당 지도부도 장악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란 얘기다.

지난 10일 서울시장에 도전한 이혜훈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심 마켓팅'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비박계에서는 '박심 마케팅' 당사자로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학재 의원과 부산의 서병수 의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639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새누리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박심' 논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박심'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이미 기

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친박계인 당 지도부가 겉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진급 거물을 투입하겠다면서 실제론 '비주류 대선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친박계 4선의 정갑윤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대해선『부산·경남권 공천의 계파 안배를 통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서병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정리'』와『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이계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울산시장 출마의 길을 열어줘 차기 당지도부를 친박계로 구성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친이계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남경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압박』할 수 있고,『비박계의 유력 원내대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차출될 경우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친박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친박독식 비판을 피하고, 당 지도부도 장악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맥락은 '비주류 대선후보 낙마'와 '친이계 지방선거 차출'로 '친박 독식 당 지도부 장악'이 '박심'과 닿아 있다는 내용인 셈이다.

기사는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나 가능성들은 근거가 없고, 선입견을 앞세운 추측성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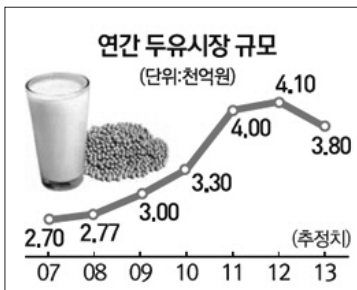
▲ 2014-1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4년 1월 27일자 A16면「길 잃은 정식품 … 뒤로 가는 두유시장」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식품 연간 실적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1,613	1,908	2,115
영업익	48	90	61
연구개발비	16.3	17.8	17.0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	1.01	0.9	0.8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 규모가 3,800억원으로 지난 2012년보다 7% 줄어들며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1위 기업인 정식품이 연구개발·투자에 소홀해 두유시장 침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식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 2010년 1.01%에서 20011년 0.9%, 2012년 0.8%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출시한 두유 신제품 수도 2012년 11종의 절반 수준인 6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유업계 관계자는 "두유 생산분야에서 경쟁업체들의 기술개발로 정식품의 기술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며 "두유 시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우유 대체품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급성장하면서 4,000억원을 넘어섰으나 정식품이 신성장동력 확보에 소홀해 정체되면서 불황 못지 않게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식품은 지난 1973년 창립 이래 40년 이상 두유시장 1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에서 정식품이 44%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삼육식품(22%), 남양유업(10%), 매일유업(8%) 등이 잇고 있다. 정식품은 지난 2011년 1,90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010년보다 18%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는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이 2011년보다 10% 늘어난 2012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오히려 4% 뒷걸음질쳤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축소는 성과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식품은 지난 2012년부터 두유 음용층을 20~30대 젊은 층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커피

두유', '냉장두유' 등 신제품들을 출시했으나 젊은 층 고객들의 주요 음료 구매 채널인 편의점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편의점에서는 1970~80년대에 출시된 주력 제품인 베지밀A·B의 비중은 여전히 지난해 정식품 매출의 77%에 달해 기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두유 제품은 우유·음료 등 다른 제품군에 비해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A편의점에서 유음료 매출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전년대비 20.8%, 8.8%씩 증가한 반면 두유 매출은 2012년 6.8%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5.2% 감소했다. B대형마트에서도 전체 음료매출에서 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1년 20.8%에서 지난해 18.1%로 낮아졌고 두유매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1년 26.1%에서 지난 2012년 -6.3%, 지난해 -11.3%로 다른 음료군과 비교할때 매출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또 다른 두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정식품 대표를 맡고 있는 손헌수 사장이 중앙연구소장 출신임에도 최근 수년 사이 변변한 히트 신제품이 없다는 사실은 정식품이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40년 이상 '베지밀' 브랜드 하나에만 의존해오면서 타성에 젖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1/e2014012616525112021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두유시장 규모가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위 기업인 정식품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 규모는 3,8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4,100억원 보다 7% 감소했다.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기 정식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다. 정식품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지난 1973년 창립 이래 40년 이상 두유시장 1위를 지켜왔다.

기사는 두유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식품이 신성장동력 확보에 소홀해 정체되면서 불황 못지않게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길 잃은 정식품 … 뒤로 가는 두유시장」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또 연간 두유시장 규모와 정식품의 연간실적 및 연구개발비를 담은 표를 만들었다.

기사와 제목, 표대로라면 지난해 두유시장 침체의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중이 줄어든 정식품의 연구개발비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하다. 정식품이 업계 1위의 업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비중 축소가 업계 전체의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설명이 없다.

기사 스스로 『"두유 시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우유 대체품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급성장하면서 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두유시장은 대체음료와 주변 여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정식품의 연구개발비는 매출 대비 비중은 3년 연속 줄어들었지만 총액은 그렇지 않다. 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2010년 16억3000만원에서 2011년 17억8000만원으로 늘었고, 2012년에 이르러 1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000만원 줄었을 뿐이다. 이 기간 정식품의 매출액이 늘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사는 또 다른 두유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2011년부터 정식품 대표를 맡고 있는 손헌수 사장이 중앙연구소장 출신임에도 최근 수년 사이 변변한 히트 신제품이 없다는 사실은 정식품이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 기사는 정식품의 이미지와 당사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길 잃은 정식품 …」이라는 제목도 기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4년 2월 4일자 17면「위기의 한샘 … 성장 집착하다 고객 신뢰 추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지난해 10월 초 한샘의 직영 인터넷몰인 한샘몰에서 자녀 방에 설치할 책장을 구매한 직장인 이 모(39) 씨는 시공 기사가 돌아간 후 책장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한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리 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다. 이 씨는 "제품 설치 후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년전 한샘 가구대리점에서 혼수를 장만한 직장인 정 모(42) 씨는 이사할 때 대리점으로 연락하면 붙박이장 재설치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대리점주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막상 이사하기 위해 대리점에 연락하니 한샘 고객센터로 떠넘긴 것. 고객센터에서 요구한 재설치 비용은 20만원. 배신감을 느낀 정 씨는 결국 2년 밖에 못 쓴 붙박이장을 싼 값에 팔고 새 장을 사기로 했다. 정 씨는 "가구업계 1위라는 회사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영업을 한다면 누가 믿고 브랜드 가구를 살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앞둔 가구업계 1위사 한샘이 외형 지상주의에

매몰돼 소비자들을 외면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기는커녕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2008년 이후 6년 만에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나며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물류, 시공, 애프터서비스(AS) 등 서비스 전 부문의 수준이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파른 성장이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양하(사진) 회장의 성장 제일주의 리더십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

진통이 가장 큰 곳은 온라인 부문이다. 한샘의 온라인 매출은 2008년 17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가구 업체 온라인 사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 시공, AS 등 대고객 서비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 판매의 경우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한꺼번에 배송·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부담이 덜하지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단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샘 수준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구업계에서는 한샘을 반면교사로 삼아 온라인 부문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서비스 수준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샘의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은 내부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의 불만이 비등하자 최 회장은 올 초 신년 하례회에서 "영업, AS, 광고, 마케팅 외에도 물류·시공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면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전 사원의 서비스 역량 제고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올 초 신년하례회에서 물류, 배송, AS 수준을 당장 끌어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워낙 빠른 성장세에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기도 버거워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한샘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가구 업체 관계자는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가구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제가구와 브랜드 가구를 차별화하는 것이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만족"이라며 "가구업계 1위인 한샘부터 품질과 서비

스 수준을 끌어올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말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 진출로 브랜드 가구사들이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의 서비스 수준으로는 이케아의 공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최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2/e2014020317485412025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앞둔 가구업계 1위사 한샘이 외형 지상주의에 매몰돼 소비자들을 외면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기는커녕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를 토대로「위기의 한샘 … 성장 집착하다 고객 신뢰 추락」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또 불이 붙은 도화선과 폭탄을 이미지 그림으로 넣어 곧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보여줬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 이미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사실상 모두에 소개된 2건의 사례다. 기사는 한샘 직영의 한샘몰에서 책장을 구입한 30대와 한샘 가구대리점에서 혼수를 장만한 40대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기사는 2건의 불만 사례만 소개했을 뿐 소비자 불만의 빈도를 알 수 있는 배경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즉, 어느 정도의 불만이 쌓였는지 가늠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근거 없이『물류, 시공, AS 등 대고객 서비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기사는 이밖에『한샘의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은 내부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그 사례로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한 최양하 회장의 신년하례회 발언을 꼽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물류, 배송, AS 수준 제고를 위한 위기감 조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발언만으로 품질저하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

기사는 한샘의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최양하(사진) 회장의 성장 제일주의 리더십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과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 등은 한샘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장 덕 수

〈주 문〉

중부매일 2014년 1월 24일자 3면「숭례문 부실공사 조사 교수·美 쇠고기 반대 박상표 국장/사망경위 유사 '음모론' 제기」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숭례문 부실공사를 조사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충북대학교 A(56) 교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한 시민단체 박상표 정책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사망경위와 방식이 유사한 것은 물론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모 호텔 객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나섰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45) 정책국장이 숨져있는 것을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 국장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객실에서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됐다. 또한 박 국장의 수첩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족과 합의하에 박 국장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유족들과 주변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 15분께 충북대 농과대학 한 학과 재료실에서 숭례문 부실공사를 조사하던 A교수가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교수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아내는 "남편과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학교에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교수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족들과, 인근 CCTV를 분석했으나 A교수 외에는 자료실에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두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숨진 채 발견된 점과, 자신의 수첩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이 유사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숭례문 부실공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됐던 인물이 연이어 숨지면서 사망원인 규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상표 국장과 숭례문 교수 모두 단기간에 자살로 처리했다는 것이 의문점이 남는다"라며 "두 사건의 의문점이 풀리기 위해선 정확한 사건규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4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은 위 기사에서 숭례문 부실공사를 조사 중이던 충북대 A교수와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이 하루 사이에 잇따라 자살로 추정되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을지로 모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박 국장의 수첩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또 A교수는 이보다 하루 앞선 1월 18일 오후 3시 15분쯤 충북대 농과대학 재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는 '너무 힘들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두 사건 모두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살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두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숨진 채 발견된 점과, 자신의 수첩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이 유사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사망 배경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양 보도했다. 하지만 유족들도 자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사망 시기가 비슷하고 수첩에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 만을 놓고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기사는 도입부 두 번째 문장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사망경위와 방식이 유사한 것은 물론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음모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객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숭례문 부실공사 조사 교수 · 美 쇠고

기 반대 박상표 국장/사망경위 유사 '음모론' 제기」라고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의 사망에 불순한 외부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사는 두 사람이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데 대해 주목했지만 박 국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앞장선 것은 2008년으로 6년 전 일이다. 박 국장은 그 후에도 사회활동에 몰입하느라 동물병원 운영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른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의적 판단에다 섣부른 선입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2월 25일자 1면 「10년 內需불황, 일자리 600만개 날렸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수출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양대(兩大) 버팀목인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를 달성하며 2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24일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3년 55.7%이던 소비 비중은 지난해 50.6%로 추락했다. 소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줄면서 '내수 불황'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커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된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5위였다.

'내수 불황'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63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 육성을 방치한 결과 10년간 6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199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가 500만개였는데 2012년에는 410만개로 90만개가 사라졌다"며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한다면 수출은 계속 늘어도 다음 세대(世代)가 국내에서 취직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5/201402250021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위 1면 머릿기사는 '한국경제, 이젠 內需다'라는 기획의 첫 번째 기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도했다. 2003년 55.7%이던 소비 비중이 2013년에 이르러 50.6%로 추락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또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의 말을 인용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63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내수 시장 육성을 방치한 결과 10년간 6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기술하고, 편집자도 큰 제목을 「10년 內需불황, 일자리 600만개 날렸다」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가 언급한 일자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정한 결과다. 설사 그러한 가정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또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한 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여 일정한 규모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기왕에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10년간 635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기사 내용과 제목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3월 3일자 1면 「野신당, 사실상 '親盧배제' 추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합의에 따라 통합신당이 창당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그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창당과정에서 사실상의 '친노 배제'를 겨냥한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일단은 친노그룹과 함께 가겠지만 창당 과정에서 안 의원측과 김한길 대표 측이 연대해 조직과 정책 면에서 '친노 지분에 대한 최대한의 축소'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민주당이라는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안 의원이나 친노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 온 김 대표측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안 의원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도 좋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며 "전날 안 의원 측에서 새정치 부각을 위한 가칭 새정치비전선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고 우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안 의원 측에서) 정강정책에 새정치 정신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측근 인사도 "새정치의 명분과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는 "안 의원이 그 동안 정치혁신과 함께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아우르는 세력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안 의원 측이 이 같은 노선과 정책을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김 대표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안 의원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 대표 역시 민주당 내 강경파 노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친노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진보노선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고, 안 의원 측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0301030123186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창당에 들어간 통합신당과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그룹과의 관계 설정을 다룬 1면 머릿기사다. 내용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창당과정에서 사실상 '친노 배제'를 겨냥해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에 나서기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기사는『두 사람은 창당과정에서 사실상의 '친노 배제'를 겨냥한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를 두고『창당 과정에서 안 의원측과 김한길 대표 측이 연대해 조직과 정책 면에서 '친노 지분에 대한 최대한의 축소'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민주당이라는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안 의원이나 친노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 온 김 대표측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어『"김 대표가 안 의원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 대표 역시 민주당 내 강경파 노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野신당, 사실상 '親盧배제' 추진」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기사의 이러한 내용들은 '親盧배제' 기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김, 안 두 사람이 이와 관련해 생각을 나눴다는 내용은 '알려졌다'는 것일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기자의 풀이나 분석, 그리고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의 말도 '親盧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정보나 막연한 추측과 주관적인 편견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3월 13일자 6면「"安心 잡아라"…박지원 극비면담, 일부의원 충성 맹세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통합 신당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친(親)안철수 성향의 의원들이 꿈틀대고 있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최근 안 의원을 만난 것은 물론 안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 의원에게 우호적이면서도 당이 달라 거리를 뒀던 이들의 물밑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힘의 균형추가 이동함에 따라 당내 권력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안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이날 부친상을 당한 이종걸 의원을 조문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들어갔다. 김한길계를 비롯해 주로 비(非)노무현계 의원들이

안 의원에게 호의적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계, 정동영계, 김근태계 의원들이다. 그동안 구심점을 찾지 못했거나 세력이 약해진 계파들이 새로운 '주군'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노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안 의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안 의원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일종의 '러브콜'이었고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동안 안풍 차단을 위해서는 전남지사 출마도 불사하겠다던 것과 비교된다. 최규성·인재근 등 김근태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도 안 의원의 우호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병두·최재천·최원식·김관영 의원 등 김 대표 측근들도 안 의원과 친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친노 성향의 의원들 중에서도 안 의원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친안철수 세력이 당내 최대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재선 여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1300600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앞둔 통합신당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안 의원과 함께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안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구심점을 찾지 못했거나 세력이 약해진 계파들이 새로운 '주군'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민주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충성맹세'를 한 의원에 대해 『알려졌다』고만 적었을 뿐, 이를

직접 확인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달리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이를 정치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安心 잡아라" … 박지원 극비면담, 일부의원 충성 맹세도」라고 큰 제목을 뽑았다. 안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일부 의원은 충성맹세까지 한 것으로 단정하는 제목을 단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5일자 26면 「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10일자 1면 「전공의까지 가세한/명분없는 의사파업」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에서 국민 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파업을 퇴근시간대에 걸쳐 진행키로 해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국민파업 투쟁과 관련, 정부는 도로 점거 및 불법 거리행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국민파업은 박근혜정부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동시에 엄중한 투쟁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왜곡·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노동자·농민·빈민·상인·학생들이 국민파업위원회로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지난 15일 청계광장 집회를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집회 장소 주변에 대형버스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내일 집회에서도 차벽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을 때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파업대회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서울·수도권 국민파업대회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후 7시 국민 촛불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화물연대·철도노조 등 1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앞서 오후 2시께부터 서울광장, 보신각 앞 등 서울 도심 13곳에서 사전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국민파업 대회에 전국적으로 총 20여만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25일 서울 도심 등 대규모 집회로 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불법 거리행진,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행진을 강행할 경우 세종대로·을지로·남대문로·종로 주변에는 장시간 교통통제가 예상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전국철도노조가 25일 민주노총의 국민파업과 연계해 파업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5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2013년 임금교섭을 파업 돌입 이유로 내세웠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국 5개 권역별 야간 총회에 이어 25일 제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철도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는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250100262860013549&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24〉

(매일경제)=『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휴진이라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대형 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해 일부 병원에서 진료 파행도 우려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사 파업에는 경남·충남 등 일부 지역 의사회가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또 전국 약 230개 대형병원 가운데 50여 곳의 전공의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은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휴

진을 강행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에는 필수 진료 인력이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짓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결정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벌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 휴진 강행 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비상진료체계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검·경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법 원칙이 똑바로 세워지도록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도 의사들이 휴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었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었다"며 "원격진료는 부분적이고 이미 정부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한 점이라서 총파업을 벌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 측은 "복지부 홈페이지와 24시간 콜센터(129), 심평원·건보공단 콜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문을 닫지 않은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도 운영시간을 연장해 집단휴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71963〉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파업'에 나선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모두에 『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에서 국민 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도 더 나아가 「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

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는 본문에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모두의 기술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의사파업'에 나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모두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휴진이라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전공의까지 가세한/명분없는 의사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정부 측 주장이고 입장이다. 의협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왜 명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분없는 의사파업'은 정부의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옮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제목이다. 기사는 또 『의협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았다』고 적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두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4년 3월 12일자 13면 「청계천 'MB 흔적지우기' 논란 재점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 자문위원회인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계천의 인공적 복원을 지적하며 수표교(사진)와 백운동천 물길 복원 등 역사성·생태성을 살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문화일보 2013년 4월 10일자 10면 참조)

위원회는 12일 청계천을 역사문화가 담긴 생태하천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 결과물로, 그간 청계천 주변지역 조사·모니터링과 설문조사, 시민열린회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수표교를 원위치에 중건해 역사성을 재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표교는 조선 세종 때 지어진 돌다리로, 지난 1958년 청계천 복개 당시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위원회는 또 청계천 물길을 곡선화하고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현재 청계천 물길을 그대로 두되, 저수로 중간중간에 굴곡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생태적 구간을 조성해 하천 스스로 자연 물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청계천 끝에 설치된 2개의 보를 철거 중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청계천 용수공급에 드는 유지관리비 18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의 유출지하수와 청계천 상류 지천 계곡수를 청계천 유지 용수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상류 지천 중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의 물길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이들 지류는 도로로 덮여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모전교 등 교차로 14곳에 크로스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청계천 보도 폭을 넓혀 보행자의 편의를 보장할 것도 건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생태·역사성 복원을 강조한 위원회의 건의가 청계천 복원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도 청계천 재공사를 통한 생태성·역사성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생태·역사를 위한 복원을 위해 공사를 재추진하는 것은 비용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MB 흔적지우기라는 오해도 살 수 있어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의견과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친 의견"이라며 "생태·역사 복원에 투입되는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2010713431750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시 자문위원회인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발표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보도한 것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수표교의 원위치 중건, 물길의 곡선화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용수 공급 체계 개선, 보행자 편의 보장 등 청계천의 역사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생태·역사성 복원을 강조한 위원회의 건의가 청계천 복원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나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기술 바로 뒤에 『실제 시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도 청계천 재공사를 통한 생태성·역사성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는 기술이 있기는 하나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 제기'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의견조차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음으로써 종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도 기존 청계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일 뿐, 청계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와 연관 지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본문에는 또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건의에 대한 익명의 '시 관계자'의 의견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같은 발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논란의 '재연' 가능성을 기술하고, 편집자는 한발 더 나아가 큰 제목에 '논란 재점화'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어 논란이 이미 벌어진 사실인 양 왜곡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 및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논란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 문〉

경인일보 2014년 3월 4일자 5면「"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어불성설"/김포 지

역사회 거센 반발 … 오늘 입장 표명할 듯」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유정복 장관이 이틀간 휴가를 내고 인천시장 출마를 위한 장고에 들어가자 지역에서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애정을 쏟아부었던 김포에서는 4선후에 천천히 정치일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자칫 현 정치상황으로 희생양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에서다.

당에서 인천시장 출마 요구가 들어오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내일 저녁때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는가하는 예정에 대해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현 정치상황이 소용돌이에 가깝게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 유 장관 개인의 입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내일쯤 공식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장관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마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당에서 요구하면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어떻든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엇그제만 해도 "장관 스스로도 선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키라고 당부했다"며 인천시장 출마는 재고돼야 한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93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는 위 기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의 지역구인 김포에서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선 의원인 유 장관이 4선을 한 뒤 다른 일을 도모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자칫 이번에 낙선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발이라는 것이다. 사실인즉슨 '반발'이라기보다는 애정 어린 '만류'인 셈이다.

편집자는 이에 맞춰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어불성설"」, 「김포 지역사회 거센 반발」이라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기사에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발언의 주체 등 누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반발'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기사 첫 문장에서 『지역에서는』이라고 실체가 모호하게 '반발'의 주체를 표기했을 뿐 그 이후에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추가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의견이나 자의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7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4년 2월 24일자 5면 「"부도덕" … 행정 공백 어쩌나/'돌연 명퇴' 장상진 전주 부시장 뒷말 무성/송 시장과 동일시기 사퇴/사상 초유 사태 비난 여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돌연 명퇴를 신청한 장상진 전주부시장을 놓고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우선 사퇴시한을 불과 6일 앞두고 전주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명퇴를 신청한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부시장의 명퇴소식이 전해지자 전주시 공무원들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송하진 전주시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8일 퇴임식까지 정해진 가운데 권한대행을 수행해야 할 부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상진 부시장은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명퇴신청 배경에 대해 "오래전부터 새정치를 고민해 왔고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의 퇴임식이 예고된 이후 장 부시장마저 명퇴를 신청한 것은 전주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적한 전주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장 부시장이 오래전부터 새정치 꿈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장 부시장이 출마를 위해서는 늦어도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장 부시장이 전주시장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측과 교감이 오갔다는 점도 도리상 어긋난다는 안팎의 중론이다.

전주시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시장에 취임한 장부시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명퇴를 신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최소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빨리 명퇴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연 전주시의회의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장 부시장의 출마시점 발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장과 부시장이 동일 시기에 사퇴,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진로만 중시 여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서 시민과 시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직을 사직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위 기사에서 장상진 전주부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송하진 전주시장이 퇴임하는 마당에 『권한대행을 수행해야 할 부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기사는 명퇴를 신청하려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기사의 취지다.

편집자는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부도적” … 행정공백 어쩌나」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에 맞춰 중앙 및 지방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행정공백은 전국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부시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것을 두고 부시장으로서 책임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사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현직 공무원 처지로서는 공직사퇴라는 마지노선 위에서 출마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기사는 장 부시장의 향후 선거운동과 그 결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 부시장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클 법한데도 기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불공정하게 부풀려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4년 3월 4일자 12·13면 「LG생활건강 치약에 방부제 '파라벤' 이라니…」·「양치질 횟수와 소변 중 농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LG생활건강…〉=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된 사실이 단독 확인됐다.

생활용품 부문에서 3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LG생활건강은 다수의 히트제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중 페리오 토탈7 오리지널 플러스, 착한 마일드, 스트롱과 페리오46 화이트 나우민트, 페리오46 마일드민트, 페리오 가글쿨과 죽염 호랑이풀 치약, 죽염 청신향 허브 치약 9928 등 다수 치약 제품에 파라벤이 함유된 것.

더욱이 이 '파라벤 치약' 리스트엔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을 올려놓아 충격을 안겨준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치약에 보존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내용물의 안정성 향상 및 사용중 외부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페리오 등 다수 제품에 함유된 파라벤의 경우 식약처 고시(2013-228호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중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보존제의 사용량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틸 파라벤의 경우에는 블루베리 등의 과일에서도 자연 추출되는 성분으로 국내 식품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LG생활건강의 태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키즈라인인 '안심키즈플러스'를 내놓으면서는 '무파라벤'이란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파라벤이 들어있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하는가 하면, 막상 파라벤 성분이 문제가 되자 "미국 FDA에서도 식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원료"라고 항변하는 것은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LG생활건강은 현 자사 치약에 들어간 파라벤 성분에 문제가 없다면서, 페리오 키즈 플러스 제품 3단계에서도 관련 성분을 빼는 조치를 슬며시 취했다. "지난 2월에 키즈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파라벤 성분을 뺐다. 3단계('키티', '아이언맨')에만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었지만, 2월에 키즈 전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엄마들의 심리적 우려가 있어 모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선 분노스러운 지점인데 현재 페리오 키즈 플러스의 경우 2월 이전 제조품도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벤 성분 함유 사실을 전혀 모른채 리뉴얼된 제품 마케팅 내용만을 믿고 치약을 골라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한편 이같은 LG생활건강의 '때에 따라 말이 바뀌는 마케팅'은 효자 상품

인 한방샴푸에서도 드러난다. 고급 한방샴푸 라인인 '리엔'을 광고하면서 LG생활건강 측은 '100% 국산 한방성분 함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사용,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덕에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일이소치아졸리논)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이슈가 됐던 화학성분이 포함된 점은 특별히 성분 리스트를 따져보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알기 힘들 지경. 한발 더 나아가 공업용 실리콘의 일종인 디메치콘을 버젓이 첨가해놓고도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고 내세운 점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4964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은 무려 전년대비 17.2% 성장했다. 특히나 생활용품 부문은 매출 1조4424억원과 영업이익 1582억원을 거뒀다. 저년 대비 각각 13.9%, 9.7% 성장한 규모다.

지난 2005년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차석용 LG 생활건강 부회장은 거침없는 M&A 행보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일궈냈다. 평소 "기업의 성공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차별화(Different)'된 '더 좋은(Better)'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특별한(Special)'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물론 LG생활건강 측이 항변하듯 '파라벤 치약'이나 '디메치콘 샴푸'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 1위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며, 보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 더욱이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성분 마케팅'을 하면서 정작 논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간 사실은 뒤로 하는 식은 업계 리딩브랜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마케팅이 고객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최선의 방침인지 되묻고 싶다.』

〈양치질…〉=『치약의 파라벤 함유 여부는 관련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특히 올해 초엔 파라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 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1021명을 대상으로 파라벤류 4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메틸과 에틸, 프로필, 부틸파라벤이 각각 97.5, 89.6, 90.5, 26.8% 나

왔다고 밝혔다. 이중 연령별로는 모든 물질이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3~6세의 파라벤류 검출농도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이 각각 110.4, 16.9, 9.8, 0.7㎍/g-크레아티닌으로 전체 평균 64.2, 10.5, 4.7, 0.5㎍/g-크레아티닌보다 훨씬 높았다. 당시 일각에선 하루 양치질 횟수가 많을수록 소변 중 파라벤 농도가 능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영유아를 둔 가정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라벤 치약'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소비자고발」문패를 단 위 기사에서 LG생활건강의 다수 치약 제품에 보존제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LG생활건강의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된 사실이 단독 확인됐으며 여기엔 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됐다는 것. 기사는 이와 관련,『더욱이 이 '파라벤 치약' 리스트엔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을 올려놓아 충격을 안겨준다』고까지 적었다. LG생활건강은 또다른 어린이용 제품을 내놓으면서는 '무파라벤'임을 부각시켰고, 기존의 어린이용 제품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 3단계에서도 지난 2월 파라벤 성분을 뺐는데, 파라벤 성분이 안전하다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며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기사는 또 '파라벤 치약' 리스트에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 왜 충격을 안겨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어린이용 치약에 파라벤이 들어 있는 것은 '충격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기사는 LG생활건강측은 보존제는 내용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제품에 첨가된 메틸 파라벤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라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 기사는 파라벤이 안전하다는 LG생활건강측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기술은 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같은 LG생활건강의 태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분노스러운 지점』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비난'하고 '분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는 또 LG생활건강에 대해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젊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쉽다는 지적』 등 기사 곳곳에서 '지적'이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지적했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기사 전체를 살펴볼 때 LG생활건강측이 파라벤이 안전하다면서도 파라벤을 뺀 일부 어린이용 제품을 내놓고, 어떤 제품은 '무파라벤'임을 부각시키면서 파라벤이 함유된 기 출시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는 점이나, 고급 한방샴푸 라인인 '리엔'을 광고하면서 공업용 실리콘의 일종인 디메치콘이 들어있는데도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고 주장하는 점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외에서 파라벤의 사용량에 따른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이나 이러한 제품을 내놓는 LG생활건강측의 행태를 문제삼으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3자가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 보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사 마지막의 『과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마케팅이 고객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최선의 방침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기술한 부분은 이 기사가 사실 보도 기사인지 의견 기사인지 혼동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기사 큰 제목 「LG생활건강 치약에 방부제 '파라벤'(⬇)이라니…」나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에 들어 있는 이미지(⚠)도 근거없이 마치 이 회사의 치약 제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놀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위 기사는 스포츠조선이 LG생활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작심하고 기획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또한 지면에 함께 게재된 「양치질 횟수와 소변 중 농도?」 제목의 별도 기사는 세계일보 2013년 12월 30일자 2면에 '단독'이라며 보도된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9명 소변서 방부제 파라벤 검출」 제목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수정해 전재한 것인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4년 3월 12일자 11면 「▶'제2롯데월드' 온갖 구설수-사고에도 개장 서둘러 …/신격호 총괄회장 ➔ '30년 집착'에 발목 잡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93)의 좌우명은 거화취실(去華就實. 겉치레를 삼가고 실질을 추구한다)이다. 이 신 회장 필생의 좌우명은 경영 전

반에 녹아있어, 롯데그룹엔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단 한 푼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유독 '예외사항'이 있어왔으니, 바로 신 회장의 30년 프로젝트인 제2롯데월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지어지고 있는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555m 높이로 국내 최고층 건물이다.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88년부터 123층 빌딩 완공 시점인 2016년까지 치면 정확히 28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요즘 업계에선 이 필생의 대역사가 역으로 신 총괄회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신격호 회장 무리수 왜?

"세계적 명물 만드는게 마지막 꿈" … 주위 반대에도 강행

롯데는 땅값만 3조원이 훌쩍 넘는 땅을 수십년간 놀리면서 길고 긴 인허가 과정을 기다려왔다. 교통 환경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제2롯데월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비용은 일반 건축물의 3~4배가 넘는다. 건축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바꾸다보니 시공비 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더욱이 상권까지 겹쳐서 내부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제2 롯데월드엔 명품샵, 극장 호텔 등이 들어설 전망. 잠실의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마트와 내부 경쟁을 벌여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룹내 임원들도 "채산성이 낮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수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무엇도 신 총괄회장의 집념을 꺾지 못했다. 이미 잘 알려진바, 신 총괄회장은 이 사업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구상해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과 쇼핑몰 극장 등을 망라해 이 일대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했던 것. 신 총괄회장은 일본 경제주간지 '슈칸다이아몬드'와 인터뷰에서 "서울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짓는 것이 여생의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제2롯데월드에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임종원 서울대 교수가 쓴 '롯데와 신격호' 등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생전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금의 롯데월드는 규모가 너무 작다.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를 지어 지금의 롯데월드와 연결하여 서울의 명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신 총괄회장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21세기 첨단 산업 중 하나가 관광인데, 한국에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시설을 조국에 남기려는 뜻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이름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신 총괄회장은 평소 '기업은 예술'이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제품을 예술작품 만들 듯 최고로 만들어 시장을 압도해야 한다'는 신 총괄회장이 생애 마지막 역작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온갖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타워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 시점까지 끌고온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 잇단 사건사고 … 바벨탑 프로젝트로 전락하나
시민들 안전 우려에 서울시가 직접 점검나서기로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이 지난 1988년 사유지 8만7770m^2(2만6550평)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등기부상에는 87년 12월 4일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 대통령이 네 명이나 바뀌는 동안이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했다. 국방부가 서울공항(공군 성남기지)의 항공기 비행 안전문제로 허가를 반대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그러나 롯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분위기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일사천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2008년 저층부 건축 허가를 받아낸 롯데는 민관 합동회의와 두 번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3월 사실상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2010년 송파구청으로부터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행안전검증용역 발주 초기부터 불공정 시비가 제기된 것과 더불어, 검증 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른바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손꼽혀왔다.

여기에 이러한 특혜 시비에 더해서, 요 몇년 사이엔 초고층 부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고층부 43층 자동상승발

판거푸집(ACS폼) 추락사고, 같은 해 10월에는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설상가상, 지난 2월엔 47층 용접 보관함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제2롯데월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대책은 기대 이하의 땜질식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분위기가 한층 강경해지면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말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제2롯데월드를 향한 우려의 시선 또한 높아지고 있다.

▶ 5월 저층부 개장 위한 채용박람회 논란

부친 뜻 받든 신동빈 회장도 '강공 행보' … 우려 목소리

부친의 뜻을 받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2롯데월드의 준공 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인 김치현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부사장)을 지난 1월 롯데건설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엔 이러한 신 회장의 의중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돌쇠형'으로 통하는 김치현 사장은 과감한 추진력으로 유명하다. 한번 맡은 업무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사장은 일찍이 '당면한 과제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현장 중심 경영 및 윤리 경영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화재 이후엔 직접 임직원 비상 회의를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 가운데 그룹 차원에서 강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롯데월드몰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서울시의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대규모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7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4 송파와 함께 하는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엔 제2롯데월드 입점 예정기업 100여개사가 참가했다. 업체 측은 고졸·청년·중장년층 구직자 1056명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물산 측은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 "롯데월드몰의 개장 시기는 미정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층부 조기 개장설'에 대

해 일정정도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채용박람회를 강행한 것 자체가 5월 저층부 개장을 위한 본격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새 그룹 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 제2롯데월드. 온갖 논란과 우려를 털어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상대로 아름다운 역작이 될지, 욕망끝에서 좌절하게 되는 바벨탑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3120100111850006892&servicedate=201403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롯데의 무리수 … 제2롯데월드 우려스럽다」라는 1면 제목과 함께 게재한 위 기사에서 롯데그룹에서 건축 중인 제2롯데월드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신 총괄회장이 세계적 명물을 만들겠다며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 건립에 집착해 왔으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저층부 개장을 위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사는 『롯데그룹엔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단 한 푼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유독 '예외사항'이 있어왔으니, 바로 신 회장의 30년 프로젝트인 제2롯데월드다』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제2롯데월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제2롯데월드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가 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인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 수입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땅값이 3조원이 넘고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의 3~4배가 넘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고 비판한 것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기사는 또 『신 총괄회장이 생애 마지막 역작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온갖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타워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 시점까지

끌고온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온갖 무리수'의 내용이나 '업계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6~7일 열린 채용박람회를 두고도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기업이 인력 수요에 대응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왜 '강행'이며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사는 또 제2롯데월드가 『어느새 그룹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제2롯데월드 건립이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본문에는 없다.

스포츠조선은 기사에서 시종 제2롯데월드를 비판하면서도 롯데월드몰 개장 시기에 대한 롯데측 해명만 게재했을 뿐 제2롯데월드 건립 의도와 최근 사건사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관계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간 제목으로 「온갖 구설수-사고에도 개장 서둘러」, 「주위 반대에도 강행」, 「바벨탑 프로젝트로 전락하나」와 같은 신랄한 표현을 달고, 1면의 큰 제목은 한걸음 더 나아가 「롯데의 무리수」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어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4년 3월 13일자 1면 「투어 망치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10면 「돈에 눈먼 KLPGA, 투어 황폐화시킨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투어 망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가 '투어 중계권'을 장삿속으로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LPGA는 지난해 말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대행사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중계권 협상에 나섰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 줬다.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의 수치는 고려 사항이 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자용 회장은 방송 중계권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 대신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분위기상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돈에 눈먼…〉= 『"176억 원을 적립해 놓은 여자 골프협회가 이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 방송 중계권 장사를 한 것은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전 KLPGA 모 이사) "1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여자 골프대회를 치르는데 한쪽 골프 채널만 중계방송을 하면 마케팅 효과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협회만 먹고살겠다는 발상 때문에 스폰서만 멍이 든다."(A사 마케팅 상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가 선수와 대회 개최 후원사의 권익을 외면하고 방송 중계권을 '장삿속'으로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176억원(2012년말 기준)의 협회 발전 기금을 적립해 놓은 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2월 SBS골프로부터 연간 48억5000만원(선수 복지 기금 3억5000만

원 포함)씩 3년간 145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KLPGA 투어 중계권을 팔았다. KLPGA 투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J골프와 SBS골프가 공동으로 중계를 해 왔다.

구자용 회장, 계약 갱신 거수로 결정

협회는 지난해말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의 수치는 고려 사항이 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자용 회장은 방송 중계권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 대신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협회장이 '그냥 돈(중계권료) 많이 주는 업체한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거수로 결정하죠'라고 말했다. 분위기상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협회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전 KLPGA 모 이사는 "미국(LPGA 투어)과 일본(JLPGA 투어) 여자 골프협회는 중계권 협상 때 협회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며 "협회가 직접 나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행사에게 주는 수수료도 아까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단법인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2011년 협회 기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분열이 생겨 회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여자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후원 회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중계방송을 전제로 대회 개최를 결정했던 A사는 "홍보 효과가 50% 가까이 떨어지면 반쪽짜리 대회가 된다. 굳이 15억씩이나 들여 골프 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회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 선수 권익보다 재정 불리기 혈안"

불똥은 방송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골프 용품 업체로도 튀었다. 해당 방송사가 거액의 중계권료를 벌충하기 위해 광고료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K

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고 단가 인상 폭이 상당히 크다”며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고액의 중계권료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 단가를 얼마나 올릴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현역 투어 프로인 C선수의 아버지는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두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게 좋다. 한 곳에서만 중계를 하면 홍보 효과가 반감될 테고 골프 팬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선수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만 불리기 위해 중계권 장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KLPGA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강춘자 수석부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오는 7월에 열리는 대회의 골프장 코스 답사를 위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KLPGA 김남진 사무국장은 “이사회 표결을 거수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구 회장께서는 이사들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소신 있게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4116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기사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SBS골프와 단독으로 방송 중계권 계약을 한 것을 두고 협회가 중계권 장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KLPGA 투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J골프와 SBS골프가 공동 중계를 해 왔는데 지난해 말 협회가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고,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은 고려치 않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올해 대회를 개최하는 후원 회사와 선수, 용품업체들이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광고료가 크게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대회 중계 채널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발과 우려를 전하면서 제목을「투어 망치는 KLPGA 회장」과「돈에 눈먼 KLPGA, 투어 황폐화시킨다」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가 전한 "협회장이 '그냥 돈(중계권료) 많이 주는 업체한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거수로 결정하죠'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회장이 투어를 망친다고 볼 객관적인 논리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중계권 고액 낙찰을 두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객관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대회 중계 채널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듦으로써 홍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어가 망쳐진다거나 황폐화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투어 망치는' '황폐화시킨다'와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이러한 제목은 객관적 근거 없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 2013-1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4월 3일자 11면「'알바카페' 청소년 성매매 창구 전락」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복 그대로 입고 키스터치 가능했으면 하구요. 가능하시면 금액이랑 알려주세요"(아이디 ha****) "발바닥 꼼지락 거리는 영상 파실 생각 있으신가요?"(아이디 Ka****)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집 카페가 성매매 탈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일 국내 유명 포털에 개설돼 있는 청소년 알바 카페에 "16세 여학생입니다. 뭐든 다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 결과, 불과 수시간 만에 수십건에 이르는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글을 올린 지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먹골역 근처에 있다고 밝힌 한 남성은 30~4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를 물은 뒤 선금을 내어 줄 테니 교복 차림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낯뜨거운 내용이 쪽지가 쇄도했다. "섹스나 애무 알바도 해?", "키알(키스 알바), 섹알(섹스 알바) 알바해요?", "비건(비건전 알바)인가요" 등의 쪽지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왔다.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디 ze****를 사용하는 한 남성은 "ㅅㅇ(섹스 알바) 10만 보고 더 드려요, ㅋㅇ(키스 알바) 5만 이것도 보고 좋으시면 더 드리구요, 아 그렇다고 막 아저씨는 아니구여"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16세 소녀'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노골적인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청소년 알바 카페가 탈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은어 등을 활용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 알바 카페를 찾은 한 회원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은어를 통해 노골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글이 수백건 게시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이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인수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응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이 같은 유인수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던 까닭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3158건, 입건자는 4457명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는 청소년 성매매의 해악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유인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가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되고 있다는 익명의 '회원'의 주장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가 제시한 사례는 취재기자가 16세 여학생으로 위장해 성매매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미끼'를 달아 카페에 올린 글에 따른 메시지들과 쪽지들의 내용밖에 없다. 실제로 익명의 '회원'의 주장대로 성매매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의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글의 실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고발 내용과 같은 글들이 게시되고 당사자들 간에 메시지나 쪽지가 오고간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이 기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고발이나 '알바 카페'에 성매매 관련 글이 수백 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는 특히 『"제가 원하는 것은 교복 그대로 입고 키스터치 가능했으면 하구요. 가능하시면 금액이랑 알려주세요"』『"섹스나 애무 알바도 해?"』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메시지 내용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소개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모든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해 사회면 머릿기사로까지 올리고, 「'알바카페' 청소년 성매매 창구 전락」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과장되고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5.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 문〉

연합뉴스 2013년 3월 22일 18:53 송고 「박시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 기사와 제목, 국민일보 3월 23일자 12면 「경찰, 박시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토/거짓말탐지기 조사서 불리한 반응 나온 것으로 알려져」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23일자 A17면 「박시후씨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3월 23일자 7면 「박시후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검토/朴측 "전혀 확인된 사실 아냐"」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3월 23일자 8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시후 거짓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및 위 4개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연예인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여성 A씨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결과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경찰은 당시 박씨와 함께 피소된 연예인 김모(24)씨와 피해여성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문항을 놓고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몄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박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국민일보)=『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시후는 지난달 14일 후배 K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박씨, K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으며 다음날 깨 보니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는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맞서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박씨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결과는 절대적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결과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씨와 A씨의 진실 공방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 1, 2차 수사를 마친 상태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작성한 최종 의견서 및 핵심적인 추가 증거자료들을 오늘 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시후씨(36·사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피해여성 A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경찰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결과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달 안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고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 여성 A씨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피소된 연예인 김모(24)씨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통보받았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부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박씨를 비롯한 어느 누구의 결과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참고 자료로만 이용된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3일 박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 여성 간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서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김모씨, 김씨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골자다.

위 매체들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식의 간접인용 방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취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 취재원을 알수가 없다. 게다가 위 기사들이 기술했듯이 담당 수사책임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부해 사실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위 기사들이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2일 인터넷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은 박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스타는 비슷한 시간에 박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역시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위 기사들에 일부 소개된 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따라서 연합뉴스 및 위 신문들은 스포츠서울닷컴과 오마이스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매체들 중 한국일보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서 이러한 내용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경찰은 위 기사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된 지 열흘 가량이 지난 4월 2일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들은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섣부른 추측과 예단에 따라 작성됐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3년 7월 26일자 21면「박연차 가석방 불허, 청와대 지시?/가석방 심사위 결정에도 법무부장관 취소 결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이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를 80% 이상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건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이들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회가 투표로 가석방 의견을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용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을 건의해 의견을 듣고 심사한 것과 법무부 장관의 최종 정치적 결정은 다를 수 있다"며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법무부 간부들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석방 불허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

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해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이 장관의 제도개선과 불허 입장을 알았다면 위원회가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가석방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은 당초 가석방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후 청와대 보고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불허 입장이 전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측은 "황 장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측 비리 인사에 대해 용서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의견을 낸 박연차 전 태광 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주요 경제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부터 의전과 비서를 담당해 온 MB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2568&sid=E&tid=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며 현재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건의 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위 기사에 보도된 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석방 불허과정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위 기사의 골자다.

위 기사처럼 '~알려졌다' 등 간접인용 방식의 보도에서는 어떤 경위를 통해 그 같은 내용을 취재했다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기사의 신뢰를 위한 보도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기사는 '청와대의 지시'나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중간에『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은 당초 가석방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후 청와대 보고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불허 입장이 전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기사 표현 그대로 '관측'일 뿐 객관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다.

또 기사 말미에 있는『"황 장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측 비리 인사에 대해 용서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추측과 추정일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문〉

한국일보 2013년 8월 27일자 8면「고립이 패륜 부른다 … 다시 늘어나는 존속살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22)씨는 고교 동창 홍모(21)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갔다. 이들 손에는 쇠파이프와 흉기가 들려 있었다. 얼마 후 이들은 콜택시를 불러 여행용 가방에 아버지 시신을 담아 사전에 물색한 전남 나주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씨는 아버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황금열쇠 등 귀금속도 처분했다. 홍씨에게는 아버지 카드로 1,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고승용차를 사줬다.(중략)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건은 지난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조모(23)씨가 붙잡히는 등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20~30대 빈대족이 존속 살해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2008년부터 5년간 존속살해로 검거된 305명(공범포함) 중 20~40세는 157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활동 주체가 돼야 할 연령대가 사실상 존속살해의 주범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존속살해범 가운데 111명은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가정불화(55명)와 현실불만(19명)도 주요 살해동기였다. 통계상으로 금품 등 이욕에 눈이 먼 존속살해범이 10명뿐이다.

하지만 이를 한꺼풀 벗겨보면,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단절된 무직자들이 가족과 오랜 갈등을 누적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가정폭력이나 금전적 문제 등을 둘러싼 불화와 갈등이 한 순간 범행으로 비화한다는 것이다. 수원시 이씨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동구 조씨도 무직이었고,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극단적 이기

주의가 만연하며 가족들이 돈 앞에서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자기 위주의 생각이 매우 강해졌다"며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회피하면 되지만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해 감정 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결국 경제적 궁핍과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을 쪼개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끌어 안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복지기능을 가정복원에 맞추는 정책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70337572195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아들이 친구와 짜고 홀로 사는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대표 사례로 내세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존속 살해 사건은 지난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0건으로 줄었고, 올해 발생 건수는 기사에는 없다.

그런데 취재기자는『이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조모(23)씨가 붙잡히는 등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라고 썼고, 편집자도「고립이 패륜 부른다 … 다시 늘어나는 존속살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는 왜 '증가 추세'로 봤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섣부른 선입견이나 기획 의도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 2013-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세계일보 2013년 3월 23일자 9면 「신종 마약 … 성폭행에 자주 이용/윤씨 차량서 나온 '로라제팜'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나온 '로라제팜(사진)'은 어떤 약일까.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2일 "A씨가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씨 별장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로라제팜 알약 1개를 찾아냈고, A씨의 머리카락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씨가 약을 먹이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A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로라제팜 성분은 6개월 전에 먹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행당했다는 시점(2011년 11월)과 일치하지 않아 성폭행 증거가 되지 못했다.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은 우울증 치료제로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를 낸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고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복용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2009년 사망한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시신에서 로라제팜 찌꺼기가 나오면서 사망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로라제팜이 합성대마나 크라톰, 알프라졸람 등과 함께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몰래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성폭행하는 데 자주 쓰여 '강간 마약'으로 불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마약 등 불법 약물을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이 출국금지한 윤씨 등 3명의 명단에는 윤씨에게 불법약물을 공급한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날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3명 중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나머지 2명에게서도 약물성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약물검사를 의뢰한 바 없고, 서초서가 지난해 윤씨와 A씨 2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건이 전부"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 등에서 나온 '로라제팜'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은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와 더불어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기사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A씨의 머리카락에서도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이 같은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는 로라제팜이 합성대마나 크라톰, 알프라졸람 등과 함께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고 불필요하게 다른 '신종 마약'들까지 실명으로 소개한 뒤 『여성에게 몰래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성폭행하는 데 자주 쓰여 '강간 마약'으로 불린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이는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유사 범죄를 충동질할 수 있다.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

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0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충 견

〈주 문〉

경남신문 2013년 4월 4일자 5면「창원 유흥가 성매매업소 대거 적발」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창원 상남동과 중앙동의 유사성매매 업소와 신·변종 음란물 상영 업소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간 불법 풍속업소 및 성매매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입건하고, 불법광고 전단을 부착·배포한 11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 상남동의 한 빌딩에 위치한 신변종 유사성매매업소인 속칭 '대딸방' 내부 전경/창원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 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A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명의상 사장 B(46) 씨와 실제 업주 C(42) 씨, 종업원 D(47·여)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1회 안마에 9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1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남동의 한 빌딩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도 적발됐다. 업주 E(38) 씨는 시간당 9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종업원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상남동에서 신변종 유사성매매 업소인 속칭 '귀청소방'을 운영한 업주 F(32) 씨와 종업원 G(25·여) 씨 등 5명, 손님 H(36) 씨 등 2명 등 총 7명이 적발됐다. F 씨는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남성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고객에게 1만 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상영한 휴게텔 업주 I(40) 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이 외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 건물 주변과 주차차량 등에 불법광고 전단을 부착·배포한 혐의로 J(41) 씨 등 11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전단 살포를 사주한 업주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창원 상남동과 중앙동의 유사성매매 업소와 신·변종 음란물 상영 업소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경찰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유사성행위의 방법과 가격 등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속칭 '대딸방'의 내부 사진까지 게재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大田日報 발행인 남 상 현
5.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6.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7.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8.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9.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 문〉

경상일보 2013년 4월 17일자 1면「보스턴서 폭탄테러 … 9·11 악몽 재연」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경향신문 4월 17일자 5면「피투성이 현장」제목의 사진, 매일경제 4월 17일자 1면「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 180명 사상」제목의 사진, 大田日報 4월 17일자 1면「아수라장」제목의 사진, 서울신문 4월 17일자 1면「유혈낭자 테러현장」제목의 사진, 중부일보 4월 17일자 1면「'보스턴 폭탄' … 美, 12년만에 또 테러 공포」제목의 사진, 한겨레 4월 17일자 2면「아빠의 완주 축하해주려는데 '쾅' … 8살 마틴 목숨 잃어」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경제 4월 17일자 A2면「"제발 도와주세요"」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4월 17일자 3면「보스턴 폭탄테러」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사진은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참혹한 현장을 A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선혈이 낭자한 도로 위에 부상자들이 피범벅 상태로 쓰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유혈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과 섬뜩함, 거부감 등을 감안해 컬러가 아닌 흑백사진으로 내보내거나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언론 관행에 비추어보면 위 신문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0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3년 5월 1일자 11면「마일리지·할인 … '性매매 VIP마케팅'/단골고객 무료 서비스 등/운영난 업소 각종 이벤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쌓아 두신 마일리지, 오피스텔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우수 고객분들에게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것) 서비스 추가됩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 사이트에 접속했다. VIP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업소 50% 할인 행사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구들과 해당 사이트 아이디를 공유했던 정 씨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이트 방문 및 게시글 작성으로 마일리지가 쌓여 자신도 모르는 새 VIP 회원이 된 것이었다. 주머니 사정 등으로 한동안 성매매업소에 발길을 끊었던 정 씨는 50% 할인이라는 말에 솔깃해 결국 해당 업소를 찾았다.

최근 불황 속에 운영난을 겪는 성매매업소들이 늘면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이색 마케팅을 펼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흥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혹은 게릴라성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성매매업소 50% 할인 쿠폰과 무료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스포츠토토처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항공사나 카드사처럼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업소도 등장했다. A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4월 마일리지가 2200점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500점을 5만 원으로 환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2500점이 넘는 회원에게는 성매매여성들이 교복, 승무원복 등을 입고 서비스하는 코스프레 서비스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이나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홍보성 행사를 진행하는 데다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기 불황 속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마케팅 행사를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그러나 기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은 거의 없이 성매매 업소들의 마케팅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특히 『2500점이 넘는 회원에게는 성매매여성들이 교복, 승무원복 등을 입고 서비스하는 코스프레 서비스를 추가했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소개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취재 의도와 경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성 짙은 기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5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4월 29일자 25면 123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자기야, 뭐해?"

비음 섞인 목소리가 울렸으므로 서동수가 시선을 들었다. 빈 술잔을 든 윤지

영이 눈을 흘겼다.

"자기 얼굴에 쓰여진 글자 읽어줘?"

"응, 그래."

서동수는 갈라진 제 목소리를 듣고는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윤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이듯 말했다.

"널 갖고 싶어."

"더 세게."

"널 안고 키스할거야."

"더, 더."

"벗기고 넣을거야."

"더 무지막지하게."

"막 박을거야."

마침내 서동수가 어깨를 늘어뜨리고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라운지 안은 떠들썩하다. 외국인들도 술에 취했다. 연휴여서 한국인 메이커들도 다 떠난 바람에 쓸쓸해졌을 것이다. 그때 윤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서동수 옆자리로 옮아 앉았다. 라운지의 조명은 어둑한 데다 아무도 창가의 구석진 이곳에 신경 쓰지 않는다. 윤지영이 거침없이 서동수의 지퍼 부분을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숨을 들이켜면서 웃는다.

"섰네."

"지영아."

"으응?"

윤지영이 지퍼 부분을 조몰락거리면서 콧소리로 대답했다. 머리를 든 윤지영이 서동수를 보았다. 어느덧 얼굴의 웃음기가 가셔졌고 두 눈이 반들거리고 있다.

"자기도 내 거 만져."

윤지영이 다리를 벌려 보이면서 말했다. 이 콧소리, 그 순간 서동수가 어금니를 물었다. 치밀어오른 성욕으로 진저리가 쳐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저리는 막은 대신 윤지영에게 잡힌 남성이 용틀임을 했다. 놀란 윤지영이 바지 위로

쥐었던 남성을 놓치고는 말했다.

"엄마, 깜짝이야."

서동수의 손이 윤지영의 스커트를 밑에서 젖히고 팬티를 끌어내렸다. 거침없다. 그러고는 손으로 골짜기를 덮었다.

"아, 자기야."

중지가 쑤욱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윤지영이 탄성 같은 비명을 뱉는다. 동굴 안은 이미 흘러 넘치고 있다. 중지가 동굴을 휘젓자 윤지영이 다리를 오므리면서 말했다.

"자기, 이젠 방에 가자."

서동수의 중지는 더 들어갔다.

"으응? 방에서 해."

윤지영이 움켜쥔 남성을 흔들었다.

"술 가지고 방으로, 응?"

그때 서동수가 동굴 속의 손가락을 빼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장실에 갔다올게."』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남녀가 호텔 라운지에서 은밀하게 상대방 성기를 애무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극적인 대사와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2013년 4월 26·27일자 19면 SeasonⅥ〈960〉 제1화 여우사냥 8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만화는 직장 상사인 여성 임원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보고를 받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장면 중에는 "아…"라는 신음 소리와 더불어 〈주물 주물〉, 〈슉 슉〉 등 자극적인 의태·의성어들도 섞여 있다.

문제 부위는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불건전한 상황 설정과 음란한 장면 묘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2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주 문〉

대구일보 2013년 5월 28일자 5면 「군대 안가려 멀미약 눈에 바르고 혈압 올리고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09년 서울에 사는 김모(28)씨는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군대에 가기 싫어 입대를 계속 미뤄왔던 김씨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바로 실행에 옮겼고 어렵잖게 동공운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 동료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1~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김씨 등 9명은 2009~2010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서 받아 낸 동공운동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완전범죄를 꿈꾸던 이들의 바람은 병무청의 치밀한 조사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한 병무청이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역기피는 하루가 다르게 그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어깨 탈골'은 기본이고 '치아 뽑기', '혈압 올리기'에다 '환자 바꿔치기'까지 다양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또 병역기피 분위기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도 부쩍 늘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관련 인터넷 사이트 수가 최근 5년간 58배나 급증했다. 2008년에 22개이던 병역기피 사이트가 지난해 1천266개가 된 것.

이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병역회피 수법이 총망라돼 있다.

몇 개월간 묵직한 아령으로 어깨 내려치기, 손으로 의자 앞부분을 잡고 앉아 뒤로 젖히기 등의 어깨탈골 수법은 물론 신체검사 전 며칠간 잠을 자지 않거나 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고 혈압을 올리는 수법 등이 있다.

또 커피가루 등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괄약근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

도 있다. 몸무게를 늘이거나 문신을 하는 방법은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났다.

진화된 병역기피 수법도 병무청의 치밀한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있다.

병역을 피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고,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병무청에 병역기피 수사권이 부여됐다. 부당한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을 적발하고 있다"며 "병역기피가 밝혀지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병역회피 백태'를 보도했다.

기사는 병역기피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수도 최근 5년간 58배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역입영 대상인 20대가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원에서 동공운동장애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몇 개월간 묵직한 아령으로 어깨 내려치기, 손으로 의자 앞부분을 잡고 앉아 뒤로 젖히기 등의 어깨탈골 수법은 물론 신체검사 전 며칠간 잠을 자지 않거나 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고 혈압을 올리는 수법』 등이 있고,『커피가루 등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괄약근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밖에 병역기피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 기준으로 1천266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사 범죄를 충동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 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0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주 문〉

대구일보 2013년 6월 4일자 6면 「'미셸위 누드사진' 해프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셸위 누드 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 등에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셸위 누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20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프로골퍼 미셸위(23) 선수와 닮은 한 여성이 알몸을 드러낸 채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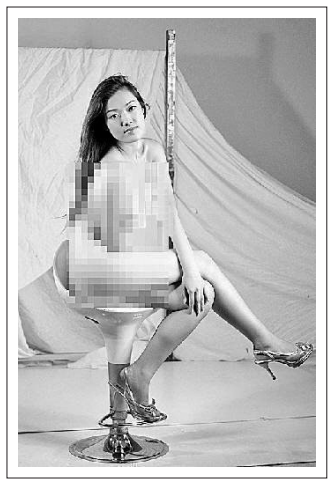
이 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 등에 게재되자 '미셸위가 아닌 이유', '미셸위 누드 사진의 진위'라는 제목 등으로 일부 누리꾼들은 미셸위가 아님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미셸위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미셸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셸위 누드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얼굴은 조금 닮았지만 딱 봐도 미셸위 선수가 아니다', '일단 외모만 봐도 미셸위보다 키가 10㎝ 이상은 작아보인다', '미셸위가 뭐가 아쉽다고 누드를?',

'합성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작성자는 안면인식장애를 갖고 계신가', '골프를 친 몸매가 아니다', 'ㅋㅋ기럭지만 봐도 딴사람인 게 티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미셸 위 누드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전체 흐름상 누드 사진의 주인공은 프로골퍼 미셸 위가 아니다. 기사는 이 사진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제시한 근거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사진 속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편집자는 위 기사의 큰 제목을 「'미셸 위 누드사진' 해프닝」으로 달았다. 이 제목만으론 누드 사진의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이 불명확하고, 오히려 미셸 위가 누드사진을 찍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 작은 제목도 「진위논란 … 누리꾼 "닮은 사람"」이라고 달아 미셸 위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편집자는 또 미셸 위 선수를 닮은 여성의 누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신문에 게재한 사진은 얼굴은 그대로 두고, 알몸의 주요 신체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이 사진 역시 미셸 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위 기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미셸 위일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작성됐다. 이는 부정확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기사 제목 역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드사진'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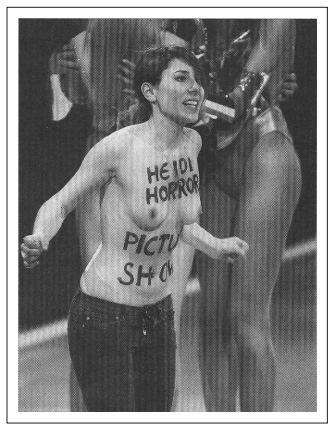
따라서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6월 3일자 23면「여권 신장하라 … 나체 시위」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사진은 우크라이나 여성 인권단체인 피멘(FEMEN)의 한 여성 활동가가 지난 5월 30일 독일 남부 만하임에서 열린 모델 캐스팅 프로그램 생방송 현장에 난입해 상의를 벗은 채 반라 상태로 시위를 하는 모습을 AF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여성의 반라 또는 전라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는 신문의 품위를 해

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보도 관행에 비추어볼 때 헤럴드경제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6월 13일자 5면 「성남시의원, 공개석상서 "새누리 X할 놈들"」 제목의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와 관련 삽화를 게재하였다.

『○…2011년 주민센터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성남시의회서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막말 사건이 발생해 성남시의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라.

12일 새누리당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께 분당구청장이 주관한 분당구 시의원과의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김모 의원이 참석 의원들에게 막말과 추태 등을 부렸다는 것.

이날 김 의원은 '새누리당 X할 놈들, X까지마, X발' 등 욕설과 막말 그리고 수차례 기물을 던지려 하는 행동으로 공식석상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는 김 의원에게 공개석상에서의 진심어린 사과와 당직 박탈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후략)』

2. 위 삽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성남시의회의 민주당 모 의원이 분당구 시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막말과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이다. 중부일보는 또 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게재했다. 삽화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성남시의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도마 위에 시의원을 세우고,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대는 내용으로 그려졌다. 삽화 속에는 몸집보다 큰 칼이 서서히 내려오고 시의원은 도마 위에서 잔뜩 움츠려있는 모습이다. 칼과 도마의 상징성으로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 이번 사건은 그 내용상 해당 시의회와 공직사회에 알려졌을 것이다. 익명의 이 시의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위 삽화는 해당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5월 22일자 26면 139회, 6월 17일자 156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9회)=『뜨겁다, 지친 호흡을 뱉으면서 서동수는 문득 비린 정액 냄새를 맡는다. 금방 잡힌 문어처럼 화란은 온몸을 밀착시킨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다 잊었다. 머릿속은 텅 빈 채로 꿈틀거렸으며 그때마다 번져오는 자극, 쾌락을 맞아 비명이 나온다. 둘의 몸은 땀으로 젖었다. 벌써 몇 번 절정에 올랐는지 화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서동수도 세지 않았다. 그저 끈질기게, 참고, 또 참으면서 화란과 엉겨 있다. 방 안은 습한 열기로 가득 찼다. 화란은 아직 서툴다. 말과는 달리 몸은 굳어졌고 수동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줍음이 다 사라졌다. 이제 또 다시 화란은 절정으로 오르고 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난 것이다. 두 다리를 추켜올렸던 화란이 서동수의 하반신을 빈틈없이 감으면서 또 폭발했다. 이번에는 더 길다. 숨이 끊어진 것처럼 뚝 멈췄다가 내뿜었는데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격렬한 절정이다. 그 순간 서동수도 참았던 대포를 터뜨렸고 화란이 맞았다. 포탄의 폭발을 느낀 화란의 절정이 더 길어졌다. 이윽고 둘의 호흡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10분쯤이나 지난 후였다. 그때까지 둘은 서로의 몸을 어루만졌고 땀에 젖은 머리칼을 젖혀 두었으며 시선만 마주치면 키스를 했다. 아직도 합쳐진 몸을 확인한 듯이 허리를 흔들어 보기도 했으며 수줍음을 되찾은 화란이 눈을 흘기기도 했다.

"사랑해요."

문득 화란이 말했으므로 위에 엎드린 서동수가 시선을 주었다. 눈과의 거리는 10센티미터도 안 된다. 화란이 서동수의 등을 손바닥으로 쓸면서 말을 잇는다.

"행복해요."

서동수는 대답 대신 화란의 입술에 키스했다. 화란이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으면서 입을 열어 혀를 내밀어 주었다. 다시 하반신이 꿈틀거리다 아직 합쳐져 있던 서동수의 몸이 다시 딱딱해졌다. 그러자 놀란 화란이 입을 떼고는 서동수를 보았다. 두 눈이 크게 떠졌다.

"보스, 이제 그만."

그러나 서동수는 다시 입을 막았고 화란의 두 다리가 저절로 올라갔다가 하반신을 감는다. 탁상시계가 오전 4시를 가리키고 있다. 입술이 잠깐 떼어졌을 때 화란이 거친 숨을 뱉으며 말했다. 서동수를 보았지만 눈동자의 초점은 멀다.

"사랑해요."

다시 방 안에 비명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서로의 몸놀림에 익숙한 터라 둘은 빈틈없이 움직인다. 뜨겁다. 뜨겁고 긴 밤이다. 서동수는 머리를 숙여 화란에게 입을 맞췄다. 비명을 질러대던 화란이 온몸으로 엉키며 입을 받는다. 서동수의 온몸은 활기가 충전되고 있다. 마치 화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 이윽고 둘의 몸이 떨어졌을 때는 또다시 30분쯤이 지난 후였다.(후략)』

(156회)=『(전략) 방으로 들어선 서동수가 문을 닫는 오정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다.

"아유, 서두르긴."

했지만 몸을 돌린 오정미가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아 안고 얼굴을 내밀었다. 빈 틈 없이 붙어선 서동수가 오정미의 입술을 빨았다. 곧 오정미의 입술이 열리면서 뜨거운 숨결과 함께 말랑한 혀가 빠져 나왔다. 서동수는 갈증 난 것처럼 오정미의 혀를 빨아 삼킨다. 뜨거운 뱀 같은 혀가 서동수의 입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오정미는 씻고 가운 차림이었는데 어느덧 허리띠가 풀어져서 젖가슴이 드러났다. 서동수의 손이 가운을 젖히고는 젖가슴을 움켜쥐었고 오정미는 서둘러 서동수의 혁대를 푼다. 선 채고 바지와 팬티가 흘러 떨어지자 서동수는 오정미의 몸을 번쩍 안아들었다. 서너 걸음을 걸어 침대로 가는 동안에도 둘의 입은 떼어지지 않는다. 침대 위로 오정미를 던진 서동수가 가운을 젖히자 알몸이 드러났다. 오정미는 가운만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오정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자기야 그냥 해!"

이미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서동수가 몸위에 오르자 오정미는 남성을 잡아 제 동굴 위에 붙였다. 그러나 넣지는 않는다.

"세게!"

두 팔을 뻗어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쥔 오정미가 무릎을 세우면서 발바닥으

로 침대를 짚는다. 이제 자세가 갖춰졌다. 서동수를 향한 오정미의 두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점은 멀다. 반쯤 벌린 입에서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얼굴을 상기되었다. 오정미의 그런 모습을 홀린 듯이 내려다보던 서동수가 숨을 들이켜더니 거칠게 돌진했다.

"아악."

와락 턱을 치켜든 오정미의 입에서 굵은 신음이 뱉어졌다. 그 순간 서동수도 머리 끝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금니를 물었다. 오정미의 동굴은 이미 뜨거운 용암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탄력이 강하고 좁다. 끝까지 들어갔던 서동수의 몸이 천천히 빠져나올 때 다시 오정미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은 더 높고 길다.

"아아아아."

오정미의 두 다리가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았다가 풀려졌다.

"아이구, 나 죽어."

오정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자기야, 나 어떡해."

서동수는 오정미의 입술을 입으로 막는다. 그러자 오정미가 혀를 내밀었다가 다시 비명 같은 신음을 뱉었다. 방안은 이제 뜨겁고 비린 열기로 가득 찼다. 반쯤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바람이 밀려왔다. 그렇다. 대륙의 훈풍이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경기일보 발행인 임 창 열
4.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5.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6.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연합뉴스 2013년 7월 10일 11:36 송고「성폭행하려다 살해·시신훼손 '엽기범행' 10대 검거」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7월 10일자 13면「性폭행하려다 살해, 시신 엽기훼손한 10대」제목의 기사, 경기일보 7월 11일자 6면「10대가 맨정신에 …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장롱에 보관」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7월 11일자 A12면「'10대 오원춘' … 소녀 성폭행후 토막살인 "호러영화 흉내"」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7월 11일자 A25면「용인서 '제2오원춘'… 범인은 10대」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7월 11일자 1면「10대여 살해 후 16시간 시신훼손/용인 '제2의 오원춘' 고작 19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상기 5개 신문, 통신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력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집 장롱에 보관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심모(19·무직·고교 중퇴)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심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여)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군은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살점을 잔혹하게 도려낸 뒤 변기에 버렸다.

엽기적인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군은 살을 도려낸 후 20여 개로 추린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7분께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후 택시를 타고 용인 집으로 귀가했다.(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0/0200000000AKR20130710043451061.HTML?from=search〉

(문화일보)=『(전략) 심 군은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뼈를 29등분한 뒤 살점과 내장 등은 변기에 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뼈는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 오후 2시 7분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도 없는 심 군이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경찰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후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001071343051001〉

(경기일보)=『(전략)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살해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모텔 화장실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A양의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쉽게 옮기기 위해서였다.

S씨는 살점을 도려내 화장실 변기에 버렸으며 20여개로 추린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았다. 피가 묻은 옷가지와 수건 등을 모두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깔끔히 청소했다.

더욱이 S씨는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훼손하다 부러지자 9일 새벽 1시37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했다.(후략)』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653〉

(東亞日報)=『이때부터 그는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을 욕조로 옮긴 뒤 공업용 커터칼로 토막을 내려다 여의치 않자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사

용하던 칼이 부러지자 9일 오전 1시 반경 모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손잡이 길이 17cm, 날 길이 8cm의 공업용 커터칼을 새로 구입해 계속 시신을 훼손했다. 9일 오후 1시 16분. 약 16시간에 걸친 시신 훼손이 대략 마무리됐다. 그는 검은 대용량 비닐봉투를 구입해 시체를 옮겨 담았다. 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다. 수십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비닐봉투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다. 그는 곧바로 할머니 부모 형과 함께 살고 있는 용인시 이동면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시체를 담은 비닐봉투는 본채 옆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장롱에 감췄다. 모두 맨 정신에 벌인 일이었다.

심 군은 김 양의 시신을 훼손하던 9일 0시경 최 군에게 '작업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 군이 '무슨 개소리냐'고 묻자 심 군은 '지금 피 뽑고 있다'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욕조 안에 김 양의 시신이 뉘어 있고,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복부의 장기가 들여다보이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심 군은 이어 김 양 시신의 자세를 바꿔 비슷한 사진 한 장을 다시 보냈다. 최 군은 인터넷 호러물 캡처 사진 정도로 알고 '장난치지 마'라고 답을 보낸 뒤 잠자리에 들었다.(중략)

심 군이 토막 낸 시신의 뼈는 모두 29조각이었다. 살을 도려내 뼈만 남은 상태로 15kg가량 무게였다. 심 군은 경찰에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을까 봐 죽인 뒤 시체를 가져나갈 방법이 없어 살점을 도려냈다"고 진술했다.(후략)』
〈http://news.donga.com/3/all/20130711/56395567/1〉

(매일경제)=『(전략) 최군이 오후 7시 38분께 모텔을 나가자 심군은 김양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심군 행동은 더 엽기적이었다. 시신을 쉽게 옮기려 9일 오후 1시 16분까지 16시간여 동안 모텔 화장실에서 김양 시신을 훼손했다.

살점과 장기를 커터칼로 도려내 변기에 버리는가 하면 추린 뼈 20여 개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용인시 이동면 자기 집으로 옮겨 장롱 속에 숨기기도 했다.

사체 훼손 과정에서 칼이 부러지자 심군은 새로운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해

사체를 마저 훼손하기도 했다.(후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65370〉

(중부일보)=『(전략) 그는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살점을 잔혹하게 도려낸 뒤 변기에 버렸다.

조사결과, 심군은 모텔 욕조에서 16기간 동안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엽기적인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군은 살을 도려낸 후 20여개로 추린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7분께 모텔을 빠져나와 콜택시를 불러 용인 집으로 갔다.(중략)

경찰은 모텔 정화조에서 발견된 A양의 살점과 장기로 추정되는 15kg 상당의 신체 일부를 회수해 조사 중이다.(후략)』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47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19살 남자가 17세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東亞日報 기사는『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다. 수십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비닐봉투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다.』『토막 낸 시신의 뼈는 모두 29조각이었다. 살을 도려내 뼈만 남은 상태로 15kg가량 무게였다』 등 잔인하고 끔찍스런 일련의 범행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다른 매체들도『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뼈를 29등분한 뒤 살점과 내장 등은 변기에 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뼈는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 오후 2시 7분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일보) 등 참혹한 시신 훼손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 같은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주는 정서적 악영향과 더불어 특히 피해자 가

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의 충격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과잉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는 잔인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영남일보 2013년 8월 6일자 6면「범행현장 CCTV에 젖은 휴지 붙여 독서실 등 돌며 상습 절도」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8월 8일자 6면「범죄 부추기는 10만원대 위치추적기」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영남일보,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A씨(35)는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서른 중반의 나이였지만 어느덧 전과는 8범. A씨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중략)

A씨는 올 초까지도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불경기 탓에 일감은 줄어만 갔고, 직업소개소에 출근 도장을 찍어도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수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희망도 점차 희미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중략) 이후 A씨는 독서실과 입시학원, 직업소개소 등 감시가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는 화장실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겹을 포개 접은 후 물을 적셨다. 자신의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젖은 휴지를 CCTV에 붙여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뒤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자판기를 뜯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을 털거나 자판기에서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그러나 꼬리가 너무 길었다. 경찰은 해당 독서실에서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지켜보며 잠복근무에 나선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후략)』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806.010060802060001〉

(국제신문)=『누구든 손쉽게 사들일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추적기)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3월 16일 오전 6시46분27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번지 ○○아파트' '48분27초 ○○지하차도' 이모(여·46) 씨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김모(여·41)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됐다. 2분 단위로 경위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위치와 차량 속도, 이동거리까지 포함됐다.

김씨는 2개월 전 크게 다투고 가출한 남편 박모(55)씨의 불륜을 의심했다. 박 씨가 새 거처를 마련한 북구 구포동 원룸 주차장에 3일 연속 주차하고 있는 이 씨를 의심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이 씨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 5월 7일까지 이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김 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정비공장에 들렀다가 추적기를 발견했다. 이 씨는 박 씨의 집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해 같은 주차장을 썼을 뿐 박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누구든 손쉽게 추적기를 구매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10만~50만 원이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다. 특히 남편과 애인 등의 불륜 현장을 적발하려고 추적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위해 여성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한 이모(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6월 금정경찰서는 고급 차를 타고 모텔에 출입하는 불륜 커플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긴 정모(40)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북부경찰서 윤한회 지능팀장은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더 크다. 인터넷 판매를 중단하고 목적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808.22006205830〉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기사는 전과 8범인 30대의 절도행각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독서실과 입시학원, 직업소개소 등 감시가 소홀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7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기사는 범인이 이 과정에서 CCTV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며 『화장실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겹을 포개 접은 후 물을 적셨다. 자신의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국제신문의 기사는 GPS 위치추적기(추적기)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는 『'2013년 3월 16일 오전 6시 46분27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번지 ○○아파트' '48분27초 ○○지하차도' 이모(여·46) 씨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김모(여·41)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됐다. 2분 단위로 경위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위치와 차량 속도, 이동거리까지 포함됐다.』며 범행에 악용된 위치추적기의 구체적인 성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편집자는 경찰이 제공한 GPS 위치추적기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실어 문제의 위치추적기 제품명이 'SOREM'이라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이들 신문의 기사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7월 25일자 25면 184회, 7월 31일자 188회, 8월 13일자 197회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4회)= 『(전략) 박서현의 몸을 반듯이 펼친 서동수가 먼저 입술을 빨았다. 이제 서동수는 박서현의 옆에 딱 붙은 채 한 손은 젖가슴을, 다른 한 손이 허벅지로 뻗쳐졌다. 박서현이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입을 벌려

혀를 내밀어준다. 그러고는 아래로 내려간 서동수의 손이 골짜기에 깊숙이 닿도록 다리 한쪽을 올렸다.

"나쁜 놈."

잠깐 입이 떼어졌을 때 박서현이 헐떡이며 말했다. 눈을 치켜떴지만 눈동자의 초점이 멀다. 그때 서동수의 손가락 하나가 박서현의 동굴 안을 휘저었다.

"아이구 나 몰라."

번쩍 허리를 치켜든 박서현이 비명을 질렀다. 벌써 동굴 안의 샘이 터져서 뜨거운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다시 서동수가 입을 막자 박서현의 혀가 거칠게 꿈틀거렸다. 서동수의 손가락이 더 깊게 동굴 안을 탐험한다.

"아파."

박서현이 비명을 질렀지만 행동은 그 반대다. 허리를 치켜드는 바람에 손가락은 더 깊게 들어갔다.

"아이구 아파."

비명은 탄성이나 같다. 외마디 탄성보다 더 자극적인 것이다. 이제 서동수의 입술이 박서현의 목을 핥고 내려와 젖가슴에 닿았다. 박서현의 젖가슴은 풍만하다. 젖꼭지는 땅콩 알만 했는데 검게 물들어졌고 이미 발딱 세워졌다. 서동수는 한쪽 젖가슴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아아."

만족한 탄성이 박서현의 입에서 터지면서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신음소리와 함께 말한다.

"자기야, 더 깊게."

"뭘?"

"손가락."

엉덩이를 흔들면서 박서현이 신음했다.

"너무 좋아."

"딴 놈하고도 이러니?"

마침내 서동수가 입안에서 뱅뱅 돌던 말을 뱉자 박서현은 신음과 함께 대답했다.

"빙신아, 너한테만 그래."

서동수는 다시 입안에 젖가슴을 넣고 혀로 젖꼭지를 굴렸다.

"아유, 더 세게."

이제 박서현의 몸은 절정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엉덩이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허리를 치켜들었다가 떨어졌는데 신음이 점점 더 커졌다. 온몸은 땀이 배어나와 번들거렸으며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현이 허리를 힘껏 치켜들면서 소리쳤다.

"나, 터졌어!"

서동수는 문득 박서현의 이런 절정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변했다.』

(188회)=『(전략) 조은희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서동수가 귓불을 씹으면서 웃었다.

"전혀 달라. 이럴 때의 당신이 말야."

"그래, 난 색골이야."

하반신을 비벼대면서 조은희가 서동수의 어깨를 물었다가 풀었다.

"미치겠어. 나 어떻게 하지?"

"그럼 가지 마."

"안 돼."

서동수가 조은희의 다리 한 쪽을 들어 올리자 적당한 자세가 되었다. 조은희가 서동수의 남성을 잡더니 제 동굴 앞에 붙이고는 헐떡이며 말한다.

"넣어!"

서동수는 조은희의 몸을 벽에 붙이면서 거침없이 진입했다.

"아이구머니."

조은희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졌다. 이제 한 쪽 다리가 서동수의 다리에 담쟁이넝쿨처럼 꼬여 매달리는 바람에 자세가 불안정해졌다. 서동수는 조은희의 두 다리를 두 팔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조은희가 안긴 채로 몸을 흔들었다.

"아, 아."

조은희의 입에서 움직임에 따라 비명이 터졌다. 두 손을 치켜들고 입을 딱

벌린 조은희의 얼굴로 샤워물이 쏟아지고 있다. 입 안에 든 물을 뱉으면서 조은희가 소리쳤다.

"여보, 세게!"

서동수는 조은희의 몸을 벽에 세게 밀어붙였다. 그러자 남성에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욕실 안에서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격렬해서 마치 누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방 안에서 엉켰을 때 조은희는 마음껏 신음을 뱉는 것 같았지만 미현을 잠재적으로 의식했을 것이었다. 미현은 방문 두 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실은 문이 하나 더 있다.

"아이구, 아야, 나 죽어."

쾌감이 더 강해진 것이 분명했다. 조은희의 비명이 점점 높아졌다. 조은희의 몸무게를 남성이 치켜 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동굴이 받는 느낌도 강할 것이었다. 서동수는 한 덩이가 된 조은희의 몸을 안고 열중했다. 조은희는 이제 쾌감만을 받는 한 덩어리의 몸이 되었다. 두 다리가 오그라졌고 두 팔은 빈틈없이 서동수의 목을 감은 채 비명을 질러대던 조은희가 마침내 폭발했다. 물에 젖은 얼굴을 치켜들면서 조은희가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서동수의 어깨를 물어뜯는다.』

(197회)=『"뭐해? 빨리!"

다시 정재민이 소리쳤을 때 서동수는 머리를 숙였다. 그러고는 정재민의 젖가슴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놀란 정재민이 엉겁결에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곧 덮쳐온 쾌감으로 입을 딱 벌리고 신음했다.

"아아아."

거침없는 신음이다. 서동수가 혀로 젖꼭지를 놀리면서 골짜기를 덮은 손이 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미 질퍽해진 동굴 안에서 서동수의 손가락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고 있다. 정재민이 안달을 했지만 서동수는 서둘지 않았다.

"아이구 아야."

정재민의 신음이 높아졌다. 허리를 들썩였다가 치켜세웠던 두 다리를 꼬면서 정재민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서동수의 입술이 배꼽으로 내려가자 정재민은 긴장했다. 가쁜 숨을 뱉더니 두 다리를 딱 붙였다.

"싫어. 거긴."

입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동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아랫배를 훑고 간 입술이 골짜기에 닿자 정재민이 몸을 비틀었다.

"이제 그만."

그러고는 서동수의 어깨를 잡고 끌어올리려는 시늉을 했다. 정재민의 샘은 흘러넘치고 있다. 서동수는 정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샘에 입술을 붙였다. 그 순간 정재민의 저항이 그쳐졌다. 입에서 앓는 소리만 뱉어낼 뿐 온몸이 늘어져 있다. 서동수의 입술이 정재민의 샘 끝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시 정재민의 몸이 꿈틀거렸고 금방 달아올랐다. 애무는 몸을 달아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제 정재민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서동수에게 몸을 맡긴 것이다. 이윽고 정재민이 폭발했다. 정재민의 절정은 독특하다. 온몸을 쭈욱 뻗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작이 꽤 오래가는 것이다. 서동수는 정재민의 샘에 얼굴을 붙인 채 참을성 있게 경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여자의 절정은 모두 다르다. 얼굴이 다르듯이 같은 절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여자의 절정도 매일, 매번 다르다.(중략)

그래서 정재민의 몸 위로 올라 거칠게 다리를 젖히고는 여유도 주지 않고 몸을 부딪쳤다.

"아악."

정재민이 비명 같은 외침을 뱉더니 두 손으로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눈을 치켜떴지만 이미 초점은 멀다. 서동수가 난폭하게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입 닥치고 있어."

정재민의 입에서는 이제 외마디 신음만 터져 나왔다. 그러나 온몸은 빈틈없이 서동수의 몸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다리가 번갈아 쳐들렸다가 소파를 짚고는 서동수의 몸을 강하게 받아 올린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주인공이 이혼한 전처를 비롯한 뭇 여성들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모두 3차례에 걸쳐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위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2 신문윤리강령 위반 大田日報 발행인 남 상 현

〈주 문〉

大田日報 2013년 8월 30일자 6면「현장르포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동행 해보니/방안 가득 性기구 '홍등가' 뺨쳐」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大田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8일 오후 8시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의 한 오피스텔 건물.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전 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오상욱 팀장과 안기현 형사는 424호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방안에서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오피스텔을 임대해놓고 그 공간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 두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안 형사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힌 후 "이 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가자 성매수남으로 보이는 남성이 방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안 형사가 "여기서 성매매 하셨죠"라고 묻자 이 남성은 "아니다"고 잡아 뗐다. 두 경관이 방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방안은 성매매 업소와 별반 다를게 없었다. 차곡차곡 쌓인 수건과 냉장고 가득한 음료수, 피임기구까지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업소 쿠폰도 발견됐다.

안 형사는 "요즘은 이렇게 쿠폰도 사용한다"며 "단골손님(?)이 있어 자주오면 할인 쿠폰 등의 혜택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경관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핸드폰을 조사했다. 오피스텔 성매매의 특성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안 형사가 남성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로 알려진 사람의 번호가 발견됐다.

또 여성의 휴대폰에서는 그 번호로부터 '424호실 7시'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그제서야 남성이 두 경관에게 성매매를 하러 왔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관들은 증거물을 통해 이들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안 형사는 성매수남에게 "어떻게 이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방안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다"며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봐서 정확하게 사이트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안 형사는 여성에게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얼마를 받느냐"고 묻자 이 여성은 "1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9만원을 자신이 갖고 4만원을 알선 업자에게 준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후 이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술서를 쓰고 모두 귀가 조치됐다. 안 형사는 성매매 업주의 것으로 여겨지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으나 업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오 팀장은 "이런 것이 힘들다"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순간을 포착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업주를 잡기는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종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면에는 변화한 풍속도 있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매매 여성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반 여성들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 택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죄의식 없다는 것. 게다가 성매수남들도 용의주도함을 보여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안 형사는 "적발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관할구역 내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 번 적발을 위해서 둔산권 내 오피스텔을 모두 훑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8013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일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고발한 르포기사다. 기자는 경찰관과 동행해 성매매 현장을 취재했다. 또 르포기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단속과정을 생동감있게 보도했다.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정보를 입수했다는 성매수남의 진술을 포함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가격, 성매매 현장의 내부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현장 내부 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독자들의 부적절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9월 9일자 24면 215회, 9월 10일자 216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5회)=『(전략) 진영아의 몸은 목이 멜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예쁘다기보다 성적(性的) 마력으로 가득찬 몸이었다. 둥근 어깨에 단단한 팔, 군살이 없고 마르지도 않은 몸매, 허리의 부드러운 곡선이 아랫배에 닿아서는 약간 볼록해졌고 곧 짙은 숲에 덮인 건강한 허벅지로 내려간다. 힘찬 허벅지다. 두 다리를 조금 벌리고 서 있어서 숲 안쪽의 골짜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홍빛 골짜기 겉쪽은 검푸른 빛이었고 위쪽에 젖꼭지만 한 클리토리스가 매달렸다. 진영아가 서동수의 거침없는 시선을 받더니 곧 두 다리를 오므렸다. 얼굴에 웃음기가 떠올라 있다.(중략)

그러면서 진영아가 한 걸음 물러나 온몸을 다 드러내었다.

"자, 봐요."

"침대 위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그것은 동굴 안을 더 잘 들여다보려는 의도다. 진영아가 거침없이 다리 하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곧 숲이 벌려지면서 동굴 안이 드러났다.

"으음."

탄성을 뱉은 서동수가 몸을 덮은 시트를 치우자 알몸이 드러났다. 그 순간 진영아의 눈빛이 강해졌다. 서동수의 남성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유, 죽겠어."

혀로 아래위 입술을 적시면서 진영아가 말했다. 목소리에 물기가 빠져 갈라진 소리가 난다. 진영아가 서동수의 남성에 시선을 준 채 물었다.

"오럴 해드려요?"

"넌 어때?"

"난 좋아요."

"해주는 거? 하는 거?"

"해주는 거, 내가 하는 건 싫어."

"그럼 이리 와."

마침내 진영아가 침대 위에 얹혔던 다리에 힘 한번 주고 올라와 서동수 옆에 눕는다. 몸이 부딪치자 더운 숨결과 함께 달아오른 피부가 느껴졌다. 상반신을 일으킨 서동수가 곧 진영아의 입술에 키스했다. 진영아가 두 손으로 서동수의 목을 감싸 안더니 곧 혀를 내밀었다. 서동수는 매끄럽고 탄력있는 진영아의 혀를 애무했다. 키스는 섹스의 인사 같은 역할을 한다. 키스로써 경계심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해소되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곧 도화선 구실을 한다. 혀를 비비면서 서동수의 손이 진영아의 젖가슴과 아랫배, 그리고 숲에 닿았다. 손끝이 클리토리스에 닿자 진영아의 하반신이 찔끔하더니 곧 두 다리가 벌어졌다. 서동수의 손이 거침없이 숲을 덮더니 손가락 하나가 동굴 안으로 탐색하듯이 진입했다.

"으응."

진영아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서동수는 손가락이 흥건하게 젖은 것을 느끼고는 진영아의 입에서 얼굴을 떼었다. 진영아의 숨결이 가쁘다. 눈동자의 초점도 멀다.』

(216회)=『"으으으."

진영아가 그렇게 신음을 뱉으면서 터졌다. 절정에 오르는 모습은 다 다르다. 자세히 보면 같은 여자의 절정도 매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진영아의 터지는 순간은 독특했다.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길고 굵은 신음을 뱉으면서 온몸을 오그린 것이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골짜기에서 머리를 들었다. 진영아의 신음과 오르가슴은 계속되고 있다. 온몸을 새우처럼 굽히고는 떨면서 신음한다. 이것이 진영아가 터졌을 때의 모습이다. 그때 서동수가 진영아를 돌려 바로 눕히면서 몸 위에 오른다. 마치 응급실 의사처럼 정확하고 빠른 몸놀림이다. 그러고는 진영아의 다리를 벌리고는 곧장 몸을 합쳤다. 그 순간이다. 진영아가 입을 딱 벌리더니 두 손으로 서동수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아이고 여보, 좋아."

한국어다. 그 순간 서동수는 피가 머리끝으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어에 익숙해진 뇌가 바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동수가 거칠게 몸을 움직

이자 진영아가 신음하며 말했다.

"여보, 천천히, 천천히."

서동수는 움직임을 늦췄다. 그러자 진영아가 허리를 들어 올려 서동수와 리듬을 맞추면서 소리쳤다.

"아, 좋아, 여보, 너무 좋아."(중략)

"좋아서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

진영아의 몸은 뜨겁고 샘은 용암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때 절정으로 오르던 진영아가 다시 소리쳤다.

"자세 바꾸지 않아도 돼?"

여자마다 다 다르다. 그래야 인간이다. 같으면 로봇이지 인간인가? 같다면 오입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아는 독특했다. 물론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자세 걱정해주는 여자는 처음이다. 모두 쾌락의 시간을 늦추려는 시도인 것이다. 움직임을 멈춘 서동수가 진영아의 허리를 잡고 돌리는 시늉을 했더니 금방 눈치를 채고 엎드렸다. 얼굴은 침대에 붙이고는 상반신을 납작 엎드린 채 엉덩이를 뒤로 내민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희고 풍만한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아아아!"

다시 두 몸이 합쳐졌을 때 이제 진영아의 입에서 커다란 탄성이 터졌다. 전위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서동수가 거칠게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진영아의 탄성이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서동수가 다시 움직임을 멈춰야만 했다.(중략)

"여보, 어서요, 빨리."

다시 서동수가 움직였고 서너 번의 신음소리가 이어지더니 바로 진영아가 폭발했다. 엄청난 폭발이다. 진영아가 침대 시트를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허리를 뒤에서 부둥켜안았다. 계속해서 진영아의 신음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서동수는 기다렸다. 이윽고 진영아의 몸이 늘어진 것은 5분쯤이 지난 후였다. 땀으로 범벅이 된 등에 찬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이 중국의 의류 매장 책임자로 고용한 여성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 신음소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경고'를 받았다.

위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5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10월 1일자 10면 「"모델출신 男이 토닥여 줍니다" … 여성 대상 신종마사지 기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친과 싸운 후 토닥이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트레이너 프로필과 전신사진이 왔고, 혼자 모텔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 훈남 마사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관계는 없는 건전마사지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건전마사지 말고 다른 서비스에도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남성 프로필은

키 185에 25살의 에이스급이었습니다."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출장마사지가 성행 중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토닥이'(몸과 마음을 토닥거려 준다는 뜻)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헬스트레이너, 모델 출신 훈남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며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

실제 여성전용 커뮤니티 등에는 토닥이 서비스를 받았다며 후기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후기글에 따르면 마사지는 A, B, C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A 코스는 아로마, 경락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B 코스는 유사성행위까지, C 코스는 성관계까지 가능한 마사지로 금액은 기본이 10만원이라고 한다. 성행위 시에는 요금 협상이 필요하고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업체로 신청을 하면 업체 측은 관리하고 있는 남성들의 프로필과 전신사진 등을 고객에게 보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업체 측은 "모텔은 물론 여성이 사는 집 등 원하는 곳 어디든 출장이 가능하고, 고객의 연락처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경찰도 이런 여성전용 출장마사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워낙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호텔을 잡고 여경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불렀지만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장마사지의 경우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성폭행은 물론 강력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01000330&md=20131004004159_AT〉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출장 마사지가 성행 중이라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기사는 그러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남성 출장 마사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사는 첫 머리에서 『"남친과 싸운 후 토닥이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트레이너 프로필과 전신사진이 왔고, 혼자 모텔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 훈남 마사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관계는 없는 건전마사지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건전마사지 말고 다른 서비스에도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남성 프로필은 키 185에 25살의 에이스급이었습니다."』라는 인터넷에 실린 해당업자의 '낚시성 글'로 의심할만한 내용의 '이용 후기'를 여과 없이 소개했다.

이어 『이 서비스는 헬스트레이너, 모델 출신 훈남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며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과 더불어 『마사지는 A, B, C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A 코스는 아로마, 경락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B 코스는 유사성행위까지, C 코스는 성관계까지 가능한 마사지로 금액은 기본이 10만원이라고 한다. 성행위 시에는 요금 협상이 필요하고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등 마사지 종류와 금액 등 선정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취재 의도와 경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성 짙은 기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10월 10일자 26면 233회, 10월 11일자 234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3회)=『(전략) 서동수는 손을 뻗어 오정미의 샘에 손가락을 넣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고 마침 오정미가 다리를 벌린 상태였다. 서동수는 자신의 손가락이 뜨거운 샘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샘은 흘러넘칠 정도다.

"자. 잔디밭에서 한번."

서동수가 일어서는 바람에 모자가 벗겨졌다. 몸을 비튼 오정미가 잔디밭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머리를 저었다.

"싫어, 여기선."

"이리 와."

몸을 돌린 오정미가 알몸으로 두어 발짝 뛰었지만 금방 서동수에게 어깨가 잡혔다. 몸을 비튼 오정미가 다시 옆으로 뛰다가 서동수가 발을 거는 바람에 잔디밭 위로 넘어졌다.

"아야."

오정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엄살이다. 서동수는 오정미를 덮어 눌렀다. 어둠 속에서 두 알몸이 잔디밭 위를 뒹굴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오정미를 제압한 서동수가 깔고 앉았다. 두 다리를 거칠게 벌렸을 때 오정미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아유, 등이 따가워!"

서동수의 남성이 골짜기 위에 붙었다. 오정미는 뱀에 잡힌 쥐처럼 순식간에 굳어졌다. 가쁜 숨소리가 잔디밭 위를 덮는다. 그 자세에서 오정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세게 해줘."

그 순간 서동수의 남성이 거칠게 진입했다. 뜨거운 용암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악."

입을 딱 벌린 오정미의 외침이 잔디밭 위에 울려 퍼졌다.

"아이고, 여보."

잔디밭에 단단히 두 발을 디딘 오정미가 허리를 솟구치면서 소리쳤다.

"나 죽어!"

머리를 숙였던 서동수는 짙은 땅 냄새를 맡는다. 풀 냄새가 섞인 땅의 냄새다. 맵고도 싱그러운 땅 냄새를 맡으면서 서동수는 거칠게 움직였다. 대지는 단단하다. 오정미의 비명 같은 탄성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서동수는 오정미의 허리를 비틀어 자세를 바꾸었다. 오정미가 익숙한 동작으로 잔디밭 위로 납작 엎드린다. 이제는 따갑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다. 얼굴 한쪽을 잔디 위에 붙였고 납작 엎드린 채 엉덩이는 추켜올렸다.

"아아악."

잔디에 대고 뱉는 오정미의 신음이 다시 울렸다. 오정미도 이제 잔디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뻗은 오정미의 두 손이 잔디를 쥐어뜯고 있다. 서동수는 오정미의 풍만한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아아, 여보! 여보!"

오정미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거친 행동이어서 리듬이 맞지 않는다. 터지려는 것이다. 일찍 터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서동수는 잠자코 오정미에게 맞췄다. 땀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오정미가 비명을 지르며 터졌다.』

(234회)=『"아유 너무 좋아."

알몸으로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린 오정미가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아직 목소리에 열기가 띄워져 있었지만 밝다. 몸을 굴린 오정미가 서동수의 팔에 머리를 베고 안긴다.

"자기하고 그거 끝나면 몸이 가벼워져."

"말도 안 되는 소리."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동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번에는 거기가 무거워져서 발을 떼기도 힘들다고 했으면서."

"내가 언제?"

오정미가 손을 뻗어 서동수의 남성을 감싸 안았다. 남성은 이제 늘어져 있다.

"쌌어?"

"응."

"난 정신없어서 몰랐어."(중략)

오정미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라 있었으므로 서동수는 몸을 세워 오정미의 몸 위에 올랐다. 놀란 듯 오정미가 눈을 크게 떴다.

"또?"

"네가 세워놓았잖아?"

"이번에는 천천히, 여보, 아깐 너무 정신이 없었……."

말을 잇지 못한 오정미가 입을 딱 벌렸다. 서동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이구 아파."

오정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샘 안은 아직도 젖은 상태여서 적당했다. 두 다리로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아 안은 오정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자기야, 화내지 마."

서동수가 거칠게 허리를 움직였으므로 말을 잇지 못한 오정미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아, 아, 아파."

다시 잔디밭 위에서 둘의 거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비명 같은 쾌락의 탄성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별에 부딪쳐서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지는 것 같다. 서동수는 집중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박서현의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다. 참 복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문득 가슴이 서늘해진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는가? 오정미의 신음이 점점 더 높아졌고 움직임도 격렬해졌다. 또 빠르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이 사업상 알게 된 여성과 바닷가 별장 잔디밭에서 알몸 상태로 술을 마시다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 신음소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문화일보가 세 차례에 걸친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공개경고' 등 더욱 강한 제재와 함께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재) ①항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13-12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연재만화「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2013년 10월 10일자 17면 SeasonⅥ〈1076〉 제3화 인간의 조건 9회, 10월 18·19일자 19면 SeasonⅥ 〈1082〉 제3화 인간의 조건 15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적시 만화는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장면 중에는 "아아아아!" 등 신음 소리와 "끼아아아~" 등 비명소리와 더불어 〈퍽 퍽〉, 〈슥〉, 〈꾹〉 등 자극적인 의태·의성어들과 함께 "저…물건 어찌할꼬…."

등 음란한 대사가 섞여 있다.

문제 부위는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선정적이고 음란한 장면 묘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0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11월 14일자 27면 258회, 11월 15일자 28면 259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문화일보는 이 '결정 주문과 이유 부분의 요지'를 자사 지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8회)=『(전략) 서동수는 먼저 이은실의 젖가슴 한쪽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그 순간 놀란 이은실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를 움켜쥐었지만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다. 서동수는 입안에 든 이은실의 젖꼭지를 혀로 굴렀다. 그리고 손 하나를 뻗어 허벅지와 무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은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젖꼭지는 땅콩 알만 했는데 어느새 발딱 일어섰고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이은실은 무릎을 세웠다가 내린다. 서동수의 입이 다른 젖꼭지로 옮겨졌다. 허벅지를 쓸던 손이 이제는 엉덩이와 무릎 뒤쪽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여자의 성감대는 수십 군데다, 분위기가 뜨거워졌을 때는 성감대가 아닌 곳이 없다. 발가락과 발바닥, 발뒤꿈치에서 목덜미와

겨드랑이, 등과 치골, 동굴과 항문 사이의 계곡까지 전류를 일으킨다. 이제 서동수의 입이 아랫배로 옮겨졌다.

"아유, 선생님."

이제는 이은실이 서동수의 머리칼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신음했다. 두 무릎을 세워 서동수의 머리를 조이려고 했다가 다시 뻗는 동작을 되풀이한다. 서동수의 손이 아래쪽의 골짜기로 밀려 내려간 순간 이은실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해요. 그만."

그러나 골짜기를 덮은 서동수의 손은 금방 젖었다. 뜨거운 애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사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서동수의 손이 동굴을 건드리자 이은실의 신음은 더 높아졌다. 이제는 서동수의 어깨를 잡아 몸을 일으키려는 시늉을 하더니 마침내 소리쳤다.

"선생님, 빨리요."

"아직 멀었어."

서동수는 두 시간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손가락 하나가 동굴 안으로 진입한 순간 긴장한 이은실의 몸이 굳어졌다가 금방 받아들였다. 엉덩이를 치켜들어 손가락과 리듬을 맞추면서 이은실이 절정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서동수는 상반신을 일으켜 이은실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은실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목을 감아 안더니 혀를 내밀었다. 서동수는 달콤하고 말랑한 이은실의 혀를 빨았다. 이제 되었다. 잠깐 입술을 떼자 이은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거칠고 깊어지면서 이은실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윽고 이은실이 허리를 힘껏 치켜 올리면서 폭발했다. 절정의 외침은 비명 같다.』

(259회)=『(전략) 서동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이은실이 올려다보았다. 조금 벌린 입에서 품어진 숨결이 가슴에 닿는다. 서동수는 남성을 동굴 끝에 붙였다.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면서 온몸의 에너지가 상승했다. 긴장한 이은실의 허리가 꿈틀거리자 호흡을 가눈 서동수가 천천히 남성을 진입시켰다.

"으으으."

이를 악문 이은실이 서동수의 어깨를 힘껏 움켜쥐었다.

"어이구 아파."

이은실이 비명처럼 말했지만 서동수는 환호하며 반기는 동굴을 느낀다.

"으음."

서동수의 입에서도 탄성 같은 신음이 터졌다. 용암으로 가득찬 이은실의 동굴 안 탄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강하면 강할수록 남성은 접촉면의 쾌감이 증대되는 법이다. 동굴을 가득 채웠던 서동수의 남성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턱을 젖힌 이은실의 입이 쩍 벌어졌으므로 다급해진 서동수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 이은실이 두 다리를 들어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는다. 얼굴을 흔들어 손바닥을 떼어낸 이은실의 비명이 방안에 퍼졌다.

두어 번 같은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몸의 움직임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올리고 내리면서 받고 치솟는 것이다. 네 쌍의 사지가 빈틈없이 엉켰다가 떼어졌고 자세를 바꾸면서 다시 리듬을 맞춘다. 이제 서동수도 이은실의 외침을 상관하지 않았다. 다 잊고 몰두한 것이다. 이윽고 이은실이 다시 터졌다. 둘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은실이 상위 자세다. 상반신을 번쩍 세운 이은실이 머리까지 젖히고 비명을 질렀을 때 서동수는 두 손으로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두 몸은 땀으로 젖었고 방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후략)』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 서동수가 북한 출신 여성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소설은 여러 가지 성행위 동작과 이에 따른 신체의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성행위 과정에서 주고 받는 자극적인 대화 내용을 드문드문 곁들이는 등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내용은 자칫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

기심을 충동질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위 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제867~제869차 회의에서 3회 연속 '경고'를 받았다.

26 樂카페 제6523호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문화일보

본보 연재소설 '서유기'
신문윤리위, 경고 결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 2013년 11월 14일자 27면 258회, 11월 15일자 28면 259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여러 가지 성행위 동작과 이에 따른 신체의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성행위 과정에서 주고받는 자극적인 대화 내용을 드문드문 곁들이는 등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일관, 자칫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동질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3항(선정보도의 금지)과 제13조 어린이보호 4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 신문제작에 반영할 방침이다.

▲ 2014-1024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4년 1월 7일자 22면 294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욕조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눕고도 남을 만큼 컸다. 서동수는 레이와 욕조에 나란히 앉았다. 레이의 어깨를 감아 안은 서동수가 다른 손으로 젖가슴을 감싸 쥐었다. 레이의 선홍빛 젖꼭지는 땅콩알만 했고 이미 단단해져 있다.

"레이, 내 현지처로 소문이 나면 결혼에도 지장이 있을 텐데."

젖가슴을 애무하면서 서동수가 말하자 레이가 손을 뻗어 남성을 쥐었다.

"난 보스의 현지처로 살거예요."

레이가 서동수의 남성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그 소문이 났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스."

"넌 나를 잘 모르지 않아?"

"이만하면 많이 아는 편이죠."

이제 서동수의 손도 레이의 골짜기로 내려왔다. 레이가 입을 벌리더니 낮은 신음을 뱉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져 있다. 서동수의 손가락이 골짜기를 문지르자 레이의 신음은 더 높아졌다.

"보스, 걱정하실 것 없어요."

몸을 비틀면서 레이가 말했다.

"난 현지처를 내세워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레이는 서동수의 몸 위로 올라와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레이가 꿈틀대는 바람에 욕조의 물이 넘쳐흘렀다. 레이가 서동수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안으면서 물었다.

"보스, 여기서?"

서동수는 레이를 안고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서."

그러자 레이가 몸을 비틀어 떼더니 타월을 집어 서동수의 몸을 닦았다. 날렵한 행동이다. 욕실을 나온 둘은 침대에 올라 다시 엉켰다. 흰 시트 위에 반듯이 누운 레이의 몸은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났다. 서동수는 레이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다. 이미 반쯤 열려진 레이의 입술에서 살구 맛이 났다. 금방 뽑혀나온 혀는 달콤했다. 그 사이에 젖가슴을 지나 아랫배로, 다시 골짜기로 훑고 내려간 손바닥은 샘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생수를 만난다. 레이의 샘은 넘치고 있

다. 서동수의 입술이 입술에서 젖가슴으로 내려왔다. 젖가슴을 입안에 넣은 서동수가 혀로 젖꼭지를 굴리자 레이의 신음이 다시 터졌다.

"어서요."

레이가 그렇게 말했다.

"해주세요."

두 다리를 꼬면서 레이가 재촉했다. 서동수는 마침내 레이의 몸 위로 올랐다. 기다렸다는 듯이 레이가 팔을 뻗어 서동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골짜기 끝에 닿은 남성을 느끼고는 허리를 꿈틀거리고 있다. 그 순간 둘의 몸이 합쳐졌다.

"아아아."

턱을 뒤로 젖힌 레이가 거침없이 신음을 뱉는다. 두 다리가 서동수의 허리를 감았다가 곧 떼어지더니 온몸을 딱 붙인다. 서동수는 남성에 전해진 압박감을 견디려고 어금니를 물었다. 레이의 동굴은 좁고, 탄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난 자극을 참으려는 의도다. 서동수가 천천히 몸을 빼니 레이의 신음이 더 높아졌다.

"아아아아."

레이가 허리를 좌우로 비틀면서 상하로 흔들었다. 두 손으로 서동수의 허리를 끌어당기더니 목을 감싸 안는다. 서동수는 다시 힘껏 레이의 몸 안으로 진입했다. 방 안에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비명 같은 탄성이 울려 퍼졌고 가쁜 숨소리에 섞여 뜻 모를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는 열중했다. 레이의 뜨겁고 깊은 동굴 안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간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주인공 서동수가 부하 여직원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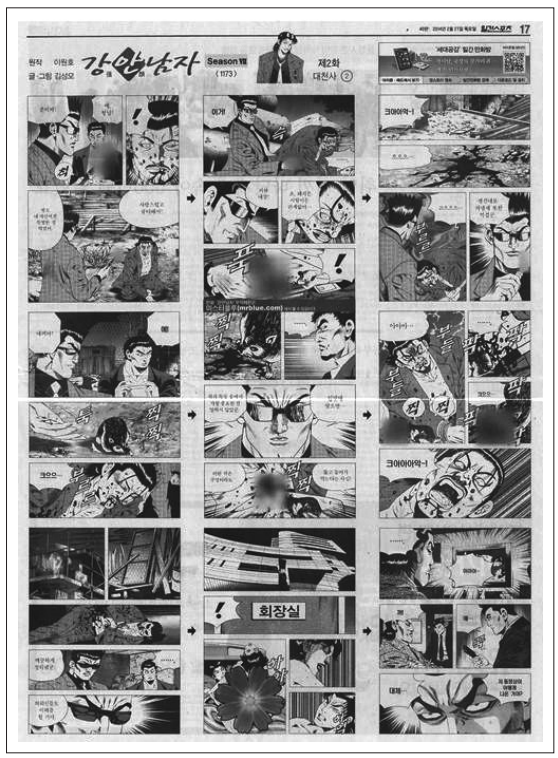
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4년 2월 27일자 17면 연재만화「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Season Ⅷ 〈1173〉 제2화 대천사 ②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연재만화는 폭력배들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납치해 잔인하게 청부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만화에서 폭력배들은 채무자의 손발을 묶은 뒤 칼로 찔러 상처를 내고, 피와 내장을 먹도록 훈련받은 쥐를 풀어놓아 상처를 뚫고 들어가 먹게 해 살해한다.

일부 장면을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한 그림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비윤리적이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8월 9일자「[사진] '귀마개? 헤어밴드?' 주요 부위만 감싸주는 '씨 팬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 여성이 '씨 팬티(C-pants)' 혹은 '씨 스트링(C-String)'이라 불리는 특이한 속옷을 입고 해변을 뛰거나 태닝을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계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씨 팬티는 허리끈을 아예 없애고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엉덩이 사이에 끼워 입는 팬티다. 모양이 알파벳 C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영상 속 여성은 해변에서 태닝을 하고 있다. 속옷에 가려지는 부위까지 예쁘게 태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힌 여성은 바로 씨 팬티를 착용한다. 여성은 주요 부위만을 가린 채 태닝을 즐기거나 해변을 질주하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씨 팬티의 용도는 다양하다. 레드카펫 행사에서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여배우들에게 필수품으로 종종 등장한다. 허리끈이 있는 '티팬티(T-pants)'의 대안으로 매끈한 허리라인을 강조해야할 때 착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29675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허리끈을 아예 없애고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엉덩이 사이에 끼워 입는 알파벳 C와 비슷한 형태의 일명 '씨 팬티'(C-pants)를 소개하며 해당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 네이버 자사 뉴스스탠드 난에 「"주요 부위 가린…" 무슨 물건?」 제목 아래 상의 탈의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아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여성의 국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게재하고 여성의 유두가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에 해당하며,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7월 8일자 「'그만 만져!' 축제 중 흥분男들 스킨십에 …」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포토뉴스 난에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http://pic.joins.com/photogallery/photoslide.asp?m_id=357446&preM_ID=359679&w_size=M&tab_id=new_tab&n_pagenum=1&s_speed=5〉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여성의 유두가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3년 7월 31일자「대학교내 성행위 일파만파, 대낮 알몸 뒤엉켜 소파에서 '야동찍나'」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온라인 커뮤티니)

한 대학 내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월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엔 서울 소재 모 대학 내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 속엔 사건 장소를 서울 소재 모 대학 법학관 안의 라운지라고 자세히 밝혔으며 사건 시간은 7월 24일 이전 오후 낮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사진엔 한 남녀커플이 옷을 모두 벗고 대낮에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위층의 공간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것으로, 남녀가 뒤엉켜 소파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 옆으로 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진엔 남성의 엉덩이 부분과 여성의 다리 부분이 담겼으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진을 게재한 네티즌은 이 공간이 학교 내에서 재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해 모이는 장소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학 중이라 이용자가 거의 없는 대학교 법학관 내 라운지에서 그들만의 시간을 즐겼다.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에 네티즌들은 “막장 대학생들이네”, “학교에선 이들을 그냥 둘건가요?”, “진짜 낯뜨겁다. 대놓고 야동을 찍네”, “어떻게 저런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생각을 … 제정신인가”, “아직 이 학교 학생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학교 자체를 매도하는건 성급한 것 같다”, “외국인줄 알았더니 한국이었네” 등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엔] 』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307310019&category=0033&no=1&tag=?
??³ª+??¶´ø,Æ÷¸£³〉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서울 소재 모 대학 내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엔’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그러나 뉴스엔은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반면, 스포츠동아는 남녀가 뒤엉켜 소파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소파에는 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남성의 엉덩이 부분과 여성의 다리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매체들도 이 기사를 게재했으나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성행위 장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아예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언론사도 상당수였다. 특히 세계닷컴은 기사 게재 후 삭제하였다.

비록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가 성행위하는 음란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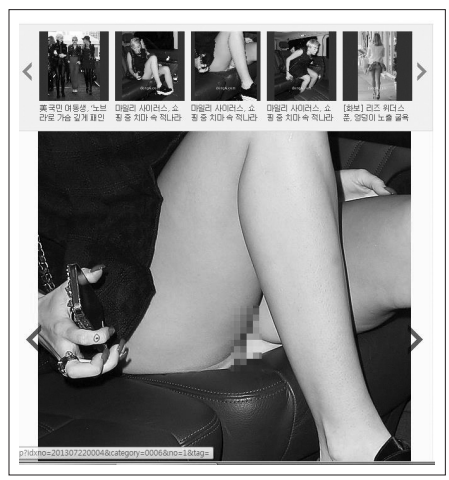
▲ 2013-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3년 7월 22일자 「마일리 사이러스, 쇼핑 중 치마 속 적나라한 노출 … '노팬티' 의혹」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가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일리 사이러스 (사진=영상/사진제공 -TOPIC / Splash News)

미국의 톱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또 치마 속을 노출하며 화제가 됐다.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쉬닷컴은 7월 21일(현지 시간)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파파라치 사진을 단독 공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샤넬 매장에서 쇼핑을 즐긴 마일리 사이러스는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리 한 쪽을 들어올렸다.

주변에 있던 파파라치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

렸다. 이 상황에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

이로 인해 마일리 사이러스는 또 한번 노출 사진을 온 천하에 공개하게 됐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전에도 파파라치들에 의해 치마 속이 종종 노출된 경험이 있다.

한편 마일리 사이러스는 올해 남성잡지 맥심이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에 오른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307220004&category=0006〉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다하더라도 노팬티 차림의 여성 국부를 충분하게 가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닷컴 발행인 김 상 규

〈주 문〉

스포츠서울닷컴 2013년 7월 30일자 「'화나면 옷 벗어?'…中 커플, 거리에서 나체 말다툼 '경악'」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닷컴은 위 적시 가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닷컴 | e뉴스팀] 중국의 한 커플이 거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2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중국 광둥성 둥관의 한 도로 가운데에서 젊은 남녀가 옷을 벗으며 싸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커플은 길가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도로로 이동하며 싸움을 계속했고, 남자가 흥분해 윗옷을 벗자 여자도 옷을 벗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도로에 서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 커플은 요란한 싸움 뒤 바로 화해해 다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마지막에 찍힌 사진에서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한 채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여성은 남자 친구의 셔츠로 몸을 대충 가린 채 걷고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창피한 줄 모르나?", "속옷 차림도 아니고 충격이다", "금방 화해한 것도 신기하다", "엄청난 다혈질 커플인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광둥성의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알몸 싸움을 벌려 관심을 끌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운영팀 sseoul@media.sportsseoul.com』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216421.htm〉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닷컴은 중국의 한 커플이 거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을 게재하였다. 근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둔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원거리에서 잡힌 여성의 둔부는 그대로 두었고, 정면 사진도 국부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채 게재하였다.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성의 나체 사진 3장을 게재한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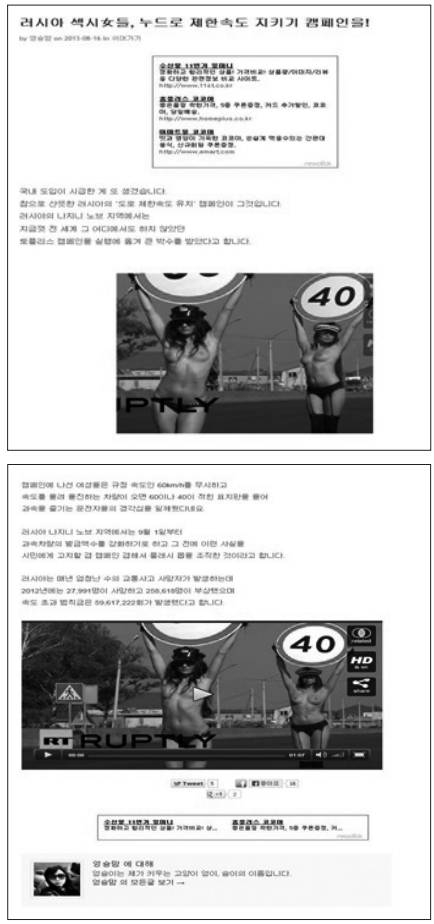
▲ 2013-3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3 8월 16일자「러시아 섹시女들, 누드로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제목의 사진 및 동영상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의 1인 블로거 카테고리 '저널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52497〉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 한 블로거가 러시아 여성들이 토플리스 차림으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에 나섰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드러낸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였음에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두었다.

여성의 유두나 성기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비록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블로거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3년 8월 25일자「'총리 딸' 스테파니 키, 문어를 은밀한 곳에 … '파격'」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인터넷판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입력 2013-08-25 20:34:56

존 키 뉴질랜드 총리의 딸이 파격적인 사진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5일(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의 딸인 스테파니 키(20)가 최근 가슴을 드러낸 애로틱한 자기인물 사진을 여러 편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문어로 주요부위만을 가린 '누드 스시'를 표현하는 가하면 체리를 입에 물고 총을 든 포즈도 있다.

스테파니 키는 현재 파리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파리 디지인 주간'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 자화상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자화상 사진 가운데 스시를 이용한 작품은 파리 디지인주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빠의 생각이 궁금하다" "낸시랭이 생각나네" "정말 파격적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30825/5721619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뉴질랜드 총리의 딸이자 파리예술학교 학생인 스테파니 키가 '파리 디자인 주간'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비록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시도한 전위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팬티만 걸친 채 체리를 입에 물고 장난감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는 모습과 문어로 자신의 성기를 가린 채 전라 상태로 누운 모습을 담은 사진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 가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하나 전체 이미지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5일자「[사진] 반라의 女權투사들 베니스영화제등장」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반라의 女權투사들 베니스영화제 등장

[뉴스1] 입력 2013.09.05 12:09 / 수정 2013.09.05 13:51

영화감독 키티 그린(오른쪽 2번째)이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70회베니스영화제에서 우크라이나출신으로 구성된 여성운동단

체 페멘(Femen) 회원 인나 셰브첸코(왼쪽 4번째), 사샤 셰브첸코(오른쪽)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라의 페멘 회원들은 비경쟁부문 출품작 '우크라이나는 갈보집이 아니다'라는 작품 소개시간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드레스 차림의 키티 그린 감독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페멘은 가슴을 드러내는 돌발시위로 유명한 여성운동그룹이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joongang.joins.com/article/642/12530642.html?ctg=1306&cloc=joongang|article|hotclick〉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여성운동가단체 페멘 회원들이 베니스영화제에서 벌인 누드 퍼포먼스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이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소재로 한 비경쟁부문 출품작 '우크라이나는 갈보집이 아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시간에 이러한 토플리스 차림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그 목적성이 뚜렷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정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유두가 드러난 사진을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도 행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3년 9월 11일자 「미란다 커, 또 가슴 노출 사고 … '너무 잦은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란다 커, 또 가슴 노출 사고 … '너무 잦은데?'

[스타데일리뉴스] 입력 2013.09.11 06:09

국내 주요 포털 검색어 1위, 인기 유감없이 과시

출처: 스플래시뉴스 캡처

[스타데일리뉴스=이◯◯ 기자] 미란다 커의 가슴 노출 사고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녀의 과거 사진들까지 함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톱 모델인 미란다 커는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의 플로렌스 굴드 홀에서 열린 영화 '마드모아젤 C' 프리미어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공개한 미국의 연예매체인 스플래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돌체 앤 가

바나의 검정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미란다 커가 머리 정리를 위해 팔을 들어올린 순간 드레스 케이프가 함께 올라가 가슴이 노출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번 가슴 노출 사고에 대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란다 커는 지난 5월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서 화보 촬영 도중 역시 가슴 노출 사고를 겪기도 했다.

한편 미란다 커는 내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이번 노출 사건을 비롯한 미란다 커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5789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배우 미란다 커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가슴노출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두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게재한 '스타데일리뉴스'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충분히 가리지 않아 여성의 유방의 전체적인 모습과 유륜(乳輪)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 사진을 보도한 다른 매체의 경우 유두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색을 덧입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위 사진은 연예전문보도매체 '스플래시 뉴스'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률에도 위배된다.

비록 타사 기사를 전재했다 하더라도 게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15773/Miranda-Kerr-ensures-eyes-US-Open-goes-bra-skimpy-black-top.html?ito=feeds-newsxml〉

■ 참고 : 다른 언론사의 보도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

매경닷컴

한국경제TV

▲ 2013-3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29일자 「[사진] 미란다 커, 가슴노출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미란다 커, 가슴노출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9.29 14:27 / 수정 2013.09.29 14:29

호주출신 톱모델 미란다 커(30)의 가슴노출 관련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

커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영화 '마드모아젤 C(Mademoiselle C)' 프리미어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다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날 커는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관능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커가 머리를 쓸어 올리자 검은 레이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가슴 부위가 모두 드러났다.

파비앙 콩스탕트 감독의 '마드모아젤 C'는 패션 거장 칼 라거펠드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칼 라커펠드, 톰 포트 등 패션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 유튜브 캡쳐]』

〈http://joongang.joins.com/article/005/12716005.html?ctg=〉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배우 미란다 커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가슴노출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에서 캡처한 유두 부위가 보이는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일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위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유방의 전체적인 모습과 유륜(乳輪)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13일자「[사진]'1만원 내고 가슴 만지고 가세요~' 日이색기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1만원 내고 가슴 만지고 가세요~' 日 이색 기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9.13 00:01 / 수정 2013.09.13 10:24

목록

일본에서 돈을 기부하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모금행사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

일본의 성인방송 '파라다이스 TV'는 최근 '스톱 에이즈'라는 모금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에이즈를 예방 및 치료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주최측은 이틀간 열린 행사에 약 4500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약 1000엔(약 1만4400원)을 기부하면 행사 현장에서 여배우들의 가슴을 만질 수 있다. 여배우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에 일렬로 서서 기부자들을 맞이했다. 행사 주최 측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가할 수 없고,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소독하도록 했다.

파라다이스 TV 측은 "4690명이 참가해 기부금 420만4836엔(약 6100만원)이 모였다"며 "모금액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에이즈예방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60129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일본에서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목적의 기금 마련을 위해 한 성인 방송에서 소액의 기부금을 내면 여성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한 이벤트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위 행사는 겉으로는 에이즈 모금을 목적으로 열렸지만, 성인TV방송이 주최했고 발상이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당초부터 대중의 성적 호기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벤트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여성의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한 행사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비록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여성을 성성품화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이같은 보도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일반적인 사회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

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3년 11월 5일자「하버드 학생들이 한밤중 누드로 뛰는게 전통? [19금]」제목의 블로그(저널로그)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 블로그(저널로그)에 게재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하버드 학생들이 한밤중 누드로 뛰는게 전통? [19금]

11 5th, 2013 @ 02:03 pm ＞ 사막의향기

하버드 대학 투어 가이드를 해준 리즈 라는 학생으로 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일년에 두번, 누드로 스트리킹을 한다고 하네요. (중간생략)

12월 중순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전날 밤 옷을 벗어던지고 누드로 학교

광장을 뛰고 있는 하버드대학생들.

보스톤의 12월은 매우 쌀쌀하지만 매년 100~200명 정도가 한밤중 알몸 질주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초적 비명 질주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감한 여학생들이 매년 참가해 남학생들과 길 옆에서 응원하는 동료 학생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학교 당국도 학생들 스트리킹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다는군요.

일년에 두 번, 학기말 시험 전날밤 스트레스에 쌓인 학생들이 한밤중 알몸으로 몇 십분 뛰어 다닌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한 듯 합니다. (이하 생략)

동아일보 저널로그 – 사막의향기
〈http://blog.donga.com/jonk78/archives/162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블로그의 위 기사는 하버드 대학생의 누드달리기 행사를 소개하면서 남녀학생들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 등 전라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학기말 시험이 끝난 뒤 중압감을 떨쳐내기 위해 한 밤중에 벌거벗은 채달린다는 대학생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외설적이고, 퇴폐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기와 음모까지 확연하게 드러난 사진을 어린이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싣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 문〉

머니투데이 2013년 11월 12일자 「스트립쇼보면서 성매매 하더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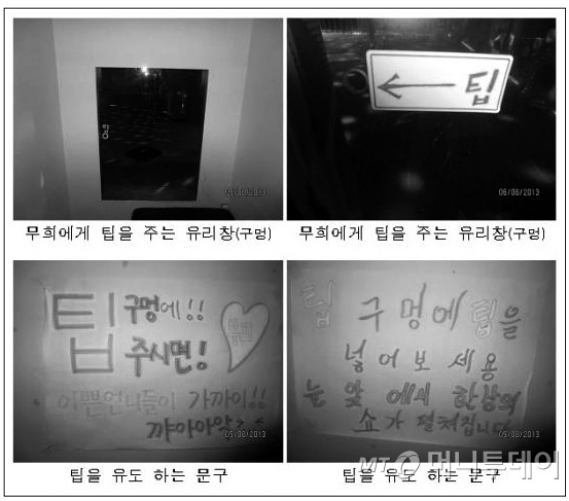
『스트립쇼 보면서 성매매 하더니…
경찰, 신변종 업소 업주 등 무더기 검거
머니투데이 오○○ 기자 |입력 : 2013.11.12 12:00|조회 : 7677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교행위와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중앙 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 유리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보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 오모씨(32)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스트립쇼를 벌인 박모씨(22·여)와 성매매를 한 김모씨(31·여), 성매매남 오모씨(45), 종업원 홍모씨(26) 등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업주 오씨 등은 지난 8월5일·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홍대입구)에 있는 건물을 빌려 중앙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에서 스트립쇼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3월1일부터 8월초까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1층을 빌려 출입문 오른쪽에 중앙 무대를 만들고, 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성매수남들은 밀실마다 사각형 모양의 창과 쇠창살이 설치된 중앙무대에서 이뤄지는 스트립쇼(15분가량)를 관람하면서 밀실에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다. 홍대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는 건물 4층 전체를 임차해 업소 중앙에 작은 무대 1개와 큰 무대 1개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작은 무대를 기준으로 'ㄱ'자 형태로 밀실 5개를 만들고 큰 무대를 기준으로 'ㄴ'자 형태로 밀실 6개를 제작해 잠실동 소재 업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소 광고는 인터넷 등에 업소명을 A·A-1, B·B-1 등으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왔고, 종업원 및 스트립걸, 성매매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소개를 받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스트립쇼를 보면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1회당 8만9,000원을 받았고, 성매매(유사성교행위)만 할 경우에는 1회당 3만 9000원을 받았다"며 "스트립쇼는 무대에서 스트립걸이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 손님이 밀실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연상케하는 춤을 추면서 성매수남들을 흥분시켰다"고 설명했다. 성매수남이 스트립쇼를 보고 흥분할 즈음 성매매 여성이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희에게 팁을 주는 유리창(구멍) 무희에게 팁을 주는 유리창(구멍)

팁을 유도 하는 문구 팁을 유도 하는 문구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업주 오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밖에 문지기(일명 '문방')를 세워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속시 성매매 수익금이 압수당할 것을 우려, 5명 정도의 손님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이 모아지면 업소 옆에 주차된 차량에 영업장부와 성매매 수익금을 옮겨 보관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2014년 1월까지 풍속업소(대형 성매매업소,사행성 게임장 등)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속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및 합동 단속반 편성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1208404332393&outlink=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교행위와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핍쇼(PeepShow)와 성매매가 결합한 형태의 변태 성매매업소의 현장을 적발한 경찰발표를 인용하면서 무대 구성 및 형태, 이용 가격, 업소 홍보 기법, 여종업원 조달방법, 고객의 성매수까지의 과정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팁구멍에 팁주시면 이쁜 언니들이 가까이 갸아아악", "팁 구멍에 팀을 넣어보세용. 눈앞에서 환상의 쇼가 펼쳐집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관음증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투명창과 팁구멍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의 세태를 고발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는 기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술과정에서 단속후 대처요령 등 자세한 범죄수법과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소개한 것은 청소년층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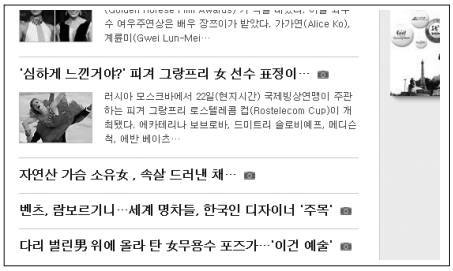
▲ 2013-3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심하게 느낀거야? 피겨 그랑프리 女 선수 표정이…」,「피겨 그랑프리 '심하게 느끼고 있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1. 25 11:28 캡처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2일(현지시간) 국제빙상연맹이 주관하는 피겨 그랑프리 로스텔레콤 컵(Rostelecom Cup)이 개최됐다. 에카테리나 보브로바, 드미트리 솔로비예프, 메디슨 척, 에반 베이츠, 카롤리나 코스트너, 율리아 리프니츠카야 등 참가 선수들이 연기하고 있다. [AP=뉴시스, 로이터=뉴스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피겨 그랑프리 혼성경기 사진을 보도하면서 여자선수의 표정연기에 대해 마치 성적인 암시를 주는 듯한 「심하게 느낀거야? 피겨 그랑프리 女 선수 표정이…」, 「피겨 그랑프리 '심하게 느끼고 있어…」라고 제목을 달았다. 남자 선수의 어깨 위에 몸을 의지한 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남자선수의 한 손만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놓고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자세라고 본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인스닷컴은 위 기사 보도시점인 11월 25일, 이외에도 연극 리허설 장면 사진에 대해 「다리 벌린 男배우 위에 올라탄 女무용수 포즈가 … '이건 예술'」,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자연산 가슴 소유女, 속살 드러낸 채 …」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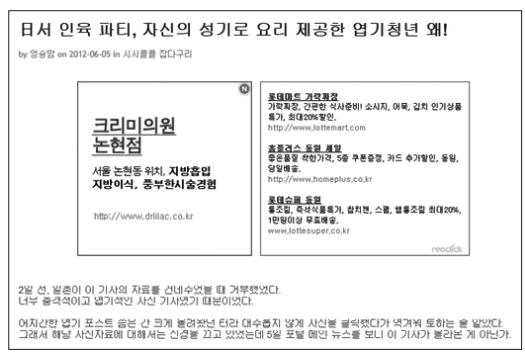
▲ 2013-3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2년 6월 5일자 「日서 인육 파티, 자신의 성기로 요리 제공한 엽기청년 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동아닷컴 자사 사이트 저널로그에 게재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日서 인육 파티, 자신의 성기로 요리 제공한 엽기청년 왜!

by 영승맘 on 2012-06-05 in 시시콜콜 잡다구리

크리미의원
논현점
서울 논현동 위치, 지방흡입
지방이식, 풍부한시술경험
http://www.drlilac.co.kr

롯데마트 가락꽈장
가락꽈장, 간편한 식사준비! 소시지, 어묵, 김치 인기상품 특가, 최대20%할인.
http://www.lottemart.com

홈플러스 동원 세일
중은물질 착한가격, 5종 쿠폰증정, 카드 추가할인, 동원, 당일배송.
http://www.homeplus.co.kr

롯데슈퍼 동원
홈조림, 즉석식품특가, 참치캔, 스팸, 햄홈조림 최대20%, 1만원이상 무료배송.
www.lottesuper.co.kr
reoclick

2일 전, 일흔이 이 기사의 자료를 건네수었을 때 거부했었다.
너무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진 기사였기 때문이었다.

어지간한 엽기 포스트 읍는 간 크게 불려왔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사신을 클릭했다가 엑겨워 토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해당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5일 포털 메인 뉴스를 보니 이 기사가 불라온 게 아닌가.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의 한 요리사가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제거한 후 이를 요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요리를 위해 수술로 절제한 성기를 담은 비닐의 피묻은 장면과 성기를 자르는 모습 등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충격적인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 비록 위 기사가 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1년여 전 게재됐다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12월 8일자「미모의 북한여성, 해외식당서 한국인만 보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모의 북한여성, 해외 식당서 한국인만 보면 … 경악**

기사입력 2013.12.08 09:45:40 | 최종수정 2013.12.08 09:47:41

실각한 장성택은 외화벌이 등 주로 경제 부문을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으로 소환한 장성택의 측근들도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외화벌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8일 MBN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110여 개 북한식당은 '통치자금 마련'과 '대남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음식점은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수익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금고인 39호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 식당운영을 통해 북한은 연간 10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것은 리용하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고, 측근 비리, 주로 금전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화 횡령 등을 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교관들에게도 다량의 현금이나 마약을 운반하게 하며 외화벌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외화벌이 할당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망명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5062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각한 장성택과 관련,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운영 중인 110여개 북한식당에서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

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국내와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 음식점은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북한 외교관이 외화벌이 할당량에 압박을 받아 한국에 망명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제목은 「미모의 북한여성, 해외식당서 한국인만 보면…」이라고 달았다.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

북한식당에 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근거로 '미모의 북한여성'이니, '한국인만 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강조한 측면이 있어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회부한다.

▲ 2014-3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스포츠조선 2014년 1월 13일자 「'간통적발' 추정 동영상 인터넷 유출 논란」 제목의 기사, 스포츠월드 1월 14일자 「'간통현장 급습' 영상 유포 논란, 알몸 여성 머리채 잡고…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조선)=『'간통적발' 추정 동영상 인터넷 유출 논란

기사입력 | 2014-01-13 11:26:12

경찰과 함께 간통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유명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에는 경찰이 한 모텔방에 들이닥치자 침대 위 남녀가 당황해 하는 모습과 함께 경찰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침대에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흔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침대 위 알몸 상태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연합뉴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401130000000000007278&ServiceDate=20140113〉

(스포츠월드)=『'간통현장 급습' 영상 유포 논란, 알몸 여성 머리채 잡고… '충격'

입력 2014.01.14 16:01:12, 수정 2014.01.14 16:01:12

간통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해 적발한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에는 경찰이 한 모텔 방에 들이닥치자 침대 위 남녀가 당황해 하는 모습과 함께 경찰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침대에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흔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침대 위 알몸 상태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의 유포에 대해 "당사자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40114023528&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찰이 간통현장을 적발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해당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 누구인지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불륜 현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자세가 아니다. 해당 남성은 얼굴 형체는 물론 머리스타일까지 드러나 그를 아는 주변 인물에게 신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어 보인다.

특히 스포츠월드는 첫 보도시에는 상반신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하루가 지난 뒤 같은 내용에 두 문장을 추가하고 노출 수위가 한층 높은 사진으로 교체했다.

위 보도를 처음 내보낸 YTN을 비롯해 대다수의 매체들은 해당 동영상 및 캡처사진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해 선정성을 완화했다.

따라서 적나라한 불륜 현장을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대중의 일반적 정서에 반하거니와 어린이를 포함해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로서 삼가야 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4년 1월 17일자「빌딩 전망대서 누드 촬영 … 12억 원 소송당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빌딩 전망대서 누드 촬영 … 12억 원 소송당해**

입력 2014-01-17 14:35:28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누드 사진을 찍은 유명사진 작가가 수십억 대 고소를 당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유주가 전망대에서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를 촬영한 사진작가 알렌 헨슨에 대해 110만 달러(약 12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빌딩 측은 "작가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일에 대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누드 촬영은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세계 관광명소인 빌딩의 명성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헨슨은 "상업적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Allen Henson/Splash News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3/all/20140117/6023255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찍은 유명사진 작가가 건물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사진 2장을 게재하였다.

게재한 사진은 눈발이 날리는 순간에 촬영돼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가슴은 물론 유두까지 드러나 있다. 반면 같은 사진을 보도한 국내외 대부분 매체들은 가슴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선정성을 다소 완화하였다.

유두가 보이는 여성의 상반신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정서를 해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4년 1월 21일자(캡처시각) 「女 "사장이 사무실서 옷 벗기더니…" 경악」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21 15:38 캡처〉

『[金과장 & 李대리] "상사보다 더 무서워" … 담배 끊게 만든 冬장군, 사무실 온도 18℃ … 키보드 치는 손가락이 '오덜덜'

입력 2014-01-20 20:55:46 수정 2014-01-21 10:58:47 지면정보 2014-01-21 A27면

김과장&이대리가 혹독한 겨울 나는 법

대기업 A사에 근무하는 강 대리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워온 '골초'. 그동안 수십 차례나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매번 니코틴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그런 그가 금연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이었다. 바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혹독한 추위다.

강 대리가 일하는 A사는 작년 11월 임직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 흡연장을 폐쇄했다. 애연가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였다. 회사 안에 부품공장이 자리잡고 있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공장을 가로질러 15분가량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왕복 30분은 족히 걸린다. 시간 낭비와 상사들의 눈총도 그렇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추위였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담배를 피우러 30분을 오가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굴복해 결국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20일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 겨울이 지나 가려면 아직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김과장 이대리들은 춥고 긴 겨울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추위도 서러운데 내복 검사하겠다는 사장님

사장님이 내일부터 내복검사 하신대요

경기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 B사의 김 대리(28·여)는 얼마 전 사장님의 '폭탄 발언'에 격분했다. 그의 사무실은 북향인 데다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 겨울철에는 한낮에도 찬 기운이 스며든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김 대리는 올겨울 들어 전기난로를 장만해 켜놓고 일을 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사장은 갑자기 '전기료 폭탄'을 맞자 특단의 조치로 '불시 검문'을 하기 시작했다. 1주일에 3번가량 불시에 사무실을 둘러보며 난로를 켠 직원을 체크하는 것이다. 처음엔 "날도 별로 안 추운데 왜 난로를 켜고 있느냐"고 부드럽게 한 마디 던지더니 한 달이 지나자 "개별적으로 난로를 켜지 말고 두세 사람꼴로 하나씩만 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김 대리는 이런 지시를 어겼다가 사장에게 걸렸다. 다른 직원들이 작은 난로를 발 밑에 켜놓은 것과 달리 김 대리의 난로는 유난히 커서 눈에 잘 띈 것이 화근이었다. "김 대리,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어? 사무실 사람들 다 추운데 혼자만 난로를 켜면 되겠어." 사장의 목소리엔 짜증과 불만이 가득 묻어났다.

김 대리가 "원래 추위를 잘 탄다"고 대꾸하자 성질 급한 사장은 '폭발'해 버렸다. "그럼 내복을 입고 다니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내복 검사를 하겠어요." 순간 사무실 분위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듯 싸늘해졌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직원의 내복을 검사하겠다는 것은 언어 성희롱 아닌가요. 회사를 때려치우더라도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아야 하는 신세가 억울하네요."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는 조모씨에게 가장 싫은 계절은 단연 겨울이다. 몸에 붙은 지방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깡마른 체구 탓인지 겨울만 되면 맥을 못춘다. 이런 그에게 한겨울의 추운 사무실은 견디기 힘든 공간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겨울철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맞춰야 한다. 말이 18도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에서 중앙난방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벌어진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체감온도를 실제 온도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뜨린다.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굳어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 때문에 개별 난로를 장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세금을 아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몸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심해

혹한의 겨울철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대기업 C사에 근무하는 신 부장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겨울이 춥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20여년 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다음달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별'로 통하는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 왔지만 최근 4년 동안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미끄러진 탓에 결국 팀장의 명예퇴직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같은 업종의 중견기업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곳을 정하지는 못했다. 몇 차례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다. 통상 연말 임원 승진 인사가 끝나고 연초가 되면 이직하려는 고참 부장급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헤드헌팅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니 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진다.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두 아들은 돈이 가장 많이 든다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다. "얼마 전 면접을 마친 뒤 지하철역으로 걸어 가는데 유독 춥더군요. 자식들 생각에 먹고 살 걱정까지 들어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친 없는 겨울 … 견디기 힘든 고통

크리스마스때 이별통보 … 옆구리 시린 게 더 추워

대기업 유통 계열사에 다니는 문 대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년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여자친구는 옆팀 직원으로 둘은 사내에 소문이 난 커플이었던 만큼 충격은 더 컸다.

최근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데이트 약속을 여러 번 깬 데다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한 게 문제였다. 문 대리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애원했지만 한 번 등을 돌린 여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친과 데이트를 즐겼겠지만 이별 이후 문 대리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별의 아픔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운 날씨에 꼭 껴안고 다니는 커플들의 애정행각을 보면 온몸이 더욱 으스스해지기 때문이다. "여친 없이 겨울을 나는 게 이렇게 혹독하고 추운지 몰랐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기분마저 우울해지네요."

강○○/전○○/황○○ 기자 kkm1026@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059521&nv=3&nv=3&nv=3&nv=3&nv=3&nv=3&nv=3&nv=3&nv=3&nv=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는 기획물의 하나로, 회사측의 난방비 절감 방침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본 사장이 추우면 내복을 입으라면서 앞으로 내복검사를 하겠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제목은 「女 "사장이 사무실서 옷 벗기더니…" 경악」이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내용을 과장·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 마치 여직원에게 성추행이라도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답변의 기회

▲ 2013-11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세계일보 2013년 6월 6일자 1면「공연시설 빌릴 때 공무원들 '갑질'/K-팝의 나라 창피한 현실/티켓 상납 공공연한 비밀/상납한 표는 암표상들에/찍히면 불이익 … 항의 못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K-팝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한 공연업계가 정작 안방에서는 갑을 관계로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K-팝 지원에 나섰다고 자랑하지만 연예·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으로 쓰이는 체육시설을 빌릴 때마다 철저하게 을이 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횡포를 토로했다.

5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이용한 A기획사는 시설 측에 200여장의 티켓을 상납했다. 10만원씩 계산하면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기획사 관계자는 "티켓 상납은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쁜 관행"이라며 "이러한 상납 없이는 대관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K-팝 가수의 공연을 개최했던 B기획사 역시 "그간 체육시설 측에 매번 수백 장의 티켓을 바쳤다. '떡값' 명목으로 거둬간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느냐"며 "상납한 표로 인해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기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릴 때면 시설 인근에 서성대는 암표 상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티켓 요구, 술 접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티켓 상납과

접대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해묵은 폐단이지만 그간 공연업계는 대관 거부 등 불이익을 걱정하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정부 기관이라는 점과 모호하게 규정된 대관 기준을, 시설 측이 갑 행세를 하는 근거로 꼽았다. 공연 기획사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민간 극장과 달리 체육시설 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들에게 밉보이면 대관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다. C기획사 관계자는 "K-팝 공연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시설 대관을 둘러싼 공연 시스템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모호한 대관 기준도 기획사가 눈치를 보는 주요한 이유다. 각 체육시설은 대관 규약에 주요 공연 요소를 '사전협의로 결정한다'고 적어놓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들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사전협의 요소는 관리자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친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용인해주면서 나쁜 관행이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체육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시설의 관리감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했다"며 하급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예기획사들이 유명 가수 공연 등을 위해 공공시설인 체육경기장을 빌리려면 공연티켓을 상납하고 접대를 해야 하는 등 공직 신분인 시설 관계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내용의 고발성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이용한 A기획사는 경기장측에 모두 2000만 원 가량인 공연티켓 200여장을 상납했다는 것이다. 비리의 주체를 올림픽체조경기장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사는 『"티켓 상납은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쁜 관

행”』『“이러한 상납 없이는 대관이 어렵다”』는 A기획사 관계자의 말도 함께 전했다.

사안 자체가 자칫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지목된 올림픽체조경기장 측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올 법한데도 세계일보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사는 단지 『“올림픽공원 내 시설의 관리감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08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全羅日報 2013년 8월 1일자 9면「야영장 운영 위해 천혜 자연환경 훼손」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 후세에 계승시켜야할 임무를 가진 국립공원측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소장 정석원)로 야영장의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천혜의 구천동계곡을 중장비로 파헤쳐 제방을 쌓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자연 파괴행위 모두가 야영

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할수있다는 국립공원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은 후대에 길이 보전해야할 소중한 국가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잘못 해석한 듯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명목아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마구잡이식 야영장 건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3년 7월 말 현재 전국 국립공원야영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특히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지리산국립공원 야영장의 두 배가 넘는 1천 7백동 규모의 야영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국 국립공원 전체야영장규모보다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역의 상인들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데 최근에는 무주군이 국립공원 상가 내 차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지역상권들은 다 죽이고 국립공원측의 편리만 제공했다고 구천동관광특구 내 일부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야영장의 경우 약 30여 만 평의 면적에 119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2012년 의 경우 공단전체 야영객 수의 22.8% 인 10만 명이 넘는 야영객이 덕유산야영장을 찾아 규모대비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덕유산국립공원측은 무주태권도원 개원에 따른 국내외 탐방객 증가와 레저트렌드가 야영문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덕유산에 풀옵션 캠핑장 조성과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FICC) 국제기준 야영장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영객을 위해 계곡을 파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할 국립공원이 수익사업에 눈이 멀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http://jeollailbo.com/news/search_view.php?code4=LO0111000&An=406749&page=1&mode=detail&search_text〉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가 야영장 운영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성 기사다.

기사는 덕유산 국립공원측이 야영장의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천혜의 구천동계곡을 중장비로 파헤쳐 제방을 쌓았고, 이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 물 확보 위해 불법 제방 설치」로 달았다.

따라서 기사 내용대로 제방 설치가 불법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덕유산 국립공원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소개야 하는데도 全羅日報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사는 단지 『덕유산에 풀옵션 캠핑장 조성과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FICC) 국제기준 야영장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덕유산 국립공원측의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3년 10월 18일자 2면 「지난달 외환위기 급변 상황에 직원 비상대기 시켜놓고…/휴양 즐긴 김중수 한은 총재/직무유기·자질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기간 중 강원도의 최고급 콘도에서 휴식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과 함께 확인한 결과 김 총재는 미 FOMC 회의 기간인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강원도 홍천의 D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재가 이 리조트에 머문 기간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이었으며 숙박 비용은 김 총재 사비로 결제했다. D리조트는 회원가가 1억6,000만원에 달하고 객실 크기가 40~90평에 이르는 VVIP급 리조트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김 총재가 FOMC 회의가 열리는 비상상황에 리조트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 콘도에서 김 총재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모든 경제부처와 한은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은 등은 비상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외환시장 급변에 대비했으며 한은의 경우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언제든 출근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당시 미 FOMC는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회의 직전까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환정책의 사령관 격인 한은 총재가 FOMC 회의 기간에 강원도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긴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낙연 의원은 "대외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대기 시켜놓고 리조트로 휴양을 간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에서는 김 총재의 직원 비하발언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은에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감독 기능은 실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한은에 감독기능을 주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자신의 인사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은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총재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스승으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 정갑영 연세대 총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인준 서울대 교수, 김대식 전 한은 금통위원과 전직 고위 경제관료 2~3명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0/e201310180020557006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 때문에 한은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 중이던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계속됐던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동안 강원도 홍천의 D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추석연휴 기간이었지만 모든 경제부처와 한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 중이었고, 특히 한은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언제라도 출근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기사는 전했다.

사안 자체가 김 총재의 사생활과 직결됐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서울경제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위 기사가 보도된 후 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서울과 근거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위 기사처럼 비난의 당사자에게 해명과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신문 발행인 최 재 왕

〈주 문〉

대구신문 2014년 3월 10일자 9면「사욕에 휘둘리는 '해양레저도시의 꿈'/'주먹구구' 울진 요트사업/도·군협회 후포 출신 선후배로 얽혀 사조직화/전무이사 K씨, 위탁운영 요트학교 관리직 겸해/매월 350만원씩 월급 챙겨 … 소중한 혈세 낭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 가운데 울진군이 육성 중인 요트관련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개선이 시급하다.

군은 바다를 낀 지역 특색을 살려 후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 마리나항을 울진의 랜드마크로 조성키로 하고 핵심사업으로 요트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라나항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군은 이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

업이 일부 요트협회 임원에게 휘둘려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요트관련 사업의 이같은 부실한 운영은 경북요트협회와 울진군요트협회, 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울진군요트학교 등 사조직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요트협회 전 임원 등에 따르면 경북요트협회 전무이사인 K씨는 울진군요트협회장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위탁운영 중인 군요트학교 관리직을 겸하며 경북요트협회와 울진 요트협회를 주무르고 있다.

울진군요트학교는 울진군이 요트의 후진을 양성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요트체험 등의 사업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설립했다.

군은 요트학교에 2012년 보조금 2억원, 2013년 보조금 2억5천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이 돈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 등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특히 K 경북요트협회 전무이사는 이 요트학교에서 매월 350만원이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은 "왜 군 예산을 이렇게 쓰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요트학교는 하절기인 6~8월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동절기에는 거의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 전무는 관리직이란 명목아래 매월 월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비정상적인 경북요트협회, 울진군요트협회 등에 대한 검·경찰조사와 외부의 집중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울진군요트협회와 경북요트협회의 임원들이 후포 출신의 선후배들로 얽혀있어 외부 감시가 없는 한 요트협회와 학교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후포주민 B씨는 "이런 현상으로 경북요트협회·울진군요트협회 등은 사조직이란 비난을 받고 군에서는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덩달아 호응을 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누군가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후포주민 A씨는 "경북요트협회, 군과 울진군요트협회 등이 요트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 조성과 함께 후진 육성차원에서 후포중·고학교 요트선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하는데 정작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tk0104&mode=view&num=12407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경북요트협회 전무와 울진요트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K씨가 울진군에서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울진요트학교의 관리직을 맡아 35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요트 후진 육성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요트학교에 울진군은 2012년 2억 원, 지난 해 2억5천만 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 등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제목으로 표현한 것처럼 「소중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사는 비난의 당사자인 K씨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직책과 직명을 명기했기 때문에 K씨의 신분은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K씨로서는 명예 훼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대구신문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

▲ 2013-11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3년 5월 29일자 17면 「직장인들의 아침 … 하우 '두유〈豆乳〉' 두?/두유,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식 인기」 기사와 제목, 5월 30일자 17면 「도심에선 젠틀맨, 오프로드에선 마초맨/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제너레이션 GLK」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2건의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직장인들의 아침…〉=『(전략)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소비자가 그동안 우유 대신 혹은 무의식적으로 마셨던 두유를 완벽한 아침식사 대용식의 대표 메뉴로 만들어냈다.

대표 제품은 바로 '참두'와 '참두 뉴트리빈'이다. 두 제품은 각각 고소한 '오리지널', 달콤하고 부드러운 '스위트', 고소하고 영양이 듬뿍 담긴 '검은콩' 등 3종씩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리뉴얼된 '참두'는 고객이 원하는 영양과 맛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고의 두유 전문가들을 투입해 개발에만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공을 들였다.(중략)

'참두 뉴트리빈'은 본격적인 아침식사대용 두유다. 비타민B2, 콩 단백질, 칼슘 등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보충해주는 영양 두유로, 한 병(200ml)안에 바나나 4개 분량의 비타민B2, 계란 1개 분량의 콩 단백질, 우유 1잔 분의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B2는 세계적인 비타민 원료 공급회사인 DSM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퀄리비(Quali-B) 브랜드의 프랑스산 비타민B2가 사용됐다. 200ml 용기를 사용해 냉·온장 보관도 용이하다.(후략)』

〈도심에선 젠틀맨〉=『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이하 뉴 GLK)의 가장 큰 매력은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차별화된 스타일과 아웃도어 활동 시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탄탄한 주행 성능,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충실한 안전장치들에 있다. SUV의 최고 가치가 공간 활용성 보다는 안전과 탄탄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에 있다고 생각하는 예비 오너들이라면 뉴 GLK는 훌륭한 해답이다.

벤츠 뉴 GLK에는 벤츠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장착돼 있다. 앞, 뒤 차축의 구동력을 45:55로 배분해 일반 도로에서는 4륜 구동의 장점(2륜 구동보다 접지력이 높다)인 뛰어난 직진 안정성을 발휘한다.

또한 오프로드에서는 높은 트랙션 컨트롤 능력을 발휘한다. 노면 상황에 비해 구동력이 지나치게 커 타이어의 회전력이 노면과의 마찰력을 넘어서면 타이어가 공회전하여 휠 스핀을 일으킨다. 4MATIC 시스템의 구동력 배분은 바로 이런 순간 휠스핀을 억제해 오프로드에서 주행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4MATIC과 공조하는 4ETS(4Electronic Traction System) 및 다이내믹 핸들링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의 공회전과 미끄러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어한다. 그 결과 핸들링과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다. 도심에서는 깔끔한 신사 같은 안정된 주행 성능을, 오프로드에서는 마초같은 파워를 발휘하는 셈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롯데칠성음료에서 생산하는 두유 제품인 '참두'와 '참두 뉴트리빈', 수입차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를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每日新聞 2013년 9월 24일자 15면「시승기 렉서스 IS250/"독일차 돌풍 잠재워라" 일본의 승부수」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10월 8일자 B5면「프리미엄 SUV 선두주자 BMW 뉴X5/오프로드선 질주본능 … 도심선 세련된 드라이빙」기사와 제목, 일간스포츠 10월 16일자 18면「토요타 4세대 아발론 시승기/부드러운 가속 … 차체는 더 강해졌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每日新聞은 자동차 기획 면을 통해 최근 렉서스가 출시한 '렉서스 IS250'의 시승기를 싣고 이 신형모델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독일차 돌풍 잠재워라" 일본의 승부수」라는 큰 제목 아래「조용/시속 160km에서도 정숙」「강력/최첨단 패널 접착 '단단'」「날렵/민첩한 핸들링 응답성」「편안/넓어진 실내 낮아진 시트」등 광고문구와 같은 작은 제목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자동차 내외부의 컬러 사진을 크게 실었다.

매일경제와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들은 새로 시장에 나온 외제차들을 소개하는 '시승기'다.

기사들은 그러나 차량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제목과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들은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신문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 47193&yy=2013〉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50959〉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66923〉

▲ 2014-106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5.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2일자 22~23면 「기획/상반기 눈여겨 볼 분양단지」 면 기사 8건, 서울경제 1월 23일자 「2014 분양, 이곳을 주목하라」 별지 섹션, 국민일보 2월 4일자 「쿠키건강+」 별지 섹션의 기사 20건, 머니투데이 2월 8일자 18면(「Fashion」)의 기사 3건, 한국일보 2월 13일자 20면(「졸업입학선물 특집」)의 기사 7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주제로 별지 섹션 혹은 기획면을 제작하면서 기업과 제품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개면에 걸쳐 8곳의 분양단지를 홍보했고, 서울경제는 8개면을 할애한 별지 섹션을 통해 장점 위주로 분양중인 아파트를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건강을 주제로 한 별지 섹션에서 타이레놀, 화이투벤 등의 약품과 영양제, 잇몸치약 등을 제품 사진과 함께 홍보했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일보는 패션과 졸업입학선물을 주제로 특정업체의 가방, 시계, 신발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위 기사들은 객관적인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돕는 홍보성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2014-1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4년 1월 10일자 17면 「필스너우르켈 … 윌리안브로이바이젠 … 기린이치방 …/수입맥주시장 낯선 자의 역습」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힘입어 수입 맥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시장에서 기존 강자를 제치고 신흥 강자가 부상하는 등 춘추전국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9일 A마트가 지난해 수입 맥주별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코 맥주인 '필스너우르켈'이 아사히 수퍼 드라이·기네스 드래프트 등 전통적인 브랜드를 제치고 매출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필스너우르켈'은 1982년 체코 필젠에서 처음 만들어진 라거 맥주로 2012년만 해도 수입 맥주 순위에 들지 못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맛이 깊고 풍부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상위 그룹에 진입했다. 일본산 맥주인 기린이치방 맥주와 산토리 맥주도 2012년에는 톱10 순위권 밖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7위, 9위로 매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B마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벨기에 맥주회사인 브로이마튼사가 만든 에일맥주 '윌리안브로이바이젠'이 지난해 판매 순위 4위를 차지했다. 기린이치방과 아사히 블랙 등도 각각 3위, 5위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판매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맥주가 신흥강자로 떠오르면서 국내 수입맥주 시장 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보다 새로운 맛의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맥주 시장이 급성장하는 사이 입맛이 한층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이 기존의 식상한 수입맥주가 아닌 맛도 품질도 우수하고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마트의 경우 국내 판매 1위를 자랑하던 아사히 수퍼드라이에 소비자 수요가 뜸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2012년 매출 1위였던 아사히 수퍼드라이 500*ml* 캔 제품은 판매가 줄면서 아예 톱10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2012년 2위였던 350*ml* 캔도 6위로 떨어지는 등 아사히 수퍼드라이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B마트도 2012년 판매순위 3~8위 내에 이름을 올렸던 호가든·밀러·버드와이저·기네스 등이 신생 맥주 브랜드에 밀려 매출 상위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국산 맥주 판매가 9.2%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반면 수입 맥주는 29.8%로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며 "수입 맥주 매출 증대의 원동력은 체코·벨기에 등 희귀 맥주나 네덜란드 하이네켄 등 유럽산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 수입 맥주들의 강세에는 소비자들의 입맛 다양화 외에 가격이나 경품 제공 등 수입업체의 프로모션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촉행사가 제한된 국산 맥주와 달리 새로 물 건너온 해외 맥주의 경우 최대 25%의 할인율 적용은 물론 다양한 경품 제공도 가능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1/e2014010917015612021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힘입어 수입맥주시장에 신흥 강자가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특정 마트가 제공한 지난 한 해 수입맥주의 판매순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기사는 판매된 순위에 따라 해당 맥주를 실명으로 소개했고, 편집자는 판매순위표를 만들어 1위부터 10위까지 수입맥주 순위를 매겼다. 특히 '필스너우르켈'은 신규 입점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는 하나 판매 순위에서는 5위에 불과한데도 유일하게 사진까지 게재했다.

기사는 판매정보를 제공한 마트를 'A마트'로 익명 처리했다.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 즉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A마트의 판매순위는 국내 수입맥주 판매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사에서 소개된 B마트의 판매순위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A마트의 판매순위는 일반화할 수 없는 불충분한 정보다.

수입맥주시장에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정도라면 몰라도 이처럼 익명의 특정 마트에서의 브랜드별 판매순위까지 밝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원칙에 어긋나며, 자칫 특정 수입맥주 브랜드의 홍보를 돕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은『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자는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1.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 2013-11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3년 4월 9일자 9면 「'유림 수장' 성균관장 국고 보조금 빼돌려/검찰, 최근덕씨 구속영장 청구/매년 수천만원 운영자금도 걷어/아파트 구입 등 25억원 사적 유용」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유림의 수장 격인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8일 부하직원에게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최 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관장은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수억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균관이 운영하는 영주선비문화수련원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 관장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성균관 부관장 장모씨는 "최 관장이 부관장 11명에게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걷어온 성균관 자금 2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최 관장을 횡령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

은 지난 2월 말 1년간의 수사 내용을 안동지청으로 넘겼다.

최 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받는 관행은 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9일 오전 최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최 관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29대 성균관장에 재추대돼 2004년부터 3대째 관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성균관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포함한 국내 7대 종단 대표에 속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근덕 성균관장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8억원씩 성균관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관장은 또 부관장 10여명으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수억 원과 성균관 공금 5,000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 부관장 장모 씨는 이에 앞서 『"최 관장이 부관장 11명에게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걷어온 성균관 자금 2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최 관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최 관장은 이에 대해 『"운영자금을 받는 관행은 있지만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위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도 서울신문은 최 관장의 혐의가 확인된 사실인양 기사 큰 제목을 「'유림 수장' 성균관장 국고 보조금 빼돌려」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작은 제목 「매년 수천만원 운영자금도 걷어」와 「아파트 구입 등 25억 사적 유용」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 관장을 검찰에 고발한 성균관 부관장 장모 씨의 주장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최 관장은 결국 구속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기사 제목은 섣부른 예단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①항(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자살보도의 신중

▲ 2013-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3년 5월 27일자 1면 「손호영은 왜? 자살을 시도했나…/죽음으로 자존심 지키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손호영은 왜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손호영이 여자 친구의 자살에 이어 본인도 자살 시도를 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과 과연 앞으로 재기가 가능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호영은 지난 23일 여자친구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24일 새벽 여자친구가 자살했던 카니발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서울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를 받아왔다. 다행히 손호영은 의식을 거의 회복해 26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손호영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봐 온 측근들의 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다.

측근들도 그의 자살 시도 소식에 놀라기는 마찬가지.

손호영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한 관계자는 "평소 여린 성격이 아닌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여자친구의 자살 소식이 감당이 안됐던 것 같다"며 "특히 여자친구의 죽음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에 무척 억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호영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매니저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따로 만나서 잡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헤어질 당시의 서운함을 털어놓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자살한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평상시 손호영의 스타일을 아는 이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별 뒤 자살했다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에 여러 루머가 더해지며 손호영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가수 손호영이 자살한 여자 친구의 장례식 다음 날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위 적시 1면 큰 제목 표현처럼 「죽음으로 자존심 지키려…!?」 자살하려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손호영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교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려다 차량 내부에 불이 옮겨 붙어 미수에 그쳤다.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여자친구의 죽음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에 무척 억울했을 것"』 등 『손호영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한 관계자』의 발언 내용과 더불어 『여자친구가 이별 뒤 자살했다는 감당하기

힘든 소식에 여러 루머가 더해지며 손호영으로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바탕으로 자살시도 이유를 자존심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화한 것이다. 그리고 큰 제목은 인용부호도 없이 「손호영은 왜? 자살을 시도했나…/죽음으로 자존심 지키려…!?」라고 달았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윤리강령'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정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光州日報 2013년 6월 5일자 6면 「위기의 가정 외로운 소녀들… 친구와 함께 꽃다운 삶 내던져/광주 북구 아파트서 여고생 2명 동반 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부하겠다며 학원 보내달라는데 돈이 없어 보낼 생각을 못했네요.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덜 미안했을텐데…. 그 어린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3일 밤 광주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와 함께 뛰어내려 숨진 광주의 한 여고생 K양(16)과 함께 살던 할머니(68)는 갑작스런 손녀의 죽음을 전해듣고 말문을 잇지 못했다. 살림에 쪼들려 학원에 보내달라는 손녀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한 특성화고 1년 K·C(16)·J(15)양 등 3명은 지난 3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곳에서 놀던 중 K·C양이 갑자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다.

이들은 두 달 전부터 "함께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J양은 1시간 이상 두 친구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J양은 안되겠다 싶어 아파트 경비실로 뛰어 내려갔다. J양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K·C양은 19층 옥상 철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그리곤 뛰어내렸다. 결손가정 자녀인 이들 학생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가정환경이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K양은 부모와 헤어져 할머니와 살고 있으며 C양은 부모와 떨어져 친척과 살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손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K양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43.0m^2(약 13평) 남짓한 작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는 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평소 어린 손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한 일을 되뇌이며 울먹였다.

K양과 K양의 오빠(18)를 어릴 적부터 돌봐온 할머니는 손녀가 바라는 것을 다해주고 싶었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한 달 평균 수입 80만 원으로는 세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손녀가 최근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못 들은 척 할 수 밖에 없었다.

올 해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보내지 못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는데, 못 들어줬다.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원이라도 없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라며 "손녀 친구들에게 들은 얘긴데, (손녀가)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던 모양이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라며 흐느꼈다.

북부경찰은 K·C양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주변인 등 진술로 미뤄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여고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밤 9시50분 아파트 19층 옥상으로 올라갔다』『옥상 철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손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그리곤 뛰어내렸다』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투신자살 사고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 19층 아파트 사진을 게재했다. 이처럼 자살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한 보도태도다.

기사는 이어 사실상 자살 동기를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결손가정의 자녀로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도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추정을 전한 것은 자살이 대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큰 제목의 '꽃다운 삶 내던져'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

위 기사는 통단 제목의 사회면 톱기사이다. 또 관련 기사를 포함해 기사 지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 관련 기사에서 제목을 통단으로 뽑고 사진까지 곁들여 크게 다룬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충 견

〈주 문〉

경남신문 2013년 7월 15일자 5면 「창원과학고 학생 학교서 투신 숨져」, 「창원과학고 학생 투신 '충격'/"전문상담교사도 없다니…" 비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남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창원과학고 학생…〉= 『창원과학고 학생이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11일 밤 10시 17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과학고 자연과학동에서 창문을 통해 A(16·2학년) 군이 투신했다. 교사가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5시간 만인 12일 오전 3시 7분께 치료 도중 A 군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군이 뛰어내린 시점과 장소, 소지품 위치 등을 근거로 A 군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쉬는 시간에 학습실이 있는 본관동에서 자연과학동으로 이동,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과학고 2학년 학생들은 11 · 12일 조기 졸업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기간이었다. 학교는 11일 시험은 이미 마쳤으며 12일 시험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과학고는 2년만 다닌 뒤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학교도 지난해 2학년 학생 9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89명이 조기 졸업시험에 응시, 56명이 조기 졸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0일 부모가 학교에 다녀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교우관계는 원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부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A 군 학우의 진술에 따라 유족과 교사, 학우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79528〉

〈"전문상담교사도 없다니…"〉= 『창원과학고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미연에 대처해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 2011년 개교 당시, 개교를 준비했던 교장과 교감이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첫 교원 인사를 단행하면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학부모가 학교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충격= 3학년 학부모 A 씨는 "개교 이후 올해 1~3학년 학생들이 모두 구성돼 각자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 충격이다"며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수군대는 등 학교 분위기가 엉망이다"고 전했다.

학부모 B 씨는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개교한 이후 뜻하지 않게 많은 학내 문제와 투명하지 못한 학사처리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부모-교원 간 불신이 증폭돼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던 터에 학생 자살 사건이 생겨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당장 2학기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부재= 이 학교에는 조기졸업, 상급학교 진학 등 성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학생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이번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내 초·중·고교에는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상담해주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하지만 교원정원을 배정하는 정부에서 예

산난 등을 이유로 상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지 못해 도내 50% 이상의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다.

특히 이 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보건교사도 없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이들 상담·보건교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교풍 세우는 노력 필요= 지난 2011년 개교한 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전국적인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한다는 큰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개교 준비를 위해 2010년 9월에 D 교장과 E 교감을 개교 준비요원으로 발령내고 파견교사도 배치하는 등 노력했다.

하지만 개교 당시인 2011년 2월 중순에 단행한 인사에서는 개교를 준비해온 D 교장과 E 교감이 발령받지 못한 채 다른 교장과 교감이 발령났으며 파견교사도 상당수 교체됐다. 이후 학부모들은 '잘못된 인사'로 인해 교풍이 잘 세워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발했고 급기야 도교육청 항의방문과 1인시위까지 벌였다.

도교육청은 1년 이후 순차적으로 교장, 교감을 바꾸겠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을 무마시켰고, 이에 개교 준비를 해 왔던 D 교장과 E 교감을 뒤늦게 인사발령내는 등 뒷북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의 첫 단추를 잘 꿰야 교풍이 세워지고 반듯한 교풍 속에서 국가를 이끌 유능한 인재가 탄생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원과 학부모 간 불신의 벽을 걷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교풍을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7952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은 창원과학고 2학년 학생이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을 스트레이트 기사와 박스 기사로 나눠 상세히 다루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쉬는 시간에 학습실이 있는 본관동에서 자연과학동으로 이동,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살과정과 방법을 묘사했다. 또 『조기 졸업시험 기간에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과학고는 2년만 다닌 뒤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학교도 지난해 2학년 학생 9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89명이 조기 졸업시험에 응시, 56명이 조기 졸업했다』며 마치 조기졸업시험이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스 기사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충격과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학교 개교 당시의 문제점과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가 자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을 구태여 나열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한편, 경남신문은 이번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고교의 이름을 명시했다. 해당 고교는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특수목적 고교다. 경남신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창원과학고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모방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또, 편집자는 위 기사를 사회면 절반 정도의 크기로 돋보이게 편집했다.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이거나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자살 보도의 파급효과를 염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신문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3.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7일자 8면 「40대 수산업자, 6세 장애아들 데리고 자살」 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10월 9일자 1면 「병들고… 외롭고… 자식에 짐 되기 싫어서/스스로 목숨 끊는 어르신」 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10월 9일자 5면 「완주서 남성 3명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수산업에 종사하던 40대 가장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부자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증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데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업 불황이 겹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6일 오후 7시 5분께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45) 씨와 지적장애 1급인 A 씨의 아들(6)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사고 직전 옥상으로 올라가는 A 씨 부자를 확인했다. CCTV 화면 속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옥상에서는 A 씨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빈 소주병과 아들의 신발이 발견됐다.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부인(39)과 딸(11), 숨진 아들과 함께 살았다. 사고 당

시 부인은 친척 집을 방문한 딸을 데리러 외출 중이었다. 집에 돌아온 모녀는 유서를 발견하고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것은 이미 A 씨 부자가 숨진 뒤였다.

유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 한 장짜리였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들은 내가 데려간다. 딸과 함께 우리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A 씨가 최근 사업이 힘들어지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선박과 어선이 부두에 들어오면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소매업자와 연결해 주거나 되파는 일을 해왔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A 씨는 성실하게 일했고, 부부 금슬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진로 등을 두고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산업 불황이 겹치면서 A 씨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됐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졌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 공포 이후 수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A 씨의 시름이 더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 자녀를 번듯하게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A 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짧은 유서였지만 A 씨가 겪었을 어려움이 절절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아파트 옥상에서 아들과 함께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영남일보)=『최근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들어 대구시 동구지역에서만 모두 3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지저동의 한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A씨(75)가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평소 A씨가 죽겠다는 말을 자주했으며, 며칠 전부터 영정사진을 찾았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에는 동구 방촌동의 요양원에서 치매로 투병중이던 B씨(79)가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동구 검사동의 한 주택에서도 C씨(74)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가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 노인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다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 등 사회적 요인이 더해지면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노인 자살자수는 매년 4천명을 웃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 자살자 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2만439명에 달하며, 지난해 노인 자살자 수는 4천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후략)』

(전북도민일보)=『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오후 1시21분께 완주군 동상면 한 숙박업소에서 이모씨(25), 정모씨(24), 윤모씨(24) 등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 펜션 관계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완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전주에서 렌터카를 빌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이곳 숙박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은 사각모형의 큰 가방에 연탄 5개와 번개탄 4개를 담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목숨을 끊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개탄의 냄새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 현관문 틈새를 녹색테이프로 봉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사망한 현장에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프라이팬 위에 이들이 태운 번개탄 잿가루가 전소돼 밥상위에 남아 있었다.

8일 오후 찾은 펜션의 현장 바닥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과 맥주캔, 음료수와 이들이 피우다 남긴 담배 2갑 등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서와 핸드폰 등은 현장에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몰고 온 렌터카에 우산 한 개와 이들 중 한 명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 한 개가 전부였다.

8일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의문의 자살자 3명이 발견,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수사대도 현장검증을 통해 이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외부의 침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소지품 중에 이씨와 장씨의 신분증을 발견한 경찰은 신원파악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20대 남성들 모두가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가 퇴실시간이 지나 청소를 하기 위해 이들이 묵은 숙소를 찾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숙소를 찾으니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사람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남성들은 숙박업소 관계자들과 주변 투숙객들로부터 의심을 살 만한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숙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파악과 동시에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이곳까지 온 배경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가장이 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톱기사다.

기사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40대 가장 A씨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와 진로 등을 두고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수산업 불황이 겹치면서 A 씨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됐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졌다』『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 공포 이후 수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A 씨의 시름이 더 깊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었다.

이처럼 기사는 고통스러운 가정사와 경제적 어려움이 이 자살 사건의 원인인 냥 보도했다. 이는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칫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판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인 자살 사건을 사례와 통계를 곁들여 1면 주요기사로 다뤘다.

기사는『한 공중화장실 바닥에서 A씨(75)가 독극물을 마시고』『요양원에서 치매로 투병 중이던 B씨(79)가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한 주택에서도 C씨(74)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병들고… 외롭고… 자식에 짐 되기 싫어서/스스로 목숨 끊는 어르신」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기사는 자살방법과 장소를 상술하고, 편집자는 자살동기를 제목으로 뽑아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3명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사건을 다룬 사회면 톱기사다.

기사는『한 숙박업소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져 있는 것을』『현장에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프라이팬 위에 이들이 태운 번개탄 잿가루가 전소돼 밥상위에 남아 있었다』『번개탄의 냄새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 현관문 틈새를 녹색테이프로 봉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프라이팬 위에 석쇠가 놓여있는 현장사진을 게재해 사실상 번개탄을 태우는 방법마저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자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한 보도태도다.

이들 기사들은 사회면 톱기사, 혹은 1면 주요기사로 크게 다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東亞日報 2013년 11월 19일자 A12면「25년간 돌본 식물인간 아들 껴안고…/50대 아버지 집에 불질러 동반자살/집 근처 車에 '아들아 미안하다' 유서」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11월 19일자 9면「식물인간 된 아들 25년간 돌보다…/타는 가슴 못이겨 하얀재가 된 아버지/집에 불질러 아들과 동반자살/"미안" 유서 … 껴안은 채 발견」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東亞日報,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째 돌보던 아

버지가 스스로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아버지는 물론 힘겹게 투병해 오던 아들마저 서러운 삶을 마쳤다.

18일 오전 1시 38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김모 씨(55)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김 씨와 둘째 아들(31)이 숨졌다. 불은 가옥 전체를 태운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김 씨 부자의 시신은 둘째 아들 방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은 모습이었다. 집 근처에 세워둔 김 씨의 차 안에서는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 글이 발견됐다. 이 집에 함께 살던 김 씨의 아내는 전날 밤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200여 m 떨어진 큰아들 집에 머물러 화를 면했다.

김 씨의 둘째 아들은 6세 때인 1988년경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중략)

김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아들을 극진히 돌봤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내와 말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방화한 흔적이 없는 데다 전소된 가옥 및 시신 상태 등으로 미루어 김 씨가 우발적으로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http://news.donga.com/3/all/20131119/58986327/1〉

(서울신문)=『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했다.

18일 오전 1시 3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김모(55)씨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김씨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둘째 아들(31)이 숨졌고 120m^2 규모의 슬레이트 단층 집과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탔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김씨 부자의 시신은 식물인간 상태인 둘째 아들이 누워 있던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불을 지르기 전 집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와이퍼에 '아들아 미안해, 미안'이라는 유서를 끼워 놓았다.

김씨는 전날 낮 아내와 둘째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가 집에서 200m쯤 떨어진 큰아들네 아파트로 건너가 잠을 자는 사이 불을 질러 둘째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집의 불행은 둘째 아들이 여섯 살 때 닥쳤다. 집 앞에서 놀던 둘째 아들이 차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냈다.

눈동자만 껌벅일 뿐 말을 못해 취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들만 둘을 둔 김씨는 가스 배달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25년간 둘째 아들을 한결같이 보살폈다. 주민 안모(60)씨는 "김씨 부부는 어렵게 살면서도 작은아들에게 극진했다"면서 "김씨가 이웃들과 어울릴 때도 작은아들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속이 문드러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고 아버지와 아들은 꼭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불을 끈 뒤 '시신은 한 구'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둘째 아들의 몸은 매우 작았다"고 전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900900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와 서울신문의 위 기사들은 6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보살펴 온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께 숨진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한 사건 기사다.

그런데 두 신문들은 본문과 제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숨졌으므로 '자살'이 아닌 '타살'에 가깝다.

위 기사와 제목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22일자 2면 「과외·알바 뛰며 삶의 무게 이기려 했지만…」 제목의 기사, 光州日報 10월 24일자 6면 「동네병원 얼마나 어렵길래… 40대 병원장 안타까운 죽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가정 형편 탓에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대학생이 도시철도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이 학생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1일 오후 8시 46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 승강장에서 A(23) 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신평→노포행) 앞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전동차가 진입할 때 갑자기 선로로 뛰어든 점으로 미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한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A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부모는 거리 가게로 생계를 이어가 A 씨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여건은 못 됐던 것이다. 게다가 A 씨 밑으로 어린 동생 3명이나 있었다.

이 때문에 A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로 1학년을 마쳤고 군 제대 후 2~3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마련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업 후에는 과외를 했다. 그는 최소 3개의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주말에도 밤늦게 일을 했다. 경찰은 A 씨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과 행사에 참여하거나 술자리 등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 대학 친구들도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집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가족의 충격은 더 크다. A 씨 어머니는 착하고 힘이 됐던 큰아들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어머니는 "집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친구들은 연수나 학원 수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러지 못해 혼자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며 "자유를 만끽해야 할 대학생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그동안 꿋꿋하게 살아왔던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후략)』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0220000161〉

(光州日報)=『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영압박에 시달려오던 40대 병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지역 병의원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의사들이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경찰은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3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병원 주사실에서 병원장 A(44)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사무장(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주사실에서 반듯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신 옆에선 수면유도제(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빈 용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사무장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 병원을 개원하면서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뒤 매년 수천 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환자가 줄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 달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석 달간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3만원을 광산구청에 내지 못해 건물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채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직원 등의 진술로 미뤄 A씨가 경영난을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병의원이 경영난을 겪는 것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환자유치를 위한 고가의료장비의 과잉투자 등으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총 893곳이었으며 압류액은 41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87곳보다 94곳 감소한 것이지만 급여 압류액은 지난해 4028억원에서 110억원 가량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선 동네 의원 10곳이 개원하면 8~9곳이 폐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광주지역 개원 대비 폐업 의원의 비율은 ▲2010년 82.4%(57곳 개원 47곳 폐업) ▲2011년 112%(58곳 개원 65곳 폐업) ▲지난해 79.2%(53곳 개원 42곳 폐업)로 매년 줄지 않는 상황이며 2011년의 경우 폐업한 의원 수가 개원한 의원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2540400509155006〉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의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3)가 철도 승강장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의 선로에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A씨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를 자살동기로 보도했다.

기사는『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대티역 승강장에서』『진입하던 전동차(신평→노포행) 앞으로 떨어져』라며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방법을 기술했다. 이러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기사는 또『(어려운 가정형편으로) A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야 했다, 수업 후에는 최소 3개의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주말에도 밤늦게 일을 했다.』며『경찰은 일단 A씨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기술은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편집자는「과외·알바 뛰며 삶의 무게 이기려 했지만…」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자칫 자살을 미화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쳐지게 할 수도 있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동네병원 40대 원장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한 병원 주사실에서』『시신 옆에선 수면유도제(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빈 용기가』라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기사는 또『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빚을 진 뒤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왔다』『한 달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도 석 달간 내지 못해』『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53만원을 광산구청에 내지 못해 건물이 압류되는 등 경영 압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또 국감자료를 인용해 동네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상세히 기술해 사망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했음을 사실상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또 편집자는「동네병원 얼마나 어렵길래… 40대 병원장 안타까운 죽음」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들 기사들은 2면과 사회면 톱기사로 크게 다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불어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5.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문〉

연합뉴스 2013년 11월 18일 16:01 송고「'아들아 미안하다' … 식물인간 아들과 동반자살(종합2보)」기사의 제목, 경향신문 11월 19일자 12면「식물인간 아들 25년 돌보던 아버지 '마지막 선택'/처지 비관 … 불질러 동반자살」기사의 제목, 매일경제 11월 19일자 A30면「"아들아 미안하다…"/식물인간 아들 25년 돌본 아버지 동반자살」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11월 19일자 14면「투병 아들과 동반 자살한 아버지」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1월 19일자 9면「"아들아 미안하다"… 25년간 병수발한 아버지 동반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연합뉴스,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6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보살펴 온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함께 숨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동반 자살'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숨진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숨졌으므로 '자살'이 아닌 '타살'로 보는 것이 옳다.

위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또 위 기사들의 본문에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위 제목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03507〉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82234585&code=940202〉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148356〉

〈중앙일보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1/19/12761913.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1900333521950.htm〉

▲ 2013-1314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 문〉

光州日報 2013년 11월 25일자 6면 「가난·질병이 부른 '목포의 눈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오후 3시40분께 목포시 죽교동 김모(82)씨의 집에서 김씨와 부인 신모(69)씨가 숨져 있는 것을 김장 김치를 전해 주러 들렀던 사위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비닐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 집안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지난 20일 자필로 쓴 편지지 1장 분량의 유서, 영정 사진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몇 달 몸 상태를 지켜본 후 생사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고통받는 집사람과 함께 떠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부는 평소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아온 부인 신씨 간병을 도맡아 했다. 김씨는 신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신씨 병간호에 극진한 정성을 쏟았다고 주민과 유족들은 전했다.

이웃 주민은 "부부 금슬이 좋았다"면서 "몸이 성치 않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순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며 안쓰러워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고 발생 이틀 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53052005116510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남편 김모 씨(82)가 유서를 남기고, 아내 신모 씨(69)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내용의 김 씨 유서를 공개했다. 또 '부인 신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아왔고, 남편 김 씨는 신 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뇌출혈로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내용의 가정사를 보도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이 자살 사건의 원인인 양 보도한 것은 자살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는 또 『방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고 방문은 연기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비닐과 테이프로 덮여 있었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 편집자는 '영정사진 이미지 컷'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유서내용을 실었다. 그리고 큰 제목을 「가난·질병이 부른 '목포의 눈물'」로, 작은 제목을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로 각각 뽑았다.

이러한 보도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위 기사는 사회면 톱기사다. 자살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자살 사건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1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연합뉴스 2013년 11월 29일 17:11 송고「인천 강화도서 30대 동양증권 직원 또 자살(종합)」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11월 30일자 8면「동양증권 직원, 인천서 또 자살/"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니" 유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 소속 직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9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의 한 논길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동양증권 금융센터 인천본부 소속 직원 A(38)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의 부인(35)은 전날 오후 8시께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빈 소주병 2개, 수면제 통, 타고 남은 번개탄 등이 있었다.

또 어머니, 부인, 자녀 3명에게 남기는 A4용지 7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이번에는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못난 아들이 더는 속 썩이기 싫어 못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점심을 하며 얼굴 봬 다행입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라고 썼다.

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다. 혹시 채무 독촉이 오더

라도 모르는 척해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A씨는 전날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가 퇴근 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수면제 100알을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상사가 A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자살 시도를 알렸다.

경찰은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3차례 고소를 당해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9/0200000000AKR20131129158200065.HTML?from=search〉

(경향신문)=『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 동양증권 소속 직원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9일 "오늘 오전 10시45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논길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양증권 금융센터 인천본부 소속 ㄱ차장(38)이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며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차량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소주 2병, 맥주 1명, 수면제 병이 함께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ㄱ씨의 아내(35)가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차량 안에서는 ㄱ씨가 어머니와 아내, 자녀 2명, 여동생 등에게 남긴 A4용지 유서 7장이 발견됐다. ㄱ씨는 유서에서 "이번에는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내와 애들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 잘 키워달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은 최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ㄱ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세 차례 고소를 당했다는 회사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후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92127315&code=9402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두 건의 기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증권 직원의 자살을 다룬 사건기사다.

그런데 기사들은『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빈 소주병 2개, 수면제 통, 타고 남은 번개탄 등이 있었다.』『부인에게는 "내년에 결혼 10주년인데 너만 사랑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니 나 없어도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글을 남겼다.』 등 자살 방법과 유서 내용 등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감상적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보도는 자칫 자살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비쳐지게 할 수 있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위 기사와 제목은『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1월 7일자 A10면「'슈퍼주니어' 이특 悲報/아버지·조부모

숨진채 발견 … 동반 자살 추정」 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 1월 7일자 11면 「사업실패·우울증 … 치매부모 오랜 병수발에 심신지친 듯」 등 기사 3건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인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31·본명 박정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할머니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특의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와 동작소방서는 6일 오전 9시 30분쯤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특의 아버지인 박모(60)씨와 할아버지(86), 할머니 천모(80)씨가 숨져있는 것을 박씨의 조카가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특의 할아버지·할머니는 이불이 목까지 덮인 채 안방에 나란히 누워있었고, 아버지 박씨는 같은 방 장롱 손잡이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이특은 비보를 전해듣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7/2014010700155.html〉

(헤럴드경제)=

사업실패·우울증…치매부모 오랜 병수발에 심신지친 듯

이특 소속사 최초 '교통사고' 발표 혼돈…자극적 보도 자제 요청

"이런 일 잊어선 안되는데…"
우리시대의 슬픈 자화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7000212&md=20140110004624_AT〉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31·본명 박정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다룬 기사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본문과 제목에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특의 조부모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해 숨졌으므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는 「이특 부친, 왜 부모와 함께 떠났나」 문패 아래 3꼭지의 기사와 함께 장례식장 사진까지 게재했다. 기사는 치매부모 병수발 등 사건의 원인 분석과 함께 이특 소속사의 '교통사고' 발표에 따른 혼선, 친족 살인사건의 실태와 대책 등을 다양하게 조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기 연예인 가족이어서 화제성이 있다 해도 신문 1개 면을 거의 대부분 할애해 보도한 것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지나친 편집이다.

위 기사들은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 문〉

경인일보 2014년 1월 17일자 23면「"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기사와 제목, 전북도민일보 2월 7일자 5면「"살기 힘들다" … 지병 노모와 동반자살/50대 男 신병비관 목숨 끊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인일보)=『"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화성시 우정읍의 한 아파트. 김모(66)씨가 베란다 가스배관에 노끈을 걸어둔 채 아들(32)을 불렀다.

아들을 바라보던 김씨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여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했다. 2012년 4월, 아내를 잃은 김씨는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특히, 지적장애 2급의 아들과 함께 하는 삶은 그에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나마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지하던 차남마저 장가를 들면서 의지할 곳은 더 없어졌다.

끝내 김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 아들은 '예', '아니오'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을 뿐 자살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다.

독한 마음을 먹은 김씨는 아들이 올라선 의자를 치워버렸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마침 집에 온 차남에게 발견돼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늘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아들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본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국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윤강열)는 아버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인 장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사별하고 정년퇴직 뒤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902〉

(전북도민일보)=『노모를 모시던 아들이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가정불화 문제로 이혼하고 홀어머니와 살던 50대 남성 A(56)씨는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을 앓고 있는 70대, 노모를 모시는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와 친형에게 전화 한 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후 10시 27분께 전주시 덕진구 주거지, 한 아파트에서 친형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이 할만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형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A씨는"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전화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동생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다급한 형은 곧장 이곳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이 모자는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다.

현장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음독한 것으로 보이는 농약이 발견됐다.

또 평범한 회사원인 A씨가 남긴 A4 용지, 한 장 분량 유서에는 "이혼을 하고 삶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살기가 힘들다" 등의 삶을 비관하는 유서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책상 위에 올려진 화덕에서는 타다만 연탄이 발견됐다. 혈중 가스검시관 검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소견이 나온 것에 비춰볼 때 연탄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9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아들을 목매달아 숨지게 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의 판결기사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기사 중간에 『끝내 김 씨가 선택한 것은 동반자살』이라고 썼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 「"지적장애 아들이 불쌍해서"/동반자살 기도 아버지 '집유'」라고 달았는데, 여기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지적장애 아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김 씨는 가스배관에 연결된 노끈을 아들의 목에 맨 뒤 발 밑 의자를 치워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기사는 이혼한 50대 남성이 70대 노모와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삶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겨 놓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 기사다.

전북도민일보는 제목과 기사 도입부에 숨진 모자가 동반자살을 했다고 표현했지만 사건 정황 상 지병을 앓던 노모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여기서도 '동반자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위 기사와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세계일보 2014년 1월 22일자 11면「"엄마의 무지를 용서해" … 죽음 부른 아토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증상을 이해하지 못한 30대 주부가 아토피 증상이 악화한 딸(8)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에서 A(33)씨와 딸 B(8)양이 숨져 있는 것을 시어머니(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은 방에서 목을 맨 채였고, B양은 거실 바닥에 숨져 있었다. 검안 결과 B양의 목에서 손으로 조른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딸이 5개월 전부터 증상이 악화하자 몹시 괴로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3살 될 무렵부터 몸에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자 지난 5년간 유명하다는 병원은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호전되지 않았다.(후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1/20140121006183.html?OutUrl=naver〉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30대 주부가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돼 고생하는 딸(8)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딸의 목에서 손으로 조른 흔적이 발견돼 주부가 딸을 살해한 뒤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도 작은 제목에 「30대 엄마 자책 끝 동반자살」이라는 기사 본문과 다른 내용을 넣었다. 경찰 조사가 맞는다면 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해 숨졌으므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부산일보 2014년 2월 21일자 6면 「"아빠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졸랐어요"/17세 딸, 빚 고민 아빠와 함께 목매」 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2월 22일자 8면 「"빚 때문에 …" 목맨 아빠/그 길 따라간 모범생 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빚에 시달리던 한부모 가정의 부녀가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딸은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20일 오전 6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야산 벚나무에 아버지 A(46)씨와 딸 B(17)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부녀는 한 나무에 나란히 목을 매었고, 발견 시각보다 3~4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여년 전부터 부인과 떨어져 노모와 B 양과 함께 수영구 모 빌라에서 지내왔다.

또 식료품 유통사업을 해 왔으나 최근 사업 부진 등으로 1억원 가량의 부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A 씨는 빚으로 괴로워했으며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종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에게 크게 의존했던 B 양은 틈틈이 힘들어하던 아버지 A 씨를 다독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집을 나간 이들 부녀가 돌아오지 않자 노모는 17일 경찰에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과 수색 등을 벌였지만 4일 만에 부녀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가출 뒤 부녀의 행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일 부녀가 발견된 당시 A 씨와 B 양의 주머니에선 찢어진 노트에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적었고, 딸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라 등의 글을 남겼다.

특히 B 양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성실했던 B 양이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할 당시 학업 성적 못지않게 빠른 취업과 장학금 등 가정 여건을 고려

했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경찰은 부녀가 함께 목을 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 탓에 가족 역시 심한 충격을 받았다. 현재 노모는 부녀의 소식을 듣고 오열해 경찰 조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부녀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건이어서 형사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딸의 유서대로 아버지를 욕할 순 없지만 딸이 입학하는 걸 보면 다시 힘을 얻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녀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 씨와 B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실종기간 행적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신문)=『빚에 시달리던 부녀가 함께 목숨을 끊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딸은 "아버지를 욕하지 마세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송정동 한 야산에서 아버지 김모(46)씨와 딸 김모(17)양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 20일 오전 6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녀는 한 나무에 나란히 목을 맸고, 발견 시각보다 3~4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부인과 떨어져 노모와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김씨는 통닭집에 생닭을 납품하는 식품 유통사업을 해 왔으나 최근 사업 부진 등으로 1억원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빚이 많아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노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수색 등을 벌여 3일 만에 부녀의 싸늘한 주검을 발견했다. 가출 뒤 부녀의 행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와 딸의 호주머니에선 찢어진 노트에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아버지는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적었고, 딸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양은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할 당시 학업 성적 못지않게 빠른 취업과 장학금 등 가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녀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실종 기간 행적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녀가 함께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건"이라며 "딸의 유서대로 아버지를 욕할 순 없지만 딸이 입학하는 걸 보면 다시 힘을 얻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2200801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와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빚에 시달리던 46세 가장이 고교 진학을 앞둔 17세 딸과 함께 부산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고도 감성적으로 보도했다.

두 신문은 특히 딸에게 초점을 맞춰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아버지를 욕하지 마라. 모두 행복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유서 내용을 전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부산의 모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는 사연도 함께 소개했다.

부산일보는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에게 크게 의존했던 B 양은 틈틈이 힘들어하던 아버지 A 씨를 다독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딸의 마음씨를 애틋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두 신문은 제목도 딸에게 맞춰 「"아빠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겠다고 졸랐어요"/17세 딸, 빚 고민 아빠와 함께 목매」(부산일보), 「"빚 때문에…" 목맨 아빠/그 길 따라간 모범생 딸」(서울신문)이라고 각각 달았다. 하지만 이들 제목들은 아버지를 각별히 따랐던 모범생 딸이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나뭇가지에 올가미가 있는 동아줄이 달려있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삽화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위 기사와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2.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중부일보 2014년 3월 4일자 23면 「방안서 번개탄 피운 40대 아이 둘 데리고 동반자살」 기사의 제목, 전북도민일보 3월 6일자 5면 「익산서 또 일가족 동반자살 시도」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3월 13일자 10면 「또 … 자폐증 아들과 父母 동반자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 전북도민일보,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부일보)= 『40대 가장이 딸,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오전 8시 38분께 광주시 초월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모(44)씨가 딸(13·지체장애 2급), 아들(4)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 A(37)씨가 발견, 경찰

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딸, 아들과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숨져 있었다.

작은 방 안쪽에는 유리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흔적이 있었으며 옆에는 불에 탄 번개탄 5개와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큰아들(18·고3)과 딸을 낳은 이씨는 사별한 뒤 2010년 현부인 A씨와 재혼했다.

지난해 9월 집을 나간 A씨는 유일한 친아들인 막내를 보러 가끔 집에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도 아들을 보러 집에 들렀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아들 시신을 거실 소파에 옮겨놓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5시 23분께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과 화덕을 구입했다.

큰아들은 경찰에서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술을 마시는 아버지를 목격한 뒤 오늘 아침 일찍 등교해 무슨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번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843〉

(전북도민일보)=『최근 지속되는 불경기에 생활고에 허덕이며 신병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아파트에서 A(35·여)씨가 자녀와 함께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남편이 며칠 전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결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가족들이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아들(7)은 결국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A씨와 딸(2)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안방에는 생활 비관으로 자살한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한 유서에서는 '더이상 못 살겠다. 화장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과 함께 A씨가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고 남편과 이혼 절차에 들어가며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신병비관에 의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후략)』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323〉

(문화일보)=『지난 2월 26일 생활고에 시달린 서울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데 이어 이번에 광주에서 아들의 지병을 고민해온 일가족이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5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방 안에서 기모(36) 씨와 부인 장모(34) 씨, 아들(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기 씨의 처제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방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연탄 화덕이 있었으며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들의 발달장애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 씨의 처제는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언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 씨 부부가 아들의 신병을 비관해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후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301071043175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40대 가장이 지체장애 2급인 13세 딸,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는 유서는 없었지만 불에 탄 번개탄 5개와 더불어 문틈을 테이프로 막은 흔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경찰은 자살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방안서 번개탄 피운 40대 아이 둘 데리고 동반자살」이라고 달았다.

사건 정황상 숨진 딸과 아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피워 놓은 번개탄 연기에 질식해 숨졌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타살'로 보는 것이 옳다.

전북도민일보도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비관해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7살 아들,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사건에서도 자살 기도는 두 자녀의 뜻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반자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아들(5)의 발달장애 때문에 고민하던 30대 부부가 번개탄을 피워 아들과 함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건 기사다.

기사는 경찰 조사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를 근거로 이들 일가족이 동반자살했다고 표현하고 제목에도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었지만 사건 정황 상 아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사와 제목의 '동반자살'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위 기사의 제목들은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 2013-10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3년 3월 27일자 5면 「경찰 '성접대 의혹' 수사 본격 진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이 건설업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사업가 A(52)씨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추적하는 등 영상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A씨의 주변인물이 다른 형태의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을 보관 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누구인지 등을 추적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출한 A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영상 원본을 찾아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를 윤씨가 쥐고 있어 조기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제출한 동영상의 이미지와 성문 분석을 통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결과를 25일 내놨다.(후략)/정○○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3월 26일 22:56 송고한 「경찰, '성접대 의혹' 동영상 촬영자·여성 추적(종합2보)」 제목의 기사의 14개 단락 중 4개 단락을 뺀 나머지 10개 단락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북도민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경북도민일보는 같은 위반행위로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각각 '주의' 조처를 받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4월 15일자 29면 「9K 3안타 … 괴물 '원맨쇼'」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헤럴드경제 4월 15일자 30면 「"베이브 류스! … 류현진 실력으로 모든걸 보여주다」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9K 3안타…괴물 '원맨쇼'

류현진 에리조나전 6이닝 3실점
MLB 2승·통산 100승 위업 달성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 기록

류현진(26·LA 다저스)이 투타에서 펄펄 날아오며 한·국 통산 100승을 기록했다.

특히 현진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폭발적인 지원 속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로써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인 피츠버그전에서 8⅓이닝 동안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6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쳐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첫 승리투수 기록을 세웠다.

이어 5일 경기에서 2승 사냥에 나선 류현진은 6이닝 동안 6피안타 1볼넷 9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냈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 속에 전날 경기패를 선물하는 데 성공했다. 4회 선취득점에 성공한 다저스는 5회에 6회 각각 2점, 3점을 뽑아내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마무 질러진 이 경기에 4회 2사 1,2루에서는 헨리 류현진의 승리를 지켜주기에는 충분했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경기 첫타석이었던 5회 1사 후 좌익 앞으로 안타를 때려내며 팀의 점타점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류현진은 이날 경기 승리로 한국 투대에서 기록한 98승에 머무게하고, 2승을 합해 박찬호에 이어 통산 3번째로 100승을 달성했다.

장우영 스타엔 기자

'베이브 류스'!…류현진 실력으로 모든걸 보여주다

'담배눈란에서 베이브 류스(Babe Ruth)까지'

LA다저스의 류현진(26·LA다저스)이 시즌을 바라보는 미국 언론의 시선이 확 바뀌었다. 불과 두 달 만에 의심의 눈초리는 '놀라움'의 눈길로 변했다. 류현진 자신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만들어놓은 변화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서 시즌 2승과 함께 한미 개인통산 100승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통고의 피칭이었다. 타자에게도 3타수 3안타로 뭐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을 메이저리그의 진실된인 홀린다지 베이브 루스에 빗대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다저스 승리를 이끌었다'고 했다. 스포츠전문 사이트 SB네이션도 '마운드의 타석

담배눈란 등 부정적 시선
시즌후 스스로 가치 입증

모두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뷔 후 최다인 5개 탈삼진을 3번씩 등판 만에 기록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류현진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청천일색이었던 건 아니다. 두 달 전만 해도 류현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했다. 지난 2월14일 스프링캠프 첫날 장거리 러닝에서 뒤처지자 현지 언론은 배다닌 '담배 눈란'으로 류현진을 비난했다. MLB닷컴의 벤 카너 기자는 '류현진의 헬비지를 걸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라'면 이런 담배를 끊는 것도 생각해보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범경기에 들어가서도 평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ESPN은 3월7일 캘리포니아 시범경기에서 3이닝 2실점 후 '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패스트볼이 평균 이하였고 커브와 슬라이더도 평범했다. 직구는 좋았을 것이다'고 혹평했다.

조형자 기자/anju815@

〈헤럴드경제 4월 15일자 30면〉

파이낸셜뉴스와 헤럴드경제는 각각 AP 보도사진을 연합뉴스가 받아 제공한 위 적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13년 5월 9일자 5면 「日 수로부 1879년 측량보고서에 독도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영토 일부로 인식해 왔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은 일본 해군 수로부가 1879년에 오키(隱岐) 열도 측량 당시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19세기 일본 공식 자료를 8일 최초로 공개했다.

1879년에 일본 해군 수로부의 기모쓰키 가네유키가 제작한 '오키열도 측량보고서'인 '은기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에는 오키 열도의 위치를 북위 35도 57분~36도 18분, 동경 132도~133도 23분으로 기록했다. 오키 열도의 범주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오키 섬은 일본 시마네 반도의 북쪽 약 50㎞에 있는 섬으로, 독도에서 약 157㎞ 떨어져 있다.

한철호 대외교류연구원 원장(역사교육과 교수)은 "오키 열도를 포함한 북서안 측량의 책임자인 기모쓰키가 독도를 오키의 소도에 속하는 179개 섬 중의 하나로 인식했다면 그 북쪽 한계에 있었던 독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북위와 동경의 위치도 넓혀 잡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략)/김○○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8일 10:36 송고한 「日 수로부 1879년 측량보고서에 독도는 없었다」 제목의 기사에서 마지막 2개 문장을 제외하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회의에서 부산일보가 단독 보도한 「잠적 보름 만에 입 연 김무성」 제목의 기사를 표절해 '경고' 조처를 받았다. 또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통신기사 표절로 '주의' 조처를 받은 데 이어 제864차 회의에선 같은 위반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 2013-113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술

2.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3.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주 문〉

무등일보 2013년 5월 10일자 3면 「'민주화를 부각시키면 안된다'는 사고」 제목의 기사, 경남매일 5월 14일자 1면 「STX 자금지원 난항」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5월 16일자 3면 「"5·18, 세계와 나누고 싶은 역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무등일보, 경남매일, 全光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등일보)=『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불과 열흘 앞두고도 공식 식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5월 3단체(5·18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와 5·18 기념재단, 정치권 등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박승춘 보훈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보훈처장의 그릇된 역사의식 때문에 5·18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보훈처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장 출신으로 비자금 조성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심의위원회 위원인 보훈처 소속 국장에게 "고인은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안씨에 대해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박 처장이 2011년 12월 광복회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며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후략) 주○○ 기자』

(경남매일)=『㈜STX에 대한 자율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STX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중 자율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온 곳이 한 곳도 없다.

당초 산은은 채권은행들에게 오는 14일 회사채 2천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것

을 감안해 가능하면 지난 10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달 STX조선해양 긴급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도 산은의 요청보다 며칠 늦게 확답이 오지 않았느냐"며 "오늘 중에는 동의서가 모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STX 지원에 관한 채권은행들의 속마음은 복잡해 보인다. 한 채권은행 부행장은 "상반 논리가 있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험을 감안하고 높은 이자를 받던 회사채 투자자들을 은행들이 보호해주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는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을까 봐 결제를 다 해주는 쪽으로 정한 것 같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 교란행위"라며 "개인이 판단해서 투자했다면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후략) 〈황○○ 기자〉』

(全光日報)=『"5·18은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역사)입니다"

게타츄 엔기다(Getachew Engida·에티오피아)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엔기다 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5·18민주묘지에 오게 된 것은 좋은 경험이며 참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유네스코의 주요 가입국 중 하나다. 세계인권도시포럼과 5·18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한국의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후략) 〈곽○○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9일 11:20 송고한 「〈보훈처장의 역사의식은? … 5·18 앞두고 비판 쏟아져」, 경남매일 기사는 연합뉴스가 5월 13일 17:47 송고한 「㈜STX 자율협약 난항… "회사채 대신 상환은 시장교란"(종합)」, 全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5월 15일 13:11 송고한 「유네스코 사무부총장 "5·18 세계와 나누고 싶은 역사"」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등일보, 경남매일은 신문윤리위원회 제861차, 제862차, 제863차 회의에서, 全光日報는 제862차, 제863차, 제864차 회의에서 각각 통신 기사를 표절한 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 2013-117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2.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3.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술

〈주 문〉

新亞日報 2013년 6월 3일자 1면 「국정 키워드 '창조경제·국민안전'」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6월 11일자 2면 「전남도, '사파리 아일랜드' 감사원 감사 반박」 제목의 기사, 무등일보 6월 13일자 4면 「"北수석대표로 김양건 요구 문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新亞日報, 全光日報,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新亞日報)=『오는 4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오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국민안전' 두 가지다.

이것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최대 동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헌신하신 위대한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며 "제2의 경제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개발과 성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를 낳았다.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후략) 장○○기자』

(全光日報)=『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사파리 아일랜드'(옛 동물의 섬)와 관련, 감사원이 막대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전남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타당성 판단을 위한 경제성 분석이 당초 부정적으로 도출됐으나, 7

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도의 입김이 반영되면서 최종보고서는 “사업성이 양호하다”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당초 0.73에서 1.08로, 순현재가치(NPV·평생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는 284억 원 적자에서 116억 원 흑자로, 내부수익률은 4.5%에서 6.4%로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소위 ‘갑’의 위치인 도가 용역업체에 “민간측면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후략) 〈문○○ 기자〉』

(무등일보)=『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북측 수석대표로 나오라고 했던 우리 정부의 요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사로 활동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 이재정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김양건 부장은 장관급이 아니라 우리 정부(체제)에 구태여 대입시킨다면 부총리급”이라면서 “(남북 직제의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고문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통일선전부장은 국정원장과 통일장관을 합친 직책으로 통일부 장관보다는 국정원장이 맞상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수석 대표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보내려했던 데 대해 “작은 것에 연연해 기싸움하다 큰 판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후략) 서울=김○○ 기자』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新亞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6월 2일 05:00 송고한 「[박대

통령 100일] 국정운영 핵심키워드 '창조경제' '국민안전'」, 全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6월 10일 14:36 송고한 「전남도, '사파리 아일랜드' 감사원 감사 반박」,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2일 11:42 송고한 「박지원 "김양건 고집한 게 문제 … 총리급 격상 제안"(종합)」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6월 14일자 12면 「스노든 폭로로 미 중 해킹 공방 역전… 수세 몰린 미국」 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6월 17일자 15면 「이란 대통령 성직자 출신 중도파 로우하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최근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해킹을 해온 것이 폭로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해져 버렸다.

관측통들은 오히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중국을 해킹했다'고 폭로해

수세에 몰린 쪽은 선제공격을 한 미국이 돼버린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장군 멍군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 조만간 공동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됐던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 "중국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측이 군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정보망에 대한 광범위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곧바로 반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에는 미국의 공격에 역공을 가한 것으로만 해석됐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운용하는 전 세계 첩보 감시망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1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NSA가 2009년 이후 홍콩과 중국의 표적 수백 건에 대해 해킹을 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후략) 최○○ 기자』

(국제신문)=『이○○ 기자

성직자 출신의 중도파 후보, 하산 로우하니(64)가 제11대 이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란 내무부는 15일(현지시간) 로우하니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 3670만4156표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861만3329표(50.71%)를 얻어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2위를 차지한 보수파 모함마드 바케르 칼리바프(51) 후보가 얻은 표(607만7292표)의 3배가 넘는 표를 획득했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심'으로 알려지면서 낙승이 예상됐던 사이드 잘릴리(47) 후보는 416만8946표(11.36%)를 얻어 3위에 그쳤고, 388만4412표(10.58%)를 얻은 모흐센 레자이(58)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보수파의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67) 후보와 최고령 모함마드 라지(72) 후보가 5, 6위를 차지했다.

로우하니 후보의 낙승으로 중도파 로우하니와 보수파의 칼리바프, 잘릴리가 치열하게 경합해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애초 예상은 빗나갔다. 이란 대통령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결

정한다.

로우하니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꾸준하게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개표 40% 상황에서 득표율이 49.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표 30% 이후부터는 줄곧 최소 50%의 득표율을 유지했다. 헌법수호위원회의 압바스 알리 카드코다이 대변인은 전날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부정이나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후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한 것이 아니다. 부산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4일 04:54 송고한 「〈스노든 폭로로 시진핑 '우리도 피해자' 주장 관심〉」 제목의 기사를, 국제신문 기사는 연합뉴스가 6월 16일 02:32 송고한 「이란 새 대통령 중도파 성직자 로우하니(종합)」 제목의 기사를 각각 부분 수정하거나 또 다른 외신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기사와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 또는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표절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0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무등일보 발행인 김 명 술

2. 新亞日報 발행인 김 명 수

3.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주 문〉

무등일보 2013년 8월 1일자 3면 「교육부, '지방대 육성방안' 지역 대학 반

응/"환영하지만 법제화 시급"」 제목의 기사, 新亞日報 8월 19일자 3면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입장차」 제목의 기사, 全光日報 8월 19일자 1면 「전남도, 수상비행장 건립 '승부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1. 무등일보, 新亞日報, 全光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무등일보)= 『교육부가 31일 '지역인재 전형' 등을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전형'과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이 핵심적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지방대 비중을 늘리기로 했으며 동시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지방대학들이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줄곧 주장해왔다.(후략) 최○○ 기자』

(新亞日報)=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국정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책을 놓고 여야의 시각이 판이해 향후 정치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현재 새누리당은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산국회와 정기국

회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별검사 수사 쪽으로 점차 기수를 돌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출석을 차단한 점에 안도하며 남은 2차례 청문회(오는 19일, 21일)를 거쳐 국정조사 최종일인 2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19일 나머지 증인들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까지 열면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의 명분도 약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올수록 원내외 병행투쟁 마무리 및 결산국회·정기국회 협의를 놓고 벌어질 민주당과의 협상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후략) 김○○ 기자』

(全光日報)=『전남도가 정부의 항공·레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상비행장 건립을 적극 추진키로 해 수도권, 새만금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항공·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지자체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지자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0월 중 거점 도시를 지정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수요가 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토 서남권을 아우를 수상비행장을 건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후략) 〈문○○ 기자〉』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 중 무등일보 기사는 연합뉴스가 7월 31일 15:13 송고한 「광주 전남대학 "지방대학 육성 법제화 시급"」, 新亞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8일 13:29 송고한 「[종합] 국정원 국조 여야 입장차 … "할 만큼 했다"vs"특검 가자"」, 全光日報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8일 13:25 송고한 「전남도, 수상비행장 건립 '승부수'」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각각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등일보, 全光日報는 제865차, 제866차 회의에서, 新亞日報는 제866차 회의에서 각각 통신 기사를 표절한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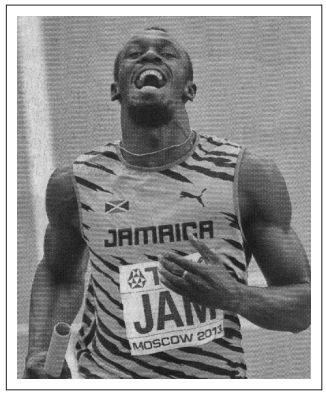
▲ 2013-120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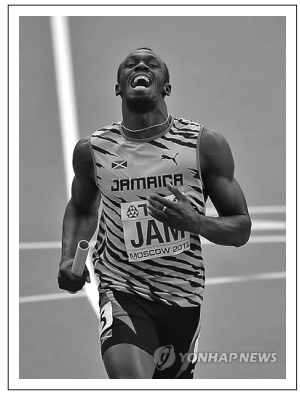
한국경제 2013년 8월 19일자 A35면 「볼트, 사상 첫 두차례 '3관왕'」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가 게재한 적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 8월 19일자 A35면



연합뉴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주 문〉

경상일보 2013년 10월 31일자 4면「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국정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배경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덧붙였다.(후략) 김○○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30일 11:23 송고한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의 13개 단락 중 5개 단락을 일부 순서와 사소한 표현만 바꾼채 전재하고, 그 뒤에 연합뉴스가 같은 날자 11:45 송고한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에 여야 '온도차'」 제목의 기사의 대부분을 덧붙여 4면(정치면) 톱으로 게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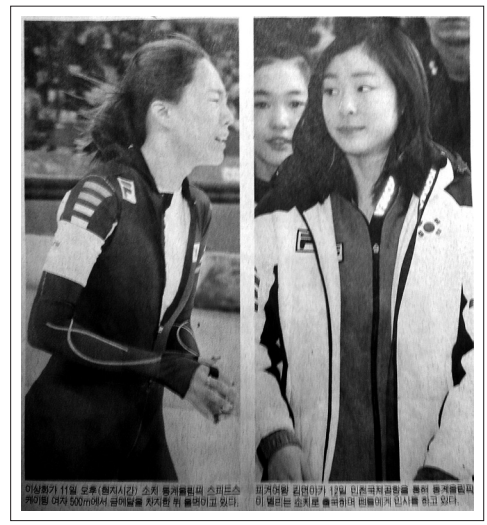
위 신문은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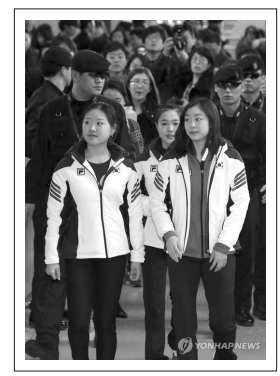
경남매일 2014년 2월 13일자 1면 「이상화 올림픽 신기록 쾌거」, 「김연아 두 번째 대관식 준비」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남매일 2월 13일자 1면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진

경남매일은 연합뉴스가 2월 12일 01:50과 11:26에 각각 송고한 빙상스타 이상화 사진과 김연아 사진을 전재하거나 트리밍해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2013-109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주 문〉

경남매일 2013년 4월 9일자 3면「박한철 "공안 업무 1년도 안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경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검사 재직 시 공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야권에서 불거진 '공안검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5·16은 군사정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수많은 결정문에서 군사쿠데타라고 칭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재직 시절에 대해서는 "20여회에 걸쳐 이른바 '촛불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

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사상 검증'으로 떠오른 5·16에 대한 평가 요구에 "군사정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자기집권 시도 과정에서 위헌적 긴급조치 남발 등 국민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등 부정적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후략) 〈이○○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헤럴드경제가 4월 8일자 6면에 게재한 「박한철 "공안업무 1년도 안했다"」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취재기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배경설명을 넣어 작성한 스트레이트성 기사다. 그런데도 경남매일은 이 기사를 옮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 문〉

한국일보 2013년 6월 19일자 23면 「성범죄 법령 강화 이후 과제 크다」 제목

의 사설에 대해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범죄자는 앞으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대폭 개정 또는 신설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제기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성범죄자의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망라한 내용이 드디어 입법화됐다.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따르고 고소 취하 가능성으로 인해 수사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시대 변화에 뒤진다는 비판이 높았던 성범죄 관련 법률이 늦게나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

법률 토대를 강화한 것만으로는 성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함께 달라져야 한다.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들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음란물에 탐닉하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 조항 강화와 함께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 방지도 중요하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의 등록·관리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됐다.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하고 범죄자의 고해상도 사진도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성범죄를 못 막은 게 아니다. 전자발찌 부착 강화, 화학적 거세 확대 등 각종 대책들이 속속 도입돼왔다. 애써 마련한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늘린

들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안 된다면 쓸데없는 일이다. 범죄자 정보를 넘치도록 쌓아놓아도 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강화된 법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위 사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가 6월 19일자 23면에 게재한 3개의 사설 중 세 번째인 위 사설은 연합뉴스가 6월 18일 오후 3시에 송고한 연합시론「성범죄 근절, 법률강화만으론 부족하다」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표절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의 리드 문장만 빼고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문장의 내용과 표현, 순서에 이르기까지 연합시론을 통째로 전재하면서 출처도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일보는 연합시론의 도입부 10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전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일보의 사설 원고량에 맞추어 연합시론의 전체 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연합시론의 문장을 전재하면서 일부 문장은 접속사와 조사 등 극히 일부 표현만 고쳤다. 한국일보가 표현을 고친 일부 문장 사례를 보면, "… 현실에 맞게 개정된 건 환영할 일이다"를 "…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환영한다"로, "아직도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문란하다"를 "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다"로, "강남 한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특별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을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수 백 명의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현실은 …"으로 "이처럼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를 "이렇게 손쉽게 성을 사고 파는 현실은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흐릴 수 있다"로 각각 바꾼 정도이다.

중앙 일간지가 이처럼 다른 언론사의 시론을 전면적으로 표절해 자기 사설로 게재하는 일은 그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신문윤리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신

뢰, 권위, 품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5.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6.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7.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8.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9.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10.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1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1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1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5월 27일자 9면「"美 출구전략 성급"/스티글리츠 "美수출경쟁력에 도움"」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5월 28일자 9면「EU 반덤핑관세 중국편 드는 獨」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5월 29일자 A8면「이라크 연쇄 폭탄테러/66명 사망·200여명 부상」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6월 10일자 15면「터키 총리 "인내심 한계" … 강경진압 임박」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6월 10일자 12면「만델라 폐감염증 악화 … 재입원」제목의 기사, 한겨레 6월 10일자 16면「프

랑스 "극우폭력 관용없다" 단체해산 강경조처」 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6월 11일자 8면「열대우림 하층식생 잦은 화재/아마존 삼림파괴 '숨은 주범'」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6월 11일자 A18면「"홍콩 날아가 3주 준비 … 호텔 문틈 베개로 막고 PC작업"」 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6월 11일자 16면「美 우방국들 '프리즘 첩보'로 자국민 사찰 의혹」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6월 11일자 15면「유엔, 사상 첫 대규모 인력 감축」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6월 12일자 14면「中 선저우 10호 궤도진입 성공」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6월 12일자 12면「중국 그림자 금융 대외충격 줄 수도」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2일자 A11면「피치 "투명성 위기 지속땐 강등압박 요인" 경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양적 완화 조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오직 양적 완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아직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며, 정상화되지 않는 것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연준의 양적 완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양적 완화가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증거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며 "양적 완화가 가격 거품과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기자』

(머니투데이)=『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후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태양광설비 무역 마찰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 베를린을 방문한 리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상황(EU의 중국산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을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실제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EU와 중국 사이 무역 분쟁이 모두에게 해롭다고 강조하며 EU의 반덤핑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상당한 독일은 EU-중국 간 무역분쟁에서 중국 편에 서 있다. 권○○ 기자』

(매일경제)=『27일 무려 10여 차례에 걸친 폭발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뒤흔들었다. 이날 연쇄 폭탄 테러로 인해 최소 6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해 2008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상자 집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아침 바그다드시 중심부 상업지구 사도운가에서 차량폭탄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행인 5명이 숨지고 인근 경비초소에 근무하던 경찰 4명을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두 차례 큰 폭발이 시아파 거주지인 하비비야를 강타했다. 중고차 판매점 부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 한 목격자는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차량이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 말리프를 노린 폭탄테러는 6명 목숨을 앗아갔고 12명이 부상했다. 시 중심가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 밖에 사드리아, 지스르 디얄라, 샤아브, 마다인 지역에서도 연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15명 이상이 숨지고 76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이번 테러가 누구 소행인지는 오리무중이다.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

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 배후가 알카에다와 연계된 수니파 무장세력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기자』

(문화일보)=『터키 반정부 시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강경입장을 재확인해 진압작전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9일 수도 앙카라 에센보아 공항에서 열린 친정부 시위에 모습을 나타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반정부 시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버스를 개조한 간이 연설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시위대는) 어떻게 나의 경찰들을 공격할 수 있는가"라면서 "국가의 총리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대표를 뽑아서 시장이나 주지사, 또는 나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폭도로 규정했다. 또 "시위대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로 이번 시위를 야당이 사주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7개월 뒤 치러질 지방선거로 판가름하자"고 말했다. "권리와 자유는 폭력이 아니라 법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아다다와 메르신의 친정부 시위에도 연달아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조기총선설을 일축했다. 중도진보성향의 일간신문 후리예트는 이번 주중 AKP가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친정부 시위를 개최, 반정부시위에 맞불을 놓을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후략) 오○○ 기자』

(세계일보)=『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94·사진) 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폐감염증 재발로 두 달 만에 또 입원했다.

제이컵 주마 대통령의 맥 마하라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만델라 전 대통령의 폐감염증이 악화돼 오늘 오전 1시30분쯤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

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위중하지만 안정된 상태"라며 "전문 의료진이 만델라 전 대통령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외부 도움없이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델라 대통령의 입원은 2011년 이래 6번째다. 앞서 만델라는 지난 4월 폐렴으로 열흘 동안 병상에 있었다. 그는 과거 민주화 투쟁 기간 옥살이를 하면서 채석장에서 노역한 이후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만델라의 요하네스버그 자택에는 그의 쾌유를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잭슨 음템부 대변인은 "만델라가 빨리 나아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야당 민주동맹(DA) 무시 마이마네 대변인도 "만델라는 남아공 국민의 아버지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프다"며 회복을 빌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병원에 입원한 넬슨 만델라를 응원한다'고 적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 기자』

(한겨레)=『프랑스 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좌파 활동가를 때려 숨지게 한 극우단체에 해산조처를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폭력에 무관용 대처를 다짐했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8일 좌파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19)의 사망과 관련된 '혁명적 민족주의 청년'(JNR)을 해산하는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은 "슬프게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동성애 등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일고 있다"며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앞서 발스 내무장관은 "극우세력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러한 폭력을 박멸할 단호한 결의"를 강조한 바 있다. 메리크 사망 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가장 강력한 어조로"로 그 공격을 비난한다고 말해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프랑스 명문대학 시앙스포의 재학생이자 반파시즘 활동가인 메리크는 지난

5일 파리 중심가에서 진행된 동성결혼 반대 시위 도중 벌어진 극우단체 회원과 반파시즘 활동가 사이의 충돌 와중에 맞아 숨졌다. 파리검찰청의 프랑수아 몰랭 검사는 메리크의 사망과 관련해 5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에스테반이라는 20살 청년이 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몰랭 검사는 "에스테반이 메리크를 맨손으로 두번이나 때려서 땅에 쓰러뜨렸다고 경찰에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에스테반이 손에 브라스너클(손가락 관절에 끼우는 금속 무기)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몰랭 검사도 에스테반의 집에서 브라스너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후략) 정○○ 기자』

(경향신문)=『지난 12년간 한국 크기만한 아마존 삼림이 타들어갔다.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열대우림의 '하층 식생 화재' 때문이다. 하층식생은 숲의 아랫부분에 서식하는 식물 집단을 뜻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위성 관측을 통해 아마존 남부 삼림을 파괴해온 불의 존재를 찾아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모디스라는 지구 관측위성을 통해 아마존의 건기(6~ 8월) 동안 삼림이 파괴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 결과 1999년~2010년 사이 하층식생 하재로 탄 면적은 8만5500㎢, 아마존 전체면적의 2.8%에 이른다.(후략) 배○○ 기자』

(東亞日報)=『미국 정보당국의 민간인 정보 수집 사실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29)의 폭로 과정은 할리우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국가안보국(NSA) 하와이 지부와 계약 관계인 부즈앨런해밀턴, 델 등에서 일하며 연봉 20만 달러(약 2억26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린 그는 하와이에서 애인과 동거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하와이 NSA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복사하고 '거사'에 들어갔다. 직장 상관에게는 간질 치료를 받는다며 휴가를 냈고 애인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5월 20일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다.

홍콩에 도착한 뒤 3주 동안 호텔방에 머문 그는 차근차근 폭로를 준비했다. 그가 투숙 기간에 호텔방을 나간 것은 단 3회. 식사도 오직 방에서만 했다. 10년 가까이 미국 정보기관에 근무한 그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도청을 우려해 호텔 문틈을 전부 베개로 막았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혹시 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붉은색 천을 뒤집어썼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인 NSA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자신의 폭로로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을 직접 본 그는 "미 정부가 나에게 간첩 혐의와 함께 미국의 적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죄목으로 어떻게든 나를 법정에 세울 것이란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가족 및 지인들. 그의 폭로 이후 NSA 요원들이 가족을 만나러 두 번이나 집을 찾았고 애인까지 조사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미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나의 가족 및 친지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백○○ 기자』

(한국일보)=『주요 인터넷기업을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우방국들도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정보 수집에 협조한 뒤 첩보 내용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국내법에 금지된 자국민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영국 감청 담당 정부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프리즘을 활용해 2011년 5월부터 1년간 전년대비 137% 증가한 197건의 첩보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0일 "영국 정보기관은 의회의 적절한 감독 아래 법을 준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도 "GCHQ가 법을 회피하려 다른 나라 정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미

국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양국은 2차대전 이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는 영국인이라면 이번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불법도청 피해자인 유명 인터넷사업가 킴 닷컴이 뉴질랜드와 미국의 정보공유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적자인 킴 닷컴은 세계 최대 파일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를 설립했다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당국에 기소된 인물이다. 미국 이송을 거부하며 재판을 진행 중인 그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통화내용을 도청했다고 주장했고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이 사실을 시인했다. 킴 닷컴은 프리즘 관련 보도가 나오자 "미국 정보기관이 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당국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9일 "정보 관련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9월 총선에서 집권이 확실시되는 호주 보수당은 "프리즘에 의한 호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은 "호주 정보기관이 미국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밥 카 외무장관은 9일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며 "(프리즘이) 호주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테러 및 범죄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인터넷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법안을 추진하던 호주 정부의 노력이 이번 사태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마스 오페르만 사회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독일 시민 전체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다음달 시작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네스 슈보보다 유럽의회 의원은 "사생활 보호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FTA 협상은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

(서울신문)=『유엔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 예산이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지만, 반기문사무총장의 임기 2기 개혁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복수의 유엔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최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감축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감축 규모는 본부 기준 260명 선인 것으로 안다"며 "예산 규모가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인력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유엔 본부에는 6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파견된 직원은 4만명 정도다. 본부에서 260명을 감축할 경우 본부 전체 인원의 4%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유엔 내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일부 보직의 정리나 조정은 있었지만 수백명 규모의 감축은 없었다. 유엔이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은 예산 축소가 가장 큰 이유다. 한 소식통은 "당초 삭감됐던 유엔의 2012~2013년 예산이 전년 회계연도 규모인 54억 달러(약 6조원)로 복원됐다가 회원국들이 다시 1억 달러 이상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예산 압박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기자』

(국민일보)=『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0호가 11일 오후 5시38분(현지시간) 네이멍구 자치구의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여성 우주인인 양야핑 등 3명의 우주인을 태운 선저우 10호는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정(長征) 2호-F 로켓에 실려 발사 후 19분 뒤 예정 궤도에 도착했다. 선저우 10호는 앞으로 15일간 우주에 머물면서 우주정거장 실험 모듈인 톈궁(天宮) 1호와 자동 및 수동 도킹을 시행하고 각종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전 우주선들과는 달리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우주비행선처럼 사람과 화물을 톈궁 1호로 운반했다가 다시 지구로 실어 보내는 실험도 수행한다.

왕야핑 등은 지상의 학생들에게 '뉴턴 운동 법칙'과 무중력 상태의 물리현상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하는 '우주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톈궁 1호의 고무 밀폐기와 배선을 교체하는 등 우주정거장 보수작업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중국은 선저우 10호와의 도킹 및 각종 우주실험을 마치면 임무가 종료되는 톈궁 1호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톈궁 2호를 발사하는 등 우주 개발을 추진, 2020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맹○○ 기자』

(서울경제)=『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그림자금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상품) 부실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돼 대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수만개의 비은행 대출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기업과 정부에 엄청난 규모의 신용을 공여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를린 추 피치 선임국장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이를 제도권 은행의 위험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중국의 일부 신탁과 자산관리 상품이 디폴트(채무불이행)됐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거나 여기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기관들도 손해가 불가피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이렇게 노출돼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위험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추 국장은 "이 같은 위험이 아직은 통제 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림자금융의 거품이 터지면 매우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그림자금융을 통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며 누가 빌리는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통적 경고 사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신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투명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는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후략) 노○○ 기자』

(한국경제)=『중국의 '그림자 금융(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대출)'이 향후 국가 신용등급 강등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했다. 그림자 금융이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까지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샬런 추 피치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에 있는 수만개의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운용 중인 신용 관련 상품 대부분이 정부 통제권 밖에 있다"며 "투명성 위기가 지속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림자 금융이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가로막아 결국 중국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금융 위기는 결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은행권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4월 중국의 위안화표시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하고,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인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4월 말 기준 3조4426억달러·세계 1위)을 감안해 종전의 'A+'를 유지했다. 당시 피치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은행권 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5.7%에 달하며, 불법적 대출을 포함한다면 GDP 대비 198%에 이를 것"이라고 강등 이유를 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현재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각각 'AA-', 'Aa3'로 매기고 있다. 이○○ 기자』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각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송고한 것이 아니다. 기사마다 각 국내 신문사 외신부(국제부)에 근무하는 기자 이름을 필명으로 단 것을 보면 국내 외신부(국제부)기자들이 외신을 번역해 정리했거나 국내통신사가 전송한 기사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게재하고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표절이다. 이같은 표절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8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8월 30일자 1면「이석기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제목의 기사, 2·3면「통합진보당(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대화록(요약)」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중심이 된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많은 곡절을 딛고 우리가 동지부대를 이루고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 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 아닌가"라고도 했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스스로를 항일 무장투쟁세력과 비교하며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는 "우리가 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도 했다.(후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71.html〉

(2·3면)=『(전략) ▲신원미상 남자= 전국적으로 미군 유류라인이(…) 낡아가지고(…) 헐어가지고(…)(중략)

▲이상호= 그래서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중략)

▲이상호= (중략)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갖다 관통하는 혜화동하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공 상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후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0287.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스트레이트 기사와 회합 대화록 요약본이다.

朝鮮日報는 위 기사에서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본지

가 입수한 이 모임의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며 발언 내용을 기술했고, 1면 소제목을 「'지하조직 비밀회의' 국정원 녹취록 입수」로 다는 한편, 회합 대화록 요약본을 실은 2·3면과 관련기사를 게재한 4면의 면머리 제목도 「'내란 음모' 녹취록 입수」라고 달았다.

하지만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한국일보가 전날 밤 온라인 신문에 잠시 게재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A4 용지 62쪽 분량의 국정원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8월 30일자 신문에 특종으로 내보내기로 했으나,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잘못으로 29일 밤 9시쯤 미완성분을 온라인 신문으로 출고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얼마 뒤에야 이 사실을 알고 요약본 기사를 황급히 내렸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다음이었다는 것이다.

위 朝鮮日報 기사가 한국일보 요약본을 옮겨 적었다고 지적받는 이유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녹취록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르게 쓴 표현이나 중복 문장, 오탈자가 朝鮮日報 기사에 그대로 게재됐기 때문이다.

위 朝鮮日報가 보도한 요약본 가운데 『신원미상 남자』라는 표현은 녹취록 원본에는 '미상남'으로 돼 있는 것을 한국일보 기자가 풀어쓴 것이라고 한국일보측은 밝혔다.

또 위 요약본 두 군데에서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등 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역시 한국일보 기자의 실수였다는 것이다.

요약본 내용 중 '통신'과 '전화'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공 형태'라는 표현도 '진공 형태'의 오기였다는 설명이다.

한국일보는 위 朝鮮日報와 같은 8월 30일자 신문에 「'내란음모 RO 회합' 본보, 녹취록 단독 입수」라는 제목을 달아 1면부터 5면까지 5개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타사 온라인판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전재했다 하더라도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9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4일자 2면 「결국 백기 든 이석채 … '마이웨이'서 '론리웨이'로 …」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헤럴드경제의 적시 사진은 인터넷신문 뉴스핌이 11월 3일 17시 44분에 인터넷 뉴스로 게재한 사진인데 헤럴드 경제는 이 사진을 전재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광남일보 발행인 김 선 남

〈주 문〉

광남일보 2014년 2월 11일자 15면 「SBS '별에서 온 그대' PPL 과다 논란」 제

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1. 광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지난 5일 방송된 '별그대'에서 천송이(전지현)는 영화 촬영 준비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열정을 보이는가 하면 "리얼한 액션을 위해 메이크업을 삼가 달라"는 스태프의 말에 공들인 화장을 다지웠다. 이 과정에서 전지현이 모델을 맡은 한율의 기초화장품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제품의 상표까지 그대로 노출하며 시청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늘 빛나고 아름다운 전지현은 이 장면에서 '굳이' 더 빛났고 '굳이' 더 예뻤다. 스킨을 바른 뒤 긴 손가락으로 얼굴을 매만지고 거울을 쳐다보며 환한 미소를 띠는 모습은 순간 '내가 지금 CF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후략) 김○○ 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남일보의 위 기사는 도입부 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아주경제가 2월 10일 오전 9시 34분 인터넷판에 올린 「'별에서 온 그대', 알고 보니 '별에서 온 PPL'」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런데도 광남일보는 위 기사를 자사기자 명의로 내보냈는데,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스포츠월드 2013년 9월 10일자 「미란다 커, '노브라 패션' US오픈 결승전 관람 화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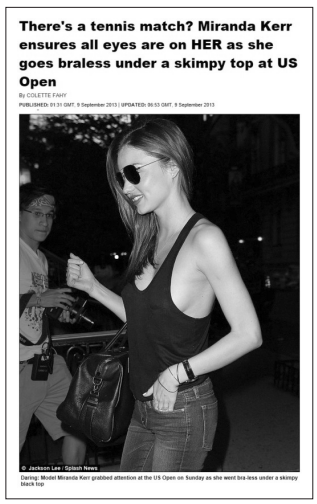
『[연예] 입력 2013.09.10 13:04:09, 수정 2013.09.10 13:04:09

미란다 커, '노브라 패션' US오픈 결승전 관람 화제

미란다 커가 테니스 관람을 하면서도 섹시한 패션 감각을 선보였다.

미란다 커는 지난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2013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타났다. 지난 6일 영화 시사회에서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시스루 노출 의상으로 화제가 됐던 미란다 커는 이날도 예사롭지 않은 패션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미국)와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라루스)의 빅 매치가 열린 이날 미란다 커는 청바지에 헐렁한 민소매 상의를 걸쳤다. 특히 속옷 없이 민소매 상의만 입는 노출 패션을 선보였다.


There's a tennis match? Miranda Kerr ensures all eyes are on HER as she goes braless under a skimpy top at US Open

By COLETTE FAHY

PUBLISHED: 01:31 GMT, 9 September 2013 | UPDATED: 06:53 GMT, 9 September 2013

© Jackson Lee / Splash News

Daring: Model Miranda Kerr grabbed attention at the US Open on Sunday as she went bra-less under a skimpy black top

미란다 커는 지난달 6일 '마드무아젤 C'의 시사회에 참석 도중 가슴이 노출되는 해프닝을 겪은 바 있다. 검은색 시스루 룩을 선보인 미란다 커는 팔을 드는 순간 가슴을 가리고 있던 검정색 레이스가 올라가면서 노브래지어 상태였던 가슴

이 훤히 노출된 것. 영국언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해 커의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이날 US오픈 결승전에서는 세레나가 아자렌카를 2-1로 꺾고 US오픈 2연패를 달성했다. 스포츠월드 체육부』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0910022494&subctg1=25&cid=114025000000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배우 미란다 커가 US오픈테니스대회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민소매 차림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인터넷판을 캡처해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위 사진은 연예전문보도매체 '스플래시 뉴스'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다.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보도하고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데일리 메일 보도내용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15773/Miranda-Kerr-ensures-eyes-US-Open-goes-bra-skimpy-black-top.html?ito=feeds-newsxml〉

▲ 2013-3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스포츠월드 2013년 10월 3일자「입은 게 더 야해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

현장」, 10월 9일자 「"속 다 비치네?"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쇼 현장」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입력 2013.10.03 11:49:53, 수정 2013.10.04 11:06:35

"입은 게 더 야해"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 현장

모델들이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위크에서 디자이너 미구엘 파라찌오(Miguel Palacio)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funsw.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03021297&cid=1140500000000〉

『[포토/동영상] 입력 2013.10.09 16:39:11, 수정 2013.10.09 16:54:33

"속 다 비치네?"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쇼 현장

모델들이 14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 위크에서 디자이너 미구엘 파라찌오(Miguel Palacio)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09022320&cid=1135200000000&subctg1=0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지난 9월 14일 보도된 AP의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쇼 사진을 보름여가 지난 뒤 10월 3일과 10월 9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각각 게재하였다. 유두가 훤히 비치는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싣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 사진을 게재한 해외사이트

〈http://www.leaderpost.com/life/fashion-beauty/Photos+Madrid+Fashion+Week/8913814/story.html〉

〈http://www.lavanguardia.com/de-moda/pasarelas/pasarela-madrid/20130915/54384507715/angel-schlesser-miguel-palacio-madrid-fashion-week-septiembre-2013.html〉

▲ 2013-3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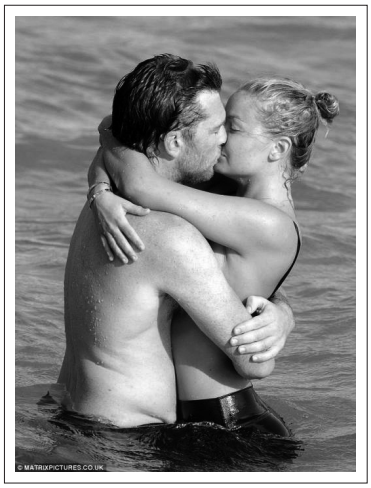
서울신문 2013년 10월 12일자 「[파파라치]'아바타' 배우, 女모델과 진한 스킨십 포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파라치] '아바타' 배우, 女모델과 진한 스킨십 포착

입력: 2013.10.12 I 수정 2013.10.12 16:36



영화 '아바타' 주연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샘 워싱턴이 연인과 함께 휴양지를 찾은 모습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재 호주 출신의 모델인 라라 빙글(27)과 열애중인 그는 최근 호주 시드니의 바닷가를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가 서로를 깊게 껴안으며 키스를 나누는 등 애정을 과시했다. 특히 라라 빙글은 모델답게 검은색 비키니와 늘씬한 몸매를 한껏 과시했다.

열애를 시작한지 불과 한 달 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신혼여행을 즐기는 부부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한 샘 워싱턴과 라라 빙글은 즐거운 물놀이를 끝낸 뒤 해변에서 조깅을 하는 등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한편 영화 '아바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등에서 뛰어난 액션을 선보인 샘 워싱턴은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드리프트'에서 매력적인 서퍼로 분해 또 한 번 존재감을 뽐냈다.

2014년에는 정치인에서 영화배우로 돌아온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호흡을 맞춘 영화 '사보타지'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1260100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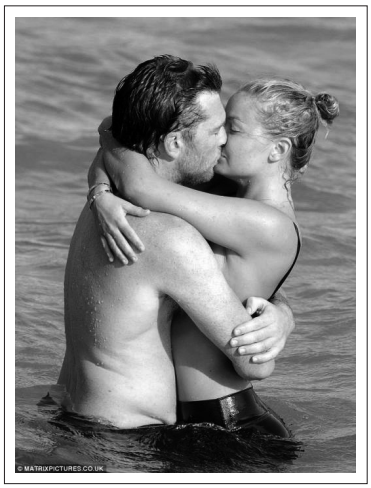
서울신문은 할리우드 배우 샘 워싱턴이 시드니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면서 인용한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 등 해외매체에 보도되었고, 게재한 사진은 데일리 메일이 게재한 사진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영국의 보도사진 전문매체인 〈Matrixpictures〉로, 해당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 보도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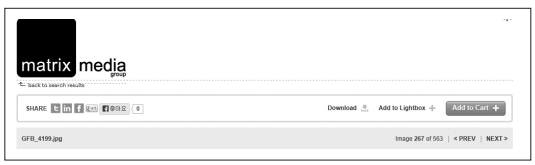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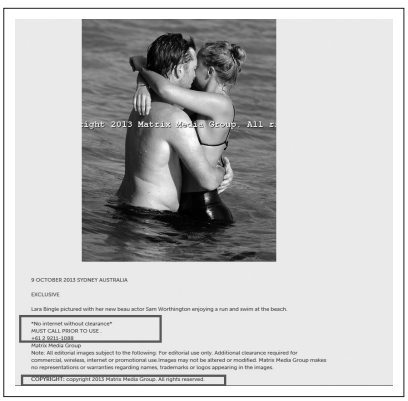
■ **데일리메일 보도**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53920/Lara-Bingle-Sam-Worthington-embrace-kiss-sea-couples-jogging-session.html?ito=feeds-newsxml〉

■ **참고 : Matrixpictures.co.uk 홈페이지 해당사진 검색**





▲ 2013-3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3년 11월 11일자 「美 '야동' 촬영시 '고글' 착용도 의무화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美 '야동' 촬영시 '고글' 착용도 의무화 논란
입력: 2013.11.11 | 수정 2013.11.11 14:53댓글보기

최근 포르노 촬영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한 미국 LA시에 이어 주(州) 당국이 한술 더 뜬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부는 포르노 촬영시 콘돔 뿐 아니라 고글 착용까지 의무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안 AB 640을 업그레이드한 이 법안은 포르노 촬영시 방출되는 정액이나 피등이 상대방 입이나 눈 등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LA에서 발효한 포르노 남자 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 일명 '콘돔법' 보다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 것. 당시 포르노 영화제작 업체들은 "콘돔을 착용한 배우들의 연기를 누가 보고 싶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우리도

배우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법 발효 이후 관련 업체들은 속속 짐을 싸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유독 캘리포니아주가 포르노 촬영에 민감한 것은 LA 지역이 미국 포르노 영화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야동의 메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캘리포니아주와 LA시를 상대로 한 에이즈 예방단체와 보건단체의 로비와 항의가 빗발쳤다.

새로운 법안 소식이 알려지자 유명 포르노 배우인 제시카 드레이크와 제임스 딘은 이를 항의하는 비디오를 만들었다. 실제 법안이 적용된 것을 가정하고 영화를 촬영한 것.

드레이크는 "왜 우리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영화를 찍어야 하냐" 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1160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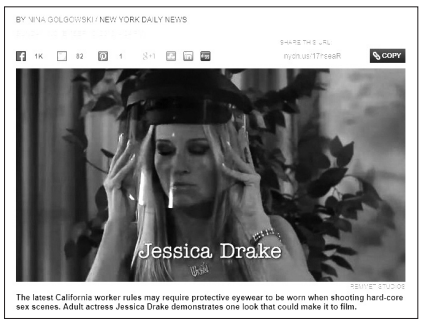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포르노 촬영시 방출되는 정액이나 피 등이 상대방 입이나 눈 등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글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인용한 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뉴욕 데일리뉴스 등 해외매체에 보도되었고, 게재한 사진도 같은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진의 저작권자는 〈Remmet studios〉에 있는 것으로, 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 보도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뉴욕데일리뉴스 보도



〈http://www.nydailynews.com/news/national/calif-law-porn-stars-don-goggles-sex-article-1.1512447#commentpostform〉

▲ 2014-3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 문〉

조선닷컴 2013년 12월 18일자 「시위대 여대생, 진압 경찰 헬멧에 키스했다고 '성폭력'으로 기소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시위대 여대생, 진압 경찰 헬멧에 키스했다고 '성폭력'으로 기소돼**

조선닷컴

입력 : 2013.12.18 13:17 | 수정 : 2013.12.18 13:50

시위에 참여한 여대생이 대치 중이던 경찰의 헬멧에 입을 맞췄다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니나 드 치프레라는 20세 여대생은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에서 다른 대학생·시민들과 고속철도 건설 반

대시위를 벌이던 중 스크린을 짜고 저지하던 한 경찰관의 헬멧에 키스를 했다.

이 장면은 취재 중이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혀 전국에 보도돼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최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탈리아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COISP'가 해당 여대생 시위자를 성폭력과 공무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토리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OISP 대표인 프랑코 마카리씨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경찰관이 그 여대생에게 키스를 했다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만약에 경찰인 내가 뒤에서 그녀를 톡 쳤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근무 중인 경관에게 한 행동은 그냥 묵인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키스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번과 같은 상황, 즉 시위자와 진압경찰 사이의 그 같은 키스는 무례한 행동일 뿐"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성폭력과 공무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여대생은 경찰 헬멧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으로 해당 경찰관의 입을 만진 추가 '성폭력' 혐의도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탈리아 여대생이 시위 중 진압경찰관의 헬멧에 입을 맞췄다가 성폭력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사는 앞서 보도한 동아닷컴 기사와 거의 같다. 또한 AFP가 단독보도한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리드를 포함한 앞부분의 문장은 동아닷컴 기사를 문장순서를 바꾸거나 줄였고, 접속사나 일부 단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형태만 바꾸었을 뿐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특히 뒷부분 세 문장은 거의 똑같다.

위 기사가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지 언론 기사를 번역한 것이라고 추정

해 볼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 대부분은 시위 발생지역(토리노)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La Repubblica'지를 인용하였고, 이 신문에 실린 프랑코 마카리(Franco Maccari) 이탈리아경찰노조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도 현지 라디오방송(라디오24 프로그램 'La Zanzara')을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을 인용한 동아닷컴의 기사와 비슷한 유형의 문장구조를 가진 이탈리아 언론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인디펜던트 기사에 'COISP'가 이탈리아 경찰을 대표하는 노조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프랑코 마카리가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라고 명시됐음에도 동아닷컴이 "이탈리아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 프랑코 마카리"라고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내용이 일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위 기사는 표절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내외 매체의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 2013-3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3년 10월 5일자「미니스커트 금지하자 옷 벗어던진 여학생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니스커트 금지하자 옷 벗어던진 여학생들

입력: 2013.10.05 I 수정 2013.10.05 18:51댓글보기

대학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등의 복장 규정을 통지한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 대학생과 여교수가 옷을 벗어 던졌다.

헝가리 남부 카포스바 대학 예술대학 교수와 10명의 남녀 학생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복장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속옷 차림으로 수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이달 초 남학생은 짙은 색 정장에 신발, 여학생은 재킷과 블라우스, 바지 혹은 긴치마만을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학장 및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미니스커트 등의 노출이 심한 복장이나 샌들을 착용할 수 없고 짙은 화장도 금지당했다.

한편 이들 학생은 오는 7일에도 샌들을 신고 수건을 걸치는 등의 새로운 복장 규정을 위반한 패션으로 수업에 임할 계획이다.

사진=멀티비츠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0560101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등의 복장 규정을 통지한 학교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일부 대학생과 여교수가 옷을 벗어 던졌다는 외신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사진의 출처를 〈멀티비츠〉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위 사진은 〈멀티비츠〉가 보도한 것이 아니라 AFP 또는 Getty Images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이다.(AFP와 Getty Images는 상호보완관계로 특정 사진의 경우 서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다) 즉, 멀티비츠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내 보도 제공사진을 대행하는 에이전시일뿐으로, 보도매체가 아니다. 따라서 사진의 출처는 AFP/Getty Images/멀티비츠로 표기해야 한다.

또 멀티비츠로 표기할 경우 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일반 독자들이 〈멀티비츠〉가 보도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는데다 저작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사진게재와 관련, 원 저작권자의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판사진을 다운받아 워터마크를 붙여 게재하지 않고 다른 매체에 보도된 사진을 복사하여 게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에이전시인 〈멀티비츠〉도 이 같은 사용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처표기 및 게재 방식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자료 : 영국 데일리메일에 게재된 똑같은 사진의 출처 표기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443951/Mini-skirt-ban-Hungary-university-prompts-female-students-turn-knickers-only.html〉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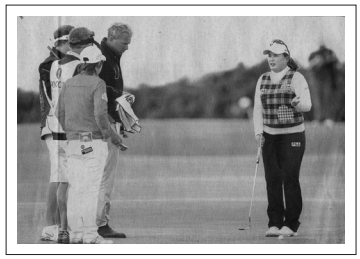
▲ 2013-120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8월 5일자 25면 「"공이 안 멈춘다" 강풍에 멈춘 브리티시여자오픈」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세계일보 8월 19일자 24면 「일 열도 정신 쏙 뺀 동방신기 … K-팝 새 역사 썼다」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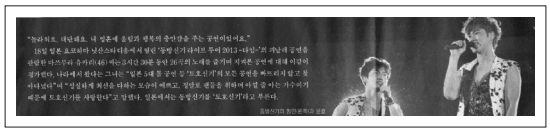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가 게재한 적시 사진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파이낸셜뉴스 8월 5일자 25면

〈사진 2〉 KB금융그룹 제공 사진



〈사진 3〉 세계일보 8월 19일자 24면

〈사진 4〉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박인비의 후원사인 KB금융그룹이, 세계일보는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사진을 각각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9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2.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 문〉

새전북신문 2013년 11월 12일자 1면「덕유산 향적봉에 핀 하얀 얼음꽃 '장

관」 제목의 사진 기사, 全羅日報 11월 12일자 1면 「향적봉 눈얼음꽃 만개」 제목의 사진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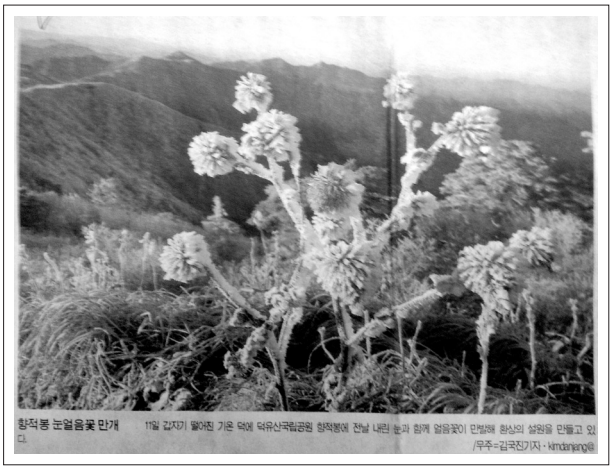
1. 새전북신문,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새전북신문)=

덕유산 향적봉에 핀 하얀 얼음꽃 '장관' 덕유산국립공원(소장 정석원)향적봉에 11일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연출했다. 이날 상고대는 새벽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 지면서 수증기가 승화해 나뭇가지에 붙으면서 생성됐다. 특히 소량의 눈도 내리면서 8부 능선까지 하얀눈꽃이 피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설원이 25일 늦어졌다. 정석원 소장은"향적봉 상고대는 국립공원 100선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풍경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며 올 겨울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주=이창걸 기자 leehy@sjbnews.com

덕유산 향적봉에 핀 하얀 얼음꽃 '장관' 덕유산국립공원(소장 정석원) 향적봉에 11일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연출했다. 이날 상고대는 새벽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 지면서 수증기가 승화해 나뭇가지에 붙으면서 생성됐다. 특히 소량의 눈도 내리면서 8부 능선까지 하얀눈꽃이 피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설원이 25일 늦어졌다. 정석원 소장은 "향적봉 상고대는 국립공원 100선에 선정될 만큼 빼어난 풍경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며 올 겨울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주=이○○ 기자 *****@sjbnews.com

(全羅日報)=



향적봉 눈얼음꽃 만개 11일 갑자기 떨어진 기온 덕에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 전날 내린 눈과 함께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만들고 있다. /무주=김국진기자 · kmdanang@

향적봉 눈얼음꽃 만개 지난 11일 갑자기 떨어진 기온 덕에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 전날 내린 눈과 함께 얼음꽃이 만발해 환상의 설원을 나들었다./무주=김○○ 기자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새전북신문과 全羅日報의 위 적시 사진은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11월 11일 제공한 사진이다. 위 신문들은 이 사진을 각각 1면에 대형 사진기사로 전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 끝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1 신문윤리강령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3년 7월 2일자 「[포토]머리 반쪽이 손상 … 말도 못해」 제목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투데이]

싸움에 휘말려 뇌의 일부분을 잃은 미국의 페인트공 안토니오 로페즈 차이(43)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의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차이는 술집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경호직원에게 머리를 맞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말도 할 수 없게 됐다. 차이의 변호사는 이날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경호업체에 58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96096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돼 뇌에 손상을 입은 미국의 페인트공의 소식을 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AP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이투데이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다.

비록 전재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없이 게재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싣는 것은 저작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7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스포츠월드 2013년 10월 20일자 「충격적 시스루 노출 패션쇼 현장 "다 보여줄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3.10.20 13:40:21, 수정 2013.10.20 13:56:59

충격적 시스루 노출 패션쇼 현장 "다 보여줄게"

모델들이 1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패션위크에서 현지 디자이너 안나 불빅(Anna Bublik)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PhotoMovie/Article.asp?aid=20131020021294&cid=1135200000000&subctg1=00&scrollTop=true〉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우크라이나 패션쇼에서 시스루 의상을 입은 모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유두가 훤히 비치는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싣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을 위반한 다른 기사들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 참조〉

평론의 원칙

1. 반론의 기회

▲ 2014-104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주 문〉

경남도민일보 2014년 2월 13일자 20면 「배한성 전 창원시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다음은 경남도민일보가 내보낸 위 칼럼 내용이다.

『배 시장님과의 악연이 시작된 것이 10년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정선거로 인하여 배 시장님은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고, 시장님 부인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아 결국 시장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남민언련) 대표직과 창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맡으면서 배 시장님 퇴진운동을 주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우상가 앞에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오후 5시면 어김없이 혼자서 퇴진 선전전을 6개월 가까이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접해보니 배시장님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자 적어 봅니다. 2003년 6월 19일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지기로 한 배 시장님 사퇴촉구 기자회견이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브리핑룸 폐쇄로 인하여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바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도를 넘어선 과잉 충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배 시장님이 수장으로 있었던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

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장님만 쳐다보면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로 경남민언련 사무실을 방문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인맥이란 인맥은 모두 동원해서 시민단체 사무실을 왜 방문했겠습니까? 제발 시내 한가운데서 시장님 퇴진운동 그만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진 사람인지 그 부탁을 단 한 번도 귀담아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배 시장님,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민단체와 지루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배 시장님은 재판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자숙이나 반성 없이 지지자를 통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보인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배 시장님 측과 반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3245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배한성 시장님과 한나라당은 가슴깊이 되새겼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배 시장님의 주름살뿐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인물이 또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창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원시민을 '졸'(卒)로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짱 좋게 출마선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배 시장님의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 선거를 하면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출마의 변을 접하고 나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1969년부터 말단 9급 면서기로 시작해서 2004년 창원시장 재임까지 약 30여

년 간 창원시와 경남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수많은 행정경험을 그동안 많이 쌓았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경험의 결과가 부정선거를 잉태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어 봅니다.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적발된 인원만 60명이었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인원수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선거 부정으로 중도 사퇴한 인물이 또다시 시장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똥·오줌을 못 가린다지만 아직도 창원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부정선거로 사퇴한 인사에게 공천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모든 걸 접으시고 창원 토박이들 단체인 '삼원회'나 잘 간수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혹시 어쭙잖은 글로 인해 심간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글은 경남도민일보의 고정난인 '갱상도 블로그'에 실린 블로거 강창덕 씨의 칼럼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배한성 전 창원시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지역 인터넷 블로그들의 집합체인 '갱상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일부를 오프라인 신문 같은 이름의 고정난에 소개하고 있다.

블로거 강 씨는 위 칼럼에서 2002년 창원시장에 당선된 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지적하며 『창원시민을 '졸(卒)'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배짱 좋게 선언을 할 수 없었을 것』『많은 행정경험의 결과가 부정선거를 잉태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 야유와 조롱조의 자극적인 문구를 섞어 시종일관 배 전시장을 비난했다.

하지만 강 씨의 이 같은 비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특히 10

여년 전에 일어난 배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주장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배 전 시장으로서는 문제의 글이 앞으로 선거운동과 그 결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박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는 비록 개인 블로거의 칼럼을 전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글이 특정인에게 명예훼손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했지만, 위 해당 지면과 그 이후 지면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정확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여론 형성을 강조하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③(반론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편집지침

1. 표제의 원칙

▲ 2013-110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4면 「김재철, 3억원 넘는 퇴직금 챙기려 '꼼수 사직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해임한 김재철 MBC 사장(60·사진)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주주총회의 해임에 앞서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면 3억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김 사장의 사퇴를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27일 "김 사장이 27일 방문진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인 MBC는 상법상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피력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사장의 사표 수리로 MBC는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안광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사장은 지난 26일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 해임까지는 주총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MBC 홍보국 관계자는 "해임당하는 것보단 자진사퇴하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은가"라며 "김 사장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려 사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MBC 노조는 "김 사장이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을 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약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3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사장이 재일동포 무용가 정모씨에게 회사 돈으로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최근 전주·청주·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서 김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사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해임하기로 결정한 김재철 MBC 사장이 해임 의결을 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3월 2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자진사퇴는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BC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주주총회 해임결의에 의해 퇴임하면 퇴직금을 못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과 연관지어 기사는『MBC 노조는 “김 사장이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리고『김 사장이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에 자진사퇴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약 15개월분의 퇴직연금을 받고 그 금액이 3억~3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주장이고 추측일 뿐이며 MBC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사에서 밝힌대로『“김 사장이 27일 방문진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김 사장의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 「김재철, 3억원 넘는 퇴직금 챙기려 '꼼수 사직서'」라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특정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청투데이 발행인 정 남 진

〈주 문〉

충청투데이 2013년 3월 28일자 7면 「학원가 편만 드는 꼭두각시 교육당국」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전교육청이 동·서부권의 지역 간 교육환경과 경제적 편차 등을 고려치 않고, 학원 수강료 기준액을 똑같이 편성, 큰 폭으로 인상시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일괄적으로 '교습비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수강료를 최대 5배 이상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분야별 인상안을 보면 동부의 경우 입시학원(종합) 수강료는 2011년 기준 분당 27원에서 135원으로, 보습은 초등이 82.5원에서 165원으로, 중등이 85.56원에서 194원으로, 고등이 85.56원에서 199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웅변과 속셈은 각각 82.5원에서 140원으로, 컴퓨터는 85원에서 130원으

로, 각각 인상됐다. 서부도 입시학원(종합) 수강료가 같은 기간 분당 26원에서 135원으로, 초등과 중등, 고등이 82.5원, 85.55원, 103원이었던 보습 수강료는 각각 165원, 194원, 199원 등으로 일제히 올랐다.

문제는 지난해 학원수강료 기준액의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았고, 지역·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동부와 서부가 모두 똑같은 기준액으로 맞춰졌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학원수강료 기준액이 최대 5배 이상 인상됐고, 분당단가도 동부와 서부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입시학원의 분당단가는 종합반과 초등·중학교·고등학교 등 4개 과정에 걸쳐 동부와 서부 모두 동일했다.

또 외국어는 유치원과 초등 과정이 모두 분당 190원으로 똑같았고,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관련 학원 수강료 역시 일치했다. 독서실과 웅변, 속셈,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도 수강료는 양 지역간 수준과 별도로 모두 같은 분당단가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불·편법적 수강료 인상도 문제지만 이처럼 교육당국이 학원가의 입장만 대변, 수강료 기준 자체를 높게 책정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 이모(45·대덕구 읍내동) 씨는 "서구나 유성구 등의 교육·경제적 환경과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의 환경이 다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 똑같은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말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들 편만 드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지침과 학원연합회의 요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원수강료 기준액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대전 동·서부교육청이 동·서부권의 지역간 교육환경과 경제적 편차 등을 고려치 않고, 학원 수강료 기준액을 똑같이 편성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수강료를 최대 5

배 이상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고,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동부와 서부가 모두 똑같은 기준액'으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학원가의 입장만 대변하고, 동부와 서부의 교육환경이 다른데도 똑같은 수강료를 책정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정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교습비조정위원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7~11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원장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학원장인 경우 2명까지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관할 지역 학원의 교습비 기준 외에 학원비 과다 여부도 심의한다. 따라서 동·서부지역 수강료 기준액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의 교습비등조정위원회가 각각 책정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수강료 기준액을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단정적으로 「학원가 편만 드는 꼭두각시 교육당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는 한 시민이 "말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들 편만 드는 교육당국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적었으나 그가 한 말은 교육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꼭두각시'는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교육당국을 근거없이 폄하한 것이다.

이러한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과도 다르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세계일보 2013년 6월 11일 15면 「中 자원야욕 북극으로 뻗어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 자원 확보에 치중하는 중국이 '자원의 보고'인 북극 진출의 야심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아이슬란드의 석유개발 업체인 아이콘 에너지와 함께 아이슬란드 동북부 해안 석유개발권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역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공유하는 북해 얀 마이엔 섬 주변이다. 개발권 허가를 얻을 경우 중국해양석유는 중국 석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자원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개발권 승인 여부는 가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석유개발권 신청은 지난달 중국이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은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끝임없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본격 뛰어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아이콘 에너지에 따르면 북극은 석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광물 매장량이 막대하다. 여기에 수송 항로의 가치도 크다. 현재 북극지역에는 석유가 1억t 이상 매장돼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극 자원 개발은 중국과 아이슬란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는 중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북극지역에 대한 영

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월 중국과 아이슬란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 것도 이 같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중국이 유럽 국가와 FTA를 맺은 것은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아이슬란드 유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 정부가 자본 유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FT는 중국이 자원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북극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위 기사에서 중국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동북부 해안 석유개발권을 신청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세계각지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확보하려고 끊임없이 나서고 있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문제는 「中 자원야욕 북극으로 뻗어간다」는 이 기사의 제목이다. '야욕'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큰 욕심'을 뜻하는데 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그러므로 위 기사 제목은 중국이 북극으로 진출하면서 자원확보를 꾀하는 일이 자기 분수나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 각지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에 나선다고 해서 유독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중국이 … 북극 진출의 야심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야심'이라는 보다 완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목은 이를 자극적으로 과장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7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5월 27일자 13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날 MB는 봉하마을 인근서 골프 쳤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인근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무현계 인사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전 대통령이 또 한번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자마자 국민이 사용해야 할 테니스장을 혼자 독차지해 사용하다가 국민적 지탄에 직면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진정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 낼 능력이 없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 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남겼다. (중략)

민주당 최민희 의원 역시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 서거 4주기 바로 그날, 거제도에서 골프치셨네요. 참회의 골프였을까요?"라고 남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봉하에서 추도식이 열린 23일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청와대 참모였던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과 골프를 쳤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거제 인근 외도를 관광한 후 이튿날인 24일에도 골프를 즐겼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인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재임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과 관련해 야권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런데 기사와 제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을 '봉하마을 인근'이라고 표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거제시 장목면은 시외버스를 타더라도 2시간 이상 걸릴 만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인근'의 사전적 의미는 '이웃한 가까운 곳'으로, 봉하마을과 장목면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기사와 제목에서 『인근에서 골프를 쳐』「인근서 골프 쳤다」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남의 슬픔은 아랑곳없이 본인 즐기는 데만 열중했다는 '무례'와 '몰상식'의 뉘앙스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사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6월 11일자 10면 「특성화高 높은 취업률 '빛좋은 개살구'」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민재(당시 19세) 군. 특성화고 재학생으로 기업 현장실습을 나갔던 김 군은 주말특근은 물론 2교대 야간근무에도 투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이던 김 군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일 뿐이었다.

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전복사고로 사망한 홍성대(당시 18세) 군도 실습나온 특성화고 학생이었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추가 근무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무리한 현장실습 환경에서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악한 현장실습에 대한 지적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내의 실습시간,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휴일 실습 불가 및 주 2회 휴무 등의 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현장실습 점검단과 현장실습컨설팅단을 구성, 서울시내 특성화고 78개교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잇단 정부 대책에 대해 일선 현장 전문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의 목적이

나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장교육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입맛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근무 등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개선대책안이 휴일 및 야간실습, 연장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할 근거법령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 의원 측은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취업률 압박에 시달리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항의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갈등을 빚은 학교를 담은 블랙리스트가 기업 간 돌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상황에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도 묵인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취업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다보니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단 현장실습을 나가 취업자로 집계됐다가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곧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현장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기획기사다.

헤럴드경제는 그런데 큰 제목을 「특성화高 높은 취업률 '빛좋은 개살구'」라고 달았다.

기사는 일선 기업들이 관련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현장실습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제목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부실이 내재된 것처럼 엉뚱한 곳을 지목한 것이다.

이 같은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5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3년 8월 1일자 1면 「찔끔 대책·국회 몽니 … 주택시장 '녹초'」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숨을 쉴 겁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사장단 간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당초 서 장관은 최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대표들은 미세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이후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국토부는 지난 24일 '4·1대책 실행방안'이란 명칭으로 추가대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거래 부진은 멈추지 않았다. 7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766건에 불과했다. 전달(9030건) 거래량의 20%에도 못 미쳤다. 작년 동기(2783건)보다는 36%나 줄었다.

정부도 취득세 감면 종료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

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잘 안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줄줄이 묶어놓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미봉책 쏟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간 두 달에 한 번꼴로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동산대책 정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발표와 실행 시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당·정·지자체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는 위 기사에서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데도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기사 내용과 그 표현에서는 신문윤리규정상 부적절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찔끔 대책·국회 몽니 … 주택시장 '녹초'」라는 위 기사의 제목에서 '국회 몽니'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몽니'라 함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을 말한다. 설사 국회가 계류중인 법안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술을 부리는 성질' 탓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기사에 없다.

기사에는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줄줄이 묶어놓고 있다.』『주택업계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미봉책 쏟

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기술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목은 독자들에게 공연히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결국 신문의 책임과 신뢰·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3.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주 문〉

국민일보 2013년 7월 20일자 1면「光州,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성공/실적 급급한 강운태 시장 정부보증 서류 위조했었다/정부, 姜시장 고발키로」기사의 제목, 국제신문 7월 30일자 5면「與, 참고인 채택 몽니 … 표류하는 국정원 국조」기사의 제목, 江原日報 8월 19일자 1면「남북 이산가족 올 추석 금강산에서 만난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민일보, 국제신문,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광주시가 논란 속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회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면

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훌리오 마글리오네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FINA 총회에서는 집행위원 투표 없이 2019년 대회는 광주시, 2021년 대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FINA에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에 김황식 전 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한국 정부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지원했던 금액(739억원)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했고 당시 김 총리와 최 장관의 사인도 위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FINA 현지 실사단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를 발견하고, 광주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개최지 결정이 날 때까지만 고발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고발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광주시가 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운태 시장은 바르셀로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FINA에 제출한 최종 서류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FINA 측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86421&cp=nv〉

(국제신문)=『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 전날 정상화 합의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노출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히 내달 7~8일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참고인을 합의하지 못한 채 향후 국조 일정만 확정했다.

양당이 공통으로 신청한 18명의 증인은 사실상 합의됐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권유린 의혹에 연루된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이미 합의한 증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또 경찰청 축소 은폐 수사와 관련 '사전교감설'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8월 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며 7~8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기관보고는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총 4명의 기조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내용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필요 시 브리핑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브리핑을 거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악마의 합의'가 도처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은 들었어도 '공개 반 비공개 반'은 처음"이라며 "반반도 아니고 사실상 비공개 합의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휴가를 이유로 기관보고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그분들을 납치해서 모셔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조사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려는 당초

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730.22005212301〉

(江原日報)=『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이틀 만에 수용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전날인 이달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열자고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산상봉 회담을 당초 남측이 제안한 판문점에서 개최하길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오늘 북한이 발표한 이산상봉 및 금강산관광 관련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수용여부는 추후에 밝힐 것"고 덧붙였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308180015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해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에 대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서류에 '한국 정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지원했던 금액(739억원)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고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와 최광식 당시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국제수영연맹이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동일자 신문 3면 해설기사에는 지난 4월 세계수영연맹 실사단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으며, 총리실의 지적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4월의 유치의향서 중간본과 6월 17일 최종본에는 재정지원 보증서 내용을 처음에 승인받은 대로 고쳤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을 소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컨설팅사가 제안을 받아 실무직원이 총리 서명 원본에 일부 문장을 첨가해 제출하게 됐다"면서 실무자의 과욕에 따른 실수라고 말했다고 해설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1면 중간으로 내보낸 위 적시 기사 큰 제목을 「실적 급급한 강운태 시장 정부보증 서류 위조했었다」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해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문제의 정부 재정보증 서류를 위조한 '주범'은 강운태 시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 기사와 3면 해설기사 어디에도 강운태 시장이 실적에 급급해 했으며, 정부 보증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은 없다.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7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진행상황을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여야간 이

견으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은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과 주장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증인채택이 안되면 이미 합의한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청 축소 은폐 수사와 관련 '사전교감설'이 제기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입장을 '참고인 채택 몽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與, 참고인 채택 몽니 … 표류하는 국정원 국조」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없는 '몽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담아 제목을 단 것은 편향된 시각과 가치판단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江原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했다. 또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도시점에서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의 제안일 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남북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이 보도 후 4일 만인 23일 이뤄졌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북한의 제안 내용만 가지고 남북이 합의한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올 추석 금강산에서 만난다」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신문들의 기사 제목은 섣부른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돼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3년 9월 11일자 1면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강화도조약' 일본 입장 기술」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역사왜곡·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구한말 강화도조약과 일제강점기 철도사업 등에서 일본의 극우 성향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보다도 강하게 일본 측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교학사 교과서는 강화도조약에 대해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이는 강화도조약은 조선에 국교 수립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기술한 후소샤 교과서보다 훨씬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한국 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발을 행하고"라고 기술했다. 국내 다른 교과서들은 "일제가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이나 무상으로 수용하고 노동력을 수탈해 농민의 저항을 받기도 했다. 호남평야의 쌀과 북부지방의 물자를 수탈할 목적으로…"라며 수탈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학계는 이날 오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근현대사뿐 아니라 고대사까지 70페이지 분량의 학술적 사실·통계 오류가 나왔다고 공개했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교과서로 부르기도 민망한 책”이라며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110600055&code=9404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구한말 강화도조약과 일제 강점기 철도사업에 대해 기술하면서 일본의 극우 성향 후소샤 교과서보다도 강하게 일본 측 입장을 반영했다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주장 등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기사가 전한 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는 강화도 조약이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에 따라 체결됐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조선에 국교수립을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기술한 후소샤 교과서보다 훨씬 일본 측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일제의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는 “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되었다” 등 후소샤 교과서에 비해 긍정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인용부호도 없이 「교학사 교과서, 후소샤 것보다 더 ‘친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교학사 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서술 전반이 ‘친일’인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강화도 조약과 철도 사업 등 두 가지 사실이며, 그 것도 주장일 뿐이지 객관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는 일본 측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지적만 나왔지 ‘친일’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도 해당 교과서가 마치 ‘친일’ 일색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을 단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객관적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사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

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3년 8월 27일자 10면「"원세훈, '從北딱지' 붙이는 新 매카시즘 구사"/檢, 부적절한 초강경 표현 왜?/국정원 댓글사건 첫 공판/공소유지에 檢 사활 걸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검찰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종북(從北) 딱지 붙이기' '신종 매카시즘' 등의 용어까지 사용하며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이같이 표현한 것과 관련,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비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북 개념에 대한 시각 차=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신종 매카시즘에 비유한 이유는 그만큼 종북이라는 개념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 국정원의 직무범위 등을 둘러싸고 원 전 원장 측과 현격한 시각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마디로 "원 전 원장이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주도 해군기

지 예산안 처리를 보류한 것을 포함,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한 것 역시 종북좌파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자, 북한과 관련이 없더라도 북한 생각에 따르는 세력은 종북좌파"라고 공판에서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특히 "종북 좌파 세력의 주장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과 외견상 비슷할 수도 있어 야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직무범위에 대한 견해 차=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검찰은 국정원법 3조 1항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법 3조 1항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 선전선동 활동이 있더라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정원의 기본 업무를 염두에 두면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업무에 속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인터넷상에 문제의 글을 쓴 아이피를 추적해보니 상당 부분 북한의 지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를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글을 쓴 이들이 일반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유지에 사활 걸려=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검찰이 총공세를 펼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으로서는 박근혜정부 정통성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과 청와대의 압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2701071027255002O〉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종북(從北) 딱지 붙이기' '신종 매카시즘' 등의 강한 표현을 곁들여 원 전 원장 측을 공박한 이유와 배경을 분석한 해설기사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檢, 부적절한 초강경 표현 왜?」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종북딱지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라는 검찰 측 표현을 부적절한 것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기사 본문에는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비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 소개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객관화된 평가인 것처럼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9월 3일자 23면 「학교숙원 공약 받으려 '4천여 학생票' 볼모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성균관대)가 기숙사 필수 입사 필수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4천여명에 달하는 성균관대 기숙사 입주 학생들을 학교측이 표심으로 이용,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성균관대와 재학생에 따르면 성대 기숙사인 봉룡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주소지 이전을 필수로 해야한다.

학교의 입사조건에 따라 봉룡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입사 이후 열흘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 사항이 명시된 주민등록 등본 1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4천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원시 장안구의 투표권자가 되고 있으며, 각종 선거때마다 성균관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다.

지난 10.28 재보권선거 당시 당선된 이찬열 후보는 성균관대 역사 민자유지, 성균관대 BTO산업과 연계된 사업개발, 기숙사 후면 방음벽 설치·전기료 인하를 공약 등을 내세워 성균관대 표심잡기에 올인했다.

또 경쟁후보였던 박찬숙 후보도 성균관대 앞 문화창조지대 조성과 기숙사후면 방음벽 설치, 전기료 인하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안동섭 후보는 성균관대 의대부속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성균관대 학생들의 표심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후보들은 재학생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성균관대가 기숙사 필수 입주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은 일면식도 없는 수원지역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게되는 기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기숙사 입주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건 대학을 관내 대학 중 성균관대가 유일했으며, 수원권 선거 후보자 가운데 특정대학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것도 성균관대가 유일하다.

성균관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재학생 이모(23)씨는 "대부분의 생활은 기숙사보다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집에서 이뤄지는데 주소지 이전을 해 놓아 불편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기숙사 입사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균관대 관계자는 “국민법에 의거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할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필수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668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가 기숙사 입사 필수조건으로 ‘주소지 이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한 학생들은 입사이후 열흘 이내 기숙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뒤 해당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입사한 기숙사 학생은 4천여명이다. 이들은 주소지를 옮긴 탓에 수원시 장안구의 투표권자가 됐으며, 정치권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성균관대와 관련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주소지 이전으로 불편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기숙사 입사를 위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에 따라 두 번째 리드부분에서 『일부에서는 4천여명에 달하는 성균관대 기숙사 입주 학생들을 학교측이 표심으로 이용,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일부의 지적’임을 내세우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기사에서 『“국민법에 의거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할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숙사 입사 최우선 조건 ‘주소지 이전’ 왜?」라는 어깨제목에, 큰 제목을 「학교숙원 공약 받으려 ‘4천여 학생票’ 볼모로」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았다. 제목대로라면 학교 측은 정치권으로부터 학교숙원 공약을 받기위해 주소지 이전을 통해 기숙사 학생 4천여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정치권에서 성대 학생들의 표를 겨냥

해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기술뿐, 학교 측이 정치권으로부터 학교숙원 공약을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다. 또 '볼모'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성급한 예단에 따른 과장되고 선정적인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2.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全羅日報 2013년 10월 10일자 1면 「7년간 유치기업 10곳 중 5곳 문 닫았다」 기사의 제목, 중부일보 10월 18일자 23면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 '게임 중독'」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全羅日報,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羅日報)=『신규기업 유치에 도정이 집중됨에 따라 기존 기업이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4기가 출발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전북에 유치한 기업은 모두 846개로 집계됐다.

2007년 178개를 비롯해 2008년 101개, 2009년 102개, 2010년 126개, 2011년 122개, 2012년 123개에 이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94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6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유치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또 고용보조금, 특별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의 혜택을 앞세워 유턴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휴·폐업한 도내 기업체는 모두 451개사에 달해, 신규기업 유치에만 공을 들일뿐 정작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도내에서만 지난 2007년 86개 업체가 휴·폐업했으며, 2008년 84개, 2009년 73개, 2010년 70개, 2011년 53개, 2012년 41개가 휴·폐업 됐고 올해 6월말 현재는 44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846개 기업이 유치된 반면, 451개 기업이 문을 닫아 통계상으론 기업유치 수 대비 휴·폐업 비율이 53.3%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도내에 10개 기업이 유치되는 동안 5개 기존 기업들이 경영난 등 각종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이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단기재정지원 등 효율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 기업 유치 실적은 전국적으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성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휴·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실직 사태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며 "현행 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기업애로 현장행정 등을 통해 휴·폐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취업 실패 때문에 … 수원시 정자동에 살고 있는 남모(29·무직)씨는 10대 시절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다. 게임방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다보니 학교를 빠지는 날도 많았고 수업시간에는 부족한 잠을 채우는 시간으로 전락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다행히 게임 중독 현상이 줄었지만 2011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에 실패하자 달콤한 게임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씨는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부모님께 받는 용돈 2만원으로 PC방에서 끼니를 때우고 하루종일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 이달 초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 쓰러져 정신을 잃은 이모(16)군은 축구게임인 '피파온라인'의 고수다.

현실에서는 학업에 대한 무게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이 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게임에서 쉽게 맛 본 승리의 쾌감은 이군을 공부와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학원도 가지 않고 독서실에 간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난 이군은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못하면 예민해지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

이군은 학원도 빼먹고 안산시 상록구의 한 PC방에서 7시간이 넘도록 게임을 하던 중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도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걱정의 수준의 넘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마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서다.

17일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들 가운데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 현상이 해마다 8.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 10대 청소년들은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59.3%에 이른다.

이들 중 자신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것을 알지만 게임 금단 현상이 심각해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87.7%에 이른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계자는 청소년기 부터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면 점차 커가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져 성인이 됐을 때 사회성결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선 남씨와 같이 성인 게임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39.9%가 만 10세 이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이현센터장은 "게임중독 증상이 저연령화 되면서 사회성 발달 장애나 안전불감증이 늘고 있다"며 "주위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상기 1면 머리기사에서 큰 제목을 「7년간 유치기업 10곳 중 5곳 문 닫았다」로 뽑았다. 또 작은 제목을 「2007년부터 846개 기업 유치/경영난 이유 휴·폐업 451곳」으로 달았다. 제목만 보면 유치기업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았고, 휴·폐업한 451곳도 유치기업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휴·폐업한 451개사는 유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전북도내에서 문을 닫은 기업체들이다. 기사는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휴·폐업한 도내 기업체는 모두 451개사에 달해, 신규기업 유치에만 공을 들일뿐 정작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밝혀 신규 기업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부일보는 위 기사의 큰 제목을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 '게임 중독'」으로 뽑았다. 제목대로라면 경기도내 10대 청소년 가운데 60%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 10대 청소년들은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59.3%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을 뿐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 가운데 몇 %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기사에는 '도내 10대 청소년 10명중 6명'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위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이고, 이들 중독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59.3%다. 따라서 10대 인터넷 중독자 가운데 59.3%, 전체 10대의 6.3%가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는 셈이다. 이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위 제목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때문에 위 제목은 본문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신문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9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3년 10월 28일자 1면 「툭하면 세무조사 … 국회는 죄인 취급/기업인 82% "기업가 정신 위축"」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기업인은 국회에 불려다니며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정치와 사회가 경제를 짓누르면서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끄고 있어요."

원로 경제학자인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지금은 기업전쟁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로 6회째인 기업가정신주간(10월28~31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23~25일) 결과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대내외 리스크 증가 및 경기 위축'(69.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와 제도(30.9%) △기업인들의 위험감수·도전정신 감소(27.9%) △노사 문제(21.6%) △단기실적 중심의 경영 형태(13.7%) △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9.3%) 등의 순이었다.

현재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는 평균 6.38점(10점 만점)을 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가량으로 낙제점에 가깝다. 4명가운데 1명(25%)은 5점 이하로 평가했다.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50.5%)을 꼽았다. '기업인들의 노력'(22.1%)과 '친기업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17.6%),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9.8%)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기업인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불을 댕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와 혁신을 이뤄내려는 도전의식인 기업가정신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관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란 지적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23~25일)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위 기사는 조사결과 응답자의 81.9%(167명)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재계 자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런데 위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기업인은 국회에 불려다니며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정치와 사회가 경제를 짓누르면서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끄고 있어요."』『"지금은 기업전쟁 시대인데 우리 사회가 기업가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다"』

위 기사는 『"… 세무조사 받고 … 준범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라는 송 명예교수의 주관적 견해를 과장해 「"툭하면 세무조사 … 국회는 죄인취급"」이라는 제목으로 달면서 마치 이것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제목으로 「기업인 82% "기업가 정신 위축"」이라는 내용을 달아 마치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이유가 '툭하면 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고

국회가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편집기자가 제목을 달면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함으로써 보도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이는 신문의 책임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3년 11월 18일자 4면「"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8일 취임후 첫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생관련 법안통과 지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간 정쟁 등 '국회 사보타지'에 대한 우려와 국회정상화를 담았다. 박 대통령은 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 공기관의 방만경영 등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도 시정되지 않은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30여분간에 걸친 시정연설 대부분을 경제 및 민생관련 입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에 할애했다. 취임 후 9개월간 국정운영의 제1 난맥상으로 '입법 지연'을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관련 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흥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꼽히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계류중인 법안을 거론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들어 "내년 국정운영의 제1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체질 전환 등의 첫 시발점도 국회 입법"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간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10월 22일 국무회의)이나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10월 31일 대수비)며 목소리를 높인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사사건건 자신을 정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며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채 국회가 국정원 댓글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자신과 청와대를 논의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야당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 문제를 가져오기 보다는 국회 내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해줘야 국정운영도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 촉구와 함께 시정연설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국정운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권도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철학임을 재확인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인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는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다.

위 기사 제목은 인용부호를 사용, 박대통령이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박대통령의 발언 중 이같은 내용은 없다. 이같은 제목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이다.

또 위 기사는 제목에서는 「“국정 난맥상 주범은 입법지연” 국회 사보타지에 쓴 소리」라고 표현했고 본문에서는 『경제·민생관련 법안통과 지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간 정쟁 등 ‘국회 사보타지’』라고 표현했다.

‘사보타지’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러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면서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보타지’라고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이처럼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의 표제화나 잘못된 개념 규정은 편집기자나 취재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탓으로 일종의 왜곡이나 과장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을 오도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2013년 11월 4일자 1면「음주단속 경관 얼굴뼈까지 함몰시켰는데…/'공권력 폭행' 풀어주는 법원」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공무집행에 반발해 경찰관을 폭행, 중상까지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관할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오후 11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권모 경사는 운전자 황모(28) 씨에게 얼굴을 수 차례 맞아 안경이 깨지고 오른쪽 눈뼈에 골절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진단 결과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판정을 받자 권 경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주거가 불확실하고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장모 경장이 윤모(36) 씨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5시 45분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경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내가 마약을 했지만 곧 풀려날 거야"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폭행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이 맞아도 구속조차 되지 않으니 힘이 빠지고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1만2090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890건에 불과했다.

곽대경(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해 5주 진단의 상처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 등 구속 영장 기각 사례 2건을 다루었다. 위 기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전하면서 이같은 법원의 조처에 대해 비판조로 서술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폭행' 풀어주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같은 제목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구속 조처 자체를 일종의 처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지향하고 있지만,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확

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처리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은 인권보호를 위해 갈수록 불구속 재판을 늘리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기사 제목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공권력 폭행을 풀어주는 법원'이라고 비판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해도 피의자에게는 재판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권력 폭행을 풀어준다」는 제목은 사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어기는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7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 문〉

부산일보 2013년 10월 30일자 4면「제3정부통합전산센터유치/'입지 부산'이냐 '로비 대구'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생산유발효과가 1조 원이 넘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제3센터) 유치를 놓고 부산시와 대구시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제3센터 입지를 발표할 예

정. 부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춘천시, 제주도, 경남 진주시 등 5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대구가 사실상 2파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5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1천여 개 전자정부 업무시스템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연간 운영비만 1천억 원에 달한다.

관리를 맡은 공무원 이외에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인원까지 9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조 2천억 이 넘는다. 현재 1센터는 대전에, 2센터는 광주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기존 센터가 2~3년 내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제3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005년 제 2센터 유치 실패 이후 제 3센터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이 직접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 시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유치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입지조건의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지 평가위원들은 부산 현장실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안행부는 대구를, 평가위원들은 부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당초 강서구 미음지구에 유치를 추진했으나 입지 결정에 '보안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입지 제안서 제출 직전 후보지를 해운대로 바꾸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부산시가 후보지로 내세운 해운대구 좌동 달맞이공원 내 53사단 옛 훈련장 일대는 보안성이 뛰어나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외와 연결된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송정에 데이터베이스 망 기지가 있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또 지역 정치권에 의지하는 유치전략을 펴고 있다.

후보지를 해운대로 옮기면서 지역에 근거를 둔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서 의원의 경우 제 3센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유권자는 물론 부산의 전체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전망. 실제로 부산시 관계자는 "서 의원이 여러 경로로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제 3센터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 고용·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지역 IT산업 활성화, 해운대 달맞이공원 인근 개발 활성화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 2013103000009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유치를 놓고 부산시와 대구시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 해설기사다.

기사는 그러나 대구시인 경우 자치단체장의 활동만 간략하게 소개한 반면, 부산시에 대해선 입지조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했다. 때문에 두 경쟁도시에 대해 공정한 자세로 보도에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편집자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유치/'입지 부산'이냐 '로비 대구'냐?」로 큰 제목을 뽑았다. 제목만 보면 부산은 입지조건상 우위에 있고, 대구는 '로비전'으로 맞서고 있다는 내용인 셈이다.

'로비'라는 표현은 본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기사는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범일 대구 시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유치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기술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로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역시 지역 정치권에 의지하는 유치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로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다. '로비'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부정적이다. 제목의 '로비 대구'는 '로비'를 하는 대구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지나치게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1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3년 12월 6일자 1면 「기업 쥐어짜더니 나라 곳간만 축났다」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융소득을 비롯한 '부가수입'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신고액이 내년에 4년 만에 뒷걸음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는 한편 고강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쥐어짜기식의 조세정책을 펴봤자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나라 곳간만 축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세금수입 중 법인세 신고액을 올해(추경예산 기준)보다 1.4%(4,536억원) 감소한 33조1,92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거두는 법인세는 크게 신고분과 원천징수분으로 나뉜다.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에 부과돼 산업계의 경영여건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그나마 기재부는 내년도 기업들의 이자·배당수입 등이 호전돼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올해보다 4.1%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원천징수분 증가분을 더해도 워낙 신고분 감소분이 커 법인세 총수입은 고작 560억원 늘며 거의 제자리걸음(0.1% 증가)을 하게 된다.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액이 각각 전년 대비 3.7%(1조1,672억원)와 7.8%(2조3,969억원) 줄었는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 국내 기업의 영업실적이 타격을 받은 탓이었다. 이번에는 경기부진 외에 다양한 함수들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민주화 등으로 기업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결과가 세입감소로 나타난 데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단은 4~5년 전과 비슷한데도 정책적 처방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기업 감세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영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세율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2011년 법인세 신고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무려 22%가량(6조1,653억원) 반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조세당국이 기업들의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야권이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액이 내년에 4년만에 줄어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추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기사는 내년에 기업의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법인세 중 신고분으로서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등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4년만에 줄어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측의 전망을 전했다.

그 원인에 대해 위 기사는 "경기 부진 외에 다양한 함수들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풀이하고 이어 '재계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즉, "삼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경제 민주화 등으로 사업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한 것이 사실" "그 결과가 세입감소로 나타난네 데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등이다.

위 기사는 법인세 신고액 감소 전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과 다양한 함수'라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어지는 원인 내용 설명에서는 '다양한 함수' 중 한 가지인 '경제 민주화 등으로 사업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한 것'이라는 내용만 상세하게 서술했다. 위 기사는 본문의 이 대목을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 「기업 쥐어짜더니 나라 곳간만 축났다」는 표현으로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서울경제가 '기업을 쥐어짰다'고 표현한 정부의 정책실행이 과연 다른 효과는 없이 오로지 나라 곳간만 축내게 했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기사 본문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편집기자가 제목을 달면서 기사 본문에 나타난 사실에 임의로 자신의 의견을 덧씌워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함으로써 보도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또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긴 것으로 신문의 책임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7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 문〉

한국경제 2014년 1월 6일자 A3면 「1년새〈2012년 12월 1일 법 시행〉 3057개 '봇물' … '정치性 협동조합' 난립에 깜짝 놀란 與」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불붙었다. 새누리당은 설립 제한을 거의 없앤 전국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맞은 협동조합법이 양당의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첨예한 정치 이슈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 3월까지 협동조합 보완책 마련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성공모델 개발과 제도 정착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 협동조합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조합의 업무분야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1일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3057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여당은 물론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파른 증가세로,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동조합법 10조2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에서 현역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하며 표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협동조합법은 2011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기초가 된 것"이라며 "당초 의도가 어떻든 현재 법 시행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만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박원순 견제 나서나**

여당이 협동조합법 손질에 나선 것은 협동조합 확산을 시정 목표로 세운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작년 2월 "2019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경제 규모를 지역내총생산(GRDP)의 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안에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어 창업자금이나 운영비가 필요한 곳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예산을 활용해 공공성 강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최대 2년간 사업비 8000만원과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의 지원책을 고리로 생성된 인위적인 협동조합은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수직적으로 무한대 팽창이 가능하다"며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 "선거 색안경이 문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협동조합의 포괄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지자체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원조건을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로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협동조합의 조세 감면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경제민주주의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새누리당이 선거 논리에 매몰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협동조합법에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05138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법이 2012년 12월1일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3,057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5개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포괄적인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지자체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나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를 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1년새 3057개 '봇물' … '정치性 협동조합' 난립에 깜짝 놀란 與」라는 통단 제목을 달았다. 마치 법 제정 이후 설립된 3,057개의 협동조합들이 모두 '정치성 협동조합'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기사 본문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기사 본문 중에는 3천여개의 협동

조합 설립을 '난립'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들 조합들이 '정치성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본문의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한 것으로 신문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1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4년 1월 22일자 1면「신용정보유출 대란, 금융사 불법조회도 한몫」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무단조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11.12면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329차례나 들여다봤다.

또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및 직장동료 9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했으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겨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기관주의 처분하고 8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65명은 정직과 감봉, 견책에 처해졌다.

국민은행 역시 직원 57명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9회나 부당 조회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했지만 금감원의 제재는 견책과 주의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은행 직원 12명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친인척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 조회했고 농협은행 하양지점은 지난해 6월 개인정보가 포함된 3.6톤의 중요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약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해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데도 금감원은 농협은행 하양지점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임직원 2명을 경징계한 것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은 행정제재에 머물러 있다.

금융사와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나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임직원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금융사 임직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전반에 불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형사처벌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467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무단조회 사례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문제가 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시기적으로는 물론 사건 내용면에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사 본문에도 이에 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무단조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 첫 문장을 볼 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무단조회 사례를 취재해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신용정보유출 대란, 금융사 불법조회도 한몫」으로 달아 마치 금융사 임직원들의 고객정보 불법조회가 카드사 신용정보유출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 나타난 사실에 임의로 자신의 의견을 덧씌워 기사 내용을 왜곡·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2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 문〉

내일신문 2014년 2월 7일자 1면 「곳곳에 '제2 용산참사' 시한폭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조합측과 주민간 명도소송에 휩싸여 강제철거가 예상되는 3월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제2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가운데 이주하지 않은 가구는 1255가구에 달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16곳 가운데 11곳에서 명도소송 232건이 진행 중이다. 뉴타운 지역인 영등포1-4구역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재개발 지역인 당산4구역이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로구 뉴타운 지역인 돈의문1구역도 51건이나 된다. 마포구 아현1-3재개발 구역은 28건이다.

그동안 조합측과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겨울철(12~2월) 철거금지 조치를 내렸고, 사전협의체를 운영해 갈등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이 되면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구역 가운데 이미 90% 이상 이주한 곳들이 대부분이어서 조합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강제철거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도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철거민조직과 연대해 강제철거에 강하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돈의문1구역 한 상가 세입자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내쫓으면 다른 곳에 가서 자리잡을 수가 없다"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전까지는 이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돈의문1구역 신문로2가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끝난 곳이 있어서 3월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면서 "보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전철연과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도소송이 끝난 뒤 조합이 강제철거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조합과 세입자간 협의자리를 마련해 강제철거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61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대부분에서 조합과 주민 간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강제철거가 예상되는 3월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지 않은 가구가 1255가구이며, 정비사업장 16곳 중 11곳에서 232건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겨울철(12~2월) 철거금지 조치와 사전협의체 운영으로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 충돌이 없었지만 3월이 되면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세입자들이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19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구역 보상대책에 반발해 점거농성을 벌여온 철거민들을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위 기사의 취지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면서도 『명도소송이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될 가능성』과 『정면충돌할 경우 ‘제2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편집자는 기사 제목을 「곳곳에 ‘제2 용산참사’ 시한폭탄」이라며 단정적으로 달았다.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여러 곳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은 본문에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편집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0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6일자 4면 「법사위 '7인의 野人'/국회를 멈춰세우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특검추천위' 설치를 놓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또다시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검제 외에도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기초연금법,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서도 접점 없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 부담이 큰 만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극적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둔다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특검 수사 대상 범죄를 비리로 제한하고, 특검추천위를 법무부에 두도록 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법사위가 26일 열리지 않

을 경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법안이 없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 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방안대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추천위를 정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우려가 높고, 이미 한 차례 '기구특검'에서 '제도특검'으로 특검의 형식적 수위를 양보했다는 점도 민주당이 물러서기 어렵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김도읍 의원 안으로 제출돼 있던 방안인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막바지에 와서 '어거지'를 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콧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0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엔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당장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보육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지원법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보호법도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견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소비자집단소송법 등도 여전히 2월 국회 처리 대기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여야가 2월 국회를 '포기'하기엔 치러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여야 대표가 올해 초 신년 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히 언급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저녁께 만나 임시국회 일정을 연장하면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4월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극적 타협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6000467&md=2014030100535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특검추천위' 설치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기 맞서는 바람에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해 법안 처리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특검후보를 추천할 '특검추천위'를 정부 산하(법무부)에 설치하는 안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반발하다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기사는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700여건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2월 임시국회가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러나 여야 모두 이러한 상황을 빚은데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극적 타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러한 기사 내용 가운데 민주당의 보이콧에만 주목해 「법사위 '7인의 野人'/국회를 멈춰세우다」라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법사위 '7인의 野人'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으로, 민주당 소속 7명의 법사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제목은 민주당 소속 7명의 법사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 활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으로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 법사위원 7명에게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한 것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4년 3월 13일자 10면 「•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그의 혁신 손길에 한국 금융 성패 달렸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갑자기 잡스가 그리워짐. 읽다 만 전기를 영화 개봉 전에 끝내야겠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작고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아 쉬움과 공허함을 토로했던 이가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다. 정 사장은 잡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해 허탈한 속마음을 SNS로 고스란이 나타냈다. 정 사장의 '잡스앓이'는 단순히 한 인간에 대한 그리움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 사장은 틈이 날 때마다 잡스의 위대함을 칭송해왔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추종한 것은 잡스가 추구해왔던 혁신이었다. 실제로 정 사장은 금융권에서 누구보다 혁신에 앞장서온 최고경영자(CEO)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현대카드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팬택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현대카드의 혁신을 넘어선 '파격'이 금융사는 물론 제조업에까지 회자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대카드는 디자인 부문을 맡는다.

이번 일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올 1월 현대카드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보고를 받은 정 사장은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가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카드업계 불황이 깊어지면서 실적은 하락일로에 빠져 있던 터였다. 정 사장은 숙고 끝에 수락했다. 돈(이익)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모바일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라 판단했다.

초기 단계인 지금 두 기업 간 기술융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

렵다. 그러나 결과를 차치하고서 두 기업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전해지는 울림이 크다. 전 세계적인 시대 조류로 떠오른 '융합'의 대표 사례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 사장은 융합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최고경영자(CEO)다. 정 사장이 융합과 혁신, 디자인의 전도사로 사전에 길이 남을 스티브 잡스의 추종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략)

정 사장의 혁신은 이제 미국과 런던 등 글로벌 무대를 향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 금융 3자가 결합된 형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패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늠할 것"(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이라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셈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finance/201403/e2014031218043311749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금융계 핫이슈를 다루는 기획인 '파이낸셜 포커스'를 통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을 집중 조명했다. 최근 현대카드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인 팬택과 손잡고 스마트폰을 출시키로 하면서 정 사장의 혁신이 금융계를 넘어 회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정사장이 현대카드에서 추진한 '스페셜트랙(역량 과 성취 등을 검증해 채용하는 제도)' 등을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하면서 그의 경영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편집자는 이에 인용부호도 없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그의 혁신 손길에 한국 금융 성패 달렸다」고 큰 제목을 뽑았다. 기사 말미에 보도된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패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늠할 것"(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이라는 내용에 바탕을 둔 제목이다.

그러나 제목의 표현은 고위관계자의 발언내용과도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다. 제2금융권인 한 신용카드사 대표의 혁신이 한국 금융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의 손길과 그 성패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늠할 것"』이라는 익명의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내용조차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제목은 익명의 취재원의 근거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과장,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취재원인 정 사장을 필요 이상으로 치켜 올리려고 무리하게 단 제목이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9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 문〉

헤럴드경제 2014년 2월 26일자 10면「'침묵의 암살자' 연일 미세먼지 공포」사진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아래 적시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진설명을 달았다.

연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오전 한강시민공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63빌딩까지의 시야가 너무 흐릿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26000421&md=201403010054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가 대기가 오염된 서울시내의 모습을 사진 기사로 보도하면서 제목을 「'침묵의 암살자' 연일 미세먼지 공포」라고 붙였다.

올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크게 늘어났고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알려진 바 없고 이에 관한 보도도 없었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는 '침묵의 암살자'와 '공포'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넣어 제목을 달았다. 제목이 주는 느낌대로라면 독자들로 하여금 미세먼지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오해하고, 불안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목은 객관적 근거 없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8월 30일자 「하반신까지 훤한 '시스루 여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베니스 여신의 훤한 시스루 자태 '보일듯 말듯'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8.30 00:02 / 수정 2013.08.30 14:00

제70회 베니스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 사회자로 모델 겸 배우 에바 리코보노가 선정됐다.

리코보노는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의 한 해변에서 열린 포토콜 행사에서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한편,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베니스영화제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올해에는 경쟁부문 초청작 20편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영화 백여 편이 상영된다. 한국 영화로는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AP=뉴시스,로이터=뉴스1]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473890〉

〈8. 30. 15:03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배우 리코보노가 베니스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하반신까지 훤한 '시스루 여신'」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이 배우가 해변에서 드레스 차림으로 포즈를 취한 여러장의 사진을 담은 포토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게재된 이 여배우의 사진은 상반신의 속살이 다소 비칠 뿐 하반신까지 훤히 비치는 '시스루 패션'과는 거리가 멀다. 하반신이 비치는 여배우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올바른 보도행위가 아니다.

기사 내용을 과장하여 제목을 다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5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2일자 「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 대체 뭐하는 곳?」 제목 등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메인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9. 2. 16:39 캡처〉

1)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 대체 뭐하는 곳?

[사진] 일탈·자유·퇴폐… 버닝맨, '여기가 지상낙원?'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9.02 00:01 / 수정 2013.09.02 09:12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26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버닝맨(Burning Man)' 축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31일에는 축제의 트레이드마크인 '맨(Man)'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버닝맨 축제는 1886년 모닥불 파티에서 나무 인형을 태운 것을 기원으로 해 현재 6만1000여 명이 참가한 큰 축제로 성장했다. 버닝맨이라는 축제로 인해 블랙록 사막에는 '블랙록 시티(Black Rock City)'라는 무채물 형태의 실험적인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축제는 일 년에 한 번, 8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9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자유를 예찬하는 참가자들이 모여 일탈을 즐긴다.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하거나 작품을 선보이며 마지막날엔 온갖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버닝맨 축제는 90년대 중반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와 세르게이가 구글 직원들과 함께 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이후 버닝맨 축제의 비상업화 정신은 구글의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영상팀 [AP=뉴시스,로이터=뉴스1]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492040〉

2)브라 훌렁 女학생 중요 부위에

[사진]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온라인 중앙일보]입력 2013.09.02 00:10 / 수정 2013.09.02 09:23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29일(현지시간) 후안 미누엘 산토스 대통령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상의를 벗은 여학생들이 몸에 구호를 적은 뒤 시위에 참가 했다. 학생들은 비료가격 인하와 값싼 외국산 감자 양파 우유 등의 수입금지요구를 하고 있는 농부들을 지지했다. 또한 자신들도 정부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는 점차 규모가 커져 이날은 수 천명의 농부와 근로자들이 참가해 보고타 시내를 행진했다. 시위는 FTA시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커피생산 농민부터 시작했다. 여기에 다른 작물재배 농민도 참가하고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근로자들이 가세가 전국적인 규모로 시위가 커졌다.

콜롬비아는 최근, 미국, 캐나다 등과 연이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8월 초에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이번 시위는 반군 단체 무장혁명군(FARC)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무장혁명군은 현재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들을 지지하면서 협상입지가 우세해지고 있다. 영상팀 [로이터=뉴스1, AP=뉴시스]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49208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1)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참가자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가슴 드러낸 풍만女, 다리 벌린 女…」라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고, 2)유두를 테이프로 가린 채 토플리스 차림으로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에 참가한 여대생의 사진에 「브라 훌렁 女학생 중요 부위에」라고 제목을 붙여 시위의 목적성을 폄하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희화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출을 한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요약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듯한 제목을 다는 것은 대중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닷컴 발행인 김 상 규

〈주 문〉

스포츠서울닷컴 2013년 10월 14일자(캡처시각) 「클라라 지드래곤 포착, 클럽서 은밀하게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3. 10. 14 10:54(캡처시각)〉

입력: 2013.10.14 10:03 / 수정: 2013.10.14 10:03

클라라 지드래곤 사진 본 누리꾼 "믿을 수 없어"

[스포츠서울닷컴 | e뉴스팀] '클라라 지드래곤, 진짜 사진 맞아?'

최근 클라라와 지드래곤이 한 클럽에서 춤을 즐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의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SNS에는 클라라와 지드래곤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 속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검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과 몸을 맞대고 있다. 게시자에 따르면 이 사진은 11일 오전 한 클럽에서 진행된 박재범 힙합 레이블 'AOMG' 론칭 파티에 참

석한 클라라와 지드래곤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진이 워낙 흐릿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누리꾼들은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의심을 보이고 있다.

클라라 지드래곤의 파티 사진에 누리꾼들은 "클라라 지드래곤이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춤을 췄다는 게 뭔가 의심스럽다", "클라라 지드래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이 더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클라라 지드래곤, 맞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클라라와 지드래곤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sseoul@media.sportsseoul.co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1252447.htm?from=naver〉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닷컴은 최근 클라라와 지드래곤이 한 클럽에서 춤을 췄다는 정체불명의 사진이 SNS에 올려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하였다. 기사의 대부분은 '진위여부를 알 수 없다' '추정된다' '네티즌은 의심을 품고 있다'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강조하고 원제목도 「클라라 지드래곤 사진 본 누리꾼 "믿을 수 없어"」라고 달았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메인화면에는 캡처한 바와 같이 「클라라 지드래곤 포착, 클럽서 은밀하게…」라는 제목 하에 선정적인 사진을 함께 게재해 마치 서로 몸을 부비고 춤을 춘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였다. 대부분의 매체들도 이내용을 다뤘지만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을 뿐 단정적인 제목을 달지 않았다.

클라라의 소속사도 "클라라가 해당 클럽에서 지드래곤을 만났다"는 사실만 밝혀 두 사람이 실제로 춤을 함께 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사진 역시 화질이 워낙 나빠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상태다.

특히 미혼의 인기연예인 교제에 관한 보도는 자칫 인기추락이라는 치명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3년 11월 1일자(캡처시각)「20대 직장女 남자선배 몰래와 귓속말로 '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1 16:12 캡처시각〉

『[직장人 직장낀] 밥에 금 넣었나 … 직장인 피 말리는 점심값

기사입력 2013.11.01 11:11:40 | 최종수정 2013.11.04 17:30:00

점심값이 '금값'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지만 왜인지 점심값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체감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것 같

아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메뉴 고민을 멈출 수가 없다.

(중간 생략)

◆ **도시락을 싸오자니 냄새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점심메뉴인 만두전골과 김치찌개

지난 6월 취업한 김경미(가명)씨는 넉넉지 않은 월급을 아껴보자며 도시락을 준비해 출근하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는 옆자리 선배가 "어디서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그렸다.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봤더니 도시락이 엎어져 경미씨 가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것.

경미씨는 "첫월급을 받았다고 큰 마음먹고 산 가방인데 아낀 점심값보다 세탁비가 더 나왔다"며 우는 소리를 했다.

게다가 회사엔 마땅히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 없어 난처한 적도 종종 있다. 탕비실은 점심을 같이 먹는 동기 2명과 함께 들어가기에 비좁았고 사무실에서 먹자니 음식 냄새가 남아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였다.

경미씨는 "사무실에서 며칠 도시락을 먹었다가 지금은 포기했다"고 전했다. 점심시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상사가 냄새가 난다며 불쾌해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이◯◯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6916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는 기획물의 하나로, 점심값이 비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여직원이 도시락을 싸왔다가 냄새가 난다는 직장상사의 지적 때문에 이를 포기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에는 가방에 넣어둔 도시락이 엎어져 옆자리 선배가 김치냄새가 난다고 코를 찡그렸다는 내용 뿐인데, 제목은 「20대 직장女, 남자선배 몰래와 귓속말로 '헉'」이라고 달았다.

기사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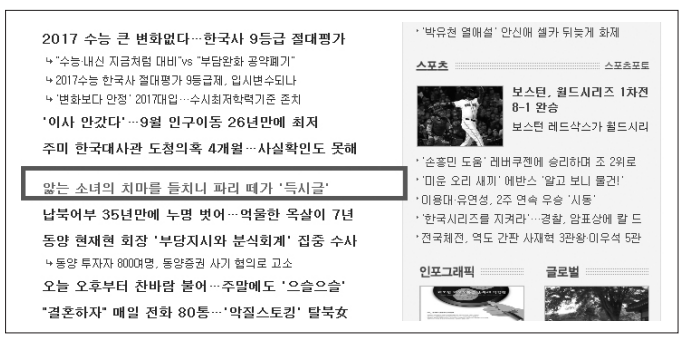
▲ 2013-3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세계닷컴 2013년 10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 「앓는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파리떼가 '득시글'」, 조인스닷컴 10월 24일자 「소녀 다리 들추니 구더기가 살 파먹고 … 40년전 그곳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과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7 수능 큰 변화없다…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수능·내신 지금처럼 대비"vs "부담완화 공약폐기"
↳2017수능 한국사 절대평가 9등급제, 입시변수되나
↳'변화보다 안정' 2017대입…수시최저학력기준 존치
'이사 안갔다'…9월 인구이동 26년만에 최저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의혹 4개월…사실확인도 못해
앓는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파리 떼가 '득시글'
납북어부 35년만에 누명 벗어…억울한 옥살이 7년
동양 현재현 회장 '부당지시와 분식회계' 집중 수사
↳동양 투자자 800여명, 동양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 불어…주말에도 '으슬으슬'
"결혼하자" 메일 전화 80통…'악질스토킹' 탈북女
'박유천 열애설' 안신애 셀카 뒤늦게 화제
스포츠 스포츠포토
보스턴, 월드시리즈 1차전 8-1 완승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시리
'손흥민 도움' 레버쿠젠에 승리하며 조 2위로
'미운 오리 새끼' 에반스 '알고 보니 물건!'
이용대·유연성, 2주 연속 우승 '시동'
'한국시리즈를 지켜라'…경찰, 암표상에 칼 드
전국체전, 역도 간판 사재혁 3관왕·이우석 5관
인포그래픽
글로벌

〈세계닷컴 2013. 10. 24 14:48 캡처시각〉

입력 2013-10-24 08:54:10, 수정 2013-10-24 13:45:03

일본인 목사가 기록한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연합〉

일본인 목사가 기억하는 청계천의 '그 시절'

노무라 리포트_310. 1974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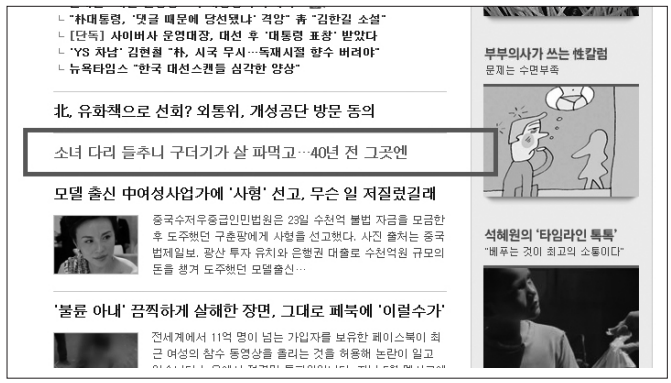
1974년 9월 청계천 빈민가의 한 쪽방을 찾아간 일본인 목사는 바로 누울 공간도 없어 대각선으로 누워 앓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옆구리 밑과 무릎 부근에 하얀 뼈가 드러나 있고 파리 떼가 까맣게 소녀의 뼈를 덮고 있었다.

목사는 파리 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간 생략)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24/20131024000336.html〉



〈조인스닷컴 2013. 10.24 16:53 캡처시각〉

〈http://joongang.joins.com/〉

『일본인 목사가 기록한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

[CBS노컷] 입력 2013.10.24 11:09

파리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고 구더기까지

(사진=1974년 9월의 '노무라 리포트')

1974년 9월 청계천 빈민가의 한 쪽방을 찾아간 일본인 목사는 바로 누울 공간도 없어 대각선으로 누워 앓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옆구리 밑과 무릎 부근에 하얀 뼈가 드러나 있고 파리 떼가 까맣게 소녀의 뼈를 덮고 있었다.

목사는 파리떼가 산 소녀의 다리에 알을 낳아 구더기가 생겼고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중간 생략) 연합뉴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07/12945007.html?ctg=1700&cloc=joongang|home|newslist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구호활동을 펴왔던 일본인 노무라 목사가 당시 빈민의 참상을 전하는 500여 장의 사진을 엮은 사진집 '노무라 리포트'가 최근 출간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또 "노무라 목사는 서문에서 '한국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당연히 한국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중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본이 한국에 범한 그 무서운 침략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고 적었다"고 덧붙이고 "그가 서울시로부터 명예 서울시민증을 받는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빈민가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한 외국인이 당시 생활상을 기록으로 남긴 사진집을 펴냈다는 감동적인 얘기를 전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몸속에 구더기가 파들어갈 정도로 앓다 숨진 소녀의 사연만을 부각시켜 「앓는 소녀의 치마를 들치니 파리떼가 '득시글'」「소녀 다리 들추니 구더기가 살 파먹고 … 40년전 그곳엔」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당시 소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표현인 동시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해야 하므로,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과도하게 포장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3년 12월 5일자(캡처시각) 「볼륨 女, 조깅하다가 남자 앞에서…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늘의 한경닷컴

볼륨 女, 조깅하다가 남자 앞에서…'충격'

소비생활硏, 18종 비교·휠라·푸마 등 쉽게 파손…리복·르까프는 우수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새벽 조깅을 즐기는 20대 여성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조깅을 하는 이들은…

'진격의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실적 알아보…

수입차 판매량이 줄 들어 11월까지 14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승용 RV 시장에서 점유율 12.2%를 올리고 있다. 주요 브랜

HOT NEWS

· 17개 女, 동네 야채씨 만나 임신 후…경악
· 에일리, 누드 유출되더니 이번엔…깜짝
· SM 이수만, 잘 나간다 했더니 창연습생들…
· 노래방 도우미女, 먼저 '2차' 가자며…헉!
· 이수근, 숨겨진 주식부자? 양환석과 차이가
· 류시원 "부인 안 때려" 실상은…'충격'

못지 못할 '베스트 애널리스트' … 푸념 가득한 이유

"연말 막바지 '영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에게 '러브콜' 한 통이라도 더 하느라 바쁩니다." (A 증권사 애널리스트) '베스트

내연 男과 짜고 아산에서 '충격행위'

〈캡처시각 12.05 16:47〉

잘 찢어지는 경량 러닝화

입력 2013-12-04 21:33:24 수정 2013-12-05 02:34:32

지면정보 2013-12-05 A21면

소비생활硏, 18종 비교

휠라·푸마 등 쉽게 파손 … 리복·르까프는 우수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그물실 매듭 형태의 메시 소재를 사용한 9개 운동화 브랜드의 러닝화 18종을 대상으로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11개 품목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종합적으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리복(제품명 서브라이트듀오·10만9000원), 르까프(알파런고·12만4000원), 나이키(에어맥스+2013·20만9000원)가 꼽혔다.

러닝화 18종의 갑피 파손 여부

5만1200회 시험에도 갑피 파손되지 않음	5만1200회 시험시 갑피파손 발생	2만5600회 시험시 갑피파손 발생
리복 '서브라이트듀오'	프로스펙스 '알라이트윈드2'	휠라 '버블런3.0 플래쉬'
뉴발란스 'M3090BG2'	프로스펙스 '알라이트핏5'	아식스 'GT2000'
르까프 '알파런고'	르까프 '플렉스온2.0'	푸마 '파스600s'
휠라 '버블런3.0가드'	리복 '원쿠션'	아식스 '젤카야노19'
나이키 '루나글라이드+5'	아디다스 'CC 솔루션'	
푸마 '바이오웰엘리트글로우'	뉴발란스 'M884BB2'	
나이키 '에어맥스+2013'	아디다스 'CC 레볼루션'	

자료:한국소비생활연구원

조사 대상은 프로스펙스(한국), 르까프(한국), 리복(독일), 푸마(독일), 아디다스(독일), 나이키(미국), 뉴발란스(미국), 휠라(미국), 아식스(일본) 등 9개 브랜드의 메시 소재를 사용한 러닝화다.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이들 제품의 △반복굴곡에 대한 내구성(신발을 여러 번 구부렸다 폈을 때 견디는 정도) △미끄럼 저항 △충격흡수 정도 △마찰에 대한 마모내구성 △접착 강도를 측정했다.

마찰포로 신발을 문지르자 아식스(제품명 GT2000·11만9000원, 젤카야노 19·14만5000원), 휠라(버블런3.0플래쉬·11만9000원), 푸마(파스600S·12만 9000원) 등 4개 제품이 가장 먼저 파손됐다.

푸마코리아 측은 "러닝화 기능을 살린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바닥을 반짝이게 만든 패션 운동화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공감 코너에서 볼 수 있다.

민○○ 기자 spop@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47394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9개 운동화 브랜드의 러닝화 18종을 대상으로 성능을 비교 평가한 결과 11개 품목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발표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자사 초기화면에 「볼륨 女, 조깅하다가 남자 앞에서 …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기사에는 조사대상 브랜드와 성능측정 항목 및 측정결과 내용만이 있을 뿐 제목을 뒷받침할 만할 내용은 전혀 없다.

브랜드명까지 적시하며 「휠라·푸마 등 쉽게 파손 … 리복·르까프는 우수」라고 제목에 반영한 것은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이 우수한가를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운동팬츠 차림의 남녀 사진을 게재하고 불륨녀 운운하며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목을 다는 등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는 동시에 특정 제품을 부각하기 위한 행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세계닷컴 2013년 12월 20일자(캡처시각) 「'하룻밤 5000만원' 성매매 女연예인 1명 있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2. 20 15:02 캡처시각〉

입력 2013-12-19 17:24:54, 수정 2013-12-19 17:55:38

檢, 연예인 성매매 수사 결과 발표 "조혜련-이다해-윤은혜 등 혐의 없어"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혐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유명 여자 연예인 B씨 등 남자 3명(이 중 알선책은 1명)과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명 작곡가 사무실에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들과 연예인들 사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예인 B씨는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5000만원을 받고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연예인들도 한번에 300만원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 올랐던 또 다른 유명 여자 연예인 C씨는 혐의가 인정 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됐다.

증권가 소식지, 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소식통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여배우들은 대부분 무혐의거나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루머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이다해 조혜련 윤은혜 김사랑 신지 등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여배우들이 소식지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차원에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명 탤런트 B씨 등 여성 연예인 수십명이 벤처사업가, 기업 임원 등 재력가 남성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후 증권가 소식지 등을 통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해당 연예인들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19/2013121900546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닷컴은 검찰의 연예인 성매매 혐의 관련 수사 발표를 보도하면서 제목을 「'하룻밤 5000만원' 성매매 女연예인 1명 있었다」고 달았다. 검찰 측 발표는 "연예인 B씨는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5000만원을 받고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연예인들도 한번에 300만원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다.

현직 가수, 배우 등 인기 연예인이 다수 연루됐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대량 유포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고, 실명이 거론된 해당 연예인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파장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흥미위주의 제목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들 유명 연예인들이 소식지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차원이었다고 기사에서 밝혔음에도 사실을 부풀려 '하룻밤 5000만원'이라고 강조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위 기사는 제목의 자극적인 표현 덕분인지 자사 〈인기뉴스〉 1위에 오른바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

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폄하했다는 인상을 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 문〉

서울경제 2014년 1월 6일자(캡처시각)「전 재산을 … 박대통령 깜짝 발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구독하기 | 오늘의신문 보기 | 이용자 한마디 | 01-06 15:42 편집

NAVER 지금 들리는 음악♪ 제목이 궁금하다면? 소리로 검색하는 네이버앱 음악 검색

전 재산을… 박 대통령 깜짝 발언

└ 작정한 박 대통령 칼 빼들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국민행복"
└ "소통 더 힘쓰겠지만 불법행동 엄정대처"

지드래곤 아버지 모습에 '깜짝'
여대생 지나가자 갑자기 바지를…
속보 한국, 北에 '이산가족 상봉하자'
박은지 드러난 속살에…
90살 백도날드만 먹은 결과는…
'아빠어디가' 류승룡 아들 화제
소녀시대 태연 헐대해서…
'국악소녀' 과거 알고보니…
노무현 향수 타고 벌떼처럼…

악발 떨어진 쏘나타 확 달라진다

새해 벽두부터 2014년을 빛낼 베스트 셀링카 등극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며칠 없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순위

미혼남녀가… 한국서 벌어진 기현상
중동서 또… 한국 '초대박' 터졌다
4조 쏟아부은 한국 조선 급기야…
안철수측, 박 대통령에 직격탄
일본 때문에… 최악 위기 닥친 한국
전세계 놀랄 한국 야심작 드디어…

급속한 '그레이트 로테이션' 없다

"한국 비금융 회사채 주의해야"

서울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캡처시각 1. 6 15: 39〉

朴대통령 "통일 시대 준비 … 설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남북통합 시작되면 전 재산 한반도에 쏟겠다"

입력시간 : 2014.01.06 13:25:26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면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통일부 등 관계 당국에 이산가족상봉 대북제안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한 정정과 관련,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논란과 관련해선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디지털미디어부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1/e20140106132526931 3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전 재산을 … 박대통령 깜짝 발언」이란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유도한 뒤 기사 본문에 『朴대통령 "통일 시대 준비 … 설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라고 메인 제목을 게재하고 부제를 「"남북통합 시작되면 전 재산 한반도에 쏟겠다"」로 달았다.

이 같은 제목은 누가 보더라도 '朴대통령이 남북통일 되면 자신의 전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기사 내용은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라는 것 뿐이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므로, 제목과 기사내용이 유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독자를 오도하게 되므로 주의 깊게 작성되

어야 한다. 朴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인데다 국내외적으로 얽힌 문제가 많아 한마디 한마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제3자의 발언을 마치 朴대통령의 발언인 것처럼 '깜짝 발언'이라고 소개한 것은 신중한 보도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한 측면이 있어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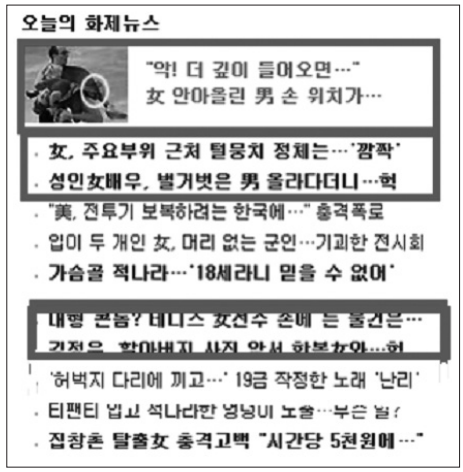
▲ 2014-3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4년 1월 17일자(캡처시각) 1)「"악 더 깊이 들어오면… 女 들어올린 男 손 위치가…」, 2)「女, 주요 부위 털뭉치 정체는… '깜짝'」, 3)「성인 女배우 벌거벗은 男 올라타더니…헉」, 4)「대형 콘돔? 테니스 女선수 손에 든 물건은…」, 5)「김정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복女와… 헉」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이 보도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17. 11:31 캡처시각〉

〈http://joongang.joins.com/article/594/13817594.html?ctg=1200〉

1) "악! 더 깊이 들어오면…"

女 들어올린 男 손 위치가…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6&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2) 女, 주요 부위 털뭉치 정체는 … '깜짝'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8&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3) 성인 女배우 벌거벗은 男 올라타더니 … 헉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34&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4) 대형 콘돔? 테니스 女선수 손에 든 물건은 …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27&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5) 김정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복女와 … 헉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3663478&cloc=joongang|article|today_topic〉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자사사이트 서브페이지 〈오늘의 화제뉴스〉 난에 위 적시된 제목을 게재하고 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1)은 피겨스케이팅 페어경기 도중 여자 파트너를 들어올리는 남자 선수의 손이 치마 밑에 보일 뿐인데 마치 남자가 못된 행동이라도 한 듯 사실을 왜곡해 표현하였고, 2)는 아시아모델 시상식에서 무대에 오른 출연진 의상의 단순한 장식물을 성과 연관지어 야릇한 표현을 하였으며, 3)은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에 대해 남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으며, 4)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여자테니스 선수가 든 얼음물 비닐주머니를 콘돔에 빗대 표현하였으며, 5)는 김정은 제1위원장 옆에 한복 입은 여성이 있을 뿐인데 터무니없게 '헉'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폄하했다는 인상을 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 문〉

매경닷컴 2014년 1월 19일자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

기사입력 2014.01.19 09:37:45 | 최종수정 2014.01.19 09:39:48

북한에서 '아미돈'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아미돈을 제조·공급하는 약장사들이 늘면서 이를 복용하는 주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무역상에 따르면 "과거에도 아미돈이 유통되긴 했지만 최근 아미돈을 복용하는 주민이 크게 늘었다"며 "아미돈의 경우 마약성분 순도가 90%에 달해 약 효과가 센 데다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서 깨면 아미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 살림을 모두 장마당에 싼 값에 내다 팔 정도"라며 "아미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함경남도 함흥으로 전국으로 유통된다"고 전했다.

또 "아미돈의 경우 뱃일이나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 등이 주로 이용해 설 등 명절 선물에 아미돈을 선물하기도 한다"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장사나 부역 등 고된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달래기 위해 아미돈을 복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을 일종의 치료제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있는 데다 제조하는 장사꾼이 당국 검문에 걸려도 본보기가 아닌 이상 뇌물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쉽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5760&sc=3000005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에서 '아미돈'이라

는 이름의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장사나 부역 등 고된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달래기 위해 아미돈을 복용한다"고 밝혔을 뿐인데, 제목은 「북한 여성들,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이라고 달았다.

인용한 데일리NK의 기사도 "마약에서 깨면 아미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 살림을 모두 장마당에 싼 값에 내다 팔 정도"라고 하는 등 과장된 측면이 엿보일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무역상'으로 익명으로 밝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더욱이 위 기사는 북한여성들이 언제 마약을 복용하는지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육체적 피로 달래기 위해 밤마다 …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아 독자에게 억측이나 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스포츠동아) 발행인 김 일 홍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4년 3월 12일자(15시48분) 1)「정우성과 불륜...17세 연하녀」, 3월 12일자(19시28분) 2)「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스탠드 3. 12. 15:48 캡처〉

'마담뺑덕' 정우성 목격담, 미모 팔짱女 누구? 모델출신 이솜

입력 2014-03-12 13:03:00

배우 정우성의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극 중 상대 배우 이솜이 주목받고 있다.

11일 각종 SNS에는 정우성 전주 목격담들이 속속 등장했다. 목격담과 함께 공개된 한 사진 속에는 정우성과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여성은 모델 출신의 이솜으로 알려졌다.

전주영상위원회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주 객사에서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쏙쏙 올라오고 있다"며 "정우성 씨 맞다. 정우성 씨가 영화 '마담 뺑덕'을 전주에서 촬영하고 있다"고 촬영 소식을 전했다.

정우성은 영화 '마담 뺑덕'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으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지방으로 좌천된 국문과 교수 심학규 역을 맡았다. 이솜은 정우성의 상대 불륜녀 역으로 등장한다.

이솜은 173cm 큰 키와 동양미를 지닌 모델 출신의 배우다. 이솜은 2008년 케이블채널 Mnet 모델 선발 프로그램 '체크 잇 걸'로 데뷔, 영화 '맛있는 인생',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사이코메트리', '하이힐' 등에 출연했다.

'정우성 목격담'에 누리꾼들은 "마담뺑덕 정우성 목격담, 아 나도 실물 한 번 보고싶다", "마담 뺑덕 정우성 목격담, 얼마나 잘 생겼길래", "전주에서 정우성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우성씨 꼭 커피 광고 찍는 것 같다","마담뺑덕 정우성 목격담, 우월해서 몰라볼 수 없겠다", "마담뺑덕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40312/61646397/3〉

〈뉴스스탠드 3. 12. 19:28 캡처〉

유명 항공사, 승무원 성상품화 논란 … '경악'

입력 2014-03-12 17:50:00

일본 중견 항공사 스카이마크의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카이마크는 5월 말부터 취항하는 에어버스 A330의 국내선(일본)에 탑승하게 될 여성 승무원들의 유니폼을 초미니스커트 형태로 디자인해 구설에 휘말렸다.

이 유니폼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에어버스 공장에서 첫 선을 보였고,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항공노동조합에 가입된 승무원으로 구성된 승무원연락회가 "긴급한 보안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여성을 상품 취급하고 성희롱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성에 지도를 요청했다.

이에 스카이마크 사장은 지난 7일 하네다공항에서 개최된 A330의 내람회에서 "승무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자들만 입게 할 것"이며 "기간 한정으로

성희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유니폼을 적용하겠다고.

한편 스카이마크 에어버스 A330는 5월 31일 하네다~후쿠오카 노선을 시작으로, 나하 선, 삿포로 선까지 일본 내에서만 운항된다.

사진 | 스카이마크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40312/61657599/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정우성과 불륜 … 17세 연하녀」 및 「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사를 열어보면 기사의 제목은 각각 「'마담뺑덕' 정우성 목격담, 미모 팔짱女 누구? 모델출신 이솜」 및 「유명 항공사, 승무원 성상품화 논란 … '경악'」으로 돼 있다. 「정우성과 불륜 … 17세 연하녀」 기사의 내용도 정우성의 드라마 촬영장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정우성의 불륜과 거리가 멀다. 이는 「여승무원 매춘부 만드는 유니폼, 쇼킹해」도 마찬가지다. 정우성과 불륜을 한 것으로 왜곡한 17세 연하녀는 함께 영화를 촬영 중인 상대배우 이솜이고, 여승무원을 매춘부로 만드는 유니폼이 아니라 실은 여승무원의 유니폼을 초미니로 제작, 착용하게 한다는 것 뿐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과장 및 왜곡된 제목으로 불필요한 상상을 유도해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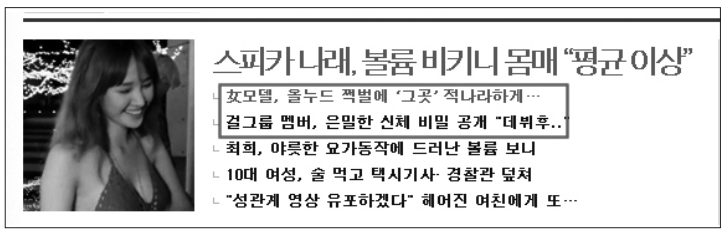
▲ 2014-3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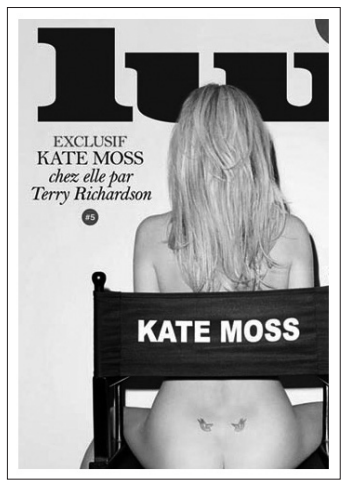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4년 3월 12일(16시 22분) 「여모델, 올누드 쩍벌에 '그곳' 적나라하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 12. 16:22 캡처〉

『톱 모델 케이트 모스, 전라의 뒤태 공개 '파격'

세계적인 모델 케이트 모스가 전라의 뒤태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최근 프랑스의 남성지 루이(Lui)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전라 상태의 케이트 모스의 모습이 담긴 잡지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유명 사진작가 테리 리처드슨과 함께 작업한 이번 촬영에서 케이트 모스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감독 의자에 앉아 매혹적인 뒤태를 뽐냈다.

한편 올해 마흔 살이 된 케이트 모스는 유명한 남성웹사이트 AskMen.com에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신 99명중 10위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Lui 트위터 캡처』

〈http://isplus.joins.com/article/666/14129666.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여모델, 올누드 쩍벌에 '그곳' 적나라하게」란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사를 열어보면 기사의 제목은 각각 「톱 모델 케이트 모스, 전라의 뒤태 공개 '파격'」으로 돼 있다. 뉴스스탠드 제목에 따르면 벌거벗은 여 모델이 다리를 쩍 벌려 은밀한 곳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선정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는 모델 케이트 모스가 나체의 뒷모습을 보이는 내용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과장 및 왜곡된 제목으로 불필요한 상상을 유도해 독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4년 3월 12일자(17시16분) 「20대 女직장인, 은밀한 '이중생활'…주말마다 가는 곳이 '깜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3. 11. 17:16 캡처〉

『직장인의 봄·봄·봄 … 쌓이는 청첩장 보니 봄 맞구나!

입력2014-03-10 21:14:44 수정2014-03-11 04:27:11 2014-03-11 A27면

왔구나 싶으면 도망가고 없는 찰나의 계절

내려앉는 눈꺼풀, 눈꼴신 저 커플 … 찬란해서 더 가혹한 봄날의 햇살이여

골프·캠핑 … 달콤피곤한 주말

상사 모시고 필드 나가야하고, 가족들 성화에 바비큐 굽고…

잠에 취하는 '잠잠한 날' 간절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눈부시게 화창했던 지난 일요일. 유통업체에 다니는 '골드 미스' 윤 과장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을 스마트폰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고 제주 7번 올레길을 묵묵히 걸었다. 노래 가사에선 둘이 걷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홀로 뚜벅이며 걸었다. 고기국수, 흑돼지, 마라도 짜장면 등등 제주 맛집도 주말 동안 혼자서 섭렵했다.

이런 모습 좀… 궁상맞지 않느냐고? 유난히 계절을 타는 윤 과장에게 이런 주말 여행은 봄을 맞는 하나의 '힐링'이자 '의식'과도 같다.

"이렇게 좋은 날 집에 있음 더 울적하잖아요. 햇빛만 보면 괜히 두근두근해요. 사춘기 때는 오히려 조용했는데 30대 중반 접어들고 더 봄을 타는 것 같아요."

◆서른 즈음이라 더 울적한 봄

일조량 증가→기온 상승→체온 상승→근육 이완→세로토닌 호르몬 분비 촉진→감정 변화. 현대 의학은 사람들이 봄을 타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그런데 증권사 정 대리가 요즘 심하게 감성적인 건 꼭 세로토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스물아홉 꽃처녀인 그녀에게 이번 봄은 '20대에 맞는 마지막 봄'이라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떠나가는 20대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까지 더해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얼마 전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듣는데 예전과는 달리 눈물이 주루룩 나는 거 있죠."

정 대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해결책을 '몸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에서 찾았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봄 마라톤에 참가신청을 했고, 주말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춤을 배우는 스윙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대학 선후배 중 싱글녀들끼리 똘똘 뭉쳐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식신원정대'도 조직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은 걱정스런 눈치다. "자꾸 싱글녀들끼리 뭉쳐 다니면 남자 더 못 만나는데…. 정 대리는 지금 돌아다닐 게 아니라 소개팅을 해야 돼요."

◆**벚꽃이 지기 전 사랑을 만들리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싱글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3년차 직장인 K는 "이달 안에 어떻게든 여자 친구를 만들겠다"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소개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입사 이후 봄에는 늘 솔로였다는 그는 매년 4월 열리는 윤중로 벚꽃축제에 바글바글 몰려드는 커플들을 바라보며 '난 무엇을 위해 일만 하고 사나'하는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K는 여자들 외모를 깐깐하게 따졌던 외모지상주의(?)를 버리고 "이달엔 어떻게든 눈을 최대한 낮춰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보회사에 다니는 27세 싱글녀 Y도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단다. '썸남(사귀는 건 아니지만 마치 곧 사귈 듯 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이 될 만한 남자들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횟수도 부쩍 늘었다고. "결혼 시즌이라 슬슬 청첩장도 밀려들어서 기분이 더 꿀꿀해요. 조건 안 따질 테니 누가 나 좀 확 끌어주면 안 되나?"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봄을 맞아 감수성이 샘솟는다는 건 어찌보면 젊다는 증거일 것이다. 40대 유 부장에게 봄이란 '주말이 사라지는 피곤한 계절'이다. 겨우내 잠잠했던 골프 접대 약속이 빽빽이 차면서 유 부장의 토요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부터 가족들 깰까봐 주섬주섬 눈치 보며 나오는 것도, 상사를 픽업해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것도, 거래처 손님들을 모시고 골프를 쳐야 하는 모든 것이 적잖은 스트레스"라고 털어놨다.

유 부장은 종합비타민과 홍삼농축액을 잔뜩 챙겨 먹으며 체력 비축에 나섰다. "해가 갈수록 일정은 빡빡해지는데 춘곤증은 왜 이리 심해지는지…. 아! 세월이 무상합니다."

결혼 2년차 워킹맘 P 역시 따뜻해지는 날씨가 두렵다. 소문난 '캠핑광(狂)'인 남편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끌려다닐 판이어서다. 신혼 때 캠핑 재미에 눈을 뜬 P의 남편은 성과급을 몽땅 쏟아부어 캠핑용품을 사더니만, 토요일마다 P를 깨워 캠핑장으로 향한다. "잠 좀 자게 놔둬!" "혼자 가!"라고 발버둥(?)쳐봤지만

남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에 늘 무릎을 꿇는다고.

"이젠 그냥 순순히 따라가요. 남편이 깨우면 '응, 알았어' 하고 좀비처럼 일어나 조수석에서 부족한 잠을 자죠. 그래도 막상 캠핑장에서 맑은 공기 쐬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좋긴 좋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며 바비큐 구워주는 남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결론은 남편 자랑인 것인가.

◆**봄 신상 자랑하고 가실게요**

봄이 되면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볍고 화사해지기 마련. 하지만 자칭 '패셔니스타'를 자부하는 A의 올봄 콘셉트는 사내에서 이런저런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잔뜩 쇼핑해 둔 올봄 신상품들을 과시하듯 A는 매일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도 쿠튀르적이면서 과감한 노출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옷차림이 보수적인 분위기의 이 회사에선 '투 머치(too much·과하다는 뜻)'라는 것.

"100m 밖에서도 알록달록한 A를 딱 알아볼 수 있으니 편하긴 한데요. 여기는 밀라노가 아니고 광화문인데 좀…. 그렇다고 여자 후배에게 '덜 파인 걸 입으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어쩔 수 없죠."

백화점에서 일하는 34세 유부남 박 과장은 봄옷 사느라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하소연한다. 비즈니스 캐주얼이 정착된 지는 꽤 됐지만, 새로 취임한 최고경영자(CEO)가 옷을 '잘'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고객들에게 패션을 파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부터 스타일이 남달라야 한다"는 CEO 메시지가 떨어진 이후 이 회사 남자 직원들의 의복비 부담이 확 늘어났다고.

"다들 멋스럽게 입고 일하니 사무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남자 옷도 멋진 건 다 비싸다고요 ㅠㅠ. 애들 학원비에 월세도 곧 오를 텐데. 계절 바뀔 때마다 부담이 좀 많아질 것 같네요."

임○○ 기자 tardis@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097221&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20대 女, 직장인 은밀한 '이중생활' … 주말마다 가는 곳이 '깜짝'」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과 풍속도를 그린 기획기사로, 20대 녀의 은밀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에서 풍기는 기사와는 거리가 멀다. 20대 녀의 주말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봄 마라톤에 참가신청을 하고, 서울 홍대 인근에서 춤을 배우는 스윙댄스 동아리에도 가입하는 정도다. 대학 선후배 중 싱글녀들끼리 똘똘 뭉쳐 전국 맛집을 탐방하는 '식신원정대'를 조직하는 것도 은밀한 이중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멀쩡한 기사를 두고 과장, 또는 왜곡된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경닷컴은 기사와는 관계가 먼 제목으로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2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4년 3월 12일자(21시9분) 「女대생, 성추행한 교수와 한방서 '이럴 수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스탠드 3. 12. 21:9 캡처〉

『학생들도 1인 시위 "성추행 교수 물러가라"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남 공주대 교수들이 전공과목을 개설해 피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는 12일 공주여성인권센터 등 각종 여성단체와 함께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성추행 교수의 강의 중단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와 공주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 감사관실을 방문해 성추행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교육 당국의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의 한 관계자는 "공주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자신을 추행한 교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을 교단에 계속 서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주대 미술교육과 성추행·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 학생들은 12일 학내에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등과 함께 성추행 교수의 직위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학기 전공 4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주연합뉴스) 한○○ 기자 jkhan@yna.co.kr』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1263718&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성 추행 교수의 대학 전공과목 강의 개설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女대생, 성추행한 교수와 한방서 '이럴수가'」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주발 연합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이 기사는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전공과목 강의를 개설해 여성단체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여대생이 성추행 교수와 한방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억측과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2013-111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 문〉

경인일보 2013년 3월 25일자 14면 「한국 '송곳니' 이호석,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 대학 선발대표팀이 4년만에 제10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승리를 거뒀다. 김종필(동국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덴소컵 일본 대학선발팀과의 경기에서 정재혁(홍익대)과 이호석(동국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최근 3년간 2무1패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4년만에 승리를 거두는 기쁨을 만끽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덴소컵 상대 전적을 4승2무4패로 동률을 만들었고 역대 대학선발 전적은 15승8무9패로 우위를 유지했다.(중략)

사령탑을 맡은 동국대 김종필 감독은 일본을 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김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미디어데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호석(동국대)을 기용했다.(중략)

한국은 전반부터 승기를 잡았다. 전반 5분 김용진(건국대)의 슈팅이 골망을 벗어났지만 5분 뒤 상대 반칙으로 잡은 페널티킥 기회를 정재혁(홍익대)이 침착하게 밀어 넣어 선제골을 뽑는데 성공했다.(중략)

후반 23분과 24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잇따라 득점에 실패한 이호석은 후반 27분 김용진의 헤딩 패스를 추가골로 연결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에서 한국 대학 선발대표팀이 4년만에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한국이 정재혁(홍익대)과 이호석(동국대)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일본에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최전방 공격수 이호석이 골을 넣은 것에 주목해 제목을 「한국 '송곳니' 이호석,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로 뽑았다. 그라운드에서의 이호석의 날카로움을 '송곳니'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 목덜미를 찌르다'와 연결되면서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스포츠 경기의 박진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한 보도라 할지라도 상대팀을 '송곳니'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목덜미'로 비하하고, '찌르는' 것으로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극적인 표현의 도를 넘어 국민의 부정적인 대일 적대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3년 9월 4일(캡처시각) 「신입 여직원 주차장에서 …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 4. 16:47 캡처〉

『[金과장 & 李대리] 점심 굶고 통장 6개 관리 李대리, 재테크 여왕 아닌 '명품백' 중독女

직장인 '넘사벽 폼생폼사'

고급 수입차 2대 굴리는 金실장, 월세 사느니 車 속에서 먹고 자고…

'최강 동안' 朴과장

회사 MT때 가져온 가방엔 이름 생소한 화장품 가득 … 20대 여직원도 혀 내둘러

대기업에 다니는 A과장은 사내에서 패셔니스타로 통한다. 183㎝의 훤칠한 키에 아무나 소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까지 잘 입고 다녀 여직원들을 설레게 하는 꽃미남이다. 30대 중반인데도 웬만한 20대보다 피부가 좋아 사내에선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그를 찾아와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최근 2박3일간의 회사 워크숍에서 그만의 '비결'이 공개됐다. 큼직한 가방을

들고 나타난 A과장은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큰 가방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화장품 9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여직원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스크팩과 오이는 물론 위아래 색상을 맞춘 운동복을 세 벌이나 꺼내놓는 게 아닌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여직원 C대리는 "평소 자기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여자인 나도 안 쓰는 종류의 화장품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직장 내에서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고 남다른 패션 감각과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신세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명품만 있으면 굶어도 좋다?

중견그룹에 다니는 20대 후반의 H대리(여). 평소 얌전하고 검소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젊은 나이에도 6개의 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 '재테크의 여왕'으로 불린다. 몇만원 수당이 나오는 날에도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입금한 후 자리로 돌아와서는 통장 잔액을 인터넷에 기록해 둘 정도로 꼼꼼하다. 동료와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도 6000원이 넘는 메뉴를 고르는 법이 없다. "이번 달 저축액 목표를 채우지 못해 돈을 아껴야 한다"며 굶는 날도 더러 있다. 다들 H대리가 이토록 저축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평소 옷차림과 행동을 토대로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미스터리가 풀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정리하던 H대리가 갑작스러운 부장의 호출에 자리를 비운 사이, 옆자리에 앉은 K과장이 통장을 들춰보면서 모두의 궁금증이 '허탈하게' 해결됐다. 몇천원 또는 몇만원 단위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던 K과장의 눈에 맨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백, 기다려. 언니가 금방 데리러 갈게'라는 글귀가 들어왔다.

빵 터진 K과장은 다른 장도 유심히 들여다봤다. 브랜드와 상품 종류만 다를

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겉모습과는 달리 H대리가 사실은 명품 중독녀였던 것이다. K과장은 "옆에서 돈 쓰는 걸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 밥이나 커피도 많이 사줬다"며 "그렇게 저축에 집착한 이유가 명품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 같이 밥도, 차도 안 마신다"고 씁쓸해했다.

◆집은 없어도 차는 폼나게

대기업 S상사에 다니는 M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동차 마니아다. 사무실 책상 속 액자에 고급 수입차 사진이 즐비하고 틈날 때마다 해외 유명 자동차 사이트를 들여다본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브랜드 수입차도 두 대나 된다. 평소 옷도 세련되게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녀 직원들은 그가 분명 부잣집 외동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다.

M실장의 실체가 드러난 건 출장길에서였다. 그와 지방 출장을 같이 가게 된 여자 후배 B대리는 그가 소유한 고급 수입 세단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 기대에 한껏 부풀어 M실장의 차에 올라탄 B대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신고 벗어 놓은 양말과 와이셔츠, 담요 베개 등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뒷좌석 구석에는 버너도 있었다.

"실장님, 요즘 집에 자주 못 들어가셨나 봐요." B대리의 물음에 M실장은 뜻밖에 답변을 했다. "집에 매일 들어가지. 이 차가 내 집인데." 이어지는 M실장의 설명에 B대리는 그에 대한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갈수록 오르는 월세를 보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좋은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증금 빼서 차 두 대에 다 쏟아부었지."

◆명품 마니아의 굴욕 사건

화장품 회사 홍보부서에서 일하는 Y대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패셔니스타다. 굽이 13㎝나 되는 킬힐에 아슬아슬하게 짧은 길이의 초미니 스커트,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는 그녀는 명품 애호가이기도 하다.

몇 달 치 월급을 모아 명품 가방을 장만한 뒤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게 취미인 Y대리는 올 3월 입사한 신입사원 D씨가 영 탐탁지 않다. 미인형 얼굴이지만

꾸미는 데는 젬병이어서다.

보다 못한 Y대리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D씨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오늘 입은 옷은 도대체 언제 산 거야? 명색이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데 싼 것만 찾지 말고 자신한테 투자 좀 해. 월급쟁이가 저축해봐야 얼마나 모은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줄근해 보이기만 하던 D씨가 유명 패션그룹 E사 오너의 외동딸이라는 소문이었다. D씨가 퇴근 후 회사에서 떨어진 주차장에서 1억원이 훌쩍 넘는 수입차를 타는 장면을 봤다는 직원들도 나왔다.

소문을 들은 Y대리는 팀장에게 달려가 소문이 진짜냐고 물었다. 그는 팀장의 답변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하도 부탁을 해서 아무 말 못했지. 소문이 맞아. 잘 사는 티도 전혀 안 내고 일부러 더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해서 비밀 지켜줬지." 이날 이후로 Y대리는 패션이나 쇼핑 얘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다물거나 슬쩍 자리를 피한다.

김○○/박○○ 기자 bk11@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289831&nv=3〉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허벅지 일부가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의 사진 아래 「신입 여직원 주차장에서 …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수수한 차림의 신입사원이 유명 패션그룹 오너의 딸이라는 소문이 난 뒤 주차장에서 억대의 수입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게재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여직원이 주차장에서 무슨 사고

라도 당하기라도 한 듯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주 문〉

한경닷컴 2013년 9월 10일자(캡처시각)「女직원, 추석때 출근했더니 부장이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9.10 14:03〈캡처시각〉

[金과장 & 李대리] "고향이 서울에 기독교랬지?" … 명절마다 당직서는 비극이

"시댁 잔소리, 느낌 아니까" … 차라리 출근하고 수당 챙겨

추석 근무자의 애환

美FOMC 결과, 추석 발표 … 증권사 직원들 "하필이면…"

"출근해, 같이 편안하게…" 기러기 부장님과의 이틀… 하나도 안 편하거든요

H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이 대리는 이번 추석 연휴 고향에서 휴대폰을 꺼놓을 순 있어도 노트북컴퓨터는 끌 수 없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추석 당일(19일) 오전 3시(한국시간)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 대리는 19일 이후 숨가쁘게 돌아갈 미국·유럽 등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체크하고 분석해 23일 발간할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출근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리는 "연휴 5일 중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FOMC 결과 발표가 하필이면 19일인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5일간의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6, 17일 의무 휴무를 시행한 일부 기업의 직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사실상 9일간의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추석 연휴 때도 출근해야 하는 김 과장, 이 대리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연휴 때 출근해도 수당은 받지 마라(?)

대기업 전자계열사에 근무하는 권 대리(29·여)는 이번 추석 연휴 후반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회사에 나와야 한다. 다음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집에서 일하면 안 되냐"고 하시지만 권 대리 회사는 업무용 노트북과 자료의 외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결국 '출근하고 업무일지 올리면 수당 나오니까…'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지난주 부서원들 사이에서 '호랑이'로 통하는 박 부장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고 많이 당황했다. "요즘 긴축 경영인 것 알지? 직원들 연휴 때 출근시키지 말라는 게 윗선의 지시야.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수당은 신청하지 마." 권 대리는 "억울하지만 박 부장이 무서워서요. 지시사항 어기면 불호령이 떨어

질 게 분명하거든요. 이번 연휴엔 일만 하고 수당은 포기해야겠네요"라며 씁쓸해했다.

대기업 B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김 과장(35·남)은 이번 추석 연휴 때 부모님을 뵈러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23일(월요일) 사장 주재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이날 회의 때 기획팀장이 발표를 하는데 관련 자료 만드는 건 '파워포인트의 신'으로 불리는 김 과장의 몫. 게다가 연말 인사에서 전무 승진을 기대하는 팀장은 이번 기회에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팀장은 김 과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출근해 자료를 만들자고. 다른 연휴는 푹 쉬고." 문제는 김 과장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 그는 그냥 서울에 남아 있는 쪽을 택했다. 5일간의 황금 연휴를 기대했던 꿈도 함께 날아갔다. "솔직히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중요한 회의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연휴 때는 푹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난 7월 보험회사로 이직한 최 대리(30·남). 이번 연휴 때 친구들이 중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고심 끝에 거부했다. 업종을 바꿔 이직한 탓에 업무 적응이 안 됐기 때문이다.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러 출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주 회식 때 최 대리는 자신의 입방정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력직원으로서 윗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전 이번 추석 연휴 때 금요일 토요일은 출근할 생각입니다. 업무를 익혀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장이 반색을 하며 "그래? 최 대리 그럼 우리 같이 즐거운 추석을 보내볼까? 나도 출근함세"라고 말했던 것. 알고보니 부장은 아들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였다. 추석 연휴 중 이틀을 부장과 사무실에서 보내게 된 최 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중견기업 B사 품질팀에 근무하는 강 대리(32·남)는 설과 추석 연휴 때마다 당직을 선다. 1년 365일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회사 특성상 명절 때도 일정 인

원의 품질팀 직원들은 출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이 고향인 강 대리가 명절 때마다 '단골 당직자'가 된다는 것. 입사 초기 선배들이 "고향이 서울이랬지? 종교는 기독교?"라고 넌지시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맞습니다"라고 말한 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 팀장은 조심스럽게 강 대리를 불러 이렇게 말한다. "다른 직원들은 고향이 멀지만 강 대리는 집이 서울이잖아. 게다가 집안이 기독교라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면서?" 강 대리도 처음엔 동료들의 사정을 고려해 연휴 때 회사에 나왔지만 매번 명절 때마다 출근하는 게 지겨워졌다.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를 지내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연휴 출근 때문에 이젠 종교까지 버리고 싶다니까요."

◆**차라리 출근이 낫다(?)**

마지못해 출근을 자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H그룹 계열사 한 부장(47·남)은 이번 추석 당직근무를 신청했다. 아내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한 부장의 아내는 "딸이 공부도 해야 하고 나도 몸이 안 좋으니 이번 추석 땐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다. 시댁에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 '남편 근무'를 핑계로 집에서 쉬겠다는 것이다.

중견 디자인업체에 근무하는 조 대리(28·여)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출근을 자청했다. 지난 설 때의 악몽 탓이다. 지난해 결혼한 '초보 며느리' 조씨는 지난 설 시댁에 가서 난생 처음 갖은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결혼 전 요리 한번 하지 않았던 조 대리는 연휴 내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전을 부쳐야 했다. 밉상 남편은 쇼파에 벌러덩 누워만 있었다.

결국 조씨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1주일간 남편을 들볶은 끝에 연휴 첫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다. "밉상 남편한테 출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죠. 대신 추석 연휴 출근으로 받은 수당은 남편을 위해 투자하려고요."

황○○/강○○/박○○ 기자 hjs@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1607481&sid=01062062&nid=009&type=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은 직장인의 애환이나 풍속도를 그린 [金과장 & 李대리] 기획시리즈를 게재하면서 자사 메인페이지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의 사진 아래 「女직원, 추석때 출근했더니 부장이 '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열어 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기사에서 여직원을 언급한 부분은 두군데이다(고딕체 부분). 한 여직원은 추석 연휴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신청하지 말라는 부장의 지시로 수당없이 근무해야 한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고, 다른 여직원은 집안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일부러 출근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매경닷컴은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게재하고 이 같은 제목을 달아 마치 여직원과 부장이 함께 근무한 것처럼 내용을 호도하였고, 다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서 억측이나 불필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부득이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의 힘든 일상을 소개한 위 기사는 독자들의 공감을 살 만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같이 왜곡된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의아심과 실망감을 줄 뿐이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과 동떨어진 내용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일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 문〉

조인스닷컴 2014년 1월 22일자(캡처시각) 1)「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 2)「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 3)「'학부모와 간통' 교사 남몰래 교실서…헉」, 4)「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 」, 5)「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22. 10: 39 캡처〉

1) 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

미성년 성범죄 교사 10명 중 4명 학교서 몹쓸 짓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2:30 / 수정 2014.01.22 09:03

교실·교무실서 가장 많이 저질러

2차 피해 우려 학부모 되레 덮기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9)에게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할아

버지뻘인 50대 후반의 특수학급 교사 S씨가 2008년 여름부터 1년여간 교실에서 여덟 차례나 강제 추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파면됐다.

(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8389.html?cloc= nnc&total_id=13701639〉

2) 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

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2:30 / 수정 2014.01.22 03:05

학교에 남아 있는 성범죄 교사들 〈하〉

미 아동포르노 소지 교사 200년형

한국 성매매 적발돼도 견책 처분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 사기 떨어져

극소수 문제 교사 즉각 내보내야"

지난해 5월 전북 무주의 한 고등학교. 22년차 체육교사 박모씨는 학교 축제날 1학년 남학생 2명을 관사 앞으로 데리고 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는 갑자기 두 남학생의 성기를 주무르고 머리와 뺨을 8차례 때렸다. 경찰은 그를 성폭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해임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8376.html?cloc= nnc&total_id=13701638〉

3) '학부모와 간통' 교사 남몰래 교실서 … 헉

성범죄 저지른 교사 146명, 학교 안 떠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4.01.22 00:06 / 수정 2014.01.22 09:04

5년 동안 적발된 교사 242명

해임·파면 등 중징계 84명뿐

2009년 3월 경북 포항의 초등학교 교사 임모(당시 29세)씨는 자신이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고생 C양(17)에게 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적발

됐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에게 '성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내렸다. 임씨는 현재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2/13287289.html?cloc= nnc&total_id=13701301〉

4) 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

가출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교사도 정직 3개월 그쳐

[중앙일보] 입력 2014.01.21 02:30 / 수정 2014.01.22 09:04

학교에 남아있는 성범죄 교사들〈 상 〉

솜방망이 징계 … 문제 되면 전보

제자 무릎에 앉히고 추행했는데 감봉만 당하고 같은 학교서 수업

동료교사들도 쉬쉬, 교장 "학생들 알게 될까 조마조마"

학부모 "해임 등 강력 처벌해야"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경기도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담임교사인 A씨(49)가 종례를 마친 뒤 청소하는 남녀 학생 4~5명을 지도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교실 밖 복도에서 여학생 3명이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했다. "얘들아, 내일 보자. 복도에서 뛰지 말고." A씨도 학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겉으로만 보면 여느 교실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그러나 A씨는 2년 전 같은 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B양(14)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 2012년 11월 A씨는 학교 전산실에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B양의 가슴을 건드린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선생님이 뒤에서 껴안고 선생님 손이 가슴에 닿았다"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자를 성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가벼웠다. A씨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억울한 면도 많지만 오해받을 일을 한 것 자체가 내 불찰"이라며 "현재 학생들과의 관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1/13278581.html?cloc= nnc&total_id=13691584〉

5) 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또 마주칠까 학교 갈 때마다 두렵고 수치스러워"

[중앙일보] 입력 2014.01.21 02:30 / 수정 2014.01.22 09:04

성추행당한 여고생 법정증언

지난 9일 강원도 영월군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법정.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10대 소녀 3명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정모(62)씨의 성추행 피해자 박소은(19·가명)양과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의 친구 2명이었다.

정씨는 2012년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과학실·급식실 등에서 박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양 외 다른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하 생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1/21/13278582.html?cloc= nnc&total_id=136915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솜방방이 징계 때문에 퇴출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획기사 5건을 1월 21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난 왼쪽 상단에 눈에 띄게 올려놓았다.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노출한 제목은 원래 기사 제목과 달리 「교무실서 여고생 아래속옷에 손 넣곤… '충격'」「남학생 2명 불러내 성기 주무르더니…」「'학부모와 간통' 교사 남몰래 교실서… 헉」「여중생 가슴 만진 교사 2년뒤…」「성추행 당한 여고생 "친구들 앞에서…"」 등 하나같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바꿔 달았다. 기사의 전반적인 방향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면직이나 격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추가범행에 노출되거나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문제점을 짚은 것인데, 제목은 온통 피해사례에만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같은 편집행위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혐오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성을 실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조 한 규

〈주 문〉

세계닷컴 2014년 1월 24일자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4-01-24 13:36:58, 수정 2014-01-24 15:19:13

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

침술 치료를 해주겠다며 간호보조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80대 한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판사는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씨는 정식 신고 없이 2009년 서울 동대문구에 한의원을 차렸다. 이후 서씨는 "간이 좋아지게 해주겠다"며 간호보조로 채용한 A(2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뽀뽀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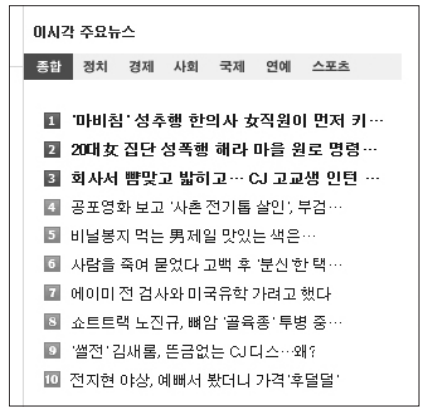
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자궁을 치료하겠다며 발에 침을 놓아 꼼짝 못 하게 한 뒤 팬티를 내려 성추행한 서씨는 B(22·여)씨의 몸도 더듬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다.

서씨는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치료 목적으로 침 놓으려 신체접촉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키스하거나 팬티를 벗으며 자궁을 봐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기자 kimcharr@segye.c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1/24/20140124002599.html〉

〈뉴스스탠드〉



〈세계닷컴 이시각 주요뉴스, 이상 1. 24. 16:32 캡처〉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침술 치료를 해주겠다며 간호보조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8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위 기사의 제목「성추행 한의사 "女직원이 먼저 키스하고 팬티 벗어"」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다. 제목만 보면 피해 여성들이 마치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은 한의사 서모씨의 주장(치료 목적으로 침 놓으려 신체접촉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키스하거나 팬티를 벗으며 자궁을 봐달라고 했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계닷컴은 위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으로 올려놓아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사사이트 〈이시각 주요뉴스〉 1위에 오르는 등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제목을 달았고,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 2013-109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3월 22자 1면「북 국경지대 이상기류 … 軍人 12명 무장 탈북」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달 초 무장한 북한군 병사 12명이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병사 2명이 상관을 사살하고 지린성 창바이(長白) 인근으로 탈북하는 등 북·중 국경 지역의 북한군 내부에 '이상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 국경수비대 소속 병사 12명이 이달 초 무장한 채 5명과 7명씩 나눠서 탈북해 지안 쪽으로 넘어갔다가 중국군에 체포돼 북송됐다"고 말했다. 옌지(延吉)의 대북 소식통은 "2월 말 북한군 병사 2명이 상관을 쏴 죽이고 창바이 쪽으로 넘어와 인근 중국군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중 국경 지역 북한군의 잇따른 탈북은 식량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4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탄)급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크게 줄면서 북한군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 식량 배급이 평양과 휴전선 인근 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북·중 국경 인근의 부대는 옥수수와 알감자 등으로 버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춘궁기가 깊어지면 북한군 탈북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중국 옌지에서 현지 공안(경찰)에 체포된 탈북자 8명은 50여㎞ 떨어진 투먼(圖們)의 중국 측 탈북자 수용소로 이송된 뒤 지난 19일 전원 북송됐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10세 내외의 아이들이며, 부모가 없는 '꽃제비'(구걸하는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체포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던 탈북자 출신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체포 11일 만인 20일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북한에 있던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해 중국에 입국했었다.

A씨는 "조선족인 공안이 조사할 때 '당신 탈북자였던 것 안다. 제대로 말하

면 한국으로 보내고, 아니면 북송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장모(36)씨는 현재도 공안의 조사를 받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이달 초 무장한 북한군 병사 12명이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으로 탈북했다가 중국군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요지다.

이 기사의 취재원은 익명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옌지의 대북 소식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원칙적으로 보도기사의 취재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꼭 보도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서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 기사 취재원의 익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익명 취재원이 전한 내용의 '사실'들을 기자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 기사는 취재원의 익명 처리로 인해 취재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그가 전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모호하고, 이처럼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한 불확실한 추정 등으로 판단해볼 때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설(說)'로 판단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익명 취재원이 전한 미확인 사실을 토대로 제목을 달면서 인용부호도 사용하지 않고 '북 국경지대 이상기류 … 군인 12명 무장 탈북'이라고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못박았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하고 과장된 제목을 달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신문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관계사진 게재

▲ 2013-3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김 병 수

〈주 문〉

세계닷컴 2013년 8월 21일자 「연예인·모델 등 외국 원정 성매매 무더기 적발」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세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입력 2013.08.21 11:00:47, 수정 2013.08.21 15:43:11
연예인·모델 등 외국 원정 성매매 무더기 적발

연예인 출신과 모델이 포함된 외국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호주, 일본, 대만, 미국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김모(27·여)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여권 브로커와 무속인, 외국 현지 성매매 업주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한모(32)씨와 국내 브로커 강모(55)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무속인을 동원해 여성들을 속여 외국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소개소 업주, 유흥업소 직원, 사채업자 등으로 구성된 국내 브로커들은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 종업원 등에게 접근해 '단기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외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지 업주로부터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일부 여성이 외국으로 가기 꺼리자 무속인에게 데려갔고, 미리 입을 맞춘 무속인은 '올해 삼재(三災)이지만, 외국으로 가면 대박 난다'는 등의 말로 여성들을 설득했다. 무속인은 그 대가로 한 사람당 7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외국으로 간 여성들은 상반신을 노출한 홍보 영상을 찍고 이를 보고 찾아온 현지 고객과 많게는 하루 10차례 성매매를 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인 성매매 여성 가운데는 전직 연예인과 현직 모델도 있었다.

유학생에서부터 전직 공무원, 운동선수는 물론 평범한 가정주부도 가담했다. 연예인 출신인 한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다시 외국으로 건너가 연락을 끊는 등 상당수가 체류기간이 끝나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 성매매를 했다.

모두가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건강 악화로 성매매를 못하게 되면서 높은 이자의 선지급금을 갚지 못해 벽지로 팔려갔다. 여권을 빼앗겨 발이 묶인 이 여성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후 몇 달 만에 귀국할 수 있었다.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여성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돼 외국 성매매를 했지만, 연리 346%라는 높은 사채 이자 탓에 빚에 허덕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정 성매매가 호주와 미국, 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국내외 브로커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자 ehofkd11@segye.com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8/21/20130821001324.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닷컴은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와 국내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는 경찰의 성매매사범 적발소식을 전하면서 매춘업소 여성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하여 마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독자를 오도하였다.

사진 속의 여성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신원을 보호한 노력이 보이기는 하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21일자「현직 경찰男女, 근무시간에 나체로 뜨거운 밀회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직 경찰男女, 근무시간에 나체로 뜨거운 밀회를…
입력: 2014.01.21 | 수정 2014.01.21 15:23 댓글보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포토리아)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일까? 현직 경찰관 남녀가 근무시간 중 남의 집에 불법 침입한 뒤 뜨거운 밀회를 가지다 발각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 포스트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뉴욕 주 서포크 카운티 이스트 햄튼 교통 경찰관인 줄리오 마리오 갈리아노(31)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0세 여성이다. 참고로 이 여성은 비상근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

지난 12월 30일, 갈리아노와 이 여성은 이스트 햄튼의 멋진 별장에서 남몰래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문제는 이 별장이 뉴욕 맨해튼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 아서 던냄 소유로 그 날 이 곳을 이용할 손님은 따로 있었다는 것.

신년 휴일을 맞이해 해당 별장을 찾은 세 명의 손님들이 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들은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녀가 그들의 용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벗어놓은 옷가지에 달려있는 경찰 배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지 무단이탈에 가택 불법침입까지 겸한 것이다.

뉴욕시립대학에서 형사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뒤 경찰의 길을 걷게 된 갈리아노는 지난 2012년 '올해의 경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전도유망한 경관

이었기에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크다. 지역 경찰 총책임자 제럴드 라슨 주니어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갈리아노와 함께 있던 20세 여성은 비상근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160101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의 현직 남녀 교통경찰관이 근무 중 남의 집에 불법침입해 성관계를 갖다가 발각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벌거벗은 남녀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포토리아)"이라고 사진설명을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⑥항(관계사진 게재)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위 기사는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이라고 달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천요강 ⑥항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닌데도 남녀의 성적 접촉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굳이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게재했다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토리아(fotolia) 서비스이용약관 '4.이용제한사항'에는 "귀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 비방하거나 또는 음란, 외설적인 작품 및 기타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전송할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게재된 사진의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침해됐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당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

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24일자 「성당 정문 앞서 '대낮 성관계' 철없는 커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성당 정문 앞서 '대낮 성관계' 철없는 커플
입력: 2014.01.22 I 수정 2014.01.24 14:00 댓글보기

긴장을 풀게 만드는 휴양지의 분위기 탓이었을까, 철없는 커플의 황당한 추억 만들기 였을까. 유명 휴양지를 여행 중인 남녀가 경건한 종교시설 정문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봉변을 당했다.

사건은 남미 우루과이의 유명한 여름철 휴양지 푼타델에스테에서 최근 발생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성당 주변을 지나가다가 정문 앞 계단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와 가까운 곳의 성당정문 계단에서 대낮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건너간 외국인관광객이었다. 현지 언론은 “여자는 20살, 남자는 18살로 두 사람 모두 푼타델에스테를 찾아온 관광객이었다”고 보도했다.

연행된 두 사람은 훈방 후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해야 할 일이지만 두 사람이 어리고 외국인관광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임○○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22601003&wlog_sub=nvt_0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우루과이를 여행 중인 아르헨티나 커플이 한 휴양지의 성당 앞 계단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벌거벗은 남녀가 침대 위에서 몸을 맞대고 있는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사진설명 없이 ‘자료사진’이라고 출처를 표기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항(관계사진 게재)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위 기사는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이 아님에도 사진설명을 달지 않았으며, ‘자료사진’으로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것이 통례이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승낙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자료사진’이라고 밝혔다 하더라도, 게재된 사진의 해당 인

물의 명예를 훼손을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예와 신용 존중

1. 개인의 명예 신용 훼손 금지

▲ 2013-120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 문〉

스포츠조선 2013년 7월 10일자 1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기성용/▶'최강희 감독 조롱' 페이스북 비밀 계정 다시 손대자 파문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특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성용(24·스완지시티)이 '최강희 감독 조롱'으로 논란이 됐던 비밀 계정 페이스북에 다시 손을 댔다. 8일 오후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교체한데 이어 이석희의 시집 '삶도 사랑도 물들어 가는 것' 중 '누가 그랬다'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시의 전문이다. 기성용은 개인 의견을 더하지 않았다. 그는 9일 오전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다. 기성용은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 비밀 계정을

통해 최 감독을 조롱했다. 4일 이 글이 세상에 공개됐고, 5일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저의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머리를 숙였다.

기성용이 페이스북을 또 만진 시기는 들썩이던 비난 여론이 식기도 전이다.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고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았더라도, 또 즉각 페이스북을 폐쇄했더라도 시기상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시의 내용도 오해를 살만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쏠린다는 현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이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그를 향하는 것은 당연했다. 네티즌들은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분위기 파악이 안됐다'며 질책했다.

자초한 일이다. 신중했어야 한다. 백마디의 말보다는 자숙을 위한 '침묵'이 필요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SNS 논란'이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더라도 기성용은 언행에 항상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SNS의 재사용은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축구계 선배들의 충고가 있었다. 조롱의 대상이 된 최강희 전북 감독도 그를 감싸 안았다. "기성용은 한국 축구를 위해 큰 일을 할 선수다. (대표팀) 감독도 바뀌었으니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축구계가 그의 잘못과 뉘우침을 끌어안았다. 축구협회는 10일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자숙과 반성이다. 기성용이 사과문을 통해 직접 밝혔다. '저는 앞으로 더욱 축구에 전념하여 지금까지 보여주신 팬들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 뿐인 사과가 아니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얘기해야 한다"는 축구계 선배들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한다. '뉴스 메이커'가 아닌 성숙한 축구선수

기성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7110100083160006124&servicedate=2013071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최강희 감독 조롱' 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축구 스타 기성용이 지난 7월 8일 페이스북 비밀계정에 이석희 시인의 시 '누가 그랬다'를 전문 게재한 사실을 놓고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시기에 논란에 불 지필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 큰 제목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기성용」이라고 비판조로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기성용은 7월 8일 오후 페이스북 비밀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교체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로 끝나는 이석희 시인의 시 전문을 본인의 의견은 전혀 달지 않은 채 올렸다. 그리고 하루 만인 9일 오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아무리 자신의 의견을 더하지 않았더라도, 또 즉각 페이스북을 폐쇄했더라도 시기상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하고『시의 내용도 오해를 살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 기사가 문제를 삼은 대상이 페이스북 비밀계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밀계정은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극히 제한된 소통의 공간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간 글을 공개리에 문제 삼는 것은 그 내용이 명백하게 공익과 직결되지 않는 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기성용이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을 저질렀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보호받아 마땅할 사생활이 있다. 페이스북 비밀계정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시를 올린 사실만 놓고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고 1면 톱으로 질책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에다, 독자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7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주 문〉

중부일보 2013년 10월 14일자 22면「도교육청 전 현직 간부간 진실공방 술렁/"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돼" 눈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가 벌이고 있는 진실 공방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월권을 행사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을 압박했다는 사유로 B씨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지난 8월12일께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A씨는 이와 함께 B씨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모 교육지원청 직원 C씨에 대한 언급과 함께 A씨와 C씨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B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

다"며 혀를 차거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해 4월 A씨가 퇴임하기 전까지 A씨와 B씨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당초 A씨와 C씨의 치정(癡情)이 도교육청 감사로 비화된 듯 하다.

연인 C씨와의 관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비밀 연애 및 사정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부터 둘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직위 및 직무상 맡은 임무로 인해 C씨의 처지에서 판단하게 된 B씨가 정의감(?)에 불타 이미 헤어진 C씨에게 집착하는 A씨에게 관계 청산을 종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전직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부탁을 해서 못하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A씨가 섭섭해한 것 같다"고 강조하며, "이번 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위 및 직무상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해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압박했고,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라며 "도교육청이 무슨 이유로 민원 사항을 덮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당초 해당 사건을 지난달 1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21일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조사 및 확인에 추가 기간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가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현직 간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간부와 교육지원청 모 직원 간의 치정문제가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전직 간부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 현직 간부 B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 B씨가 월권을 행사해 얻은 정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는 그 압박사례로 B씨가 A씨에게 연인관계였던 모 교육청직원 C씨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기사는 『당초 A씨와 C씨의 치정(癡情)이 도교육청 감사로 비화된 듯하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이해 당사자 간에 명예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치정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는 근거를 『알려졌다』『전해졌다』『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등으로 기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기사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 A씨, 현직 간부 B씨' '지난해 4월 A씨의 퇴임' 'A씨와 B씨는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사이'라는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인연과 관계, A씨의 퇴임시기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보도로 A씨는 물론이고, B씨와 C씨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때문에 이들의 명예와 신용을 고려해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점과 관련해 신문윤리강령은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1월 27일자 A10면 「경찰 남편 둔 女警, 동료와 '양다리 불륜' 의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관 남편을 둔 현직 여경(女警)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 소속 C(32)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속상관 C 경감, 다른 부서 P 경사와 불륜 행각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감찰 대상이 됐다. C 순경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서울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남편 K 경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C 순경은 K 경장과 2011년 5월 결혼했다.

K 경장은 C 순경의 휴대전화를 바꿔주기 위해 가져갔다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고 감찰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을 담당하는 한 경찰 간부는 "C 순경과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두 경찰관 모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7/2014012700138.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현직 여경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과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의심돼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에 '양다리 불륜'이라는 표현을 넣어 흥미 위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관 남편을 둔 수서경찰서 소속 현직 여경인 C 순경이 같은 경찰서의 직속상관 C 경감, 다른 부서 P 경사와 불륜 행각을 저질러 감찰 대상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불륜 여부는 의혹이 제기된 수준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C 순경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영문 이니셜로 익명 처리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C 순경과 C 경감, P 경사가 수서경찰서 소속이라는 것과 C 순경이 남편 K 경장과 결혼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이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챌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보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자의 명예존중

▲ 2013-1312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12월 3일자 A10면「빚 고민하던 조폭출신 30대 家長 가족 살해 후 교통사고 내 숨져/펜션서 유서·3명 시신 발견/"1억5000만원 빚 감당 어려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채로 고민하던 조폭 출신 30대가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자신도 숨졌다.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13분쯤 이모(33·무직·충북 청주 거주)씨는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BMW 승용차를 몰고 과속하다 좌회전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정면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박모(38)씨 가족 4명은 외식 후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박씨는 흉부 골절상(전치 4주 이상) 등을 입었고 아내(34)는 코뼈 골절, 7세와 2세 난 두 아들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한 펜션 방안에선 이씨의 부인(33), 딸(9), 아들(6)이 모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에선 먹다 남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다. 펜션 안에서는 이씨가 쓴 편지지 3장 분량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1억5000만원가량 되는 빚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혼자 가면 가족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장례를 치르지 말고 함께 화장해 달라'는 등 가족을 살해한 것을 암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손위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처남은 119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8시 4분쯤 제원리 봉황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신분을 확인했으며, 손목에 자해 시도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병원행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차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지구대 쪽에 주차하겠다"고 말하고 차에 오른 뒤 갑자기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나는 이씨 차를 순찰차로 추적했지만, 이씨의 차는 과속을 하다 지구대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원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이씨가 식당 등을 하다 장사가 잘 안 됐고, 최근 폐전선 수집 사업을

준비했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3/2013120300122.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채로 고민하던 3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진 사건을 다룬 사건기사다.

朝鮮日報는 이 기사 도입부와 제목에서 숨진 가장 이 모 씨를 『조폭 출신』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씨가 조폭 출신이라고 해도 기사 내용을 보면 그가 일을 저지른 것이 과거에 조폭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폭 출신'이라는 점을 돋보이게 내세운 것은 숨진 이씨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③(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생활 보호

▲ 2013-1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 문〉

국제신문 2013년 5월 11일자 7면 「보육원 아이들 친형된 공무원」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세현 씨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희락원 원생들과 양산 통도환타지아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붉은 티셔츠를 입은 원생 뒤에서 V자를 그리는 이가 최 씨다. 희락원 제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시의 20대 공무원 최세현씨가 2009년부터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희락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담기사다.

그런데 국제신문은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최씨가 어린이날을 맞아 양산 통도 환타지아에서 원생들과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

로 실었다. 위 사진은 원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희락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때문에 국제신문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는 원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진게재로 인한 원생들의 신분노출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일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규정의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인의 사생활 보도

▲ 2013-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3년 4월 1일자 21면 「연예계 주택 최고가 랭킹 톱10」 관련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일간스포츠는 「연예계 주택 최고가 랭킹 톱10」이라는 문패를 달아 1개면 전체를 할애해 배용준, 조영남 등 연예계 고가 주택 소유자 11명(김승우와 김남주는 부부)의 주거지를 주택 가격 순서에 따라 표와 사진을 곁들여 일일이 소개했다.

일간스포츠는 해당 연예인별로 주택 시세를 제목으로 앞세우고 주택의 특징과 주변환경, 구입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주택의 위치와 크기, 매입 시기와 가격을 표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들 모두가 대중들의 관심이 큰 연예계 스타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생활 노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주택의 위치까지 시시콜콜 밝힌 것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4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1월 17일자 A13면「연예인 에이미는/케이블방송 '악녀 일기'로 얼굴 알려 … 美서 대학 나온 부잣집 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는 미국 출생으로, 미국 네바다대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8년 케이블 채널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상류층 사회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했다.

2010년에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자기가 사는 서울 한남동의 호화 빌라를 공개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2008년 연인이었던 댄스 그룹 신화의 이민우(34)와 결별하며 "이민우가 연애 당시 자주 속이고 변명을 늘어놓아 헤어졌다"고 말했다가 같은 그룹 멤버 김동완(35)이 "헤어진 연인과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비

정상적이고 지저분한 행동"이라고 받아치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10년엔 자기 이름을 내건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 분배 문제로 동업자인 가수 출신 오병진(38)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도 있다. 에이미는 오씨를 '사이코' '쓰레기'라고 부르며 비난했고, 오씨는 에이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1년엔 '성형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앞트임(눈 수술)만 했다"고 말을 바꿨다. 에이미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그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188.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 검사 사건을 다룬 같은 면의 기사 「에이미의 성형醫, 직원 성폭행 피소 … 그 바람에 '檢事추문'도 들통」의 관련 기사로, 방송인 에이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에이미가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연인이었던 댄스 그룹 신화의 이민우와 결별 당시 했던 발언 때문에 다른 연예인과 설전을 벌였고, 2010년 온라인 쇼핑몰 수익 분배 문제로 가수 출신 오병진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상대방을 비난했고, 성형 논란이 불거졌던 일까지 시시콜콜 전하고 있다. 기사 제목에도 '美서 대학 나온 부잣집 딸'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기사에 소개된 에이미의 신상 정보나 과거 발언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것들이긴 하지만 대부분 에이미의 부정적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례들이다. 또한 에이미의 이 같은 과거 행적이 전모 검사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사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에이미가 비록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방송인이라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을 이처럼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보도는『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4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4년 3월 6일자 A10면「배우 장동건 부부 가평 별장에 도둑」·「장씨가 도난당한 카메라 3대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우 장동건…〉=『유명 배우 장동건(42)·고소영(42)씨 부부의 가평 별장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3대를 훔쳐 달아났다. 장씨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장에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 당시에는 빈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장씨 부부의 별장이 도난당했다는 무인경비업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업체는 "밤 8시 53분쯤 무단 침입 경보가 울렸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범인은 건물 뒤쪽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1층 거실 진열장에 보관돼 있던 카메라 3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을 받고 밤 10시쯤 매니저와 함께 도착한 장씨는 현장을 확인한 뒤 "니콘 F2·F3 필름 카메라와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졌다.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이외에 귀중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거실 진열장에 있던 카메라만 훔쳐 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 바깥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지만 산과 연결된 뒤편 담장 밖은 경사가 있고 낮아 도둑이 쉽게 넘어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별장엔 CCTV 8대가 설치돼 있지만, 건물에서 멀거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침입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씨 부부의 별장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조성해 분양한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 60여개 필지 가운데 23개 필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장씨의 별장은 단지의 가장 안쪽 꼭대기에 있으며 부지는 약 400평이다. 별장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서울 고소영 빌딩' '강원도 정선 원빈 집' 등으로 불리는 유명 연예인의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곽희수씨가 설계했으며, 한 달 전쯤 완공됐다. 부지는 부인 고씨가 결혼 이전인 2009년 약 4억원에 매입했으며, 건축비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강과 청평호수를 끼고 있는 설악면 일대는 자연환경이 좋고 서울과 가까워 부유층 인사들의 별장이나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6/2014030600123.html〉

〈장씨가 도난당한…〉=『1971년부터 생산된 니콘 F2는 니콘을 좋아하는 프로 사진가들 사이에선 가장 잘 만들어진 기계식 명품 카메라로 통한다. 튼튼한 내구성 때문에 1970년대 종군기자들이 가장 애용했던 카메라다.

F2 시리즈에 이어서 1980년부터 생산된 F3 카메라는 2001년까지 생산된, 니콘 카메라 중 가장 장수한 기종이었다.

조리개 우선 자동노출 기능이 처음 장착되었고, 카메라 보디 위의 헤드(펜타프리즘)가 분리되어 파인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볍고 튼튼한 카메라로 니콘 F3를 채택, 1981년 컬럼비아 우주왕복선에 처음 사용하게 된다. 이후 최근까지도 니콘 카메라가 우주 유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종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니콘 F2와 F3는 이미 단종된 기종이라 현재 중고 카메라 시장에서 각각 30만원,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뛰어난 해상도를 자랑하는 칼차이스(carl zeiss) 렌즈를 사용하는 라이카(Leica) 카메라는 많은 카메라 애호가 사이에서 SLR 카메라의 로망으로 통한다. 최초의 소형 카메라로, 세계 최고의 보도사진가 그룹인 매그넘(Magnum) 작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작가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1998년부터 라이카도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200만원대부터 900만원대까지 다양한 모델이 팔리고 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6/2014030600111.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명 배우인 장동건·고소영 부부의 경기도 가평 별장에 도둑이 들어 카메라 3대를 도난당했다는 사건 기사다. 기사는 무인경비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고 피해자 장씨가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했다는 말까지 세세하게 전하고 있다.

장씨 부부가 별장에서 도난당한 것은 카메라 3대가 전부다. 피해 금액은 일부 언론에서 시가 100만원 정도라고 보도할 정도로 소액이다. "집 안에는 가구와 가전제품 이외에 귀중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거실 진열장에 있던 카메라만 훔쳐 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으로 볼 때 사건 자체도 단순하다.

그런데 朝鮮日報는 대형 사건이라도 벌어진 양 기사에 장씨 부부 별장 사진과 별장이 위치한 약도를 덧붙여 눈에 띄게 편집했다. 게다가 「장씨가 도난당한 카메라 3대는/니콘 F2·F3, 기계식 카메라의 名品/라이카는 高價 카메라의 대명사」 제목의 별도 기사까지 카메라 사진 3장을 곁들여 게재했다. 기사는 또 장씨 부부 별장의 규모와 부지 매입 및 건축 시기와 비용 조달 과정, 별장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 별장의 위치 등 도난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부분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전했다.

이러한 기사는 장씨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명인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흥미 위주로 작성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처럼 흥미 위주로 기사를 다루는 것은 사회의 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